

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072-10



# 2019 경제백서



기획재정부





# 발간사

2019년은 세계경제 동반 성장둔화(synchronized slowdown), 일본수출 규제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경제체질 개선도 가시화되는 등 여러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 재정정책, 경제활력 제고 대책 등으로 성장모멘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연간 성장률이 '30-50 클럽' 국가 중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구축('19.2월),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등으로 고용이 질적·양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기초연금 인상('19.4월) 등으로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등 그간 추진한 포용정책의 성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 전략('19.3월) 등으로 혁신성장의 동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벤처 생태계 성장척도인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은 '18년 6개에서 '19년 10개로 한 해 동안 4개가 증가한 가운데, 벤처투자 규모가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서고, 신설법인 수도 사상 최대 수준인 10만 9천개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한 것도 우리 산업생태계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이 2년 연속 2단계 상승하는 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 발간사

다만, 2020년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며 당면한 위기극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미래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큰 과제입니다. 특히, 위기의 상처로 인한 양극화 확대,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미·중 갈등 등에서 비롯된 국제경제 질서 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우리 경제에 상생, 혁신, 포용의 가치를 착근시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962년 이후 59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경제백서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업무 가운데 원고 집필에 참여해주신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 CONTENT

## 목 차

2019년 경제백서

제1장 2019년 우리경제의 종합 평가 .....	13
제2장 2019년 거시경제 개관 .....	21
제1절 세계경제동향 .....	21
1. 개 관 .....	21
2. 선진국 경제동향 .....	23
3. 신흥국 경제동향 .....	27
4.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동향 .....	29
5. 국제금융시장 동향 .....	31
제2절 국내경제동향 .....	34
1. 개 관 .....	34
2. 경제성장 .....	36
3. 소비·투자 .....	40
4. 수출입·경상수지 .....	44
5. 고 용 .....	52
6. 물 가 .....	55
7. 재 정 .....	57
8. 금융시장 .....	58

# CONTENT

9. 외환시장 .....	64
10. 외환보유액·국가신용등급 .....	66

## 제3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 73

### 제1절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73

1. 개 관 .....	73
2. 투자개선 모멘텀 마련 .....	74
3.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 .....	75
4. 수출 경쟁력 제고 .....	76
5.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76

### 제2절 부동산시장 안정화 ..... 77

### 제3절 가계부채 관리 강화 ..... 81

1. 가계부채 동향 .....	81
2. 가계부채 관리 주요 내용 .....	82

### 제4절 산업·기업 구조조정 ..... 85

### 제5절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 89

1.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	89
2.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현안 대응 .....	92

### 제6절 일본 수출규제 대응 ..... 94

1. 일본 수출규제 대응 체계 및 성과 .....	94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	97

# CONTENT

<b>제4장 혁신성장 성과 창출</b> .....	<b>103</b>
<b>제1절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b> .....	<b>103</b>
1. 개 관 .....	103
2. 2020 전략투자방향 .....	103
3. 성과점검 및 보완 .....	105
4.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 .....	106
<b>제2절 핵심규제 혁신</b> .....	<b>107</b>
1. 개 관 .....	107
2.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	107
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샌드박스 .....	108
4.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	109
5.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	110
<b>제3절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b> .....	<b>111</b>
1. 개 관 .....	111
2. 제2벤처 붐 확산전략 .....	112
3. 향후 계획 .....	113
<b>제4절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b> .....	<b>114</b>
1. 제조업 혁신 .....	114
2. 서비스 산업 혁신 .....	117
<b>제5절 노동시장 혁신·제도개선</b> .....	<b>118</b>

# CONTENT

1. 노동자 보호 강화 .....	118
2.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노동제도의 보완·조정 .....	119
3. 노동시장 격차 완화 .....	120
4.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협력 촉진 .....	121

## 제5장 포용성 강화 .....

125

### 제1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125

1. 청년 일자리·소득 지원 .....	125
2. 여성·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	127
3. 노인·저소득층·장애인 일자리 지원 .....	128

### 제2절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129

1. 저소득·취약계층 소득 지원 .....	129
2. 고용안전망 확충 .....	131
3.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	135
4. 금융 포용성 강화 .....	136

### 제3절 5대 생계비 경감 .....

139

1. 주거비 .....	139
2. 교통·통신비 .....	140
3. 교육비 .....	140
4. 의료비 .....	141

### 제4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

143

1.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143
----------------------	-----

# CONTENT

2. 상권 활력 제고 .....	144
3.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	145
<b>제5절 사회적경제 활성화 .....</b>	<b>147</b>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148
2. 사회적경제 지역 확산 촉진 .....	149
3. 사회적경제 대국민 인식 제고 .....	150
<b>제6장 공정경제 확립 .....</b>	<b>153</b>
제1절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	153
1. 개 관 .....	153
2.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	154
3.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	155
4. 소비자 권익 보호 .....	156
제2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	158
<b>제7장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비 .....</b>	<b>163</b>
제1절 4차 산업혁명 대비 .....	163
1. 개 관 .....	163
2. 혁신 인프라 D.N.A .....	164
3. 핵심 신산업 BIG3 .....	165
제2절 인구구조 변화 대응 .....	168

# CONTENT

1. 생산연령인구 확충 .....	168
2.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	169
3. 고령인구 증가 대응 .....	172
4. 복지지출 증가 관리 .....	175
<b>제8장 2020년 예산 .....</b>	<b>179</b>
제1절 2020년 예산 편성 .....	179
1. 2020년 예산의 모습 .....	179
2. 2020년 중점추진과제 .....	183
제2절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	190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190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192
3.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195
<b>제9장 2019년 세법개정 .....</b>	<b>199</b>
제1절 2019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199
제2절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200
1. 투자활력 제고 .....	200
2. 소비·수출 활성화 .....	202
3. 혁신성장 지원 .....	203
제3절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205

# CONTENT

1. 일자리 지원 .....	205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	206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	208
<b>제4절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b>	<b>210</b>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210
2. 조세제도 합리화 .....	211
3. 세입기반 확충 .....	212
<b>제10장 재정혁신 가속화 .....</b>	<b>217</b>
제1절 지출구조 혁신 .....	217
제2절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219
제3절 재정성과관리체계 개선 .....	220
1. 성과관리체계 개편 .....	220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	220
3. 재정 조기집행 및 이·불용 최소화 .....	222
제4절 실질적인 재정분권 추진 .....	224
제5절 재정의 투명성·접근성 제고 .....	225
1.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	225
2. 재정정보공개 확대 .....	226

# CONTENT

<b>제11장 국고 관리 패러다임 전환</b> .....	<b>229</b>
<b>제1절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b> .....	<b>229</b>
1. 국유재산의 공익적 개발·활용 및 체계적 관리 .....	229
2. 국유지 개발사업의 추진 및 확대 .....	232
<b>제2절 공공조달 혁신</b> .....	<b>234</b>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	234
2. 혁신조달 추진 .....	236
3.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	237
<b>제3절 국고채 시장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b> .....	<b>238</b>
1. 2019년 국채시장 동향 .....	238
2. 국채시장 제도개선 .....	240
<b>제12장 사회적 가치·공공성 강화 중심 공공기관 혁신</b> .....	<b>245</b>
<b>제1절 사회적 가치 및 자율·책임 경영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b> .....	<b>245</b>
1. 공공성 강화를 반영한 공공기관 평가 실시 .....	245
2.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목표제 운용 .....	246
3.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	248
<b>제2절 공공기관 혁신 추진</b> .....	<b>249</b>
1.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점검 .....	249
2. SOC 통합기술마켓 개통 .....	251

# CONTENT

제3절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	253
1. 일자리 창출 .....	253
2.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254
제4절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 및 안전대책 마련 .....	257
1. 채용비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257
2. 정기 전수조사 후속 조치 .....	259
3.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등 마련 .....	260
<b>제13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b>	<b>265</b>
제1절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265
1. 전략적 통상정책 적극 추진 .....	265
2. 신북방·신남방 등 신시장 진출 확대 .....	268
3.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 지원 .....	272
제2절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	275
1. 아시아 및 신흥국 양자협력 강화 .....	275
2. 상생의 ODA 확대 .....	276
제3절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	279
1. G20 등을 통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	279
2. 국제금융기구 참여 확대 .....	282
3.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	286





# 01



## 2019년 우리경제의 종합 평가





### 세계경제 동반 부진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

2019년 한국경제는 제조업 경기 부진 및 주요국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둔화 흐름이라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2019년 경제성장률은 전년(2.9%) 대비 하락한 2.0%를 기록하였고, 특히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출( $\Delta$ 10.4%)이 성장세 둔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의 조정 여파로 감소폭이 확대된 설비투자( $\Delta$ 7.5%), 주택건설 부진의 영향을 받은 건설투자( $\Delta$ 2.5%) 부진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고용 측면에서는 연간 취업자 및 고용률 등 주요 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면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 개편 등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힘입어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정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고용 안정성을 대표하는 상용직 취업자 또한 44.4만명 증가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이러한 결과 3대 주요 신용평가사(S&P, 무디스, 피치)는 거시경제 성과 및 높은 재정건전성 등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로, 엄중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민간과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정부는 국가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와 더불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더불어, 글로벌 경기둔화 및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대내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처간 정책 목표를 공유하여 ‘2019년 경제 정책방향(18.12.17)’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3)’을 마련하였다. 투자개선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민간의 투자유인을 제고하는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하여 투자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차년도 공공투자 계획을 조기집행 하는 등으로 2018년 대비 10조원 이상 공공투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및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등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국내기업의 해외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수출상담회 등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9월에는 ‘수출시장 구조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외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는데, 2019년 4월에 UAE와 6.1조원/200억디르함 규모의 통화스왑 재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및 R&D 투자전략, 혁신대책을 마련하여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였다.

## 혁신성장·포용경제 성과 창출

2019년 정부는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에 집중하였으며,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라는 비전하에 포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개편·운영하였으며, 신산업 및 노동시장 규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성장을 추진했다.

우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에 따라서 혁신성장의 핵심 인프라와 분야와 신산업 분야에 각각 1.7조원 및 3조원을 투자하여 혁신성장이 확산 및 가속화되도록 하였다. 한편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신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을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9년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 및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하였고,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통해 노동시장 혁신·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6만개 제공 등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 및 구직급여·실업급여 등의 확대 개편을 통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을 추진하였다. 한편 주거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의료비 등 5대 생계비 경감을 통해 포용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 미래 도전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

2019년 정부는 당면한 과제뿐만 아니라 장래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될 4차 산업혁명과 및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기존에 실시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및 8대 선도 사업·3+1 전략투자 플랫폼 등에 더하여 2019년에는 핵심 인프라 기술로서 D.N.A.(Data, Network, AI)와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 선점이 가능한 산업으로서 BIG 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정하여 대비하였다. 한편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 등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추진했다.

DNA 분야는 미래 쏠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혁신적인 인프라 분야로서 정부는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 30조원 달성 및 AI 유니콘 기업 10개 확보·AI 융합인재 1만명 육성을 목표로 투자를 추진했다. 또한 2019년 4월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한데 이어 정부는 '5G 전략'을 발표하여 2026년까지 해당분야 생산액 180조원 및 수출 73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BIG 3 분야에 대해서도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고 투자를 추진하였다.

한편,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 계속고용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및 가입주택 가격 조정을 통해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에도 적극 매진했다.

## 공정경제 확립

2019년 정부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국정과제를 포함한 총 119개의 공정경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그 중 56개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하도급 분야의 95%가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공정경제 확립에 일부 성과가 있었다. 또한 범부처가 협업하여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 및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 등을 개최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직불 제한 및 하도급 업체가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 갱신권을 강화하고, ‘생애주기 전단계 가맹점주 경영개선 대책’을 발표해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판촉비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주요 그룹 간담회 및 정보공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대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가 2017년 대비 95% 감소하여 사실상 해소되었다. 2019년 4월에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하여 불명확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확정하였으며, 11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였다.



# 02

## 2019년 거시경제 개관





## 제 2 장 2019년 거시경제 개관

### 제1절 세계경제동향

#### 1 개 관<sup>1)</sup>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3.5%)에 비해 큰 폭 둔화된 2.8%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부진, 주요국간 무역갈등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반 부진(synchronized slowdown)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Delta 0.1\%$ ) 이후 가장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분쟁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된 가운데, 인도·아세안 등 여타 신흥국도 대외수요 부진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선진국 경제는 1.7% 성장하며 전년(2.2%)보다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미국은 개인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업률이 지속 하락하는 등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었으나,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투자가 위축(6.9  $\rightarrow$  2.9%)되며 성장세가 둔화(3.0  $\rightarrow$  2.2%)되었다. 유로존은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투자 증가세 둔화, 수출 부진 등으로 유럽 재정 위기(2013년  $\Delta 0.2\%$ ) 이후 최저 수준의 성장률(1.3%)을 기록했다. 일본 경제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주택투자 등이 증가 전환하며 성장세가 완만히 회복(0.3  $\rightarrow$  0.7%) 되었다.

신흥국 경제도 3.7% 성장하며 전년(4.5%)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세계경제 둔화 등 영향으로

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오다은 사무관

내수·수출 증가세가 위축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6.7 → 6.1%)되었다. 인도는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상반기 내수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며 하반기 성장세 약화가 지속되었다. 브라질·러시아 등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낮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국제유가는 이란제재 등으로 2분기 들어 배럴당 70달러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으로 60달러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하반기 들어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상방요인과 미국 셰일오일 공급 확대 등 하방요인이 교차하며 연말까지 60달러 초중반 흐름이 이어졌다.

〈표 2-1〉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단위 : %, 전기비연율, 전기비, 전년동기비)

		2018년					2019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세계경제	3.5	-	-	-	-	2.8	-	-	-	-
선진국	3.1	-	-	-	-	2.4	-	-	-	-
미국 (전기비연율)	3.0	3.8	2.7	2.1	1.3	2.2	2.9	1.5	2.6	2.4
유로 (전기비)	1.9	0.8	1.8	0.4	2.0	1.3	1.9	0.8	0.8	0.5
일본 (전기비)	0.6	0.0	0.1	△0.7	0.5	0.3	0.6	0.1	0.2	△1.9
신흥국	4.5	-	-	-	-	3.7	-	-	-	-
중국 (전년동기비)	6.7	6.9	6.9	6.7	6.5	6.0	6.4	6.2	6.0	6.0

자료 : IMF, 블룸버그 등

## (1) 미국경제

2019년 미국 경제는 2.2% 성장하면서 전년(3.0%)에 비해 성장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성장률이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2.9% (전기비연율)를 기록하였고, 2/4분기에는 민간소비(3.7%) 및 정부지출(5.0%) 증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 부진으로 1.5% 성장에 그쳤다. 3/4분기 및 4/4분기에는 견조한 정부지출 및 주택투자 회복세를 바탕으로 각각 2.6%, 2.4% 성장하였다.

2018년부터 이어진 양호한 고용상황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 재정을 통한 정부지출 증가세가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고(2018년 6.9 → 2019년 2.9%) 수출이 감소전환 (2018년 3.0 → 2019년  $\Delta$ 0.1%) 하며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시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전년 대비 다소 축소(월평균 19만명 → 17만명)되었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용률(60.4 → 60.8%)이 상승하는 등 호조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실업률은 1969년(3.5%) 이후 최저 수준인 3.7%를 기록하였다. 시간당 임금도 연중 상승세가 지속 유지되었다.

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오다은 사무관

〈표 2-2〉 미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연율, 전년동기비, %)

	2018년					201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1」	3.0	3.8	2.7	2.1	1.3	2.2	2.9	1.5	2.6	2.4
민간소비	2.7	2.0	3.2	2.7	1.6	2.4	1.8	3.7	2.7	1.6
기업투자	6.9	12.2	6.2	2.6	5.0	2.9	4.2	0.0	1.9	△0.3
주택투자	△0.6	△3.3	△1.7	△5.4	△5.2	△1.7	△1.7	△2.1	4.6	5.8
정부지출	1.8	1.5	2.9	2.5	△0.9	2.3	2.5	5.0	2.1	2.4
수 출	3.0	2.7	1.9	△5.2	2.8	△0.1	1.8	△4.5	0.8	3.4
수 입	4.1	0.3	△0.1	8.0	4.1	1.1	△2.1	1.7	0.5	△7.5
소비자물가2」	2.4	2.2	2.7	2.7	2.2	1.8	1.6	1.8	1.8	2.0
실업률	3.9	4.1	3.9	3.8	3.8	3.7	3.9	3.6	3.6	3.5

주 : 1」전기비연율 2」전년동기비  
 자료 : 미 상무부, 블룸버그 등

## (2) 유로지역 경제

2019년 유로존 경제는 1.3% 성장하며 전년(1.9%)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스페인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보였으나, 자동차 산업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됨에 따라 독일은 경기가 다소 위축되었다. 프랑스는 재고투자 감소, 이탈리아는 전반적인 내수부진으로 4/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2019년중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2월에는 7.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만, 독일의 경우 4/4분기 들어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연중 2%(ECB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하회했으며, 유가 흐름 영향으로 4월

고점(1.7%) 기록 이후 지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11월부터 소폭 상회하며 연간으로는 1.2% 증가했다.

국별로는 독일 1.9% → 1.4%, 프랑스 2.1% → 1.3%, 이태리 1.2% → 0.7%, 스페인 1.7% → 0.8%로 주요 4국의 성장세가 모두 둔화되었고, 영국도 2.4% → 1.8%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표 2-3〉 유로지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2018년					2019년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1」	1.9	0.1	0.5	0.1	0.5	1.3	0.5	0.2	0.2	0.1
- 민간소비	1.5	0.5	0.2	0.1	0.4	1.3	0.6	0.2	0.3	0.1
- 고정투자	3.2	0.6	1.4	0.5	4.7	5.8	△2.1	6.8	△5.4	6.2
- 정부소비	1.2	△0.1	0.5	0.0	0.4	1.9	0.6	0.4	0.7	0.3
- 수출	3.6	△0.1	1.0	0.1	1.0	2.5	1.1	0.0	0.6	0.0
- 수입	3.7	0.0	1.3	0.9	2.7	3.9	△0.8	3.3	△2.2	2.2
소비자물가2」	1.8	1.3	1.7	2.1	1.9	1.2	1.4	1.4	1.0	1.0
실업률	8.2	8.5	8.3	8.0	7.9	7.6	7.8	7.6	7.5	7.4
독일 GDP1」	1.3	△0.2	0.5	△0.3	0.3	0.6	0.6	△0.5	0.3	0.0
프랑스 GDP1」	1.8	0.1	0.2	0.4	0.6	1.5	0.5	0.3	0.2	△0.2
이태리 GDP1」	0.9	0.0	0.1	0.0	0.2	0.3	0.1	0.1	0.0	△0.4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유로통계청, 블룸버그 등

### (3) 일본경제

2019년 일본경제는 연간 0.3% 성장하며 전년(0.6%)보다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수입이 큰 폭 감소하며(△3.9%) 전기 대비 0.6% 성장한 이후 2/4분기 및 3/4분기는 견조한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등에 힘입어 2018년 4/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4/4분기는 소비세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3.1%), 성장률은 △1.8%로 5분기만에 감소 전환하였다.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2%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유효구인배율(구인수/구직자수)도 연평균 1.60배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명목임금은 1월 이후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표 2-4〉 일본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조엔)

	2018년					201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1)	0.6	0.0	0.1	△0.7	0.5	0.3	0.6	0.1	0.2	△1.8
- 민간소비	1.0	△0.1	0.2	△0.2	0.1	0.2	△0.1	0.4	0.5	△3.1
- 설비투자	2.5	0.5	0.7	△3.5	4.0	0.6	△0.7	0.2	1.0	△4.6
- 정부지출	1.6	0.8	0.2	△0.3	0.3	2.3	0.6	0.4	0.8	0.6
- 수출	4.8	1.1	0.9	△2.2	1.8	△4.4	△1.6	△0.1	△0.5	0.2
산업생산	1.1	△0.9	0.8	△0.7	1.3	△3.0	△2.1	0.0	△1.1	△3.7
소비자물가2)	1.0	1.3	0.6	1.1	0.9	0.5	0.3	0.8	0.3	0.5
실업률	2.4	2.5	2.4	2.4	2.5	2.4	2.5	2.3	2.3	2.3
무역수지	△1.2	△0.2	0.8	△0.6	△1.3	△1.7	△0.6	△0.3	△0.5	△0.2
경상수지	20.5	6.0	5.0	5.8	2.6	19.4	6.2	4.7	5.8	3.9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통계청, 후생노동성, 블룸버그

## (1) 중국경제

2019년 중국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부진 등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과 2018년 추진된 디레버리징 정책 등의 영향이 지속되며 소비, 투자 및 수출 등 전반적인 부진을 경험하였다. 상반기 중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였으나, 하반기에 성장세가 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간으로는 6.0% 성장하며 천안문사태 이후 29년만(1990년 3.6%)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주요 선진국 경기 둔화 영향으로 크게 위축(2018년 9.9 → 2019년 0.5%) 되었다. 소비자 물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식품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확대(2.1 → 2.9%)되었다.

〈표 2-5〉 중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8년					201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	6.7	6.9	6.9	6.7	6.5	6.0	6.4	6.2	6.0	6.0
산업생산 <sup>1)</sup>	6.2	6.8	6.6	6.0	5.7	5.7	6.5	5.6	5.0	6.9
소매판매 <sup>2)</sup>	9.0	9.8	9.0	9.0	8.3	8.0	8.3	8.5	7.6	7.7
고정자산투자 <sup>2)</sup> (누계)	5.9	7.5	6.0	5.4	5.9	5.4	6.3	5.8	5.4	5.4
경상수지(억달러)	255	△403	△89	155	512	1,413	301	305	402	405
수출	9.9	13.7	11.5	11.7	3.8	0.5	1.4	△1.0	△0.3	2.0
수입	15.8	19.4	20.6	20.7	4.7	△2.7	△4.1	△3.6	△6.2	3.4
소비자물가 <sup>1)</sup>	2.1	2.2	1.8	2.3	2.2	2.9	1.8	2.6	2.9	4.3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블룸버그,

1) 분기증가율: 월평균 증가율의 평균 2) 명목

3)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오다은 사무관

## (2)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2019년 인도경제는 민간소비·투자 위축과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6.1%) 대비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상반기는 2018년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총선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모습이었다. 하반기는 세계경제 부진 영향으로 수출이 8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감소를 지속하였다.

브라질의 경우, 2019년 1.1% 성장하며 전년대비 다소 둔화된 성장률을 보였다. 저금리와 물가안정 및 고용상황 개선으로 민간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금개혁, 조세간소화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수출 부진 등으로 예상보다는 완만한 성장에 그쳤다.

러시아의 경우, 2019년 1.3% 성장하며 전년(2.5%) 대비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비교적 견조한 민간소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축기조와 원유수출 애로 등으로 수출이 감소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6〉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비, %)

	2018년					2019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인도	6.1	8.2	7.1	6.2	5.6	4.2	5.7	5.2	4.4	4.1
브라질	1.3	2.2	1.3	2.0	1.1	1.1	1.5	1.8	0.8	1.5
러시아	2.5	2.2	2.6	2.5	2.8	1.3	0.4	1.1	1.5	2.1

자료 : 블룸버그, IMF, 러시아 연방통계청 등

2019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평균 63.5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전년(69.7달러) 대비 8.8% 하락했다. 주요 산유국 증산 등으로 2018년말 5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국제유가는 OPEC+ 감산(일일  $\Delta$ 120만 배럴), 이란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년 4월 7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6월에 미중 무역분쟁이 재점화되면서 이란 유조선 나포 등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도 불구하고 60달러 초반으로 하락했다. 이후 OPEC+ 감산 연장, 사우디 원유시설 피습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상방요인과 미국 셰일오일 등 비OPEC 국가 공급 확대 등 하방요인이 교차하면서 2019년말까지 60달러 초중반대 흐름이 이어졌다.

〈표 2-8〉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단위 : \$/B, 기간중 평균)

	2018년	2019년				
			1/4	2/4	3/4	4/4
두바이유 (Dubai)	69.7	63.5	63.4	67.6	61.4	62.1
브렌트유 (Brent)	71.7	64.2	63.8	68.6	62.0	62.4
서부텍사스유 (WTI)	64.9	57.0	54.8	59.9	56.4	56.9

자료: 한국석유공사

2019년 비철금속 가격은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부진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구리( $\Delta$ 8.0%), 알루미늄( $\Delta$ 15.1%), 아연( $\Delta$ 12.8%), 납( $\Delta$ 10.8%), 주석( $\Delta$ 7.5%) 등 대부분의 비철금속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니켈(6.3%)은 하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

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최지훈 과장(한국은행 파견)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 금지 계획 등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 등으로 상승 했다.

소맥(△1.0%), 대두(△4.5%) 등 농산물 가격은 봄철 미국 중서부 지역 폭우 등에 따른 작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부진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다만, 연말에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등으로 수요부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며 하락을 일부 만회했다. 한편, 옥수수 (3.7%)의 경우에는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차질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상승했다.

〈표 2-9〉 주요 비철금속·곡물 가격 추이

(기간중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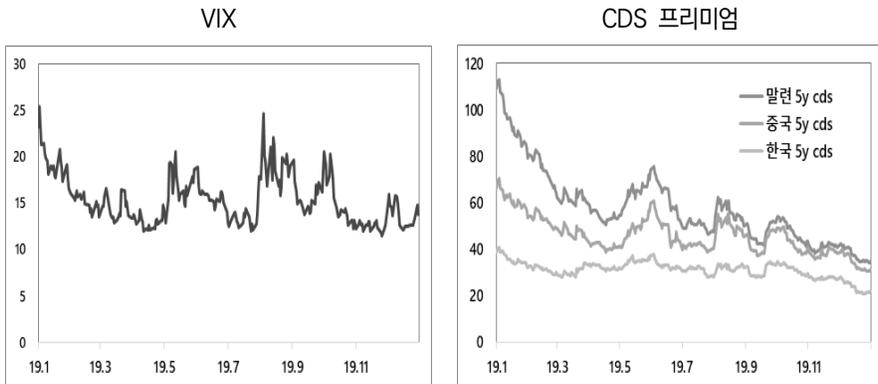
	(단위)	2018년	2019년 (전년비,%)				
			1/4	2/4	3/4	4/4	
구리	(\$/톤)	6,519	6,000 (△8.0)	6,215	6,113	5,802	5,881
알루미늄	(\$/톤)	2,109	1,791 (△15.1)	1,859	1,793	1,762	1,752
니켈	(\$/톤)	13,114	13,936 (6.3)	12,369	12,258	15,540	15,450
아연	(\$/톤)	2,919	2,544 (△12.8)	2,703	2,752	2,348	2,388
납	(\$/톤)	2,241	2,000 (△10.8)	2,036	1,885	2,028	2,045
주석	(\$/톤)	20,147	18,643 (△7.5)	21,052	19,793	17,162	16,680
옥수수	(¢/부셸)	373	387 (3.7)	375	393	397	383
소맥	(¢/부셸)	499	495 (△1.0)	491	479	487	521
대두	(¢/부셸)	938	896 (△4.5)	909	871	887	918

자료: Korea PDS

## (1) 개관

2019년 국제금융시장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반 회복세를 시현하는 가운데 주요국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美·中 무역협상, 브렉시트,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다가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 2-1〉 VIX 및 CDS 프리미엄



\* 자료: 블룸버그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VIX는 연초 美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약화 및 美·中 무역협상 기대감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5월 이후 미중 갈등 심화, 노딜 브렉시트 우려, 홍콩 시위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증감을 반복했다.

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도종화 사무관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2019년 국제금융시장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CDS 프리미엄은 5월 이후 美·中 무역갈등 고조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10월 들어 美·中 1단계 무역합의,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다시 하락세를 시현했다. 글로벌 CDS 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 (2) 주가

선진국 주가는 연초 美 연준의 긴축기조 완화,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5월부터 美·中 갈등,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였다. 10월 이후에는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 美·中 무역협상 진전,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신흥국 주가도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에 따라 2019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표 2-10〉 2019년 연간 주요국 주가상승률

(단위 :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홍콩	인도	터키	브라질
+7.7	+22.3	+12.1	+18.2	+22.3	+8.9	+14.4	+25.4	+31.6

\* 자료: 블룸버그

## (3) 금리

주요국 장기금리(국채 10년물)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은 연초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9월 중순 이후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주요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하였다. 유럽은 미국 국채금리와 대체로 동조흐름을 보인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 지속으로 연초 하락하였으나 10월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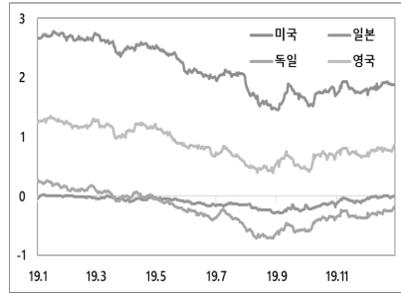
브렉시트 합의 기대 등 영향으로 상승 전환하였다.

〈그림 2-2〉 선진국·신흥국 MSCI 및 주요국 국채금리

MSCI 선진국·신흥국 주가지수\*\*



주요국 국채금리 (10년물, %)



\* 자료: 블룸버그

\*\* 2019.1.1일=100

#### (4) 환율<sup>6)</sup>

2019년도에 달러화는 美·中 무역갈등 등 영향으로 주요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4분기 이후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 영향으로 강세폭을 축소했다.

〈표 2-11〉 2019년 연간 주요국 환율절상률(미달러화 대비)

(단위 : %)

미국	일본	유로	중국	영국	호주	한국
+0.2	+1.0	△2.2	△1.3	+3.9	△0.4	△3.5

※ 자료 : Bloomberg ※ 미국은 달러화 인덱스

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이상민 사무관

2019년 한국경제는 전년 대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 성장하였다. 특히 수출이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한편, 설비·건설투자가 2년 연속 동반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였다.

수출( $\Delta 10.4\%$ )의 경우 반도체( $\Delta 25.9\%$ ), 석유화학( $\Delta 14.8\%$ ), 석유제품( $\Delta 12.2\%$ ) 등 주력품목 대부분이 감소하였다. 한편 무역수지는 2009년 이후 11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흑자폭(289억불)은 크게 감소하여 2012년 이후 7년만에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Delta 7.5\%$ )는 반도체 경기 둔화에 따른 구조적 조정 흐름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면서 감소하였다. 건설투자( $\Delta 2.5\%$ ) 또한 주거용 건물건설이 부진하면서 2년 연속 감소하였다.

한편, 민간소비(1.7%)는 전년 대비 증가폭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개선 및 정책효과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 또한 일자리 중심 정책효과에 따른 청년 및 여성·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취업자가 30.1만명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상황 개선은 소득 확대로 이어지면서 민간소비 증가에도 기여하였다.

물가(0.4%)는 저물가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전년(1.5%)대비 상승세가 하락했다. 무상교육 시행 및 교통·통신비 절감 등 정책효과에 따른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도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병준 사무관

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하반기 중 두 차례 인하하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국고채(3년) 금리(1.36%)는 한때 사상 최저치(1.09%)를 기록하는 등 크게 하락하였고, 은행 여수신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주식시장은 대외여건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전년 대비 7.7% 상승한 2,198pt로 마감하였다. 연중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및 일본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1,910pt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전기전자 등 업종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하였다.

〈표 2-11〉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단위 : %, 전기비)

	2017년	2018년	2019년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	3.2	2.9	2.0	1.8	2.1	2.0	2.3
- 민간소비	2.8	3.2	1.7	1.4	1.8	1.6	1.9
- 설비투자	16.5	△2.3	△7.5	△17.4	△7.0	△2.3	△2.0
실질 GNI	3.3	1.6	△0.3	0.1	△0.2	0.4	0.6
취업자증감(만명)	31.6	9.7	30.1	17.7	23.7	36.6	42.2
실업률	3.7	3.8	3.8	4.5	4.1	3.3	3.1
소비자물가	1.9	1.5	0.4	△0.4	0.4	△0.1	0.3
경상수지(억불)	752.3	774.7	599.7	121.9	104.5	192.0	181.3
수출(통관, 억불)	5,737	6,049	5,422	1,327	1,385	1,347	1,364
- 증가율	15.8	5.4	△10.4	△8.5	△8.7	△12.3	△11.8
수입(통관)	4,785	5,352	5,033	1,238	1,288	1,250	1,258
- 증가율	17.8	11.9	△6.0	△6.5	△3.3	△4.1	△9.7

2019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속에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전년 성장률(2.9%)을 하회하는 2.0% 성장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성장세는 개선되었으나, 제조업 성장이 둔화(3.3 → 1.3%)되고 건설업 생산 감소세도 지속(△2.8 → △2.5)되었다.

〈표 2-12〉 경제활동별 성장률

(단위 : %, 전기비)

	2017년	2018년				2019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3.2	2.9	1.1	0.6	0.6	0.9	2.0	△0.3	1.0	0.4	1.3
- 농림어업	2.3	0.2	1.4	△2.1	△3.4	2.8	2.3	5.8	△5.5	2.9	△1.5
- 제조업	3.7	3.3	1.0	1.4	1.9	1.1	1.3	△2.9	1.0	1.8	1.8
- 건설업	5.9	△2.8	1.4	△2.0	△4.3	0.1	△2.5	△1.2	3.1	△3.7	3.7
- 서비스업	2.6	3.8	1.6	0.5	0.7	0.8	2.9	0.6	0.8	0.5	1.3

자료 : 한국은행

지출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전년의 높은 기저에 따라 증가폭이 축소(3.2 → 1.7%)되었으며,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투자의 기초적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감소폭이 확대(△2.3 → △7.5%)되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으로 연간 2.5% 감소했다. 수출 및 수입도 모두 전년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신채용 사무관

〈표 2-13〉 지출항목별 성장률

(단위 : %, 전기비)

	2017년	2018년				2019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3.2	2.9	1.1	0.6	0.6	0.9	2.0	△0.3	1.0	0.4	1.3
- 민간소비	2.8	3.2	1.3	0.3	0.5	0.5	1.7	0.1	0.7	0.4	0.7
- 설비투자	16.5	△2.3	4.7	△8.9	△3.3	2.4	△7.5	△8.5	2.6	1.7	2.6
- 건설투자	7.3	△4.6	1.3	△2.7	△6.9	2.3	△2.5	△0.7	2.9	△6.4	8.0
- 수출	2.5	4.0	3.7	1.0	4.2	△1.6	1.7	△3.1	1.9	4.5	0.6
- 수입	8.9	1.7	5.4	△2.2	△0.8	1.0	△0.6	△3.2	2.9	1.2	0.4

자료 : 한국은행

성장기여도의 경우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전년 수준(1.0%p)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축소(1.9 → 1.1%p)되었다. 한편, 민간활력 저하에 따라 민간부문 성장기여도가 축소(2.1 → 0.4%p)되었으나 추경 편성, 집행률 제고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힘입어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확대(0.8 → 1.6%p)되었다.

〈표 2-1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 %p, 전기비)

	2017년	2018년				2019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3.2	2.9	1.1	0.6	0.6	0.9	2.0	△0.3	1.0	0.4	1.3
내수	5.2	1.9	1.5	△0.5	△1.4	1.9	1.1	△0.3	1.3	△1.0	1.3
- 민간소비	1.3	1.5	0.6	0.1	0.2	0.2	0.8	0.0	0.3	0.2	0.4
- 설비투자	1.1	△0.7	0.4	△0.9	△0.3	0.2	△0.4	△0.7	0.2	0.1	0.2
- 건설투자	1.4	△0.2	0.2	△0.4	△1.1	0.3	△0.7	△0.1	0.4	△1.0	1.1
순수출	△2.0	1.0	△0.4	1.2	2.0	△1.1	1.0	△0.1	△0.3	1.4	0.1
민간	2.5	2.1	0.8	0.5	0.7	△0.2	0.4	0.0	0.0	0.1	0.5
정부	0.7	0.8	0.2	0.2	0.0	1.1	1.6	△0.4	1.0	0.3	0.9

자료 : 한국은행

2019년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전년대비 0.1% 증가하여 실질 GDP 성장률(2.0%)을 하회했다. 이는 교역조건이 악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감소 등에 기인했다.

〈표 2-15〉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비)

	2017년	2018년				2019년p					
		1/4	2/4	3/4	4/4	1/4	2/4	3/4	4/4		
교역조건지수 <sup>1)</sup>	0.2	△3.2	△0.9	△2.4	△5.0	△4.6	△5.9	△5.2	△6.4	△6.4	△5.1
실질 GNI	3.3	1.6	2.8	2.3	0.2	1.2	0.1	△0.4	0.0	0.0	0.8

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 디플레이터 기준(2015=100)

자료 : 한국은행

2019년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919.0조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으며, 미국 달러기준으로는 4.6% 감소한 1조 6,463억 달러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3,743.5만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으며, 미국 달러기준으로는 전년대비 4.3% 감소한 32,114.9달러를 기록했다.

〈표 2-16〉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당해연도 가격기준)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내총생산(GDP)	조원	1,740.8	1,835.7	1,898.2	1,919.0
	억달러	15,000.3	16,233.1	17,251.6	16,463.3
1인당 국민총소득(GNI)	만원	3,411.2	3,588.6	3,693.0	3,743.5
	달러	2,9394.3	31,734.1	33,563.7	32,114.9

자료 : 한국은행

한편, 2019년 GDP 디플레이터는 교역조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 전환(104.8 → 103.8)했다.

〈표 2-17〉 GDP 디플레이터

(단위 : 2015=100,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GDP 디플레이터	102.0	104.3	104.8	103.8
(상승률)	2.0	2.2	0.5	△0.9

자료 : 한국은행

총저축률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1.7%)보다 최종소비지출 (3.7%)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전년(35.9%)대비 1.3%p 하락한 34.7%를 기록했다. 민간 총저축률은 전년과 동일한 27.8%를 나타냈으며, 정부 총저축률은 6.9%로 전년(8.2%)이 비해 1.3%p 하락했다. 한편, 국내 총투자율은 전년(31.5%)보다 0.3%p 하락한 31.2%를 기록했다.

〈표 2-18〉 총저축률 및 투자율

(단위 :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저축률	36.8	37.1	35.9	34.7
민간	29.5	29.2	27.8	27.8
- 가계	7.5	6.8	6.8	6.9
- 기업	22.0	22.4	21.0	20.9
정부	7.3	7.8	8.2	6.9
국내총투자율	30.1	32.3	31.5	31.2

자료 : 한국은행

(1) 민간소비<sup>9)</sup>

2019년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고용상황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년대비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분기별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가계소득 개선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기저영향 등으로 증가폭은 전년대비 1%대로 완만하게 증가하며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월) 등으로 대응했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4/4분기 소폭 개선되었다.

〈표 2-19〉 민간소비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

	2017년	2018년		2019년p			
				1/4	2/4	3/4	4/4
민간소비	2.8	3.2	1.7	1.4	1.8	1.6	1.9
- 가계소비	2.8	3.1	1.7	1.6	1.8	1.5	1.8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	1.2	5.6	0.9	△5.1	2.3	3.0	4.4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부문별로는 내구재 등 가계 국내소비 전 영역에서 증가세가 지속 되었으나, 전년 대비 증가폭은 일부 축소된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2.6%)는 전년과 동일한 증가폭을 기록했으나, 승용차·가전 등 내구재(1.9%) 및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1.4%) 증가폭이 전년 대비 감소하며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약했다. 한편,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감소 전환(△7.9%) 및 비거주자

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신태섭 사무관

국내소비 증가(22.1%)에 따라 가계소비(1.7%)는 전년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표 2-20〉 부문별 가계소비

(단위 : 전년동기비, %)

	2017년	2018년	2019년p				
			1/4	2/4	3/4	4/4	
가계 국내소비	1.7	3.3	2.5	2.6	2.6	2.4	2.5
- 내구재	4.2	6.4	1.9	0.8	△0.5	1.3	6.2
- 준내구재	△0.7	4.7	1.4	4.7	4.1	0.2	△2.7
- 비내구재	1.6	3.0	3.0	2.0	3.1	3.1	3.6
- 서비스	1.7	2.6	2.6	2.8	2.7	2.7	2.3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15.1	9.6	△7.9	△10.8	△6.8	△7.4	△6.2
(공제)비거주자 국내소비	△27.2	31.6	22.1	22.4	22.4	26.3	17.7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 (2) 설비투자<sup>10)</sup>

2019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의 기초적 조정,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7.5%)하였다.

부문별로는 반도체 경기 둔화의 영향에 따라 반도체 제조장비 등 기계류 수입이 감소하여 기계류 투자가 크게 감소(△11.5%)하였으나,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5.3%)하면서 일부 보완하였다.

향후 설비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민간부문 모두 둔화되면서 전년대비 감소(△0.9%)하였다.

1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병준 사무관

〈표 2-21〉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7년	2018년		2019년p			
				1/4	2/4	3/4	4/4
설비투자	16.5	△2.3	△7.5	△17.4	△7.0	△2.3	△2.0
- 기계류	23.0	△4.2	△11.5	△22.2	△13.4	△7.3	△0.3
- 운송장비	△1.9	4.0	5.3	3.0	13.8	14.4	△6.1
국내기계수주	18.4	4.8	△0.9	△10.0	△1.8	△6.1	15.3
- 공공	△22.5	9.5	△6.7	△39.0	△39.3	△48.4	77.2
- 민간	23.2	4.4	△0.4	△7.9	1.1	△3.1	9.2
기계류 수입	18.8	△0.9	△12.2	△25.5	△13.0	△4.8	△2.4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 (3) 건설투자<sup>11)</sup>

2019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2.5%) 하였다.

부문별로는 주거용 건물건설이 지난해에 이어 기초적 조정 흐름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크게 감소(△11.9%)하였다. 특히, 2015~2017년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마무리된 영향이 컸다. 한편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전년대비 증가 전환(1.3%)하였으며, 토목건설은 SOC 예산 확대 등 영향으로 증가(5.8%)하였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면적은 건축·토목 모두 증가하였으나, 건축허가 면적은 감소하면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1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병준 사무관

〈표 2-22〉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7년	2018년		2019년p			
				1/4	2/4	3/4	4/4
건설투자	7.3	△4.6	△2.5	△8.1	△3.0	△2.7	2.6
- 주거용건물	15.3	△5.3	△11.9	△12.7	△11.8	△14.0	△9.0
- 비주거용건물	9.3	△5.5	1.3	△2.4	△0.8	3.9	3.7
- 토목	△4.7	△2.7	5.8	△7.8	5.9	5.9	15.7
건설수주	△1.7	0.2	6.2	△5.5	2.0	2.6	20.9
- 건축	△4.7	△5.0	6.4	△5.3	5.5	7.8	14.4
- 토목	9.6	17.3	5.7	△6.1	△10.5	△7.1	40.9
건축허가면적	△4.0	△6.3	△10.4	△12.6	△18.3	△12.2	1.9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산업활동동향), 국토교통부

## (1) 수출입

2019년 수출(통관기준)은 전년대비  $\Delta 10.4\%$  감소한 5,42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Delta 25.9\%$ ), 석유제품( $\Delta 12.2\%$ ), 석유화학( $\Delta 14.8\%$ ), 일반기계( $\Delta 1.8\%$ ), 철강( $\Delta 8.6\%$ ), 디스플레이( $\Delta 17.0\%$ ), 무선통신기기( $\Delta 22.7\%$ ), 선박( $\Delta 5.2\%$ ) 등 주력품목 대부분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Delta 16.0\%$ ), 일본( $\Delta 6.9\%$ ), EU( $\Delta 8.0\%$ ), 아세안 ( $\Delta 5.0\%$ ), 중남미( $\Delta 5.2\%$ ), 중동( $\Delta 18.6\%$ ) 등 주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표 2-23〉 수 출

(단위: 억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중	1/4	2/4	3/4	4/4
수출액	5,268	4,954	5,737	6,049	5,422	1,327	1,385	1,347	1,364
증감률	$\Delta 8.0$	$\Delta 5.9$	15.8	5.4	$\Delta 10.4$	$\Delta 8.5$	$\Delta 8.7$	$\Delta 12.3$	$\Delta 11.8$

자료 : 관세청

2019년 수입(통관기준)은 전년대비  $\Delta 6.0\%$  감소한 5,033억달러를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원자재( $\Delta 9.0\%$ ), 자본재( $\Delta 5.6\%$ )는 감소하였으나 소비재(3.6%) 수입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5.1%), 중국(1.6%)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아세안( $\Delta 11.2\%$ ), 일본( $\Delta 12.9\%$ ), 중동( $\Delta 43.5\%$ ) 등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감소했다.

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태순 사무관

〈표 2-24〉 수 입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중	1/4	2/4	3/4	4/4
수입액	4,365	4,062	4,785	5,352	5,033	1,238	1,288	1,250	1,258
증감률	△16.9	△6.9	17.8	11.9	△6.0	△6.5	△3.3	△4.1	△9.7

자료 : 관세청

2019년 무역수지는 389억달러로 2009년 이후 11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월별로는 2012년 2월 이후 2019년 12월까지 95개월 연속 흑자를 시현했다. 지역별로는 중국(519억달러), 아세안(409억달러), 베트남(285억달러), 미국(115억달러), 홍콩(428억달러), 중남미(82억달러) 등에서 흑자를 기록한 반면, 중동(△638억달러), 일본(△192억달러), EU(△32억달러) 등에 대해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표 2-25〉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중	1/4	2/4	3/4	4/4
무역수지	903	892	952	697	389	89	97	98	105

자료 : 관세청

〈표 2-26〉 품목별 수출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전체	604,860	542,232	△10.4
반도체	126,706	93,930	△25.9
일반기계	53,558	52,581	△1.8
석유화학	49,984	40,691	△14.8
석유제품	46,350	42,567	△12.2
자동차	40,887	43,036	5.3
철강제품	33,973	31,043	△8.6
디스플레이	24,679	20,492	△17.0
자동차부품	23,119	22,535	△2.5
선박류	21,275	20,159	△5.2
무선통신기기	17,089	14,082	△17.6
섬유류	14,080	12,959	△8.0
컴퓨터	10,760	8,540	△20.6
가전	7,216	6,957	△3.6

자료 : 무역협회

〈표 2-27〉 지역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전체	604,860	542,232	△10.4
중국	162,125	136,203	△16.0
아세안	100,114	95,086	△5.0
미국	72,720	73,343	0.9
EU	57,676	52,758	△8.5
베트남	48,622	48,178	△0.9
일본	30,529	28,420	△6.9
중남미	27,768	26,337	△5.2
중동	21,688	17,661	△18.6
인도	15,606	15,106	△3.3
CIS	10,822	13,609	25.7

자료 : 무역협회

〈표 2-28〉 용도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전체	535,202	5,033	△6.0
소비재	81,596	84,533	3.6
원자재	279,030	253,953	△9.0
자본재	174,577	164,857	△5.6

자료 : 관세청

〈표 2-29〉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통관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액
전체	69,657	38,890	△30,767
중국	55,636	51,910	△3,726
아세안	40,486	40,899	413
미국	13,852	11,465	△2,387
EU	△4,620	△3,213	1,407
베트남	28,979	28,519	△460
홍콩	43,999	42,820	△1,179
일본	△24,075	△19,161	4,914
중남미	8,436	8,213	△223
중동	△64,384	△63,761	623
인도	9,722	9,907	185
CIS	△8,521	△8,230	291

자료 : 무역협회

## (2) 경상수지

2019년 경상수지는 599.7억달러 흑자로 1998년 이후 22년 연속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표 2-30〉 경상수지

(단위 : 억달러)

	2017년	2018년	연중	2019년			
				1/4	2/4	3/4	4/4
경상수지	752.3	774.7	599.7	121.9	104.5	192.0	181.3
- 상품수지	1,135.9	1,100.9	768.6	195.2	173.8	195.1	204.5
(수 출)	5,803.1	6,262.7	5,619.6	1,377.2	1,406.6	1,399.2	1,436.6
(수 입)	4,667.2	5,161.8	4,851.0	1,182.1	1,232.8	1,204.0	1,232.1
- 서비스수지	△367.3	△293.7	△230.3	△71.8	△43.6	△53.7	△61.2
(수 입)	897.0	1,036.8	1,076.3	257.3	276.8	269.7	272.5
(지 급)	1,264.4	1,330.5	1,306.6	329.1	320.4	323.4	333.7
- 본원소득수지	53.4	49.0	122.0	15.2	△8.2	60.3	54.7
(수 입)	294.7	348.2	419.1	84.0	113.3	113.1	108.7
(지 급)	241.4	299.2	297.1	68.8	121.5	52.8	54.0
- 이전소득수지	△69.6	△81.5	△60.6	△16.7	△17.5	△9.7	△16.7
(수 입)	97.1	94.8	98.6	24.3	24.9	24.4	25.0
(지 급)	166.7	176.3	159.2	41.0	42.4	34.1	41.7

자료 : 한국은행 ECOS

상품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감소하며 2018년(1,101억달러)보다 감소한 7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sup>13)</sup>

13) 통관수출입과 경상수지 상의 상품수출입은 수출입 거래인식 시점, 운임·보험료 포함 여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표 2-31〉 상품수지

(단위 : 억달러)

	2017년	2018년	연중	2019년			
				1/4	2/4	3/4	4/4
상품수지	1,135.9	1,100.9	768.6	195.2	173.8	195.1	204.5
- 수 출(FOB)	5,803.1	6,262.7	5,619.6	1,377.2	1,406.6	1,399.2	1,436.6
〈통관수출〉	5,736.9	6,048.6	5,422.2	1,326.5	1,384.9	1,347.3	1,363.6
- 수 입(FOB)	4,667.2	5,161.8	4,851.0	1,182.1	1,232.8	1,204.0	1,232.1
〈통관수입〉	4,784.8	5,352.0	5,033.4	1,238.0	1,287.7	1,249.6	1,258.1

자료 : 한국은행 ECOS

서비스수지는 운송·여행·건설수지 등이 개선되면서 적자폭이 축소 되었다.  
(2018: △294억달러 → 2019: △230억달러)

여행수지는 방한 외국인관광객 증가하며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설수지는 해외건설 수주 감소 등 영향으로 흑자폭이 축소되었다.

〈표 2-32〉 서비스수지

(단위 : 억달러)

	2017년	2018년	연중	2019년			
				1/4	2/4	3/4	4/4
서비스수지	△367.3	△293.7	△230.3	△71.8	△43.6	△53.7	△61.2
- 가 공	△69.6	△73.2	△69.9	△18.0	△18.0	△18.4	△15.7
- 운 송	△54.2	△25.1	△16.2	△6.6	△2.4	△1.9	△5.3
- 여 행	△183.2	△165.7	△106.7	△25.4	△23.1	△29.2	△29.0
- 건 설	78.8	97.2	96.4	22.1	25.4	24.2	24.7
- 지재권사용료	△24.1	△20.6	△22.1	△13.2	△2.2	△3.0	△3.7
- 기타사업서비스	△122.1	△122.1	△123.5	△32.0	△26.6	△29.2	△35.7

자료 : 한국은행 ECOS

본원소득수지는 4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18년(49억달러 흑자)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급료 및 임금수지는 적자폭이 2018년보다 소폭 축소되었으며,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수지는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이전소득수지는 △61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82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표 2-33〉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단위 : 억달러)

	2017년	2018년	연중	2019년			
				1/4	2/4	3/4	4/4
본원소득수지	53.4	49.0	122.0	15.2	△8.2	60.3	54.7
- 급료및임금	△12.1	△11.7	△6.3	△1.1	△1.6	△1.3	△2.3
- 투자소득	65.4	60.8	128.3	16.3	△6.6	61.6	57.0
이전소득수지	△69.6	△81.5	△60.6	△16.7	△17.5	△9.7	△16.7

자료 : 한국은행 ECOS

2019년에는 연간 취업자가 전년대비 30.1만명 증가하였고,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15~64세 고용률도 6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특히 취업취약계층인 청년·여성·고령층의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분기별 흐름을 보면 1분기는 10만명 후반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2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4분기에는 40만명 초반까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나며 취업자 증가폭이 대폭 확대되었다. 건설업은 건설투자 둔화 등 영향으로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되었고, 제조업의 경우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안정성 높은 상용직 취업자는 40만명대 중반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고,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 전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 전환되며 자영업자 감소폭은 축소되었다.

연령별로는 인구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50대 이상 취업자는 증가하고, 30~40대 취업자는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청년층의 경우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고용률을 살펴보면 청년, 30대, 50대, 60세 이상은 상승하였고, 40대는 하락했다.

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하다애 사무관

〈표 2-34〉 취업자 증감

(단위 : 만명)

	2017년	2018년	2019년				
	연중	연중	연중	1/4	2/4	3/4	4/4
전체 취업자 증감	31.6	9.7	30.1	17.7	23.7	36.6	42.2
〈산업별〉							
제조업	-1.8	-5.6	-8.1	-14.3	-6.4	-7.6	-4.1
건설업	11.9	4.7	-1.5	-0.7	-0.1	-0.1	-5.0
서비스업	20.9	5.1	34.8	24.0	29.5	39.1	46.6
· 도소매·숙박음식업	3.8	-11.7	0.1	-5.7	1.7	2.7	1.5
· 전문·과학기술업	-0.9	0.4	6.0	6.3	3.6	6.2	8.0
· 보건·사회복지업	6.1	12.5	16.0	19.6	12.6	16.3	15.5
· 공공행정	5.5	5.2	-3.3	0.2	-4.2	-5.9	-3.4
· 사업시설관리·지원	-1.7	-6.3	0.1	-4.9	-3.3	3.3	5.2
농림어업	0.6	6.2	5.5	10.1	1.8	5.8	4.3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26.5	15.0	35.7	22.3	29.5	42.7	48.2
· 상용직	36.6	34.5	44.4	33.4	34.7	49.1	60.3
· 임시·일용직	-10.1	-19.5	-8.7	-11.1	-5.3	-6.4	-12.1
비임금근로자	5.1	-5.2	-5.6	-4.5	-5.8	-6.1	-6.0
· 자영업자	6.8	-4.4	-3.2	-3.9	-2.6	-3.0	-3.4
· 무급가족종사자	-1.7	-0.9	-2.4	-0.6	-3.2	-3.0	-2.6
〈연령별〉							
청년층(15~29세)	-0.1	-0.3	4.1	2.2	3.0	3.9	7.4
30대	-2.9	-6.1	-5.3	-10.8	-6.5	-1.5	-2.4
40대	-5.0	-11.7	-16.2	-15.4	-18.2	-16.2	-15.1
50대	15.2	4.4	9.8	8.1	10.0	12.1	8.9
60대 이상	24.2	23.4	37.7	33.6	35.4	38.3	43.5

자료 : 통계청

〈표 2-35〉 주요 고용지표

(단위 : 만명, %)

	2017년	2018년	2019년				
	연중	연중	연중	1/4	2/4	3/4	4/4
15세 이상 인구	4,393	4,418	4,450	4,437	4,447	4,455	4,463
경제활동인구	2,775	2,790	2,819	2,770	2,843	2,833	2,828
· 경제활동참가율	63.2	63.1	63.3	62.4	63.9	63.6	63.4
취업자	2,672	2,682	2,712	2,646	2,726	2,738	2,739
· 고용률(15세 이상)	60.8	60.7	60.9	59.6	61.3	61.5	61.4
· 고용률(15~64세)	66.6	66.6	66.8	66.0	66.9	67.1	67.3
실업자	102	107	106	124	118	95	89
· 실업률	3.7	3.8	3.8	4.5	4.1	3.3	3.1
비경제활동인구	1,618	1,629	1,632	1,667	1,603	1,622	1,635

자료 : 통계청

2019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4% 상승했다. 저물가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호한 기상여건 및 국제유가 안정, 복지정책 확대 등 정책요인의 영향으로 전년(1.5%)보다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대비 1.7% 감소했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8.1%)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농산물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대비 3.0% 감소하였고, 축산물은 보험세를 보였다.

공업제품 가격은 전년대비 0.2% 감소했다. 가공식품은 전년대비 2.0%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국제유가 안정 및 유류세 인하(~8월)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5.7% 하락하며 공업제품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전기료(0.2%), 도시가스(3.5%), 지역난방비 (1.6%) 등이 상승하며 전년대비 1.5% 상승했고, 집세는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공공서비스는 교통·통신비 경감 정책, 무상교육 시행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0.5% 하락했고, 개인서비스는 무상급식 확대, 건보적용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2.5%)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되며 1.9% 상승했다. 대표적으로 학교 급식비(△41.2%), 병원검사료(△9.4%), 고교납입금(△13.5%)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석유류·농산물 등 공급 측 변동요인을 제거하여 기초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대비 0.9% 상승했으며, 소비자 체감지표 성격을 갖는 생활물가 지수의 경우 전년대비 0.2% 상승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15)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송지현 사무관

〈표 2-36〉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 전년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비자물가	1.0	1.9	1.5	0.4
농축수산물	3.8	5.5	3.7	△1.7
(농산물)	3.8	4.6	8.1	△3.0
(축산물)	4.4	6.5	△3.5	0.0
(수산물)	2.9	6.8	3.2	0.1
공업제품	△0.5	1.4	1.3	△0.2
(가공식품)	0.5	0.7	1.3	2.0
(석유류제품)	△8.1	7.7	6.8	△5.7
전기·수도·가스	△9.2	△1.4	△2.9	1.5
(전기료)	△4.1	△6.3	△2.9	0.2
(도시가스)	△17.3	3.5	△4.3	3.5
집세	1.9	1.6	0.6	△0.1
공공서비스	1.5	1.0	0.2	△0.5
개인서비스	2.7	2.5	2.5	1.9
(외식)	2.5	2.4	3.0	1.9
(외식 제외)	2.9	2.6	2.2	1.8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1.6	1.5	1.2	0.9
생활물가지수	0.7	2.5	1.6	0.2

자료 : 통계청

2019년 정부 총수입은 2018년 추경 기준(476.4조원)대비 3.3조원 적은 473.1조원이며, 총지출은 추경 기준(475.4조원) 대비 9.7조원 많은 485.1조원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추경 기준(1.0조원) 보다 13.0조원 감소한 12.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4조원 적자로 2018년 추경 기준(△42.3조원)에 비해 적자폭이 12.1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8%로 추경 기준(△2.2%) 보다 0.7%p 감소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비율은 2019년 말 기준 37.7%로 추경 기준(37.2%) 보다 0.5%p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 기준 2018년 재정수지와 2019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각각 3.1%와 42.2%로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참고로 2018년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8%, 2019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110.0%이다.

〈표 2-37〉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및 부채비율

(단위 : GDP 대비 %)

	한국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	OECD평균
재정수지 비율(2018)	3.1	△0.4	△6.3	△2.2	△2.3	△2.8
부채 비율(2019)	42.2	94.3	108.4	117.3	225.3	110.0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20.12), 한국은 정부산출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기준

1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김영웅 사무관

## (1) 금리동향

2019년 중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 지원 및 물가 둔화 압력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총 두 차례 인하 하였다.(1.75% → 1.5% → 1.25%) 상반기 중에는 1.75%로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하반기 중 대외 리스크 심화에 따른 성장과 물가 하방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7월과 10월중 각각 0.25%p 인하하였다.

2019년말 국고채(3년) 금리는 1.36%를 기록하며, 작년말(1.82%)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국고채금리(3년)는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국고채(3년) 금리는 8월 19일 사상 최저치인 1.09%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미·중 무역협상 진전, 낮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소폭 반등하였다.

회사채(3년) 금리는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채권투자 자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말 대비 0.35%p 하락하였다. (2019년말 1.94%, AA- 기준)

은행 여수신금리 또한 기준금리 인하 및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으며 큰 폭 하락하였다. 2019년말 수신금리는 1.60%로 작년말 대비 0.45%p 하락하였고, 2019년말 여신금리는 3.22%로 작년말 대비 0.50%p 하락하였다.

---

1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정영주 사무관

〈표 2-38〉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단위 : %, 기말기준)

	2018	2019.											
		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1일)	1.89	1.81	1.80	1.81	1.79	1.79	1.83	1.56	1.54	1.58	1.29	1.28	1.39
CD(91일)	1.93	1.86	1.89	1.90	1.84	1.84	1.78	1.50	1.49	1.55	1.44	1.53	1.53
국고채(3년)	1.82	1.81	1.81	1.69	1.70	1.59	1.47	1.29	1.17	1.30	1.47	1.39	1.36
회사채 (3년, AA-)	2.29	2.26	2.25	2.16	2.17	2.08	1.97	1.80	1.69	1.80	1.97	1.92	1.94
회사채 (3년, BBB-)	8.36	8.34	8.33	8.24	8.25	8.15	8.08	7.90	7.80	7.90	8.08	8.03	8.05
수신금리1)	2.05	2.00	1.93	1.95	1.88	1.86	1.79	1.69	1.52	1.57	1.55	1.62	1.60
여신금리2)	3.72	3.73	3.70	3.66	3.65	3.62	3.49	3.40	3.19	3.31	3.20	3.18	3.22
장단기금리차3)	△0.11	△0.05	△0.08	△0.21	△0.14	△0.25	△0.31	△0.21	△0.32	△0.25	0.03	△0.14	△0.17
회사채프리미엄4)	0.47	0.45	0.44	0.47	0.47	0.49	0.50	0.51	0.52	0.50	0.50	0.53	0.58
회사채 신용등급별 금리차5)	6.07	6.08	6.08	6.08	6.08	6.07	6.11	6.10	6.11	6.10	6.11	6.11	6.11

1)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신규취급액 기준)

2) 예금은행 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3) 국고채(3년) - CD(91일)

4) 회사채(3년, AA-) - 국고채(3년)

5) 회사채(3년, BBB-) - 회사채(3년, AA-)

## (2) 주식시장 동향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주로 대외요인의 전개양상에 따라 등락하며 2018년말 대비 +7.7% 상승한 2,198pt로 마감하였다. 연초 美 연준의 금리 인상속도 조절 시사,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미·중 무역협상 타결 무산 및 양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강경조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이 이어지며 8월중 1,910선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8월 하순 이후 미·중 무역협상 재개 및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였다. 전기전자 및 서비스업 등이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전기전자 +39.9%, 서비스업 +12.9%)한 반면, 건설업(△16.5%),

전기가스(△16.6%) 등은 하락하였다.

코스닥은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요인의 전개영상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2018년말 대비 0.9% 하락한 670pt로 마감하였다. 특히 대외요인 이외에도 바이오 등 일부업종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이어지며 하락하였다.

〈표 2-39〉 주식시장 동향

	2018년	2019년				
		연중	1/4	2/4	3/4	4/4
종합주가지수(기말)	2,041.0	2,197.7	2,140.7	2,130.6	2,063.1	2,197.7
거래량(일평균, 억주)	4.0	4.7	3.9	5.2	4.9	4.8
코스닥 지수(기말)	675.7	669.8	729.3	690.5	621.8	669.8
거래량(일평균, 억주)	7.9	8.3	7.5	8.4	7.8	9.2

2018년 순매도세를 보인 외국인 유가증권 주식투자는 미·중 갈등 등 대외요인에도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가며 순매수로 전환되었다. 외국인 유가증권 시가총액 보유비중은 35.8%에서 38.4%로 +2.6%p 증가하였다.

기관 투자자는 지난해와 달리 순매수로 전환하였으나, 개인은 1.2조원을 순매도하였다.

〈표 2-40〉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유가증권) 추이

(단위 : 조원, 체결기준)

	2018년	2019년				
		연중	1/4	2/4	3/4	4/4
외국인	△5.8	0.8	0.5	0.6	△1.1	△3.1
기관투자자	△2.9	8.9	△1.3	0.4	3.7	6.0
개인	7.0	△1.2	△3.5	△0.9	△2.9	△4.5

### (3) 자금흐름

2019년중 은행수신은 2020.1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대율 규제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자금조달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작년말 대비 약 15조원 증가하였다. 특히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수시입출식 예금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저금리 기조 하에 투자자들의 수익 추구현상이 강화되면서 작년말 대비 98.6조원 증가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기타펀드(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는 작년말 대비 68.0조원 증가하는 등 다른 펀드 대비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표 2-41〉 금융기관 수신 추이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

	2018년	2019년				
		연중	1/4	2/4	3/4	4/4
은행 <sup>1)</sup>	91.6	106.3	25.3	24.6	21.5	34.9
(수시입출식 <sup>2)</sup> )	10.9	65.9	10.9	10.0	△2.4	47.5
(정기예금)	72.2	48.3	14.3	19.2	23.7	△8.8
(단기시장성 <sup>3)</sup> )	3.2	△7.6	1.8	△1.5	△4.6	△3.4
(은행채)	5.3	△6.9	△3.9	△4.6	3.0	△6.5
자산운용사	53.8	98.6	29.8	34.7	15.5	18.7
(MMF)	△7.7	15.2	9.5	4.3	△1.3	2.6
(주식형)	7.3	2.5	0.2	△3.9	△2.2	8.4
(채권형)	6.4	15.7	7.2	9.3	4.1	△4.9
(기타펀드 <sup>4)</sup> )	48.3	68.0	13.4	25.8	15.4	13.4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예금 제외 기준

2) 실세요구불예금 포함

3) CD, RP, 표지어음 기준

4)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

#### (4) 기업자금사정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이 하락하고 부도업체 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모습을 보이며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대출 연체율 또한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 지속 등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표 2-42〉 기업자금사정

	2018년	2019년				
		연중	1/4	2/4	3/4	4/4
어음부도율(%)	0.13	0.08	0.10	0.10	0.07	0.06
부도업체수(개)	469	414	112	123	91	88
기업대출 연체율 <sup>1)</sup> (%)	0.5	0.5	0.6	0.5	0.6	0.5

1) 기말기준

은행의 기업대출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대기업 대출은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중소기업대출은 대출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회사채는 작년에 이어 순발행을 지속하였다. CP의 경우 상반기까지 순발행을 이어가다 3/4분기부터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순상환을 기록하였으며,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은 작년 대비 △3.6조원 감소하였다.

〈표 2-43〉 기업자금조달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

	2018년	2019년				
		연중	1/4	2/4	3/4	4/4
은행대출 <sup>1)</sup>	46.7	47.7	12.6	14.6	9.2	11.2
(대기업)	6.9	△1.7	0.2	0.5	△3.5	0.9
(중소기업)	39.8	49.4	12.4	14.1	12.7	10.3
직접금융	16.0	4.6	△6.9	5.0	5.4	1.1
(회사채 순발행) <sup>2)</sup>	5.2	9.6	0.0	3.4	4.3	1.9
(CP 순발행) <sup>3)</sup>	0.7	△1.4	1.2	0.2	0.0	△2.8
(주식발행) <sup>4)</sup>	10.1	△3.6	△8.1	1.4	1.1	2.0

1) 신탁대출 포함

2)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3) 증권·종금사 및 은행신탁 취급분

4)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합계

## (1) 환율동향

2019년말 원/달러 환율은 증가 기준으로 1,156.4원으로 마감하여 전년말(1,115.7원)에 비해 40.7원 상승(3.5% 절하)했다.

원/달러 환율은 1분기 중 1,110~1,140원내 안정적인 흐름이었으나, 4월 중순 이후 美·中 무역갈등 등 대내외 불안요인 등으로 8월 1220원대까지 상승했다. 10월 중순 이후에는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며, 연말 1,150원 대에서 마감했다.

〈그림 2-3〉 2019년 중 원/달러 및 원/위안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폭 및 변동률은 각각 3.5원과 0.30%로 2018년(4.1원 및 0.37%)에 비해 축소되었다.

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이상민 사무관

〈표 2-44〉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추이

	2017	2018	2019				
				1/4	2/4	3/4	4/4
전일대비 변동폭(원)	4.4	4.1	3.5	2.9	3.5	4.0	3.6
변동율(%)	0.38	0.37	0.30	0.26	0.30	0.33	0.31

한편, 원/100엔 환율과 원/위안 환율도 각각 1059.6원, 165.6원으로 전년말 대비 상승(절하)했다.

〈표 2-45〉 원/100엔 및 원/위안 환율 추이

	2017	2018	2019
원/달러	1,070.5	1,115.7	1,156.4
원/100엔	949.2	1,008.8	1,059.6
원/위안	163.15	162.43	165.60

## (2) 외환거래 동향

2019년중 국내 은행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외국환증개회사 경유 기준)는 262.1억달러로 전년(245.0억달러)에 비해 17.1억달러 증가했다.

〈표 2-46〉 은행간 외환거래 규모 추이

(단위 : 일평균, 억달러, %)

	2018	2019				
			1/4	2/4	3/4	4/4
현 물 환	97.8	92.2	91.9	93.5	92.6	91.0
선 물 환	4.7	6.2	4.5	5.9	6.1	8.4
외환스왑	121.2	138.5	142.1	140.1	137.2	134.7
기타파생상품	21.3	25.1	24.2	26.1	25.9	24.4
계	245.0	262.1	262.6	265.5	261.7	258.4

(1) 외환보유액<sup>19)</sup>

2019년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88억달러로 전년 대비 51억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스위스, 러시아, 사우디, 대만, 인도, 홍콩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으로, 대외 충격을 완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2-47〉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달러)

1998말	2008말	2010말	2012말	2014말	2015말	2016말	2017말	2018말	2019말
485	2,012	2,916	3,270	3,636	3,680	3,711	3,893	4,037	4,088

〈표 2-48〉 2019년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단위 : 억달러)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31,079	6	대 만	4,781
2	일 본	13,238	7	인 도	4,599
3	스위스	8,548	8	홍 콩	4,414
4	러시아	5,544	9	한 국	4,088
5	사우디아라비아	4,994	10	브라질	3,569

또한, 2019년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약 3.1배, 경상지급액의 약 7.4개월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외환보유액 적정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이다.

2019년에도美中 무역분쟁, 중동지정학적 리스크, 블랙시트, 글로벌 경기둔화

1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김유이 사무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대외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굳건히 했다.

## (2) 국가신용등급<sup>20)</sup>

2019년은 글로벌 경기둔화,美中 무역 갈등 등 대외 위험요인과人民币汇率 등 대내요인이 증첩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수출 등도 침체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신용평가사와 소통하며 우리 경제의 건실한 기초체력 및 위기대응 능력 등을 홍보했다. 정기 연례협의 뿐만 아니라 고위급 면담, 영문 정책자료 제공 등을 활용하여 주요국대비 양호한 재정·대외건전성 등을 알리고, 경제정책방향·예산안 등 주요 정책도 적시에 공유했다. 뿐만 아니라 對北 관계, 가계부채 등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정책 대응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에도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및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양호한 재정·대외건전성, 높은 재정·통화유연성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았다. 각 신용평가사와의 연례협의 및 등급평가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이정아 사무관

가. S&P, AA(전망: 안정적)으로 유지

4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3일간 S&P 평가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S&P는 최저임금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 한반도 비핵화 전망 등에 관심을 가졌다. 정부는 연례협의에서 현재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 위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 중이며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입증 책임 전환 등 규제 혁신도 병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고정 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가계부채 위험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경우, 北美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하며 양측이 대화를 지속할 의지가 있으므로 단기간에 타결은 어려워도 협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S&P측은 11.6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경제적 번영, 높은 재정·통화 유연성,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에 기여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다만, S&P는 현재 안정적 등급 전망은 향후 2년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경제 펀더멘탈을 저해할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하면서, 여전히 북한 관련 안보 위험을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요인으로 지적했다.

나. 무디스, Aa2(전망: 안정적)으로 유지

무디스와의 연례협의를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되었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 경제동향 및 정책대응, 중장기 재정건전성, 가계부채, 북한 관련 진전사항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연례

협약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대규모 기업투자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분야별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출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노력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임을 언급했다. 재정정책은 2017년부터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며,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의 경우, 南北·北美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의 모멘텀이 형성 되었고,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무디스는 7.5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Aa2(전망: 안정적)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무역 의존도가 높아 대외수요 감소에 따른 단기적 부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신용등급 국가 대비 한국 경제는 매우 다각화되어 있으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우 견고한 재정 펀더멘탈은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해 충분한 완충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 Fitch, AA-(전망: 안정적)으로 유지

정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총 3일간 Fitch와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Fitch는 일본 수출 규제 및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북한 비핵화 진전 가능성 등에 대해 특히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능력 제고와 수입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부진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무역 금융 확대 등 다각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 및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2021년까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나, 고강도 지출 혁신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정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요하므로 北美 대화 진전을 고대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경협이 본격화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Fitch는 2020년 2월 12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Fitch는 현재 한국 신용등급이 고령화·저성장 등 중기 도전과제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하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건전한 재정관리 경험 및 부채 관리 의지를 바탕으로 단기 재정 확대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순대외채권, 지속적인 경상흑자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Fitch는 북한 관련 외교 노력이 정체되어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신용등급을 제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03

##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 제 3 장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 제1절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1 개 관<sup>21)</sup>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과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정착을 2019년 경제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3축 정책기조를 균형 있게 견지하며 경제정책을 운영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착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투자·소비·수출 등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를 위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2018.12.17) 및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19.7.3)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첫 번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아울러, 9월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2019.9.4)을 추가로 마련·발표하기도 했다.

2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권용준 사무관

우선, 민간·공공·지자체 투자 분위기 확산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민간투자의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 처리하고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하여 사업등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했다. 또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하여 ①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상향, ②생산성향상 시설·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③가속 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 유인도 제고했다. 민자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들을 추가 발굴하고 신속 추진하였다.

공공투자 관련해서는, 2020년 투자 계획 중 1조원을 2019년 하반기로 당겨 조기에 투자하고, 하반기 중 추가 투자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은 경영평가시 부채비율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54조원의 계획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는 2018년 43.5조원 대비 10조원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

지역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는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 규모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들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8.6조원 이상의 생활 SOC 사업들이 연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했다.

우리 경제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소비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고 소비 심리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를 2019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데 이어 6월중 동 인하조치를 한 번 더 연말까지 연장하여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 소비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연중 지속 제공했다. 또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그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지속 확대했다. 특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신규로 출시하고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구매 및 사용 편의 제고도 병행했다. 아울러,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조정하여 해외소비가 국내소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관광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보고라는 인식하에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K-pop 등 한류와 연계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재 및 해양레저 등 관광 콘텐츠도 확대하는 등 국내 관광 여건 개선도 병행했다. 아울러, 관광과 연계하여 KTX·SRT 등 다양한 철도 할인 상품 등도 개발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국면에 접어들며 우리 수출 어려움도 우려되었던 한해였던 만큼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들도 강화하였다.

우선, 수출금융을 포함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수출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동력 분야들을 중점 지원했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수주를 돕기 위해 6조원 규모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확대,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검사비 지원, 수출보험료 특별할인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해외바이어와 국내업체를 매칭해주는 수출상담회 등 판로개척도 적극 지원했다.

4분기 들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협을 받으며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수출시장 구조혁신 방안」(2019.9.11)을 발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 무역, 서비스산업 등 분야별 수출대책들도 시리즈로 마련하는 등 수출 분위기 반전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투자·소비·수출 등 부문별 활력제고와 함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특히, 2019년에는 부동산·가계부채 등 대내 리스크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와 일본 수출규제라는 새로운 대외 리스크도 대두되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했던 한해였고 정부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 제2절 부동산시장 안정화2)

2019년 주택가격은 9.13 대책(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다가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하는 지역 간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가 확산되며 2019년 7월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2019. 11. 6.) 이후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도 발생했다.

주택거래량은 2018년 대비 약 5.1만호 감소한 80.5만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2018년 47.1만건에서 2019년 39.9만건으로 감소, 지방은 2018년 38.6만건에서 2019년 40.6만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1〉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기비)과 거래량 추이

(단위 : %, 만건)

		2018	2019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매 가격	전국	1.10	△0.36	△015	△012	△016	△021	△016	△013	△009	△005	0.01	0.12	0.19	0.38
	수도권	3.31	0.45	△015	△013	△018	△023	△017	△010	△002	0.04	0.14	0.27	0.35	0.62
	지방	△0.86	△1.09	△015	△010	△014	△018	△015	△015	△016	△013	△010	△002	0.04	0.16
거 래 량	전국	85.6	80.5	5.0	4.3	5.1	5.7	5.7	5.5	6.7	6.7	6.4	8.2	9.2	11.8
	수도권	47.1	39.9	2.2	1.8	2.2	2.5	2.7	2.7	3.4	3.5	3.3	4.2	4.9	6.2
	지방	38.6	40.6	2.8	2.5	2.9	3.2	3.0	2.8	3.3	3.1	3.1	4.0	4.4	5.6

자료 :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22)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김애리 사무관

2019년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3월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 증가 등 투기 수요도 가세하며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국지적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서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세제 측면에서는 투기차단을 위해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향 조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증가시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계획 등을 포함했다.

금융측면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강화,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투기지역·투기 과열 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더하여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했고,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표 3-2〉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내용(12.16대책)

현 행	개 선	
	주택가격 구간	대상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40% 적용	[구간①] 9억원 이하분	▶LTV 40% 적용
	[구간②] 9억원 초과분	▶LTV 20% 적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초과) 구입시 LTV 0%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자 세제측면에서 종부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를 및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상향,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 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부여시 전입요건을 추가하여 실거주 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했다. 금융측면에서도 투기지역·투기과열 지구 내 1주택세대·무주택세대의 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가능요건인 2년 내 전입 및 처분의무를 1년 내로 변경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 지정범위를 기존에 지정된 서울 27개동에서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서울 5개구의 37개동, 경기 3개구의 13개동으로 확대했다. 한편, 청약 시장의 경우 청약금지 규정이 없었던 불법전매에 대해 적발 시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도록 했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조정대상 지역·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시 설정한 재당첨 제한기간을 1~5년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내 당첨시 10년, 조정대상 지역 당첨시 7년으로 변경해 보다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표 3-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2019.12.17. 기준)

구분	지정	
집값 상승 선도 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경기	광명(4개동)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4개동)   창우, 신장, 덕풍, 풍산
정비 사업 등 이슈 지역	과천(5개동)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서울	강서(5개동)   방화, 공향,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13개동)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7개동)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정부는 공급측면에 있어서도 기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5월 7일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12.16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3차 신규택지의 경우 1차 3.5만호, 2차 15.5만호에 이어 11만호의 입지를 확정했으며, 특히 신도시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2곳에 5.8만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에 발표한 1·2차 지구 중 15만호(13곳)의 지구지정도 완료했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지구계획수립 용역도 조기에 발주 완료했다.

한편,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하여 신고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고, 심의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참여 등 공공성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제외 등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일반사업도 부담금 축소,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사업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불가능했던 산업-주거 복합건축을 2만㎡까지 확대허용하고, 취사 등이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입주선호도가 떨어지는 기숙사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 제고를 지원했다.

1 가계부채 동향

2019년말 가계신용 규모는 1,600.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4.1% 확대되었다.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르게 하향 안정화<sup>24)</sup>되며 2019년 당초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인 5%를 하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4〉 가계부채 동향

(단위 : 조원, %)

	2018	2019			
	4/4	1/4	2/4	3/4	4/4
가계신용	1,536.7	1,539.9	1,556.7	1,572.5	1,600.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5.9)	(4.9)	(4.3)	(3.9)	(4.1)
- 가계대출	1,446.6	1,451.7	1,468.0	1,481.4	1,504.5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5.6)	(4.7)	(4.2)	(3.8)	(4.0)
(1) 은행	713.1	718.7	732.1	750.7	767.7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733.5	733.0	736.0	730.7	736.8
- 판매신용	90.1	88.2	88.7	91.1	95.7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1.5)	(8.8)	(6.7)	(5.1)	(6.3)

자료 : 한국은행

2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유근정 사무관

24)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비, %) : (2015) 10.9 (2016) 11.6 (2017) 8.1 (2018) 5.9 (2019) 4.1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화 추세이나 여전히 절대 규모가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 2019년에도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주력했다. 한편,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상환부담 경감 등 정책노력도 강화했다.

### (1)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한다는 목표 하에 2019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지속했다. 그 결과, 가계신용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2019년 매 분기 5%를 하회하며 2016년 말부터 이어진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속 견지할 수 있었다.

또한,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 정착을 위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DSR규제를 도입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2017년 도입계획 발표 이후 2018년 은행권부터 도입한 바 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2018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업권 및 대출 유형별·차주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지표를 설정했다.

관리 일관성 확보 및 규제차익 차단을 위해 전 금융권에 DSR 적용대상·범위, 소득·부채 산정방식, 관리지표 유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제2금융권 차주의 금융이용 여건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DSR의 점진적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관리강도도 업권별 현황·차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였다.

더불어, 개인사업자 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업권별로 대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특별 관리했다.

## (2) 가계부채 질적 개선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더불어 질적 구조 개선에도 지속 노력했다. 우선,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및 금리상승 폭을 5년간 2%p 이내, 연 1%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월 상환액 변동성을 최소화 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출시를 유도했다.

또한, 고정금리·분할상환형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하였고, 특히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2019년 9월 출시하였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2013년말 15.9%에서 2019년말 49.4%로,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18.7%에서 52.6%로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

## (3)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한편,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 가계차주를 위한 상환부담 경감 및 연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했다.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2018년 7.2조원에서 2019년 8.0조원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그간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어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 이용이 불가피했던 최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을 2019년 9월 출시했다. 햇살론17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보다 낮은 금리인 연 17.9%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자금으로 설계되었으며,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70% 가까이 공급<sup>25)</sup>되며 정책취지에 부합하게 공급되었다.

또한, 휴·폐업으로 연체를 겪는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및 자금지원,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2019년 11월 신설했다. 채무조정의 경우 당초 최대 8년간 분할상환이나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분할상환 기간도 이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연체채무자는 재창업자금 지원이 원칙적으로 제한(채무조정 후 9개월 성실상환 시 지원)되나, 질적심사를 거쳐 채무조정 즉시 미소금융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재창업자금 신청 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대출심사 시 이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

25) 2019.9~10월 이용자 기준, 전체 2.7만건 중 7등급 이하에 1.9만건(69.7%) 공급

## 제4절 산업·기업 구조조정<sup>26)</sup>

### (1)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2019년 우리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수익성(매출액영업 이익률)은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재무구조 안정성(부채비율)<sup>27)</sup>도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기업 경영지표 추이(%)

	외환위기			금융위기		최근		
	1997	1998	1999	2008	2009	2017	2018	2019
매출액증가율	11.0	0.7	8.0	18.6	2.6	9.2	4.0	0.4
매출액영업이익률	8.3	6.1	6.6	5.0	5.2	6.1	5.6	4.2

\* 1997~1999년은 제조업 기준, 나머지는 전산업 기준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2019년 구조조정 대상 업체 수는 전년 대비 20개가 증가했다.(2018년 190개 → 2019년 210개) 대기업은 주요 업종 구조조정 마무리 등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2018년 10개 → 2019년 9개)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실적이 하락한 가운데, 세부평가 대상 기업이 증가하며 전년대비 증가(2018년 180개 → 2019년 201개)하였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A, B, C, D의 네 등급을 부여하고 C(워크아웃), D(자체정상화 또는 법정관리)등급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2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성민혁 사무관

27) 부채비율 : 2017년 114.1% → 2018년 111.1% → 2019년 115.7%

〈표 3-6〉 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단위 : 개사)

		2018년(A)	2019년(B)	증감(B-A)
세부평가대상	대기업	631	599	△32
	중소기업	2,321	2,708	+387
구조조정 대상기업 (부실징후 기업)	합계	190	210	+20
	C등급	53	59	+6
	D등급	137	151	+14
	대기업	10	9	△1
	C등급	5	3	△2
	D등급	5	6	+1
	중소기업	180	201	+21
	C등급	48	56	+8
	D등급	132	145	+13

자료: 금융감독원

업종별로는 기계(35개사), 부동산(19개사), 자동차부품·금속가공(각 17개사), 도매·상품중개(14개사) 순으로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가 많았다. 특히, 기계(+15)가 구조조정기업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조선(△7), 금속가공·철강(△5) 업종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표 3-7〉 주요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기계	부동산	자동차부품	금속가공	도매·상품중개	전자	고무·플라스틱	철강	건설	조선
2019년	35	19	17	17	14	12	10	8	6	3
대기업	1	1	1	-	-	2	-	-	3	-
중소기업	34	18	16	17	14	10	10	8	3	3
2018년	20	14	14	22	18	11	10	13	3	10
대기업	3	-	1	1	2	1	-	1	-	1
중소기업	17	14	13	21	16	10	10	12	3	9
증감	+15	+5	+3	△5	△4	+1	-	△5	+3	△7

자료: 금융감독원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위기 극복 및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토록 유도하고 있다. 일시적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조속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채권은행 등이 유동성 지원, 경영애로 컨설팅 등<sup>28)</sup>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은행간 협력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실 발생 전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활력법 일몰을 당초 2019.8월에서 2024.8월로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신산업 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기업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부실기업의 경우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를 활용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하였다.

## (2) 기업 · 산업 구조조정 추진 실적

정부는 ①개별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독자생존능력 확보라는 원칙하에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②실업, 지역경제 위축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③아울러 개별기업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패키지로 병행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 2019년에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를 위한 현대중공업과의 투자유치 계약 체결, 아시아나항공 매각(M&A) 추진, 현대상선 경영정상화 진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현안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또한, 산업 차원에서도 2019년 4월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및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추진현황

---

28) 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채권은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사업(중진공),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캠코) 등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여 조선·해운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소조선사·기자재업체 및 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시행하였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6곳 중 2020년까지 이미 지정된 군산을 제외한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해 현장 실사, 전문위원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2021년 5월까지 2년간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하였다.

## 1

##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1) 선제적인 위험요인 점검<sup>29)</sup>

정부는 2019년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우리 외환·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특히 글로벌 경기둔화, 美·中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했다.

정부는 美 연준 FOMC, 英 브렉시트 등 주요 이벤트를 전후하여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외환·금융시장,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등에 대한 이상 징후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대외부문 조기 경보체계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해 위기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시장 상황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위험 요인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여 대비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다양한 레벨이 참여하는 관계기관간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리스크 발생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매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불필요한 시장불안 방지를 위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상승시,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계 기관

2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도종화 사무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국내외 외환·금융시장 각 세부분야에 대한 일별 점검·보고체계를 운영하기도 했다.

### (2)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sup>30)</sup>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외채 급증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했다. 이후 단기외채는 감소하고 외채의 만기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외채구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단기외채는 과거 과거 위기나 기타 신흥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이다.

〈표 3-8〉 외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외채(억불)	4,221	4,230	3,961	3,822	4,120	4,412	4,670
단기외채(억불)	1,099	1,146	1,043	1,048	1,160	1,256	1,345
장기외채(억불)	2,814	3,122	2,917	2,774	2,961	3,156	3,325
단기외채/총외채(%)	31.3	26.4	26.3	27.4	28.1	28.5	28.8

또한,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외화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외환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했다.

### (3)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영<sup>31)</sup>

정부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투기 등으로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적기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이후로는 美-中 무역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3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도종화 사무관

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이상민 사무관

작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내외 외환·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 등으로 환율 급변동시 시장안정조치 실시하였다.

(4) 다층적 금융안전망 강화<sup>32)</sup>

정부는 유사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금융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과의 양자간 통화스왑 체결과 더불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CMIM)라는 ASEAN+3 국가와의 다자간 통화스왑 구축을 통해 다층적으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에는 UAE와 6.1조원/200억 디르함 규모의 통화스왑 재계약을 체결하여 양국간 최고수준의 금융 협력을 지속하는데 합의하였다.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는 총 8건의 통화 스왑을 체결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1,328억불+α(캐나다 무제한)이다. 이는 유사시 제2선의 외환보유액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표 3-9〉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양자 통화스왑							다자 통화스왑
	중국	말련	호주	인니	UAE	스위스	캐나다	CMIM
규모	560억불 상당	47억불 상당	77억불 상당	100억불 상당	54억불 상당	106억불 상당	무제한 (캐나다 달러/원)	384억불
	(3,600억 위안/ 64조원)	(150억 링깃/ 5조원)	(100억 호주달러/ 9조원)	(115조 루피아/ 10.7조원)	(200억 디르함/ 6.1조원)	(100억 스위스프랑/ 11.2조원)		
만기	2020.10월	2020.1월	2020.2월	2020.3월	2022.4월	2021.2월	없음	없음

3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협력과 김용준 사무관

2019년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재 조치 등으로 국제 통상환경이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상 리스크 확대에 영향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통상현안들에 적극 대응했다.

우선, 미중 무역분쟁 관련 효율적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제 1, 2위 교역국인 만큼 양국의 무역분쟁 심화는 수출 등 우리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에 부총리 주재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물·금융부문 등 우리경제 전반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물경제 대응반 등을 상시 가동하여 수출 부문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대응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소비재·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품목 다각화 등 수출구조혁신 노력도 지속했다. 산업협력강화·FTA 확대 등을 통한 신남방·신북방지역 진출을 적극 추진하였고, 화장품·농수산물·생활용품·패션의류·의약품 등 5대 유망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지원 및 R&D·전문인력 확충 등 서비스 수출생태계 조성 노력도 강화했다.

특히, 2014년부터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과 진행해온 쌀 관세화 검증을 2019년 11월 완료하였다. 관세율 513%를 유지하고, 국별 쿼터도 2014년 저율관세할당물량(TRQ : Tariff Rate Quota) 수준인 40.9만톤 내에서 배분하여 농업계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협상을 완료하는

33) 집필자 :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김종성 사무관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자동차 등 통상압력에도 적극 대응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2018년 5월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가 개시된 이후 2019년에도 범정부적으로 미국의 행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 계획을 세우고 설득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자동차 기업이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미국측에 전달하였다. 그 결과 미국측은 2019년 상반기 즉각적인 관세부과 조치 결정을 연기하고 6개월간 추가협상을 결정했다.

## 1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체계 및 성과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8.2일에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8.2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일)』등을 마련했다. 우리정부는 크게 기업피해 최소화, 산업경쟁력 강화·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국제공제 및 대응체계 강화의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했다.

## (1) 기업피해 최소화

먼저,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발족, 애로접수 및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응하여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략물자관리원) 관련 동향, 제도변경 등 정보를 종합 제공했다.

또한 단기 공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보세구역내 저장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요 품목 물량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수입처 다변화를 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소재·부품·공급 업체 발굴·현지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국내 자체 공급확대를 위해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34)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태순 사무관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해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 등 국내공장 신증설을 지원했다.

피해기업 등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지원도 이루어졌다. 추경 및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세제를 통해서도 R&D 세액공제 확대 및 피해기업 세제 부담 완화를 지원하여,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1년간 만기연장, 최대 6조원 규모 추가 자금공급 여력 확보 등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였으며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조원 이상 규모로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R&D·M&A 등 소요자금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2) 산업경쟁력 강화·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개의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하여 기술 개발, 신뢰성평가, 양산평가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공급 안정을 도모했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생산·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를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 핵심 R&D 과제에 대한 예타면제,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인프라 확대 등을 지원했다. 또한 해외 의존형 수입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기업간, 수요기업간 상생협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주로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했다.

### (3) 국제공조 및 대응체계 강화

우리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글로벌밸류체인(GVC)를 교란하는 등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주요국·국제기구·신용평가사·IB 등에 적극 피력하였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추진했다. 한편,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여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도 병행했다.

또한 수출규제 대응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여 상시적 상황점검 및 대응을 총괄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위원장 경제 부총리)를 신설하고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보완했다. 민간과의 상시 소통채널을 마련하였으며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가동하여 민간·정치권·정부가 합심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3대 규제 품목을 포함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 등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아직 철회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관련 동향 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구조 및 취약점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계기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 정책은 1978년 수입국 다변화 制를 시초로 대일 무역적자 등 무역 역조<sup>36)</sup>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 유치산업 육성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과 함께 그 해부터 2019년까지 R&D에 총 5.4조원을 투입했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외형적인 성장<sup>37)</sup>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낮은 기술자립도, 만성적 대일적자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성도 존재했다. 2018년 對日 전체 무역 적자 241억불 중 소재·부품·장비 부문 적자가 224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시장의 크기는 작아도 오랜 기간 투자를 지원하여 기술이 축적되고, 수많은 품목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구조인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은 크지만 기술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 하, 100대 핵심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첫째, 입체적, 다각적 공급안정성 조기 확보. 둘째, 수요-공급기업,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 셋째, 강력한 추진체제 통한 대대적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3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최진광 서기관

36) 1978년: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 22.6억불 < 對日 무역적자 33.5억불

37) 생산은 3배(2001년 240조원 → 2017년 786조원). 수출은 5배(2001년 646억불 → 2018년 3,409억불)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대규모 흑자로 전환(2001년 △9억불 → 2018년 1,375억불)

무엇보다 공급안정화가 상대적으로 시급하고, 주력산업 및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우선순위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었다. 정부는 일본 전략물자(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품목(4,708개)을 대상으로 5가지 분석기준<sup>38)</sup>을 적용하여 업계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개 분야<sup>39)</sup> 100대 품목(단기 20개, 중장기 80개)을 선정하였다. 단기 20대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큰 품목,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 중심으로 선정했다. 중장기 80대 품목은 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 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 중심이다.

3대 추진 전략별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00대 핵심전략 품목 조기 공급 안정화다. 공급안정화가 긴급한 20대 품목은 전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통해 최단기간 내 공급 안정성 확보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 생산설비 신·증설 신속처리, 조기 기술개발에 긴급자금을 투입했다. 추가경정예산<sup>40)</sup>을 투입하여 시급한 기술개발을 조기에 추진하고, 상용화 이전 단계 품목은 3~6개월의 신뢰성 지원 연계를, 상용화에 가까운 품목은 6개월 가량의 양산평가를 지원했다. 중장기 8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르게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했다. 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의 다양화도 추진했다. 더불어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했다.

38) ①안보/산업 측면, ②대체가능성, ③기술수준, ④특정국가 의존도, ⑤주력·신산업 연관

39)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40)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요 총 2,732억원이 2020년 국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내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이다.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부족은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동해왔다. 이에 정부는 핵심전략품목과 관련한 수직적·수평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4가지<sup>41)</sup> 유형의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R&D,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sup>42)</sup>했다. 또한,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Test-bed를 대폭 확충하고, 신뢰성 보증 등 위험분산 시스템도 도입했다. 아울러 민간 투자 밀착 지원, 투자자금 공급 확대, 전문 인력 공급 등 입체적·맞춤형 지원도 강화했으며, 특화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전문기업(Global Top Specialty)육성도 추진했다.

마지막 추진전략은 강력한 소재·부품·장비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구성하여 One-stop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했으며, 항구적 추진 원동력을 위한 3중 세트로서 민관합동 심의·의결기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설치<sup>43)</sup>,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신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sup>44)</sup>을 추진했다.

---

41)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에는 협동 연구개발형과 공급망 연계형이 있으며, 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으로는 공동 투자형과 공동 재고확보형이 있다.

42) 2019년에는 5개의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패키지 지원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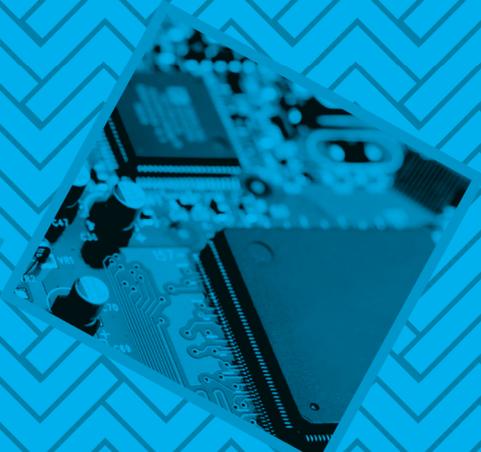
43) 2019.10.11일에 제1차를 11.20일에 제2차를 각각 개최했다.

44) 2019.12.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04

## 혁신성장 성과 창출





## 제 4 장 혁신성장 성과 창출

### 제1절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sup>45)</sup>

#### 1 개 관

2019년 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에 집중하였다. 특히 혁신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D.N.A + BIG3 분야(Data, Network, AI +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에 대규모 전략투자를 통해 정부가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 내 임시조직인 ‘혁신성장본부 TF’를 범부처 합동조직인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하여 부처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혁신정책의 추진력 및 속도감 향상을 꾀하였다.

#### 2 2020 전략투자방향

8월 정부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하였다. 혁신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에 대규모 전략투자를 통한 정부의 마중물 제공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로 혁신인프라를 확충하고, 2단계로 핵심 신산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도미노 확산 전략’을 추진하였다. 우선 1단계로 혁신의 중심인 ‘코어블록’ 공약을 위해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D.N.A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 확충에

45) 집필자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기획팀 한유빈 사무관

집중투자하기로 하였다. 2단계로는 '체인블록'인 BIG3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전 산업분야로 혁신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D.N.A 분야에는 1.7조원을 투자하여 혁신 확산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대상 AI 바우처 신규 도입, 클라우드 기반 AI 로봇 기술개발, 대국민 민원용 챗봇 개발 등 데이터·AI와 타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 시설물대상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5G 재난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5G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표 4-1〉 2020 전략투자방향 분야별 2020년 재정투자

(단위 :억원, %)

분 야	19년 (A)	20년 안 (B)	전년 대비 (B-A)	증감률(%)
〈 합 계 〉	32,545	47,100	14,600	45
D.N.A.	11,589	17,100	5,500	47
데이터·AI	8,123	10,600	2,500	31
5G	3,466	6,500	3,000	86
BIG3	20,956	30,000	9,100	44
시스템반도체	726	2,300	1,600	229
바이오헬스	11,112	12,800	1,700	15
미래차	9,118	14,900	5,800	64

BIG3 분야에는 3조원을 투자하여 타산업으로의 혁신을 확산·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R&D지원, 중소기업 대상 설계자원 센터 신규 구축 등을 통해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진료역량 제고를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를 신규 지정·지원하고, 의료기기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R&D도 추진하고자 하였다.

전기차·수소차 배터리에 대한 R&D 확대 등을 통해 미래차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기차 수소차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미래차 시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 3

### 성과점검 및 보완

12월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보완계획'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잠재 성장률 제고의 토대를 축적하는 핵심전략으로서의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제2벤처붐 조성, D.N.A + BIG3 전략투자 방향 설정,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5G+ 전략마련, AI 등 핵심 혁신기술 확보, 지구둘레 20배의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구축 등을 들수 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부분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혁신성장의 큰 틀과 구체적 정책 추진방향 마련, 추진동력 결집을 위해 혁신성장 프레임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정리하였다.

산업·시장을 한 축으로 하여 ①기존산업(주력제조+서비스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②신산업 신시장의 신규창출, 그리고 혁신자원(기술, 인재, 금융 등)을 또 다른 한축으로 하여 ③혁신기술 확보 및 R&D 혁신, ④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 등 4+1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먼저 주력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등과 같이 ICT 및 첨단 핵심기술 등이 융복합되도록 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정책노력을,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D.N.A. BIG3 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 토대의 전략적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창업생태계의 전주기적 활성화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자원 고도화를 위해 AI, IoT 등 차세대 핵심 혁신기술 확보 및 R&D 생태계의 혁신, 2023년까지 혁신인재 20만명 육성, 대규모 모험자본 확충 등 혁신금융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법·제도 인프라 영역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본격화, 혁신 공공조달 강화 등 법·제도 측면에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플랫폼·생태계 보강 등 공통 인프라를 구축·활용하는 정책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4

####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

기획재정부는 4월 1일부터 임시조직인 ‘혁신성장본부’를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개편·운영하였다. 전담조직 신설에 따라 혁신성장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종전 겸임·지원근무에서 전임 근무체제로 전환하여 혁신성장 업무 집중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범부처 합동조직으로 부처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혁신정책 추진력 및 속도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AI·데이터 등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이슈별·분야별 전문가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꾀하였다.

### 1 개 관46)

정부는 2017년 9월 발표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체계의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신산업·신기술이 증가하여, 신산업 내 스타트업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애로해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4가지 위주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

### 2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국민·기업이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했다.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존치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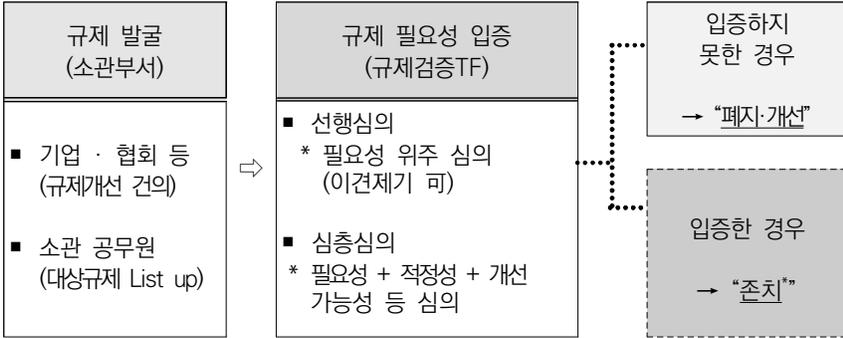
2019년 1월~3월초 기획재정부는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실시했다. 해당 규제를 담당자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 T/F에서 심사하여 3개 분야 규제 272건 중 83건(30.5%)을 폐지·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9년 3월부터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모든 부처에 확대 적용하여, 상반기에 1,017건, 하반기에 1,045건의 성과를 창출했다. 각 부처에서도

4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남궁향 사무관

민간전문가(경제단체, 학계, 연구계, 기업)를 다수 포함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운영하여, 규제 혁신시 민간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그림 4-1〉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흐름



\* 출처 :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2019.3월)

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샌드박스

두 번째로, 先허용·後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여 2019년 4월 132건, 9월 142건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신산업·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규제하는 사후 규제체제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샌드박스<sup>47)</sup>를 적용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여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47)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그림 4-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 출처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2019.9월)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기술·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의 모호 및 불합리성 등으로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규제를 면제·유예시키는 제도이다. 2019년에는 규제샌드박스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당초 목표는 연간 100건 달성이었으나, 목표의 2배에 가까운 195건(산업융합 39건, ICT 융합 40건, 금융 77건, 규제자유특구 39건)의 사례를 창출했다.

〈표 4-2〉 2019년 규제샌드박스 창출 통계

계	ICT융합 (과기부)	산업융합 (산업부)	금융혁신 (금융위)	지역혁신 (중기부)
195건(100%)	40건 (21%)	39건 (20%)	77건 (39%)	39건 (20%)

#### 4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정부는 2018년에 시작된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2019년에도 2차례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해결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5월 ‘제3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3D프린팅·IoT·신약·웰니스식품 중심으로 36건의 애로를 해소했고, 2019년 10월 ‘제4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중심으로 33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그림 4-3〉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 출처 : 제4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인포그래픽('19.10월)

## 5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기획재정부는 대한상의회와 공동으로 위축한 혁신성장 움부즈만을 통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주로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주요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총 30회 기업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여 업계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정부는 현장간담회에서 발굴된 규제 등 작지만 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2019년 4월에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V’, 10월에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VI’을 발표했다. 두 번의 발표를 통해 총 6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처럼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성과창출에 주력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氣를 살리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스타트업 및 주력 기업을 위한 혁신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1

## 개 관

벤처·창업기업은 고용 수준이 이미 우리나라 4대 대기업을 능가<sup>49)</sup>할 만큼 우리 경제의 근간임은 물론, 향후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혁신의 주체로써 자리 잡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확산되면서, 혁신성과 기술력을 갖춘 벤처·창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창업을 2019년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제2벤처 붐 확산전략<sup>50)</sup>을 마련하여 벤처·창업의 열기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창업 → 투자 → 성장 → 회수' 전 과정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의 질적인 제고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9년 신규 기술창업 수(22만개)와 벤처기업 수(3.7만개) 모두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벤처투자 회수 규모도 2조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4-3〉 연도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동향 (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 기술창업	-	190,674	198,911	212,237	220,607
벤처기업	31,260	33,360	35,282	36,820	37,008

〈표 4-4〉 연도별 신규 벤처투자 및 회수 규모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 벤처투자	20,858	21,503	23,803	34,249	42,777
회수	20,792	19,682	17,965	26,780	23,222

4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박재은 사무관

49) 2019년 벤처기업 총 고용은 80.4만명, 4대 그룹 상시근로자 수는 66.8만명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은 2022년까지의 벤처·창업 종합 대책으로,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 유니콘 기업<sup>50)</sup> 20개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산업·고기술 창업 촉진,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확대,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 회수 활성화와 함께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4+1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신산업·고기술 창업 촉진을 위해 바이오헬스, 핀테크, ICT, 지능형 로봇, AR·VR 등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대학, 연구소 등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 펀드(2022년까지 6,000억원), 대덕특구 펀드(2019년 230억원) 등을 통한 기술 사업화 지원과 함께,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R&D 등을 지원하는 TIP를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2022년까지 500개).

두 번째로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 제도 개선과 함께, 민간의 초기단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조건부지분인수 계약 투자방식<sup>51)</sup> 도입,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허용 등 그간 벤처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되던 제도를 정비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도 활성화한다.

세 번째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여 성장단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 조성, 현지 거점에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벤처·

50)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원) 미만의 비상장 스타트업

51) 초기 투자시 지분율을 결정하지 않고, 후속투자로 결정되는 기업 가치에 연동하여 지분율을 결정하는 투자 방식

창업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네 번째로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전용펀드 신설(2021년까지 1조원),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 신설(2022년까지 2,000억원) 등을 추진 한다.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엔젤·초기투자의 신속한 회수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벤처·창업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벤처·창업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고임금 대신 스톡옵션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sup>52)</sup>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도 지원한다. 또한, 스타트업파크 등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공간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이다.

### 3

### 향후 계획

벤처·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창업기업이 스케일업하기 위한 성장 사다리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유망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52) 비과세 한도를 행사이익 기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1 제조업 혁신<sup>53)</sup>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엔진<sup>54)</sup>이자, 일자리<sup>55)</sup>와 혁신<sup>56)</sup>의 원천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추격형 전략의 성공으로 세계 6위의 제조 강국으로 성장했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등 세계 일류기업도 다수 배출<sup>57)</sup>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중국의 약진 등으로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sup>58)</sup>을 하고 있다. 한편, 중국 등 신흥 제조 강국의 부상과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양적 추격형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고, 이에 따라 주력산업은 정체되고 신산업 창출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환경 변화를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전반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 30%(2017년 25%), 신산업·신품목 비중 30%(2017년 16%), 세계일류기업 수 1,200개사(2018년 573개사), 수출순위 세계 4위 (2018년 6위) 달성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 (2019.6.19일 발표). 제조업 르네상스는 크게 4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둘째, 신산업을 새로운

5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최진광 서기관

54) 2017년 기준, GDP의 29.6%, 수출의 90%, 설비추가의 56%

55) 2017년 기준, 제조업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84.5%로 서비스업 67.4%보다 높다.

56) 2016년 기준, 기업 연구개발비의 89%, 특허의 83%를 창출

57) 2001년 105개에서 2018년 573개로 증가

58) (美) 첨단제조업 리더십 발전전략(2018년), (獨) 인더스트리 4.0(2012년), (英) 산업전략 (2017년), (中) 중국제조 2025(2015년), (日) 신산업 구조비전(2017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셋째, 산업 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넷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이 그것이다.

추진전략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 구축하고 스마트 산단을 2030년까지 20개 조성한다. 또한, 제조업에 AI를 전면적으로 접목한 AI 팩토리(AI 기반 스마트공장)를 2030년까지 2천개 구축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실증도 2018~2020년간 추진한다.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하고,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뿌리산업에 대한 클린팩토리 도입·확산을 지원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이업종간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도 추진한다.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 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규제 샌드박스과 규제 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 해소도 지원한다. 산업분야별로 민간주도 융합 얼라이언스를 활성화하고, 정부는 제조-서비스 기업간 매칭, 공동개발 지원 등 이업종간 협력을 촉진한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 산업을 혁신을 통해 탈바꿈”이다.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R&D를 지원한다. 혁신적 신기술에 대해 정부는 표준화전략 수립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 5G 네트워크 등 DNA 인프라를 집중 구축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주력산업을 산업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차세대 메모리, 지능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비리튬이차전지, 스마트자동차, 자율운행 선박, 스마트가전 등 고부가 유품목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한,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 까지 확대하는 등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혁신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이다. 먼저,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하게 양성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현장-교육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장기 산업비전·수요예측에 따라 범부처 “국가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도전, 속도, 축적이 가능하도록 R&D 체계를 혁신한다.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과제 도전 R&D를 확대하고, 산업 핵심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도록 기술 축적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체제도 구축한다. 혁신 제조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 조성 및 민간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하고, 여신제도도 기업의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재편한다.

마지막 추진전략으로 “투자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를 설정했다. 규제 혁신과 함께 노동·환경 등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시 기업의 감당 능력과 수용성을 제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첨단기술, 신산업, 위·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강화하고, 내·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가 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대규모 실증도 확대한다.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 트랙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신제품·비즈니스 모델을 한꺼번에 검증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스마트 산단, 수소 시범도시 등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은 정부는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데 주력했던 한 해이기도 했다.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 혁신전략 외에도 분야별·유망 업종별 혁신 방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체감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성과도 창출한 바 있다.

우선, 서비스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혁신을 위해 6월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①제조업과의 차별 완화, ②기초 인프라 구축, ③제조-서비스 융복합 촉진, ④거버넌스 체계화, ⑤관광·보건·콘텐츠·물류·O2O 등 4+1 전략의 틀 내에서,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5년간(2019~23) 70조원 금융지원, 서비스 R&D 5년간(2019~23) 6조원 투자, 창업 세제지원 서비스업종 대폭 확대, 보건의료·게임 규제 개선 등 주요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관광·보건·콘텐츠·물류·공유경제 등 부문별·업종별 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였다. 숙박·승차·공간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과제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방안」을 1월에 발표한 것을 필두로, 스마트 관광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4월에,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출시 등 산업 전 주기별 지원방안을 담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5월에, 물류제도 혁신·인프라 확충·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포함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6월에, 콘텐츠 정책금융 확충·실감콘텐츠 육성·한류 연관산업 활성화 등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을 9월에 각각 발표한 바 있다.

5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김태웅 사무관

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산업장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제 등의 보완·조정을 병행했다. 사업장 규모, 임금체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노사협력을 촉진했다.

### 1 노동자 보호 강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됐다. 2018년 3월 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특례 조항의 적용이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도 2019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안착을 위해 방송·배너 광고 등으로 제도 도입을 홍보하고 현장 점검 및 안내·지도를 통해 제도 준수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전년보다 8시간 감소(1,986 → 1,978시간)하는 성과가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도 지속 추진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추진했다.

6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전유석 사무관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보장 노력을 강화했다. 유해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했고,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했으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산재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116명 감소(971→855명) 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전년대비 0.05‰ 감소 (0.51→0.46‰)했다.

## 2

###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노동제도의 보완 · 조정

2018년 3월 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년부터 50~299인 사업체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2019년 12월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돌발적 · 일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지원을 추진하며, 특히,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는 제도 도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다. 또한, 구인기업과 구직자 연결을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고,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의 임금보전 비용 및 설비투자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됐다.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매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제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산입되면서 고액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아 최저 임금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일부 해결됐다. 향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제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산입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2024년부터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모두가 산입될 예정이다.

### 3 노동시장 격차 완화

사업장 규모별 임금, 복지혜택,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 간 거래 공정화,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저임금 근로자 지원·보호 등을 추진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 지식노동자 육성, 성과 향상을 위한 작업조직·환경 개선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스마트 공장 도입 및 고도화에 필요한 자동화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촉진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일 채용 공제 등 자산형성, 직업훈련 및 선취업 후학습 등 역량 향상, 안전장비 확충 등 작업·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또한, 기업 상담 등을 통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 선택적 복지 등 복지프로그램을 확산하고 2019년 9월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한편, 연공성에 따른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했다. IT 등 8개 업종의 직무평가 도구를 지속 보급했고,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해 임금개편을 위한 상담을 제공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기존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을 임금직무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직무정보 및 직급별 임금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직무·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18년 말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여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고, 산하 위원회 논의를 통해 2019년 2월 탄력근로제 합의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본 합의, 2019년 3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 등 합의문 세 건을 도출했다. 탄력 근로제 합의를 둘러싼 노동계 계층별 위원의 이견으로 사회적 대화가 공전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6인 대표자 회의, 본위원회 전면 개편 등의 노력으로 2019년 10월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합의문 3건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노사간 상생협력을 지원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촉진했다.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은 따로 선정하여 노사교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경제·노동단체와 긴밀한 대화를 지속하면서 노사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05**

**포용성 강화**



## 제 5 장 포용성 강화

### 제1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sup>61)</sup>

2000년 이후 급격한 세계화와 탈산업화는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술혁신·자동화 등으로 생산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근 성장중인 IT, BT 등의 산업분야는 기존 제조업에서 만큼 고용창출효과가 없어 민간 일자리 창출이 지체되었다. 더불어 노동시장의 이원화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새로운 부문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여성·신증년·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했다.

#### 1 청년 일자리·소득 지원

정부는 「특목희망사다리」를 통해 고등·대학생, 취·창업준비생,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자리·주거·교육·취약청년 등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 하였다.

우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新직업 Making Lab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新직업 창출 시도에 대해 창업지원·멘토링·직업홍보 등을 지원했다. 또한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청년전용 창업 용자를 확대하였으며,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및 청년창업펀드 등을

61) 집필자: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 김주민 사무관

확대하여 청년 초기 창업자의 재정·경영부담을 완화했다.

청년 신규채용·근로환경에 개선의 의지가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최소한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화장실·샤워실 개·보수를 지원을 하였으며,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정부·지자체 인증을 받을 기업 중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최대 4천만원 한도 매칭지원을 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우수 중소기업 인증 정보 통합 및 유형별 제공을 통해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6만개 제공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기존 2.3만명에서 2.5만명으로 추가 증원하여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채용규모도 2019년 1.8만명으로 확대하여 청년의 일경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였다.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 이하) 청년의 탈빈곤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저축금의 3배에 달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였으며,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재출시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2018년 12.1만개에서 2019년 13.8만개로 1.7만개 확대하여 여성 취업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공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사유에 결혼·자녀 교육을 추가하고, 동일기업 재취업 요건을 동일업종 재취업으로 완화 하였다.

신중년(50대)의 경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경력 활용 지역일자리 3,500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및 지역 사회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1인 최대 80만원/월 지원) 지원 규모를 확대(2018년 3천명 → 2019년 5천명)하여 민간기업의 신중년 채용 유인을 강화하였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예시〉

- ▶ 마케팅·회계 등 분야 별 신중년 경력자를 활용 →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경영개선 지원
- ▶ 드론자격증 보유한 신중년 채용 → 산림, 해양, 환경, 교통, 건축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점검 및 관리 지원
- ▶ 바이오 자문위원 활용 → 지역 내 바이오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역대표산업인 발효미생물 분야 전문자문 지원

어르신들의 소득확충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2018년 51만개에서 2019년 61만개로 10만개 확대했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일자리 3만개를 추가 확충하여 64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공공형 일자리 활동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했다. 추경 집행과정에서 지자체가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12월말 기준으로 총 68.4만명을 선발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세부유형 별로는 공공형 일자리 55.1만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4만개, 민간형 일자리 10.9만개이다.

자활근로는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활·자립 효과 증진을 위해 급여 단가를 시장진입형 기준 월 139만원으로 2018년 대비 26.6% 대폭 인상했다.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이 금액 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추경 예산을 통해 자활 일자리를 4.8만명에서 5.8만명으로 1만명 추가 확충했다.

2019년 장애인일자리는 전년대비 2,500명을 추가 확충하여 2만명을 지원했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5.5천명,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1.8천명, 복지 일자리 1.1만명 등이다.

62) 집필자: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원종혁 사무관

## (1) 기초생활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2019년의 경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등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에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2018년 7월에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내용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8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에 이어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와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 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 수는 2018년 174만명에서 2019년 말 기준 188만 명(생계급여 123만 명, 의료급여 140만 명, 주거급여 168만 명,

63) 집필자: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원종혁 사무관

교육급여 29만 명)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저소득·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2)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실업, 휴·폐업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지원금,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서비스, 수업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긴급 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했다. 2019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이다. 이는 2009~2018년까지 10년간 적용된 일반재산기준에 그동안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이며,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인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에 비해 약 40% 가량 완화됐다.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간 4인 가구 기준 119.5만원,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원을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복지시설 이용 등이 지원된다. 2018년에는 25.4만 건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는 일반재산기준 완화를 통하여 긴급복지 지원이 33.7만건으로 수혜자 수가 증가했다.

## (3)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소득지원 강화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액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액을 30만원으로 조기인상했다. 당초에는 2018년 9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 후 2021년에 3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중 장애인

비중이 높고,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어, 생활이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급여액을 인상했다. 또한, 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5%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급여액은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는 30만원, 소득하위 20~70%는 253,750원, 장애인연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0만원, 그 외에는 253,750원이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2019년 4월 기준 134만명, 장애인연금은 16만명이 30만원으로 인상된 급여액을 받았다. 급여액의 단계적 인상 조치는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노인·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 고용안전망 확충

#### (1) 고용보험제도 개편<sup>64)</sup>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1995년 제도도입 이후 제기된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직급여 지급수준(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90~240일 → 120~270일)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이 2019.8.27. 개정되어 2019.10.1.부터 시행되었다.

6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김희준 사무관

### 📁 고용보험법 개편 주요내용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 → 60%  
(자영업자 기준보수의 50% → 60%)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90~240일 → 120~270일  
(자영업자 90~180일 → 120~210일)  
\* 연령별 구분 '30세 미만-30~50세 미만-50세 이상' → '50세 미만-50세 이상'
- 하한액 인하: 최저임금의 90% → 80%
-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기간 연장: 18개월 → 24개월

실업급여는 2019년에 1,526천명에게 8조 3,820억원이 지급되어, 전년도 1,390천명에게 6조 6,847억원 지급된 것에 비해 증가되었다. 이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늘어나 이직 시 구직급여 수혜자가 증가하고,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및 2019년 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으로 1인당 구직급여 수혜금액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함께 소요재원의 충당을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1.3% → 1.6%, +0.3%p ↑)하는 등 재정 조치를 병행하였고, 구직급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였다.

또한, 구직급여와 함께 모성보호급여의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비롯한 출산·육아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모성보호급여의 계속적 지출 증가에 따라 그간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했다.

\*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 (2017·2018) 900억 원 → (2019) 1,400억 원

## (2) 직업훈련 혁신 및 포용성 강화<sup>65)</sup>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2019.4.10)」을 발표했다.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노동자의 신기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훈련을 확대했고,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국민의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고 학습권을 강화했다. 또한, 신기술 분야 훈련과 생애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개선했다.

또한, 산업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 사업을 도입했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일정 기간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외부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범사업은 기존의 일학습병행과는 달리 산업계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사업주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업종별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현장성을 강화하였다.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직업능력을 개발 및 향상시킬 기회가 없었다. 그 결과 임금 상승 기회가 부족하고 기술변화에 취약해 고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훈련비를 1인당 최대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6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임순목 사무관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안전망 확충<sup>66)</sup>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특성상 재해위험이 높은 특고 종사자에게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특고 종사자의 기본적인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9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 하였으나, 전체 특고 종사자 규모 대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하여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분야별 · 직종별 연구용역, 실태조사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1월부터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의 건설기계조종사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 📁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2012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2016년)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2019년)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덤프트럭, 굴삭기 등 27종)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따라 가변적인 근무형태의 종사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6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김동욱 주무관

2018년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2019년 청년 고용상황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상당한 수의 청년이 취업하기 쉽지 않다고 느꼈으며,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 계층이동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등 청년층은 사회적 여건이 어렵다고 인식했다. 정부는 청년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경제·사회의 역동성을 높이는 주체가 되도록 ‘톡톡(talk talk) 희망사다리 간담회’, 청년 실태조사 결과 등 청년 목소리를 바탕으로 2019년 7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 (1) 일자리: 창의와 도전의 기회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직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원하는 新직업 making lab을 설립했으며, 청년 창업자가 자금조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 고정금리로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창업 용자 규모를 300억원 확대했다. 한편,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화장실·사위실 보수 비용을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클린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지속했다.

### (2) 주거: 교통 요지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

청년이 교통요지에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년 주거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주거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취약한 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6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전유석 사무관

에게는 최대 0.5%p까지 낮은 전세임대용자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주거와 관련된 금융지원도 확대했다.

### (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보장

취업 후에도 계속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뿐만 아니라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에게도 선취업-후학습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대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 학생의 진로탐색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에게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4) 취약청년: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했다. 저소득 청년이 생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2020년부터 출시하기로 했으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에게 부과하는 지연배상금 이자율을 낮추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년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청년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4

## 금융 포용성 강화<sup>68)</sup>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을 확충하였다.

2019년 2월 「개인사업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체

6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유근정 사무관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촘촘한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했다.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90일 이후 상각 전 미상각 연체채무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채무상각 이후 채무감면율을 추가로 확대하고, 채무감면율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상환불능 단계의 취약 채무자가 일정기간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감면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신용회복의 사각지대에 있는 연체 전 채무자 및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완비하여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를 완성했다. 또한, 미상각채권 채무감면 허용과 상각채무 감면폭 확대 등 실질적 채무감면 혜택을 크게 늘려, 연체채무자의 효과적 재기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도 공급규모를 2018년 7.2조원 대비 2019년 8.0조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 이용이 불가피했던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을 신규 출시하여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늘렸다.

한편,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2019년 12월 발표 하였다. 그간 정책서민금융은 확보 가능한 재원을 한시적으로 활용해 오며 따라 안정적 자금공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안전망’ 성격의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정부 출연기간을 당초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를 종전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이용 출연’도 도입했다.

휴면예금 출연 제도는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 제도’로 개선하였다. 휴면예금 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하여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무관히 유연한 출연을 가능하게 하였다.

## 1

주거비<sup>69)</sup>

정부는 주거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경제정책방향(2018.12, 2019.7. 2회 발표)에서 발표했다. 먼저 주택면적에 따라 지원중인 월세 세액공제에 주택가액기준을 추가하여 가격대가 낮은 비수도권 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HUG)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주거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 등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취약계층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 입주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다자녀·비주택 거주가구 등에 대한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비를 경감하고자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대책’을 10월 24일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여 국민임대 우선 입주자격을 3자녀 이상인 경우에서 2자녀 가구도 포함 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대출한도 인상 등 주택구입·전세 자금 지원도 강화했다. 비주택 거주가구 대상 공공임대 우선지원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주택도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했다. 안전 등에 취약한 노후고시원 거주자가 민간주택 이주시 보증금을 저리용자할 수 있도록 전용대출을 신설했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공공 전세임대 용자 금리우대를 실시했다.

69)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김애리 사무관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책, 저소득층 및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을 통해 교통·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다.

2019년에는 교통비 30% 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부산, 인천 등 주요 도시에 도입하여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월 44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구입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형태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설·추석명절기간 동안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으며, KTX 요금도 30~40% 할인하였다.

또한, 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 3사 요금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알뜰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 9월에 일몰예정이었던 알뜰폰에 대한 전기통신 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 기한을 연장하고 망 도매대가를 음성은 17.8%, 데이터는 19.2%, 단문메시지는 1.15%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공공 Wi-Fi를 전국 시내버스에 2만대, 농어촌 도서벽지에 1만개소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보편적 교육비 경감을 위해 고교단계에서 무상교육이 추진되었다. 2019년 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였으며,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 등으로 1인당 연간 약 156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위하여 2019년 10월에는 「초·중등 교육법」 및 「지방교육

7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조찬우 사무관

7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이보영 사무관

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여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학 학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의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소득 요건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혜학생은 2018년 66.5만명(30.5%)에서 2019년 68.4만명(31.5%)로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에서는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3개월 이내 연체시 7%, 3개월 초과 연체시 9%였던 지연배상률을 2019년도 2학기부터 기간에 상관 없이 6%로 경감·단일화했다. 특히,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는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4

#### 의료비<sup>72)</sup>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왔다.

2019년에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두경부·복부·흉부 MRI 등 질병 진단에 필수적인 분야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상급병실 중 병원급 2·3인실을 급여로 전환했다. 또한, 카보메틱스(신세포암) 등 사회적·임상적 요구가 큰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에 신규로 등재하고, 일부 의약품에 대한 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등 의약품 보장성도 강화했다.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를 시행하고,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 시술에 건강보험·

72) 집필자: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이한결 사무관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등 의료 수요가 높은 기타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병행했다.

의료비 외 국민 부담이 높은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중심으로 확대 추진했다.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도입, 우수 운영기관 성과보상 강화 등 간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했다.

임신·출산 및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치료 시술(보조 생식술)의 적용연령(현행 만 45세 미만)과 횟수 기준 등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카드 진료비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또한,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정부는 높은 의료비 부담이 생계 곤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조정(연소득 10% 수준)했다. 재난적 의료비<sup>73)</sup> 지원액 차등화 및 상한액 조정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비<sup>74)</sup>했다.

---

73) 중증질환 등으로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 발생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74) 외래 지원대상에 '중증화상질환' 추가 및 의료비 부담수준 산정시 급여 인정액을 최대 100만원에서 전액으로 확대

정부는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3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9월),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9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10월) 등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했다.

## 1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온라인 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AI, VR·AR 등 신기술 등장,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비·유통 트렌드가 급변하는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쇼핑몰 입점 등 교육 및 상담을 지원(2019년 1,434명)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선별하여 TV 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과 V-커머스 채널 방송출연 및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및 종합몰 등)에서 기획전을 개설하여 쇼핑몰 메인화면 노출 등 제품판매 기회를 제공(2019년 1,361개사)했다.

한편, 소상공인 전용 PPL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여 관련 홍보 콘텐츠를 제작·홍보했으며, 소상공인이 1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본인 제품을 스스로 등록 후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가치샵시다' 플랫폼을 구축·운영(2019년 11월~)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에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촉진 및

7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재홍 사무관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가치샵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서 스마트상점의 보급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고, 스마트 기술개발과 스마트 서비스 혁신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소공인에 대해 성장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상권정보시스템 입력정보를 대폭 확충하여 정확성과 활용도를 제고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상권정보시스템이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창업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서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소공인 전용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명문소공인 육성을 통해 숙련기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년가게 지정도 지속 확대하여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역별 홍보 강화, 한국관광공사·코트라 홈페이지를 활용한 해외 홍보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 2

### 상권 활력 제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디자인, 마케팅 개발 등 상권별 특성화로 상권 경쟁력을 높여 지역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고 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2018년 3곳 → 2019년 12곳)하는 한편, 상권 규모·특성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80억원 → 60~120억원)하여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지역의 문화·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2018년 0.3조원 → 2019년 2.3조원)과 온누리상품권(2018년 1.5조원 → 2019년 2.2조원) 발행을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제고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개인구매 한도, 할인율,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상권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발행을 통해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전달효과도 제고했다.

### 3 |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4,500억원, 영업 악화로 제도권 금융보증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기 자영업자(테스밸리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1,200억원, 과거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300억원 등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3종 세트를 마련·지원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비율을 대폭 상향(85% → 95~100%)했으며, 보증료를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이용을 위해 만기 5년으로 운용하는 등 지원 요건을 대폭 우대했다. 또한 신보·기보에 면책 조항이 포함된 운영지침을 부여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심사 위원회를 신설하여 재창업 보증을 심사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이 가능 하도록 면책 등의 제도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하고, 지급기간을 확대(90~180일 → 120~210일)하는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고,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를 30개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지원도 확대했다.

## 제5절 사회적경제 활성화<sup>76)</sup>

정부는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7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년) 등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019년에는 그간 마련한 대책의 이행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협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 2016년 대비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 수가 48.0%, 취업자 수가 44.6% 증가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개선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5-1〉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 및 취업자 수

구 분	기업 수(개)		취업자 수(명)	
	2016년	2019년	2016년	2019년
사회적기업	1,713	2,435	39,195	47,322
협동조합	10,640	16,869	27,129	56,609
마을기업	1,377	1,592	16,101	19,261
자활기업	1,186	1,176	10,231	10,441
주요 유형 합계	14,916	22,072	92,656	133,633

자료 : 부처별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부지원 의존성과 성장 지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7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황인환 사무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판로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연 4,625억 원까지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금융평가모형, 사회적경제기업 DB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를 구축했다. 민간이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 도매 기금인 ‘한국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설립(2019.1월)을 인가했다. 일반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잉여금 배당시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의결권·선거권이 없는 ‘우선출자’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쇼핑몰(e-store 36.5+)을 개편하고, 공공구매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유휴 국·공유시설을 사회적가치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경감(5→2.5%)하고 매각시 5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사회적경제 분야로 우수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 추가 지정(4개소), 초·중·고교 대상 사회적경제 학습자료 배포 등을 추진했다. 또한, 협동조합 조합원 및 종사자가 협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 신협)의 연합회 설립을 허용하는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다.

사회적경제가 각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거점 마련, 사업모델 발굴 등 지역 주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별 사회적경제 추진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 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 역량 제고 방안’(2019.11월) 주요 내용

#### ①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등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 민·관 협치기구 운영 및 내실화      ▪ 중간지원기관 운영방식 개선

#### ② 현장활동 지원

- 도시재생, 생활SOC 등 지역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휴 국·공유시설 활용 확대

#### ③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 지역의 교육역량·인프라 강화 및 교육 확대
- 금융의 지역편차 해소 및 사회적가치 반영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마련을 추진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위한 공간적 기반인 ‘소셜캠퍼스온’을 추가 조성(6개소 → 10개소)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을 추진(2019년 2개소 선정)한다.

또한, 지역 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지역주민의 수요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7개지역), ②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 운영(18개소),

③일자리 기획가인 ‘그루매니저’ (35명) 배치를 통한 산림 분야 주민사업체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 3 사회적경제 대국민 인식 제고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2019.7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방송, 신문 등 주요 언론사를 통해 168회 보도되었고, 총 34,371명이 방문하였으며, 2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소통·화합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최초로 개막식에 참여하여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파했으며, 사회적경제 주요 당사자 조직 대표 등이 참석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대전선언문’을 발표했다.

#### 2019년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행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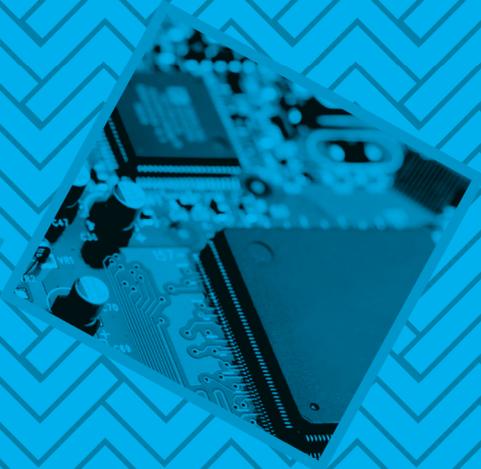
대전선언문 퍼포먼스



사회적경제 상품관 전시·판매

# 06

## 공정경제 확립





## 제 6 장    공정경제 확립

### 제1절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sup>77)</sup>

#### 1    개 관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경쟁하고,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공정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64개 국정과제를 포함 119개의 공정경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회의」를 총 6회 개최하여 부처별 공정경제 과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신규 과제도 적극 발굴하였다. 지속적인 정책 추진 노력에 따라 2019년에는 국정과제 34개를 포함하여, 국민체감형 과제 14개, 하위법령 과제 8개 등 총 56개의 공정경제 과제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서면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 분야에서는 95%,가맹 분야에서는 86%, 유통 분야에서는 91%의 업체들이 전년도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도 대폭 축소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정당한 경쟁과 보상의 틀을 확립하여 경제 주체의 혁신의지를 일깨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에

77) 집필자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지원팀 성진규 사무관

기여한다. 이는 한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여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공정경제 체감모도 확산을 위해 2019년 1월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 2019년 7월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 등을 연달아 개최하는 등 공정경제 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2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정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갑(甲)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을(乙)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2019년 2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직불을 제한하고, 11월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하도급업체의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증액하도록 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자살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정경제 관련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가맹 분야에서는 온라인 위주의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9년 2월에는 가맹사업법령을 개정하여 가맹 희망자가 구입요구 품목에 소용되는 비용부담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5월에는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점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분야 장기점포 계약 갱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9년 9월에는 「생애 주기 전단계 가맹점주 경영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추진하였다.

유통분야에서도 보복조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를 도입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 판촉비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온라인 분야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대리점 분야 최초 협약 체결절차·평가기준 마련(7월), 6개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12월)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였다.

### 3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며 기업 가치 향상 및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먼저, 주요그룹 간담회, 정보공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행태 개선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기업집단 내 순환출자고리가 2017년 282개에서 2019년 13개로 95% 이상 감소하여 순환출자가 사실상 해소되었으며, 상장사 중 전자투표제 도입 비중도 2017년 23.1%에서 2019년 34.4%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유도하였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집단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개별 기업의 부실이 다른 계열회사로 전이되어 기업집단 전체가 부실해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 소비자 권익 보호

2019년 11월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sup>78)</sup>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대·신설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9년 1월에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해 수수료 원가분석(자금조달비용, 마케팅 비용 등)에 기반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12월에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고위험상품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주택 환기설비 기준 강화(국토부),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식약처) 등 총 10건의 소비자 안전 및 건강 관련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2019년 3월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등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소비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였다

일상생활 속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도 개정하였다. 2019년 4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하여,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었던 스마트폰이나 보증기간이 불명확했던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열차 지연 시 보상에 대해 KTX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던 일반열차의 보상기준을 KTX와 동일한

78)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계속거래고시를 개정하여, 요가·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 분야에서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 계약 대금의 10% 이내로 규정하여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자상한 기업’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협력사뿐만 아니라 미거래기업과도 공유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자상한 기업’ 발굴과 함께 ‘자상한 기업’을 관련 협·단체와 상호 연결하여 대기업의 상생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5월 ‘자상한 기업’ 1호 네이버를 시작으로, 12월 현대·기아자동차까지 총 10개의 자상한 기업이 관련 분야의 민간 협·단체와 연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거래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새로운 분업적 협력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벤처·스타트업 투자,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전환 지원 등 ‘자상한 기업’의 업종별 특수성 및 강점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 내용과 방식으로 자발적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대 - 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의 지평이 기존의 협력사 중심에서 미거래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으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을 위한 새로운 분업적 상생모델을 구현하는 데에도 ‘자상한 기업’이 기여하고 있다. 또한 AI, 미래자동차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2019년 6월에는 범부처 간 불공정 사건의 조정 및 중재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상생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거래공정화

7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재홍 사무관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업계 대표 단체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생조정위원회는 2019년말 기준으로 총 3회 회의를 개최(분기 1회)되었으며,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기술침해·불공정거래의 조사·조정·중재에 대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

또한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멘토 프로그램이 2019년 7월 도입되었으며, 대·중소기업 간 근로자 복지격차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도 2019년 9월 출범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성과공유제 확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상생협력 지원 등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성과공유제 등록기업(누적)은 2012년 77개로 시작하여 2019년 469개로 확대되었으며, 확인과제(누적)는 2012년 997개에서 2019년 7,419개로, 참여 수탁기업(누적)은 2012년 566개에서 2019년 8,425개로 확대되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역시 2019년 말 누적 기준으로 244개 기업으로부터 12,073억원을 조성했으며, 71,3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495억원을 지원했다. 대·중소기업 간 결제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 결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상생결제액이 2016년 66.7조원에서 2019년 115.6조원까지 증가했다.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동반성장지수도 평가 대상 기업이 2011년 56개사에서 2019년 214개로 확대되는 등 동반성장 우수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2019년 12월에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등을 통해 거래 공정화 기반을 구축하고, 상생결제 활성화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체계 개편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살한 기업 발굴·확산과 중소기업 판로 확보 지원 강화 등의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도 가속화하고, 건설 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와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 강화 등을 통해 시장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 07

##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제 7 장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제1절 4차 산업혁명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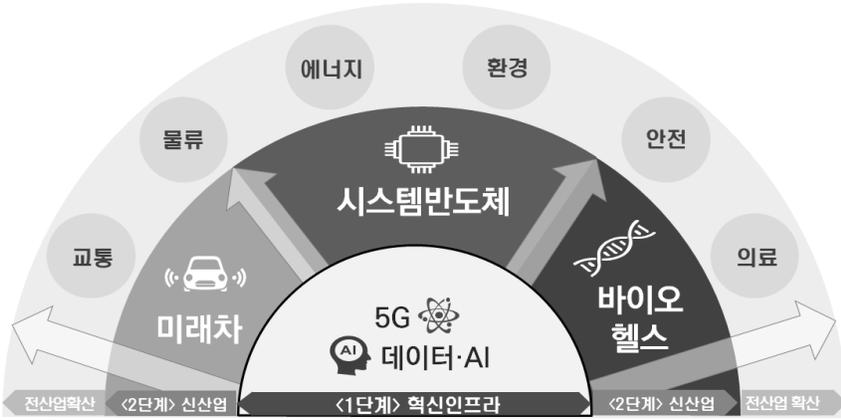
#### 1 개 관<sup>80)</sup>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뿐 아니라 노동,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계 주요국들은 앞다퉀 Industry 4.0(독일), 일본 재흥 전략(일본) Smart America Challenge(미국)등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우리정부도 2017년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선도 사업들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7년에는 혁신 성장을 견인할 '8대 선도 사업(미래차,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산단,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드론)'을 선정해 산업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했고, 2018년에는 플랫폼 경제의 구현을 통한 혁신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AI·수소경제, 핵심인재 양성을 '3+1 전략투자 플랫폼'으로 선정하여 재정을 확대하고 활성화계획을 마련했다. 2019년에는 언급된 기존 전략투자 분야 및 국내외 산업 여건·기술 변화를 고려하여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핵심분야로는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 기술로서 데이터(Data), 네트워크 (Network), 인공지능(AI)의 소위 D.N.A.와, 기존 산업의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글로벌시장에서 선도적 위치선점이 가능한 신산업으로서 BIG 3(미래차,

8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양현정 사무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를 선정했다.



## 2 혁신 인프라 D.N.A

Data, Network(5G), AI는 쏠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혁신 인프라 분야이다. Data와 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 요소로 작용할 혁신 성장 경쟁력의 원천이고 5G는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신경망역할을 하게된다. 정부는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련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데이터·AI는 산업을 고도화하고 新시장을 창출할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쏠 세계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데이터·AI 기술수준 및 활용도가 저조(31위/63개국, 2018년 IMD)한 상황으로 정부는 공공서비스 활용 확대 및 기반조성과 함께 他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데이터·AI 경제 확산 가속화를 추구하고 있다.<sup>81)</sup>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핵심적 생산요소인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육성을 위한 중기계획을

81)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안(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2019.8.21.)

설정하고 데이터와 AI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잘 다루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 30조원 달성, AI 유니콘 기업 10개 및 데이터·AI 융합인재 1만명 육성을 목표로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sup>82)</sup>

5G는 데이터·AI의 이동통로로 3차 산업 생산성 향상 등 산업혁신의 파급효과를 가속화하고 확산시키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상용화(2019.4.3일)를 계기로 단말·장비산업에서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고 정부는 5G 주파수 조기할당(2018.6월), R&D 투자 확대, 5G망 구축비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조성에 힘써 왔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스마트공장·자율차 등 전후방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신서비스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sup>83)</sup>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5G 전략」(2019년 4.8일)을 발표하여 공공선도투자, 민간투자확대, 제도정비, 산업기반조성, 해외진출 지원의 5대 5G+ 전략산업분야 하 2026년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 달성,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3

## 핵심 신산업 BIG3

BIG 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는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가능성이 높은 핵심 신산업 분야로, 정부는 기존 산업의 경쟁 우위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 선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他산업으로 혁신의 확산을 촉진했다.

자동차 산업은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82)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2019.1.16.)

83)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2019.2.20.)

이른바 CASE(Connectivity, Autonomous, Shared, Electricity) 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한 미래차 생태계 조성 가속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2019.10.15)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달성을 비전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1위,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 삼아, 친환경차 국내보급 가속화, 2024년 완전자율주행 법제도 세계 최초완비, 민간투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신속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이 미래 자동차의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산업의 주도역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sup>84)</sup>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AI·IoT 등 신산업과 융합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주문형 생산방식으로 안정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되었다. 삼성은 세계일류 수준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약 133조원 규모의 투자, 1.5만명 규모의 채용계획을 발표하는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 육성, 관련인력양성과 핵심기술 개발지원 등에 역점을 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19.4.29일)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핵심 기술개발로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대중소 협력 기반조성으로 설계-생산-조립·검사에 이르는 반도체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하여 메모리 중심인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시장경쟁력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는 향후 연 평균 5.4%씩 빠르게 성장하여 2022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분야이나 많은 초기투자 비용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정부는 최첨단 ICT 기술과 우수한

---

84)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안(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2019.8.21.)

의료인력·병원 등 강점을 잘 살려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R&D, ②규제혁파, ③마케팅 및 시장진입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추진방안」(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2019.5.15.)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맞춤형의료의 바탕인 의료데이터 축적을 지속하며 신약·의료기기 및 헬스케어·질병치료 선진화 지원 통해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정부는 2019년 3월에 발표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계기로 인구구조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기존의 출산율 제고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정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인구정책TF를 구성(2019.4월)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4개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1

생산연령인구 확충<sup>85)</sup>

급격한 출산율 하락으로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①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②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③외국인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sup>86)</sup>’을 2019년 27만원에서 2020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sup>87)</sup>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8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박기오 사무관

86)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2019년 27만원 → 2020년 30만원)

87)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고령자 재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비전문·비숙련인력 중심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세부업종·직종별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외국 인력을 배정하고 고용한도를 조정한다. 또한 송출국의 현지 훈련을 통해 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알선·매칭시 사업주의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성실재입국 제도를 개선<sup>88)</sup>하고, 선발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비전문 인력의 장기체류 비자전환 규모를 확대했다.

셋째, 고학력·고기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정책을 개편한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인에게는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 2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sup>89)</sup>

저출산·고령화는 학령인구 및 병역 의무자를 줄이고,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전요인에 대응하여 인구정책 TF에서는 교육·국방·지역 분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교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한다.

88) 국내 취업활동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기간(현행 : 3개월) 단축 등

8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박기오 사무관

범부처 협의를 통해 학령인구 변화,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교원수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의 질 제고 및 양성규모 조정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결과를 향후 양성기관 정원 조정 과정에 반영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소규모 학교 간 교육과정을 분담하여 개설하는 공유형, 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하는 거점형, 1~4학년은 소규모 학교가 담당하고 5~6학년은 중규모 학교가 담당하는 캠퍼스형 등 다양한 학교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합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하여 ①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 인정제, ②정해진 기준 내에서 집중강의·집중이수 등을 허용하는 집중이수제, ③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해 학점이수를 인정하는 시간제등록제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도 확대한다.

둘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인력 충원체계를 최적화한다.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감안하여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한다.

갈수록 충원이 어려워지는 중소위·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숙련도가 높은 중간 간부는 확대하여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재설계하는 한편,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경·해경 등 전환복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하되,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한다.

간부인력 확충을 위해 간부의 여군비율을 2019년 6.2%에서 2022년 8.8%로 확대하고, 부서관 임용연령은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표 2-1〉 연차별 여군비중 확대계획

(단위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6.2	6.7	7.4	8.1	8.8
장교	7.9	8.6	9.2	10.0	10.9
부서관	5.3	5.8	6.5	7.2	7.9

국민적 공감대, 귀화자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셋째, 지역공동화에 대응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한다.

공공·생활서비스 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거점지역과 주변지역 간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도 국민생활 최소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중심의 사후적 복지 지원에서 예방적 개입으로의 전환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 및 범위를 생애전환기<sup>90)</sup>·돌봄필요<sup>91)</sup>·위기가구<sup>92)</sup> 등까지 확대한다.

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sup>93)</sup> 및 기관 공동설치·운영<sup>94)</sup>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한다.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존의 중앙부처 중심의 획일적이고 유사·중복이 많은 지역공모사업에서 벗어나 주민과 지자체가 마련한 지역 맞춤형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 3 고령인구 증가 대응<sup>95)</sup>

우리나라는 2018년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초과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생산성 하락, 빈집 증가, 노후보장 필요성 증대 등 경제·사회 전반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산업·국토·금융 분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들을 마련했다.

첫째,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생산·제조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구축 및 스마트 제조인력 10만명 양성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숙련된 고령인력의 점진적 은퇴에 대비해 해외사례<sup>96)</sup>를 참고하여 지식·경험(암묵지)의 산업 자산화를 추진하고 퇴직인력이 자신의 경력·전문성

90) 노인 도래 가구, 출산·양육 가구 등

91) 의료기관 퇴원·퇴소자 등

92) 1인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 가족 등

93) 예 : 도서관 공동이용(천안·아산시), 공동형 장사시설 설치(화성·부천·광명) 등

94) 해외사례 : 일본은 의회사무국, 각종 위원회, 보건소 등 공동설치

9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안건희 사무관

96) 독일 앱시스트 - 개별기업 도제시스템의 디지털화 추진

·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젊은 인력이 생산·제조현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재직자 임대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2022년까지 4만호 보급하고 젊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액티브 시니어<sup>97)</sup>(Active Senior) 출현에 따른 고령층의 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의 욕구·소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령자 라이프로그<sup>98)</sup>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약·의료기기,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둘째, 고령자 가구·1인 가구 증가 및 빈집 발생 등을 고려해 기존 주택정책·도시계획 방향을 수정한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가구추계를 보정하고 그에 따라 가구주연령대별, 지역별, 가구원수별 등 분석단위를 세분화하여 주택수요를 재추정한다.

고령자에 대한 주거 +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19년 10개소, 2020년 10개소 총 20개소 조성하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노인일자리 간 연계를 추진한다.

1~2인 가구 등 소형가구 증가에 대응해 공유형 주택공급의 기반을 조성한다. 공동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주거·공유시설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형 주택 매뉴얼을 개발하고 민간 사업자에 보급한다.

---

97)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소비 및 문화활동을 하는 노년층

98) 고령자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행동, 습관, 감성 등의 정보

도심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시설 + 상업시설 + 생활편의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을 확충하고 빈집 및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확대한다.

도심 내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허용용도·용적률 등을 별도 적용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도시의 고령친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령친화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셋째, 주택연금,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에 대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하향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한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을 자동 승계하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또 가입주택의 임대활용을 허용하여 고령층은 추가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0세 이상(고소득 제외) 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sup>99)</sup>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가 5년 만기가 되는 경우에 계좌금액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불입을 허용<sup>100)</sup> 및 세제혜택<sup>101)</sup>을 부여한다. 또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만 적용하여 퇴직연금의 수령을 유도한다.

전문가에 의한 연금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일임형 제도<sup>102)</sup>, 디폴트

99) 400만원(IRP 합산시 700만원) → 600만원(IRP 합산시 900만원), 3년 한시운영

100) 연금계좌 불입액 한도 : 연 1,800만원 + ISA 만기시 계좌금액

101) 추가불입액의 10%(월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

102) 금융회사가 가입자 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러주는 제도

옵션<sup>103</sup>), 기금형 제도<sup>104</sup>)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달성하는 성과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가입자가 온라인에서 손쉽게 수익률을 비교하고 운용기관과 상품을 즉시 바꿀 수 있도록 연금공시 및 계좌이동 인프라를 구축한다.

### 3 복지지출 증가 관리<sup>105)</sup>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으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지출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유지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고령자 증가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노인복지제도들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됐다. 이에 정부는 재정·복지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마련했다.

첫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심화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장기재정전망의 분석 및 정책 제언기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한국형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둘째, 노인복지정책별 노인연령기준을 재검토하고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다.

이야기할머니 사업 대상자의 연령기준 상향을 기존 56~70세에서 56~80세로 대폭 상향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중 재능나눔 일자리 사업 대상자의 참여연령을 하향조정한다.

103)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상품에 자동가입

104)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 퇴직연금 운용

10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안건희 사무관





**08**

**2020년 예산**



## 제 8 장 2020년 예산

### 제1절 2020년 예산 편성

#### 1 2020년 예산의 모습<sup>106)</sup>

##### (1) 2020년 재정총량

예산과 기금을 합한 2020년 나라전체 총수입은 2019년 예산보다 1.2% 증가한 481.8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예산수입은 2019년 예산 대비 △0.5% 감소한 319.9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수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0.9% 감소한 292.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295.9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4.0조원으로 전망되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라 2019년 대비 4.7% 증가한 161.9조원으로 예상되었다.

〈표 8-1〉 2020년 총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총 수 입	476.1	476.4	481.8	1.2	1.1
○ 예 산	321.4	321.7	319.9	△0.5	△0.6
- 일반회계	297.1	297.4	295.9	△0.4	△0.5
- 특별회계	24.3	24.3	24.0	△1.0	△1.0
○ 기 금	154.7	154.7	161.9	4.7	4.7

10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남기범 주무관

2020년 총지출은 2019년 예산 대비 9.1% 증가한 512.3조원이다. 우리경제의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미래성장동력 발판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예산지출은 351.1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7%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 증가한 296.0조원, 특별회계는 10.6% 증가한 55.1조원이다. 기금지출은 사회보험성기금 급여지출 등의 증가에 따라 2019년 계획 대비 14.6% 증가한 161.1조원 수준이다.

〈표 8-2〉 2020년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 총 지 출	469.6	475.4	512.3	9.1	7.8
- 예 산	328.9	332.6	351.1	6.7	5.6
· 일반회계	279.1	280.9	296.0	6.1	5.4
· 특별회계	49.8	51.7	55.1	10.6	6.6
- 기 금	140.7	142.8	161.1	14.6	12.8

2020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1.5\%$  수준( $\Delta 30.5$ 조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GDP 대비  $\Delta 3.5\%$  ( $\Delta 71.5$ 조원) 적자로 예상되었다. 이는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지속하여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연평균  $\Delta 3\%$  중반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표 8-3〉 재정수지

(단위 : 조원, %, %p)

구 분	2019년		2020년 (C)	증감	
	본예산(A)	추경(B)		(C-A)	(C-B)
○ 통합재정수지(I)	6.5	1.0	△30.5	△37.0	△31.5
(GDP 대비, %, %p)	(0.3)	(0.05)	(△1.5)	(△1.8)	(△1.6)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II)	44.0	43.3	41.0	△3.0	△2.3
○ 관리재정수지(I-II)	△37.6	△42.3	△71.5	△33.9	△29.2
(GDP 대비, %, %p)	(△1.9)	(△2.2)	(△3.5)	(△1.6)	(△1.3)

2020년 예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이다. 2020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 805.2조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9.2% 수준인 476.6조원이며, 나머지 40.8% 수준인 328.6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이다.

〈표 8-4〉 국가채무

(단위 : 조원, %)

구 분	2018년 결산	2019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 국가채무	680.5	740.8	805.2
(GDP대비, %)	(35.9)	(37.1)	(39.8)
① 적자성 채무	379.2	426.5	476.6
▪ 일반회계 적자보전	300.4	347.9	397.0
▪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78.8	78.6	79.6
② 금융성 채무	301.3	314.3	328.6
▪ 외환시장 안정용	234.9	247.3	260.7
▪ 서민주거 안정용 등	66.4	67.0	67.9

\* 2019년, 2020년 본예산 국회 확정 기준

(2) 2020년 예산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2020년 예산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26.4%로 가장 증가율이 높고, 이후 환경 분야 21.8%, R&D 분야가 18.0% 순이다.

〈표 8-5〉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본예산(A)	본예산(B)	(B-A)	%
◇ 총 지 출	469.6	512.3	42.7	9.1
1. 보건·복지·고용 (일자리)	161.0 (21.2)	180.5 (25.5)	19.5 (4.3)	12.1 (20.1)
2. 교 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0.6 (55.2)	72.6 (55.4)	2.0 (0.1)	2.8 (0.2)
3. 문화·체육·관광	7.2	8.0	0.8	10.6
4. 환 경	7.4	9.0	1.6	21.8
5. R&D	20.5	24.2	3.7	18.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3.7	5.0	26.4
7. SOC	19.8	23.2	3.5	17.6
8. 농림·수산·식품	20.0	21.5	1.5	7.4
9. 국 방	46.7	50.2	3.5	7.4
10. 외교·통일	5.1	5.5	0.4	8.8
11. 공공질서·안전	20.1	20.8	0.7	3.5
12. 일반·지방행정 (지방교부세)	76.6 (52.5)	79.0 (52.2)	2.5 (△0.3)	3.2 (△0.5)

### (1) 혁신성장 가속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하였으며, 국내 주력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정체되고 가동률이 저하되는 등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 4대 패키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리경제 전반으로 혁신을 확산하고자 하였다.

먼저,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안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0.8조원에서 2.1조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2019.7.4.)에 대응하여 핵심소재 66개 품목의 자립화 및 제품 국산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에 1.2조원을 투자했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양산평가를 위해 공공나노랩, 소재부품지원센터 등 테스트베드 인프라 확충, 수요기업 생산라인 활용을 지원했다. 5천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신용·기술보증자금과 창업기업·신성장기반자금 융자 등 생산 확대·기술 도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추가 지원소요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를 0.2조원 증액 반영하였다.

혁신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고 우리나라의 차기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D.N.A. + BIG 3’산업에도 집중 투자했다. 우선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핵심 플랫폼인 D.N.A. 분야에는 1.7조원을 투자했다. 기 구축된 플랫폼·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확산·연계하고 데이터셋, 고성능컴퓨팅 지원 등 AI 생태계를 확충하는 한편, AI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AI 융복합을 지원하였다. VR·AR 등 5G 기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험·실증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집중 지원했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산업(BIG 3)에 3.1조원을 투자했다.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10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김진수 사무관

팍리스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설계지원센터 등 성장기반을 확충했으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1만명)을 추진하고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을 지정·운영(5개소)하는 등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신약·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미래차 상용화 기반 구축 등을 지원했다.

혁신성장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인재 4.8만명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AI·SW 등) 고급실무인력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미래형 창의인재 체제 구축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투자도 확대했다. 이에 더해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모태펀드에 0.8조원을 출자하여 총 2.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창업성공패키지(1,085팀) 확대, 창업도약패키지(1,275억원) 강화, 혁신창업 사업화자금(2.55조원) 확대 등 기술창업·데스밸리 극복·스케일업을 통해 혁신적 유니콘 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 (2) 경제활력 제고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고용시장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30~40대·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고용여건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는 수출·투자의 부진을 타개하는 등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도 중점 투자했다.

고위험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해외플랜트를 수주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기금 출자·출연으로 무역금융을 3.4조원 확대하고, 마케팅 등 기업이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3500개사)도 확대하였다. 민간의 설비·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확대하여 정책자금 14조원을 공급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공급도 5.5조원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0.4조원을 투입하고 (5,500개, 누적 1.8만개), 스마트산단을 금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여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차원의 혁신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신기술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550억원)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지방이전·신증설 등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3,082억원)을 확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였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의미하는 생활 SOC에 10.5조원을 투입하였으며, 특히 문화·체육·돌봄 시설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복합화 시설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기 발표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비·착공소요, R&D, 인프라 구축 등 0.4조를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금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14개 지역에서 혁신적 신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R&D(642억원)와 사업화자금(196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도 시범 실시하였다.

한편, 경기 회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체 일자리예산을 2019년 대비 20.1% 늘어난 25.5조원으로 반영했다. 저출산·고령화 및 국민안전을 위한 사회서비스 수요증가 등을 고려하여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19년 대비 9.5만개 확대했으며,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직업훈련 강화, 예방적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점 지원했다. 또한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청년의 추가채용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신중년·고령자·일하는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했다.

### (3)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저소득 노인층이 1분위로 대폭 유입되는 등 저소득층 소득개선이 미흡하였으며, 영세·자영업자 체감경기 및 사업소득 등이 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취약계층의 자립과 혁신을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데도 지속 역점을 두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청장년층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7.9만 가구가 신규로 수급혜택을 받게 되었다. 교육주거급여 인상 및 에너지·의료비 경감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도 경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월평균 급여시간을 127시간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는 9.1만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사업을 본격화하여 7,800명에 대해 자립수당(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맞춤형 자립지원도 실시하였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20만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여 고용안전망도 강화했다. 고교무상교육도 기존 2학년에서 2~3학년으로 확대하고, 최초로 국고에서 비용의 절반 수준인 0.7조원을 부담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초등돌봄교실(700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400개소)를 확대하였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영구·국민임대 및 신혼희망타운을 확대 공급하였으며,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인상(80만원)하는 등 육아친화적인 일터도

지원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도 61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하는 등 소득기반 및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였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자금을 3,500억원 확대(2.3조원)하였으며, 지역 신용보증 재단의 특례보증지원 규모도 5조원 확대(25.5조원)하였다. 아울러, 골목상권의 활기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3조원), 온누리상품권 (2.5조원) 발행 확대를 위한 소요도 지원하며, TV홈쇼핑·T-커머스(300개사), 온라인 기획전 (100회), 글로벌 쇼핑몰 입점(400개사) 등 온라인 판로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혁신을 돕는 사업도 병행한다.

#### (4)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SOC 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에 따라 안전사고 등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국민 불안이 확대되었으며,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정신질환·마약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이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생활편의, 안전, 건강 등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상수도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반 시설과 AI·5G 등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에 1.2조원을 투자했다. 적수문제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IoT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오염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에 0.4조원을 신규 투입하였다. 아울러, 도로·철도에 센서 및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 활용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지원하는 첨단 교통체계인 도로 ITS(1,194km) 구축을 통해 막힘없는 도로환경을 조성했다. 세종·부산에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본격화 (712억원)하고 개별 운영 중인 방법·교통 등 5대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통합플랫폼 보급사업도 조기에 완료하였다.

지자체의 노후 기반시설 개량을 지원하고 기후 리스크,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교통안전, 산재방지, 자살 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중점 투자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는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수준인 4조원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4000개소) 설치 지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30만대) 등 저공해조치 지원 확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35만대) 등 산업·수송·생활 등 배출원별로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 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 하였다. 전국 지하역사 566개에 미세먼지 저감설비도 확충(530억원)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규모를 1.1조원 늘렸다. 이와 함께 조현병, 마약, A형 간염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5대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사고예방·관리 투자도 확대하였다.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 정신건강 전문요원 580명 확충 및 응급개입팀 34개팀 신설을 통해 정신질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장비 64대 보강,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도 신규로 실시 (44억원)하여 건강 위해요인을 제거하고자 한다.

## (5) 튼튼한 국방·외교

전방위 안보 위협 및 주변국 첨단무기투자 확대 등 대외관계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외교 예산도 확대하였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역대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하였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와 첨단 개인장비·과학화 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하였으며, 병 봉급을 33% 인상하는 등 장병의 기본적 복지도 대폭 향상시켰다. 공공외교와 ODA 예산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대외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4대 강국 및 신남방·신북방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10% 이상 증액하였다.

### (1)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

지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 기초 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등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투자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출·투자 부진으로 경제 활력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대응이 시급한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수출·투자·내수 활성화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소득분배 개선 등 포용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생활SOC 확충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투자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했다.

### (2)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병행

증가하는 지출 소요와는 달리 글로벌 경기 둔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향후 세입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더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10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이종혁 사무관

유사·중복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재정사업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사업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였다.

또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국유재산 활용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의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했다.

### (3) 재정운용·관리 과정에서 혁신성·투명성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운용·관리시스템 전반에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나갔다.

계약제도를 능력·기술 중심으로 개선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추진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했다.

현행 예산회계시스템을 대체하는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정보 관리를 고도화하고, 재정·경제·행정 정보를 망라한 통합재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했다.

국민 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재정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 (1) 재정수입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2019~2023년 기간 중 연평균 3.9%이다. 이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밑도는 수준으로 국세수입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이다.

〈표 8-6〉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476.1	476.4	482.0	505.6	529.2	554.5	3.9
(증가율)	(6.5)	(6.5)	(1.2)	(4.9)	(4.7)	(4.8)	
○ 국세수입	294.8	294.8	292.0	304.9	320.5	336.5	3.4
○ 세외수입	26.6	27.0	27.8	28.9	30.1	30.5	3.4
○ 기금수입	154.7	154.7	162.1	171.7	178.5	187.6	4.9

\* 20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2) 재정지출

정부는 2019~2023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6.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했다.

10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이종혁 사무관

〈표 8-7〉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 조원,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지출	469.6	475.4	513.5	546.8	575.3	604.0	6.5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328.9	332.6	352.4	375.3	393.2	412.9	5.9
(비중)	70.0	70.0	68.6	68.6	68.4	68.4	
○ 기금지출	140.7	142.8	161.0	171.5	182.1	191.1	8.0
(비중)	30.0	30.0	31.4	31.4	31.6	31.6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239.3	239.8	255.6	270.7	289.5	302.8	6.1
(비중)	(51.0)	(50.4)	(49.8)	(49.5)	(50.3)	(50.1)	
○ 재량지출	230.3	235.6	257.8	276.1	285.8	301.3	6.9
(비중)	(49.0)	(49.6)	(50.2)	(50.5)	(49.7)	(49.9)	

\* 20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2019~2023년 기간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을 중심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6.1%,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에 따라 재량지출은 2019~2023년 기간중 연평균 6.9%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사·중복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심도 깊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을 수립했다.

###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가속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2019~2023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GDP 대비 △3%대를 기록한 후, 2023년까지 GDP 대비 △3% 후반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2023년에는 적자폭이 GDP 대비 △2.2%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표 8-8〉 중기 재정수지·국가채무 전망

(단위 : 조원,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본예산	추경				
▣ 관리재정수지	△37.6	△42.3	△72.1	△81.8	△85.6	△90.2
(GDP대비, %)	(△1.9)	(△2.2)	(△3.6)	(△3.9)	(△3.9)	(△3.9)
※ 통합재정수지	6.5	1.0	△31.5	△41.3	△46.1	△49.6
(GDP대비, %)	(0.3)	(0.05)	(△1.6)	(△2.0)	(△2.1)	(△2.2)
▣ 국가채무	740.8	731.5	805.5	887.6	970.6	1,061.3
(GDP대비, %)	(37.1)	(37.2)	(39.8)	(42.1)	(44.2)	(46.4)

\* 2019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019~2023년 계획기간 중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같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며, 국제기구와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건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 3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sup>110)</sup>

#### (1) 고용·사회 안전망을 적극 확충하고 구조적 과제 지속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도 지원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보육·돌봄·청년주거 등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고, 일자리 확대 등 노인소득 기반도 확충해나갔다. 또한 미래 핵심인재 양성,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 (2) 미래성장 동력 창출과 생활편의 증진 인프라 확충

데이터·5G·AI 및 3대 핵심산업 활성화와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기공급 안정 등에 집중 투자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했다.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인프라도 확충해나갔다.

#### (3) 튼튼한 국방안보 태세와 안전한 국민생활 투자 확대

핵·WMD 대응 전력 등 핵심무기체계 투자 확대, 스마트 정예군 육성 등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재해예방 투자,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등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지속했다.

11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이종혁 사무관

〈표 8-9〉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단위 : 조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1. 보건·복지·고용	161.0	181.6	198.4	213.2	229.1	9.2
2. 교육	70.6	72.5	76.0	79.1	82.0	3.8
3. 문화·체육·관광	7.2	8.0	8.3	8.6	9.0	5.4
4. R&D	20.5	24.1	26.7	28.7	30.9	10.8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3.9	26.4	28.0	29.9	12.4
6. SOC	19.8	22.3	23.4	23.7	23.7	4.6
7. 농림·수산·식품	20.0	21.0	21.5	21.9	22.2	2.6
8. 환경	7.4	8.8	9.6	10.1	10.6	9.3
9. 국방	46.7	50.2	53.4	56.4	59.5	6.2
10. 외교·통일	5.1	5.5	5.9	6.3	6.6	6.9
11. 공공질서·안전	20.1	20.9	21.8	22.7	23.5	4.0
12. 일반·지방행정	76.6	80.5	82.4	84.3	86.1	3.0



**09**

**2019년 세법개정**



# 제 9 장 2019년 세법개정

## 제1절 2019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영
- ◇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에 역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

비전	<b>“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b>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		
기본 방향	경제활력 회복 ·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 세입기반 확충
추진 전략	투자활력 제고	일자리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소비·수출 활성화	서민 지원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 1

## 투자활력 제고

(1)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sup>111)</sup>

기업의 투자유인 증대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일반기업 1%에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2%로 2020년 투자분(중견·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투자분까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또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제조 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물류 자동화설비 등 첨단물류시설을 추가했으며,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열수송관·송유관 및 LPG·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을 추가했다.

(2)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sup>112)</sup>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연장(2020년 1월 1일~6월 30일)하는 한편,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하고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sup>113)</sup>

서비스업 창업 지원을 위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지원하기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을

11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이신영 사무관

1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박준영 사무관

11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고대현 사무관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총 97개 서비스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 (4)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sup>114)</sup>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지역 내에 창업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종전 5년간 100% 감면에서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으로 2년간 연장했다.

#### (5) 주류 과세체계 개편<sup>115)</sup>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맥주·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여, 맥주의 세율은 출고가의 72%에서 1리터당 830.3원으로, 탁주의 세율은 출고가의 5%에서 1리터당 41.7원으로 변경했다.

#### (6)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sup>116)</sup>

기업이 경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7년간(개정 전 : 10년) 유지하여야 하는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를 상속 개시 전 2년간 평균 고용인원의 120% 이상에서 100% 이상이 되도록 고용유지의무를 완화하였으며, 업종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를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에서 중분류(평가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중분류 외 업종변경도 허용)로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했다.

---

1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이신영 사무관

115)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석원 사무관

11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경숙 사무관

(1)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sup>117)</sup>

내국인의 면세점(시내·출국장) 한도는 오랫동안(2006~2019년) 3,000달러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그 간 국민소득과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동기간 1인당 GDP 증가율 73.1%, 소비자물가상승률 32.2%) 면세점 구매 한도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 (3,000달러 → 5,000달러)했다.

(2)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sup>118)</sup>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숙박용역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3)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확대<sup>119)</sup>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4)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sup>120)</sup>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 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던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청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11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최관수 사무관

1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조진희 사무관

119)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남원우 사무관

12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김준하 사무관

### (5)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sup>121)</sup>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화주가 부담하고 있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 컨테이너물품의 화주로서 선별검사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 3 혁신성장 지원

### (1)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sup>122)</sup>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세액공제 대상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여 종전 173개 기술을 223개 기술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 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도 종전 102개에서 142개로 확대했다.

###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sup>123)</sup>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을 확대하고,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 이내 창업자금을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 창업자금을 사용하도록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을 확대했다.

12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김영현 사무관

12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고대현 사무관

12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경숙 사무관

(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sup>124)</sup>

벤처기업으로 우수 인재가 유입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2천만 원에서 연간 3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4)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sup>125)</sup>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벤처투자의 선순환 유도)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 보유지분(구주) 인수 시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했다.

---

12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백경원 사무관

125)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만기 사무관

## 1

## 일자리 지원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sup>126)</sup>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2)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sup>127)</sup>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 시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3%에서 10%로, 중견기업의 경우 종전 1~2%에서 5%로 확대했다.

(3)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sup>128)</sup>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감면율 70%, 감면기간 3년, 감면 한도 연간 150만 원)이 적용되도록 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4)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sup>129)130)</sup>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 30%·중견 15% 세액공제, 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

126)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만기 사무관

12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고대현 사무관

12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백경원 사무관

12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백경원 사무관

13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김현수 사무관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임신·출산·육아 외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 요건도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으로 완화함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 (1)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sup>131)</sup>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적용 중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9/109)과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적용 중인 공제한도 특례(+5%p)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공제율 10/110)의 적용기한도 1년 연장했다.

### (2)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sup>132)</sup>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점증구간(단독가구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7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800만 원 미만) 상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sup>133)</sup>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직전 과세기간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1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김준하 사무관

13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종완 사무관

13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백경원 사무관

(4)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sup>134)</sup>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하여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 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대 이상자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표 9-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현 행	개 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4천만 원 이하 (5.5천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5%
1억 원 이하 (1.2억 원)		300만원(700만 원)		12%
1억 원 초과 (1.2억 원)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인하했다.

(5)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sup>135)</sup>

장애인 지원을 위해 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타익신탁) 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추가하고, 중증장애인이 의료비·특수교육비 외에도 본인의 생활비(150만 원 한도) 용도로 신탁재산의 원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했다.

13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종완 사무관

13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최시영 서기관

### (6) 행복기숙사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36)

행복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이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BTO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실시협약 체결된 행복기숙사의 시설 관리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 3 ||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 (1)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sup>137)</sup>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외에도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공익목적 의무지출제도<sup>138)</sup>의 적용 대상을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했다.

###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sup>139)</sup>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136)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조진희 사무관

13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최시영 서기관

138)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함

- 특정법인 주식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 3%

- 그 밖의 공익법인 : 1%

13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서은혜 사무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수도권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하고,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점용주택에 대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하도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했다. 동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sup>140)</sup>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정화를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에서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50%)로 축소했다.

### (5)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sup>141)</sup>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10년 또는 15년)이 지난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조정했다.

14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이신영 사무관

14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최시영 서기관

###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마련<sup>142)</sup>

세무조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 (2) 조세심판 · 심사청구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sup>143)</sup>

조세불복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조세심판원장 혼자 결정하던 것을 조세심판원장 및 상임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를 자문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개선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수준으로 강화했다.

#### (3) 기한 후 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sup>144)</sup>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한 후 1~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 감면하던 것을 1~3개월 이내는 30%, 3~6개월 이내는 20% 감면하도록 했다.

14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권영민 사무관

14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권영민 사무관

14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김서란 사무관

(1)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sup>145)</sup>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50% 이하 : 20%, 50% 초과 : 30%)되던 할증률을 지분율과 관계없이 20%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적용되던 할증평가 배제를 영구화하는 등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합리화했다.

(2)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sup>146)</sup>

국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이 조세정책 연구·평가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 효율성 및 공익 증대를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범위 및 제공사유를 확대했다.

(3)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sup>147)</sup>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기준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4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경숙 사무관

14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권영민 사무관

14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이원준 사무관

(1)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sup>148)</sup>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 원 한도를 신설하여 제도를 합리화했다.

(2)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sup>149)</sup>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한도를 축소하기 위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했다.

(3)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정비<sup>150)</sup>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당초 서민의 자산형성을 촉진·지원 하고자 가입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하여 도입되었으나, 고소득자·대자산가가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sup>151)</sup>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4)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sup>152)</sup>

국내기업이 특허(국내 미등록)를 보유한 외국기업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대가 및 특허침해 보상금액에 대해 국내 과세권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지급대가를 2가지로 구분하여 미등록 특허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국외 특허 침해로 인한 보상대가는

14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백경원 사무관

1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종완 사무관

15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윤민정 사무관

151)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15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와 남한샘 주무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각각 규정했다.

(5)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sup>153)</sup>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감치 제도를 도입했다.

---

15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김서란 사무관





**10**

**재정혁신 가속화**



## 제 10 장 재정혁신 가속화

### 제1절 지출구조 혁신<sup>154)</sup>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첫째,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재정여력 확보, 재정지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출혁신 2.0」 추진 방안을 확정(2019.1월)하고 추진했다. 재정이 일자리·소득분배 등 구조개혁 및 경제활력 제고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①사회안전망 확충, ②재정지출 재구조화, ③재정제도 혁신으로 구분하여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과제로는 창업예산 지원체계 통합·정비,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효과성 제고 등이 있으며,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예산안 반영 등을 추진했다.

〈표 10-1〉 지출혁신 2.0 주요 추진실적

주요 과제	추진실적
창업예산 지원체계 통합·정비	· 창업지원 사업 연계, 범부처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등 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체계 효율화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효과성 제고	·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피해아동쉼터 확대 등 아동보호 업무의 공공성 강화
중기 R&D 지원방식 다양화	· 기술적 전문역량을 보유한 하이테크 창업기업지원을 위한 R&D 매칭펀드 조성 등
국가-지방간 세출기능 재조정	· 균특회계 시·도 포괄보조사업 기능 이양(중앙→지방) 및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15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지출혁신과 이주호 사무관

둘째, 재정운용 성과 제고를 위해 정밀 분석이 필요한 사업(군)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수행하여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는 ①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②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③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④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을 고려하여 실업자 재취업 지원사업군, 아동돌봄 사업군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주요 사업군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예산안 반영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 표10-2〉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주요 추진실적

2019년 과제	추진실적
실업자 재취업 지원사업군	· 실업자 훈련기관 추진 주체간(민/관) 역할분담 및 유사중복 해소 추진, 성과 중심의 경쟁적 훈련시장 기반 마련
아동돌봄 사업군	· 지역별 실수요를 고려한 돌봄기관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효율화 추진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군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산학연협력사업의 주기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과 점검 및 부처간 역할을 명확화하여 유사중복사업 조정 추진
외국인체류관리 사업군	· 사전여행허가제 도입 등 출입국 행정서비스 고도화, 불법고용주 처벌 강화, 고용허가제 주기적 개편 및 인력공급 저변 확대 추진
다자개발협력 사업군	· 다자개발사업 성과점검 및 평가기준 도입 검토, 범정부적 다자협력 전략방향 설정 및 공유

## 제2절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sup>155)</sup>

우리나라의 2019년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37.7%,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2.2%로 OECD 주요국가와 비교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MF · 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 신용평가사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중장기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했다.

첫째, 최근의 경제·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준칙 도입방안 마련을 추진했다.

둘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 저성과·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했다.

셋째,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편 추진을 통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였고, 재정 관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넷째, 민간투자대상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을 추진하는 등 투자재원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

15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김영웅 사무관

## 제3절 재정성과관리체계 개선

### 1 성과관리체계 개편(156)

정부는 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다수의 민간전문가 및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2019.4월부터 총 3차례의 관계부처 회의 및 6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정부는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대상을 현행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미시적인 사업 실적 관리보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성과목표에 집중하여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 부처의 성과관리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는 성과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성과관리 관련 법적 근거를 체계화하고, 재정성과 DB(Database)를 구축하는 등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성과관리 관련 규정은 국가재정법 내 단일조항(제8조)이나, 성과관리 관련 별도의 장(章)을 신설 추진하고 성과관리의 개념 및 목적, 추진체계, 예산 환류, 결과 공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재정사업별 목적, 대상, 성과지표 및 달성도,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 성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성과DB를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구축하기로 했다.

###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157)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5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혁신팀 김지현 사무관

157) 집필자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이현주 사무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과 중기사업계획서상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보건 등 기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2019년까지 총 908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57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다.

제도 초기에는 경제성만으로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였으나, 2003년부터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체계(AHP<sup>158</sup>) 방식 활용)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간 종합평가체계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가중치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해왔다. 금년에는 지역균형발전 강화,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을 위해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평가비중 이원화, 정책성 평가 내실화<sup>159</sup>) 등 종합평가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사회복지·소득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시행·미시행 결정방식에서 수혜계층·전달체계 등 항목별 평가 및 대안제시 방식으로 전환했다.

〈표 10-3〉 수도권 · 비수도권 평가비중

구분	기준	개편	
		비수도권	수도권
① 경제성	35 ~ 50%	30 ~ 45%	60 ~ 70%
② 정책성	25 ~ 40%	25 ~ 40%	30 ~ 40%
③ 지역균형	25 ~ 35%	30 ~ 40%	-

158) 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화분석법) : 문제의 구조를 계층화(Hierarchy)하고 단계별로 분석(Analytic)하는 의사결정방법

159)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신설

이와 함께,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면제, 평가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종합 평가를 수행하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종합평가 시 사업 주무부처·지자체가 직접 평가자(분과위원)에게 사업추진의 의의, 주요 평가 항목별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 3

## 재정 조기집행 및 이·불용 최소화<sup>160)</sup>

### (1) 재정 조기집행

2019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2.5%, 하반기 2.8%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흐름이 전망되었다.<sup>161)</sup>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확장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는 총 291.9조원으로, 상반기 집행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인 61.0%(178.1조원)로 설정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 SOC, 생활SOC 사업은 중점관리 분야로 별도 선정하여, 집행실적 중점관리를 실시했다.

경제 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 12월 중 2019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공고 등 사전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도록 준비했으며, 공공계약 선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등 한시적 계약특례 적용을 추진했다.

16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김도희 주무관

161) 한국은행(2019). 「경제전망보고서(2019년 1월)」.

관리대상사업 상반기 집행실적은 65.4%(190.7조원)로 목표를 4.3%p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 1.0% 중 정부 성장기여도는 1.0%p를 기록했다.

〈표 10-4〉 2019년 상반기 집행실적

(단위 : 조 원, %)

구 분	연간 계획 (A)	상반기 계획		상반기 실적		계획 대비 달성도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금액 (C-B)	비율 (C/B)	(C/A) -(B/A)
□ 합 계	291.9	178.1	61.0	190.7	65.4	12.6	107.1	4.3
○ 중앙부처	252.6	155.9	61.7	166.2	65.8	10.3	106.6	4.1
▪ 예 산	208.9	131.2	62.8	138.3	66.2	7.1	105.4	3.4
▪ 기 금	43.7	24.7	56.5	27.9	63.8	3.2	113.0	7.3
○ 공공기관	39.3	22.2	56.5	24.5	62.4	2.3	110.5	5.9

## (2) 이·불용 최소화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이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보강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위한 집행 관리를 실시했다. 선제적으로 부처별 이·불용 요소를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된 정부의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2019년 불용률은 1.9%로 1%대를 달성했다. 이는 2006년 불용률 1.6% 이후 최저치이다.

〈표 10-5〉 연도별 불용규모

(단위 : 조 원, %)

구 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불용액	3.3	5.6	5.5	5.7	17.5	10.8	11.0	7.1	8.6	7.9
(불용률)	(1.6)	(2.4)	(2.1)	(2.7)	(5.5)	(3.2)	(3.2)	(2.0)	(2.3)	(1.9)

\* 불용률: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국가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지방세 비중은 24%에 불과하나, 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 감안 시 지방의 가용재원은 국가 전체의 68%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과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전분을 10%p 인상(2019년 11 → 15%, 2020년 15 → 21%) 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에서 3.6조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2020년에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3.3조원의 지방소비세가 확충되었고, 2020년에는 5.1조원을 추가 확충하여, 총 8.5조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이양, 교부세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총 3.6조원(2019년 2.8조원, 2020년 0.8조원)의 지방 재원이 순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

16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 정민형 사무관

1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2019년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참여확대, 소통활성화, 제도운영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참여 범위를 기존 사업의 제도개선 사항까지 포함했고, 예산국민참여단(300 → 400명), 일반국민 선호도조사(1,000 → 2,000명) 인원도 확대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Facebook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그룹 계정을 신설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http://www.mybudget.go.kr))를 내실화했다.

또한, 연중 상시 사업제안을 접수 받고,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토론 과정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2019년에 발굴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국민제안(1,399건)과 문제해결형 방식(3개 이슈 토론)을 거쳐 각 부처 96개 사업(2,663억 원) 요구 → 예산국민참여단 사업검토 및 회의를 통해 68개 사업으로 압축 →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참여단 투표 + 일반국민 선호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 38개 사업(1,114억 원) 반영 → 국회 심의를 거쳐 38개 사업(1,057억 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16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이범한 사무관

정부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국민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운영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후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 2018년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등 재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정보 연계가 미흡하여 일부 정보는 열린재정,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지방교육 재정공시포털시스템) 등의 홈페이지에서 중복·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산재된 재정정보를 연계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별로 각각 공개 중인 재정정보를 포괄하는 통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한 곳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개편 시 국민이 보다 손쉽게 재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정투명성 제고를 도모할 것이며,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16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박준영 사무관

# 11

## 국고 관리 패러다임 전환





## 제 11 장 국고 관리 패러다임 전환

### 제1절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 1 국유재산의 공익적 개발·활용 및 체계적 관리<sup>16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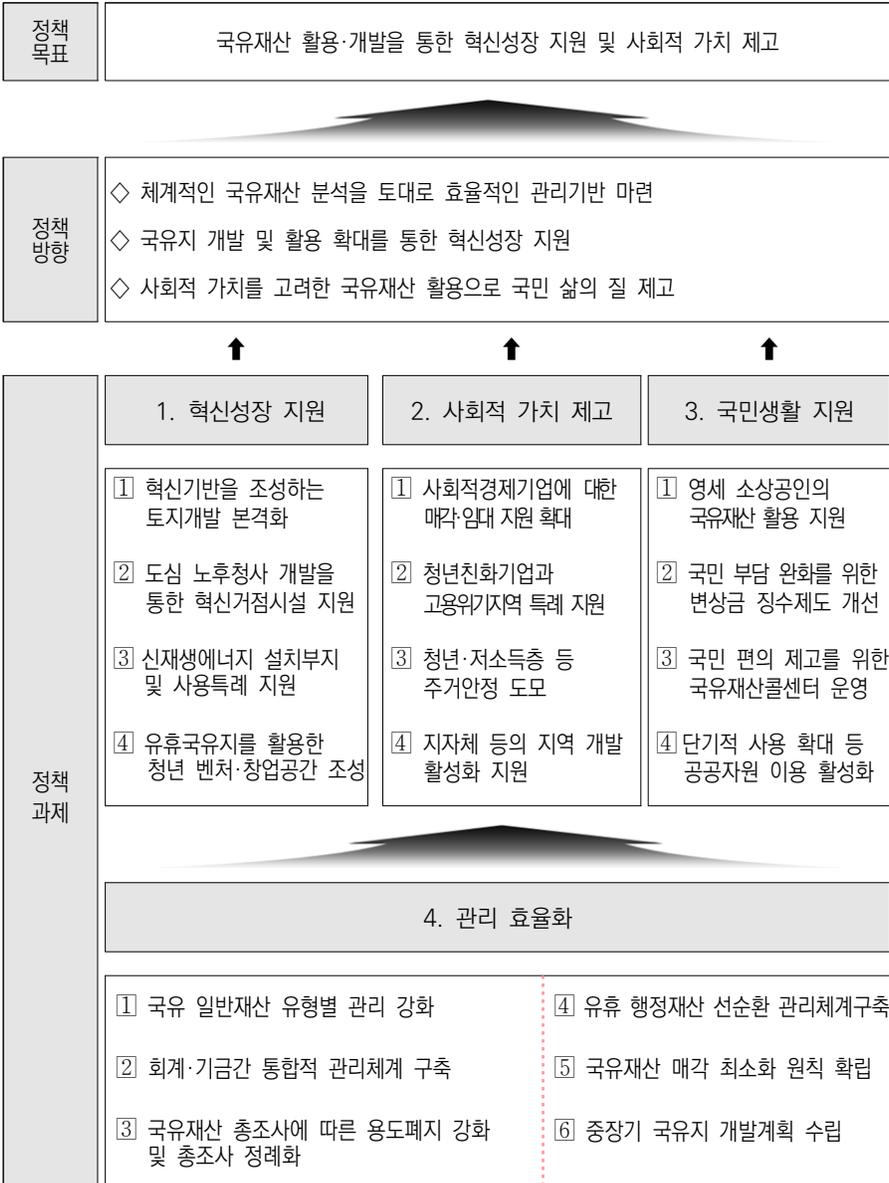
그간 국유재산 정책은 정부 기능 유지와 행정목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지·보존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들어 혁신성장 지원과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 개발·활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다. 더불어 주거안정·복지 등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2019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유재산 활용·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국유재산 분석·관리, 확보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국유재산 활용’이라는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개발 본격 추진, 유희국유지를 활용한 청년 벤처·창업 공간 조성, 둘째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확대, 청년친화기업 사용부담 완화,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 도모, 셋째 국민생활 지원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활용 지원, 넷째 관리 효율화를 위해 국유재산 총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등 유희 행정재산 관리 강화, 일반재산 유형별 관리, 매각 최소화 원칙 확립 등 총 18개의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토록 했다.

16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최현화 사무관

## 〈 2019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



지난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유휴 행정재산 발굴을 위해 행정재산 501만 필지에 대해 검토해온 결과, 2019년에는 일선관서 의견수렴 끝에 5.2만 필지를 직권 용도폐지하고 재산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이 가능한 재산을 엄선하고 대국민 개발·활용방안을 공모하여 10건을 선정·시상하는 등 국유재산 활용에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했다.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유지 개발을 본격 추진한 점도 중점 추진 내용이었다. 특히 2019년 1월, 전국 11곳의 총 693만㎡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11개 선도사업지 중 연내 4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토지개발과 더불어 유휴부지 개발로 청년 혁신창업공간 등을 제공하고, 청·관사, 상업·업무시설,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도심 노후청사 개발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도 구체화했다.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율을 5%에서 2.5%로 인하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지 매입대금 분납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지 사용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여 차세대 국유재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단순 회계정보 조회 기능에 머물렀던 국유재산 대장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유휴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휴 국유지나 건물의 개발·활용시 GIS 기반 분석을 통해 최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

그 밖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중 미운용 규정에 대한 존치평가를

실시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207개 특례 중 미운용 중인 특례 50개에 대한 존치평가를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 미흡상황은 개선 권고하는 한편, 국유농지의 불법 전대 방지를 위해 국유농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재산 1,288건의 계약해지 등 후속조치와 더불어 국유농지 대부기준을 제정하는 등 총괄청으로서 국유재산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 2

### 국유지 개발사업의 추진 및 확대<sup>166)</sup>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하여 2018.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9.1월 전국 11곳의 총 693만㎡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이 중 2019년에는 ①부산 원예시험장, ②의정부 교정시설, ③원주권 군부지, ④광주 교정시설 부지 등 총 4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이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2.2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창업·벤처입주기업 보육등 136만㎡의 혁신성장공간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도 개발필요성, 개발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국유지 가치제고 및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토지개발과 더불어 정부는 2018년부터 유휴·저활용 공공청사를 ‘공공청사 + 청년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2019년에는 지난

16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한송이·손주연 사무관

해 발굴한 대상지 중 대전통합청사(구 충남도경), 구 부산남부경찰서, 부산 연산5동 우체국 3건의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설계단계에 착수했다.

또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의 추가 발굴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의 역세권에 위치한 복합개발 대상지 5곳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 〈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상지 〉

- ① 구 선거연수원 (서울 종로구 인의동, 종로5가역 인근)
- ② 구 관악등기소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인근)
- ③ 안양세관 (경기 군포시 금정동, 산본역 인근)
- ④ 대방 군관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역 인근)
- ⑤ 공릉 군관사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역 인근)

이 중 선거연수원, 대방·공릉 군관사 복합개발 사업은 연내에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설계에 착수하였고, 관악등기소 및 안양세관은 2020년 예산안 반영 이후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10월 1일, 국유재산 개발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최초 사례로서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를 개관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 KTV 건물을 위탁개발하여 청년창업지원 공간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정부(기재부)·지자체(서울시)·공공기관(캠코 등)·민간(스파크플러스) 부문이 협력하여 조성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민간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입·낙찰제도 및 계약조건 등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계약의 규모는 2019년도 기준으로 약 135조원에 달하며 입찰기업도 57.5만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 시장의 민간 파급효과를 활용하여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추진했으며,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했다.

##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sup>167)</sup>

## (1)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도입

정부는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등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하였다.

2년 간 제도 운용을 통해 공공조달 현장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됨에 따라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여, 기존에는 입찰가격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던 중·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도 기술력 평가를 강화했다.

또한 정부는 1,0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로서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16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장준영 사무관

공사에 대하여 입찰자가 시공방법 등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우수한 제안을 한 입찰업체 간에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9년부터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 (2) 입찰시 가격평가 합리화

정부는 입찰평가에 있어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거나 불공정하게 대가를 감액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였다. 입찰자가 제시하는 공사의 세부내역별 단가를 심사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내역을 작성한 경우 감점을 부여하는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항목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비용을 가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항목은 입찰참가자 간 가격경쟁 없이 전액이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 (3)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발주기관이 예산절감을 위해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산정된 단가를 소규모 자재의 단가로 활용함으로써 과도하게 예정가격을 감액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자재단가를 계상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현장관리비 등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개선했다.

### (1)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마련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민간의 기술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혁신 기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추진전략은 혁신구매제도 활성화,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활성화 등이다.

### (2) 패스트트랙 마련 및 혁신제품 지정

정부는 혁신제품의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 조달사업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패스트트랙 I·II,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했다. 패스트트랙 I·II는 각각 부처 R&D 결과, 시제품 중 뛰어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절차로 조달청은 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66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다.

### (3) 혁신조달 추진체계 마련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조달 혁신 아젠다를 총괄 기획·관리하는 협의체로서 민관합동 「범정부추진단」을 각각 7월, 10월 두 차례 개최하여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계획,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향후 추진계획,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했다

168) 집필자 : 기획재정부 혁신조달팀 조선희 사무관, 박양규 주무관

### (1) 조달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 완화

입찰·계약과정에서 뇌물·담합·계약불이행 등 부당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계약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제재사유 중 ‘입찰 신청서 제출 후 입찰 미참가’, ‘산출내역서미제출’ 등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사례의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 (2)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국가, 지자체 등으로 제한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지급각서를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하여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조달기업의 입찰 부담을 완화했다.

### (3) 분쟁조정대상 범위확대

국가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당한 비용·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없이 간편한 조정절차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운용 중이나, 공사계약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계약의 범위가 30억원 이상으로 협소하여 영세업체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종합공사에 비해 공사규모가 작은 전문·기타 공사에 대하여는 분쟁조정 적용대상을 3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영세·소규모 건설업체의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16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장준영 사무관

## 1

## 2019년 국채시장 동향

## (1) 발행시장

2019년 국고채 발행규모는 101.7조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1.2조원을 감축 발행했다.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반회계 적자보전 수요 등에 따른 순증규모(44.5조원)는 전년대비 24.2조원 증가한 반면 만기도래, 조기상환 등을 위한 상환규모(57.2조원)는 전년대비 19.9조원 감소해 총 발행량은 2018년 97.4조원 대비 4.3조원 증가했다.

〈표 11-1〉 국고채 연도별 발행량 및 발행잔액 추이

(단위 : 조원,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발행량	97.5	109.3	101.1	100.8	97.4	101.7
(전년비)	(+10.3)	(+12.1)	(△7.5)	(△0.3)	(△3.5)	(+4.4)
발행잔액	438.3	485.1	516.9	546.7	567.0	611.5
(전년비)	(+9.4)	(+10.7)	(+6.6)	(+5.8)	(+3.7)	(+7.8)

## (2) 유통시장

2019년 상반기 국고채 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전환 및 韓 1사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률(△0.3%) 기록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했다.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되었는데, 일본의 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발표(7.1일) 및 미·중 무역 분쟁 격화 우려로 금리는 8월 중역사상 최저치를 경신<sup>171)</sup>했다.

17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채과 김지수 사무관

이후 금리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의 세 차례 금리인하( $\Delta 75\text{bp}$ ), 우리나라의 두 차례 금리인하( $\Delta 25\text{bp}$ ) 단행 등의 영향으로 2019년말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7%를 하회하면서 2018년말 대비  $\Delta 26.5\text{bp}$  하락한 1.683%를 기록했다.

〈표 11-2〉 2019년 국고채 금리 동향

(단위 : %, bp)

구 분	2018년말	2019년말	전년말비	연중최고	연중최저
국고채(3년)	1.817	1.360	$\Delta 45.7$	1.836	1.093
국고채(5년)	1.884	1.480	$\Delta 40.4$	1.914	1.127
국고채(10년)	1.948	1.683	$\Delta 26.5$	2.051	1.172
국고채(20년)	1.954	1.691	$\Delta 26.3$	2.101	1.150
국고채(30년)	1.927	1.682	$\Delta 24.5$	2.088	1.142

### (3) 외국인 채권자금 동향

2019년 들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양호한 대외신인도, 재정거래 유인 등에 따라 유입세를 유지했다. 종목별로 보면 국고채는 11.0조원, 통안채는  $\Delta 1.4$ 조원 순투자를 기록하는 등 총 9.2조원의 순투자를 시현했다.

외국인 채권 보유잔액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전환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며 1월과 2월 유출되었다. 그러나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6월에 120조원을 돌파한 후, 9월에 127.2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국고채와 통안채 만기 상환, 연말 장부마감 (book closing) 등의 영향으로 10월 이후 연말까지 유출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3/4분기까지 지속돼 온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 기인하여 2019년말 외국인 채권 보유잔액은 연말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123.7조원을 기록했다.

171) 3년물의 경우 8.19일, 5~30년물의 경우 8.16일 최저치 경신

〈표 11-3〉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규모

(단위 : 조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00.4	101.4	89.3	98.5	113.8	123.7
국고채	65.9	67.9	72.5	77.8	86.3	98.3
통안채	33.2	32.7	15.5	19.5	26.2	24.3

2

국채시장 제도개선

(1)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안정적 국고채 발행을 위해 핵심 수요기반인 국고채전문딜러(PD)의 인수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PD 의무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시장조성’ 배점을 일부분 ‘인수’ 배점으로 전환<sup>172)</sup>하여 PD들의 국고채 실인수 유인을 강화했다. 또한, 물가채 인수옵션 행사시간을 확대<sup>173)</sup>하여 물가채의 안정적 발행과 공급 확대를 통해 물가채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

(2) 연물별 발행비중 탄력 조정

정부는 시장 상황과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물별 발행 비중을 2018년부터 단기·중기·장기로 그룹화하여 관리했다. 연초에 계획한 최적 발행비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장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며, IFRS17 시행 등에 따른 보험사의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년물 발행비중을 지속 확대했다.

172) PD 월평가 배점 : 인수 34점, 호가 32점 → 인수 36점, 호가 31점 )

173) 물가채 인수기한 : 명목 10년물 발행당일(14:30~15:30)까지

→ 명목 10년물 발행당일(14:30~15:30), 다음날(09:00~15:30)까지 연장

〈표 11-4〉 만기물별 발행 실적

(단위 : %, 조원)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가이드라인		40±5		25±5	35±5		
실적	비중	40.4		24.2	35.4		
	발행액	20.6	18.5	26.1	7.7	25.6	3.2

한편 2016년에 처음으로 발행하였던 50년물은 시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19년에는 격월로 정례 발행(작수월+3·9월 8차례 발행)에 성공했다. 그 결과 국고채 평균잔존만기는 2015년말 7.62년에서 2019년말 10.64년으로 증가했다.

### (3) 국고채 차환리스크 감축

정부는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의 만기가 특정 연도에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조기상환(buy-back)과 교환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2019년에는 2020년과 2021년에 만기가 집중된 국고채 물량을 적극적으로 차환하여 향후 발행량 급증 및 조달금리 상승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2020년 및 2021년에 집중된 만기도래분을 약 △20.3조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11-5〉 2019년 국채 관련 주요 추진 정책

일 시	내 용
2019.2.1	2018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발표
4.1	PD규정 개정 시행(인수배점 확대, 월별·분기별 평가기준 일원화 등)
4.2	2018년 하반기 우수 PD 시상식 및 국채시장 발전포럼 개최
6.4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1.75% → 1.50%)
7.23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1.50% → 1.25%)
7.31	2019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발표
8.8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1.25% → 1.00%)
9.4	2019년 상반기 우수 PD 시상식 및 국채시장 발전포럼 개최
10.8	제6회 국제 Korea Treasury Bonds 컨퍼런스 개최
12.19	제1회 국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
12.23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12**

**사회적 가치공공성 강화  
중심 공공기관 혁신**



## 제 12 장 사회적 가치·공공성 강화 중심 공공기관 혁신

### 제1절 사회적 가치 및 자율·책임 경영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1 공공성 강화를 반영한 공공기관 평가 실시<sup>174)</sup>

정부는 2017년, 공운법 제정 10년을 계기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요구를 반영하고자 평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을 추진했다. 전문가, 공공기관 노사,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기관·유형별 맞춤형 평가, 참여·개방·소통형 평가체계 구축, 책임·윤리경영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에도 평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초를 유지한 가운데 정부는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이는故 김용균 사망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삼고, 이것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2019.3)에 따라 추진했다.

우선, 안전 지표(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배점을 기존 2점에서 최대 6점까지 대폭 상향했다. 또한, 적부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여부, 안전법령·지침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 지표를 만점 또는 0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기관의 사고 감소 노력 및 성과도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산재가 빈발하는 작업장이나 국가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분야 외에 주요사업에도 안전지표(2~4점)를 별도로 신설했다. 평가의 전문성

174) 집필자 :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채원혁 사무관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자문단’ 구성 등 경영평가단에 안전 분야 전문가를 확대했고, 안전전문기관(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결과, 위험성평가·점검 결과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장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 등은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이외에도 부적절한 채용관행, 갑질 등 윤리경영 분야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분야에 대해서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정례화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권익위)’를 평가에 반영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시행(공운법, 2019.7)에 따라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달성노력 등을 평가에 새로 반영했다.

정부는 아울러, 경영관리 분야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 분야(공기업 45점, 준정부 55점) 평가시에도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 정부정책의 국민체감 성과 창출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소외계층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도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2

###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목표제 운용<sup>175)</sup>

정부는 2017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균형 잡힌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 임원임명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17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권오영 사무관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양성평등임원임명목표제'를 2019년 7월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였다.

동 제도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향후 5년간의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그 이행 노력과 실적을 평가받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서 애초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 수립 당시 11.8%였던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이 2019년 말에는 21.2%까지 상승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표 12-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	13.4%	18.4%	21.8%	22.4%	23.0%
실적	11.8%	17.9%	21.1%	-	-	-

양성평등 임원임용목표제의 도입은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제거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성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민간 영역까지 확산하도록 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총사업비 1,000억원 & 정부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금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제도로서, 2011년부터 시행 후, 2016년 법제화되었다. 동 제도는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재무구조 정착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과 재무건전성 간 균형잡힌 제도 운영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2019년에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주요 개편 필요 사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았던 조사 기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바, 공공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조사 방안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 사후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 논의에 집중하였고, 종합평가(AHP)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문가 활용 방안, 산업계의 요구를 고려하여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의 산업 파급효과 반영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상기 다양한 논의 과제는 과제 구체화 및 의견 수렴 등의 후속작업을 거쳐 추후 전반적인 제도 개편안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

17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소병화 사무관

## 제2절 공공기관 혁신 추진

### 1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점검<sup>177)</sup>

그간 공공기관이 수익 극대화, 부채 감축 등 경영효율성에 치중한 결과,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이 위축되고, 채용·입찰비리 등으로 국민 신뢰가 저하되었다. 또한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추진에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및 민간 확산 노력 등이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을 본격 추진했다.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운영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2019.6.)

「2019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혁신의 지향점을 국민에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또한, 포용성 강화, 경제활력 제고, 적극행정 확산 등 최근 주요 정책을 반영하여 ①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 ②혁신적 포용국가 선도, ③국민 신뢰 제고의 3대 기본방향 하에 8대 주요 혁신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12-2〉 3대 기본방향 및 주요 과제

기본 방향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	국민 신뢰 제고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li> <li>②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li> <li>④ 혁신성장 지원</li> <li>⑤ 공정경제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적극행정 확산 및 조직운영 혁신</li> <li>⑦ 투명·윤리경영 강화</li> <li>⑧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공헌</li> </ul>

17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 가순봉 사무관

첫째,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을 위해 기관별 고유 목적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기관을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둘째, 일자리 중심의 경제, 혁신성장의 지속 추진,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도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혁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요 발굴, 기술마켓 플랫폼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약관 및 특약 등을 점검·정비한다.

셋째, 적극행정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기관별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채용·입찰비리, 갑질 등 각종 부패 근절을 위해 규정 강화, 내부감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업계획 수립·집행·점검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 확대한다.

이러한 혁신방향에 따라 각 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상은 2019년 339개 공공기관 중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 33개와 연구개발 목적기관 69개를 제외한 237개 기관이다.

237개 기관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세부과제,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혁신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했다. 정부는 주무부처의 이행점검,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성과 등을 평가한다. 아울러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성과가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과 자재가 있어도 납품실적 제출 및 기술입증 한계 등으로 공공 공사 참여와 납품이 어려운 혁신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과 신제품이 전문가 검증을 통해 빠른 시간내에 인정 받고 상품화까지 가능한 SOC 통합 기술마켓을 구축하여 개통하였다.(2019.6.5.)

「SOC 통합 기술마켓」은 공공기관의 요구기술과 중소기업의 보유기술 정보를 윈스톱으로 제공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혁신기술의 공모·R&D 제안·검증을 통해 상품화 및 홍보·판매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콘텐츠는 ①기관별 중소기업 지원 제도 안내, ②참여기관 공동 기술 공모, ③중소기업 기술개발 제안, ④중소기업 기술, 제품 홍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콘텐츠		내용
포용 성장	포용성장 제도·법령	▪ 포용성장 제도 및 법령 등재
	기관별 지원제도	▪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제도 게시
기술 공모	기관별 연간계획	▪ 기관별 연간 공모 계획 게시
	기술공모	▪ 기관별 공모내용 게시
	관심공모 알림서비스	▪ 중소기업이 사전 등록된 관심분야의 공모 시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기술 제안	-	▪ 중소기업이 기술 연구개발(R&D)을 SOC 기관에게 제안
기술 홍보	-	▪ 중소기업이 보유기술을 통합 기술마켓에 등재하여 홍보

17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 이승민 사무관

그간의 추진 경과는 SOC 통합기술마켓 구축 용역(2019.1~4월)을 수행하여 플랫폼 개통식을 개최(2019.6, 판교 기업성장센터)하였으며 공공기관운영 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2019년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우수사례 동영상 시연(2019.9.4, 부총리 주재)하였으며, 토지주택공사 등 SOC 10개 기관이 기술마켓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공모(2019.9.18)를 시행했다.

그리고, SOC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기계 출연연구기관(6개)의 기술검증을 지원(2019.11)하였다.

이러한 추진결과, SOC 기술마켓 참여기관의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직접구매지원 실적(2018년 366억원 → 2019년 548억원)이 전년대비 50% 수준 증가한 성과로 이어졌다.

향후에도 SOC 통합기술마켓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다른 공공기관들과 민간 대기업 등에도 혁신성장을 확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10월)을 수립했다. 동 대책에는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충원 계획(2022년까지 6~8만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확충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 확정된 2020년 공공기관 정기증원 규모는 5천여명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증원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건설공사 현장점검 등 시설물 안전 강화(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국립대병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소 건설·운영(한국전력공사 등), 스마트공장·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사업 추진(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등), 연구개발 기능 강화(출연연구기관 등) 등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보건의료, 에너지, 혁신성장, 연구개발 등 분야의 인력이 확대되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자율성 확대 조치에 따라 자율 정원조정 제도 대상기관의 하위직급 및 예산비수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협의 없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증원이 이루어졌다. 2020년 정기증원 중 이에 해당하는 증원 규모는 3천여명 수준이다.

2019년도에는 정기증원 외에도 신규예산 반영, 법령 제·개정, 정부정책 추진 등에 따라 인력소요가 발생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증원을 진행했다. 특히 안전

17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이상협 사무관

분야 필수인력 확대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는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2019.3월), 「공공기관 안전대책」(2019.3월)을 발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4천여명을 수시 증원하였다. 안전 전담·총괄부서 강화, 현장 안전부서 신설, 위험작업장의 2인 1조 근무를 포함한 현장인력 확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일자리 확충 노력에 따라 2019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3.3만명 수준으로, 2년 연속 3만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안전·SOC·에너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3〉 공공기관 신규채용

(단위 : 만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채용	1.92	2.09	2.22	3.37	3.34

자료 : 알리오 홈페이지(www.alio.go.kr)

정부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2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sup>180)</sup>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7월)을 마련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공공기관의 정규직

18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영관리과 박준하 사무관

전환결정 인원은 100,422명으로 당초 설정한 전환 계획 인원 (96,030명)대비 104.6%에 달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표 12-4〉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2019년말)

(단위 : 명)

구분	전환계획인원	전환결정인원	전환완료인원
공공부문	193,252	173,943	141,945
공공기관	96,030	100,422	85,786

자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고용노동부)

전환 결정 이후 전환 완료가 되지 않은 인원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전환 완료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로 설치된 ‘노·사·전문가 협의회’<sup>181)</sup> 등 정규직 전환결정기구를 통해 기관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 직종, 전환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sup>182)</sup>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절감되는 비용(이윤 - 일반관리비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하에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019.5월)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이후 연간 평균 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하는 등 처우 개선의 효과가 상당한 정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181) 노사전 협의회 구성: ①기관, ②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③기관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④무노조 대표, ⑤외부 전문가 등

182) 정규직 전환 5대 원칙: ①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②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추진, ③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④국민 부담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⑤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관계부처 합동, 2018. 12월)을 마련하고 ‘자회사 운영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19.9~11월)를 실시하여 자회사가 안정적·독립적 기반위에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선도하여 우리 사회의 이중적 노동시장 개선에 기여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1

채용비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sup>183)</sup>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강원랜드 등) 채용비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채용비위 근절을 위해 매년 정부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2017년 조사 이후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채용비위 연루자 등을 엄정제재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채용비위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했으며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계획 부터 모든 채용과정을 대외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2018년 조사 이후에는 채용비위에 대한 엄정제재 기조를 강화하고 비위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공공기관별로 채용절차·기준을 세분·구체화하는 별도 세칙을 마련하도록 하여 기관장 등의 불필요한 재량을 축소하고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채용계획 등을 감독부처와 협의 하는 등의 사전통제 기능을 확대했다. 그리고 채용비위에 대한 처분(징계양정) 가이드를 마련하여 기관장 등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온정적 징계를 방지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 시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수위를 경감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채용비위에 대한 엄정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응시자와 친인척 또는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의 평가위원 참여를 금지하고 면접위원의 경우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1/2이상으로 의무화했다.

18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 안형자 사무관

〈표 12-5〉 제도개선 이행사항

구분	개선과제	이행사항
채용 비위 연루자 등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비위 연루 직원 제재</li> <li>• 부정합격자 제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 개정 (2018.3.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비위 연루 임원에 대한 제재</li> <li>• 채용비위 발생기관, 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운법 개정 (2018.9.28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된 징계양정기준 마련 (자의적·온정적 징계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이드라인 통보(2019.4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 시 감경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 개정 (2019.3.2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합격자에 대해 확인서 징구 - 부정합격 시 취소 가능함을 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 개정 (2019.12.27.)</li> </ul>
감독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감사기능 강화 - 채용 전 과정에 감사인 입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 개정 (2018.3.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처 사전협의</li> <li>• 면접 외부위원 참여 내실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 개정 (2019.3.2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세척 마련(불필요한 재량 축소) - 채용단계별 세부규정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 배포 (2019.4월)</li> </ul>
채용 절차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정보 공시 확대</li> <li>• 각 전형별 외부위원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 개정 (2018.3.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프로세스 관리 표준 매뉴얼 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 배포 (2018.6월)</li> </ul>

정부는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채용실태 전수조사(2018.11.6. ~ 2019.1.18)를 앞당겨 추진했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총괄하에 전체 338개 기관 중 감사원에서 감사중인 기관 등 5개 기관을 제외하고 33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10월 이후 신규채용 및 2014.1월 이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채용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280개 기관에서 88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채용비위 사안은 84건(수사의뢰 19건, 징계요구 65건)으로 관련 연루자(162명)는 즉시 업무 배제하고 기소 등 수사결과에 따라 퇴출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본인 기소 시 즉시 퇴출하도록 하고 비위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추가조사를 거쳐 퇴출시키도록 했으며, 채용비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특정 시 다음 단계 채용시 기회를 부여하고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 대상으로 제한 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도록 했다.

〈표 12-6〉 2018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구분	적발 건수	대상자						합계
		현직			퇴직			
		직원	임원	소계	직원	임원	소계	
수사의뢰	19	28	1	29	4	6	10	39
징계요구	65	133	0	133	6	0	6	139
합계	84	161	1	162	10	6	16	178

18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 안형자 사무관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故 김용균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안전·생명을 우선하는 안전경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2019.3. 19)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산재사고 사망자를 60%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①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②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③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구조, ④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워 추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2019.3.28.)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책무 및 이행 사항을 등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2019.3.28.)을 제정하여 시달하였다.

안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배점을 최대 2점에서 6점으로 대폭 상향하고, 사고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기관장 등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매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실적은 주무부처의 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위험작업장의 2인1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안전투자도 확대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관 등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안전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임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게 하였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추진 등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2019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수는 2018년에 52명에서 37명으로 28.8%로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강화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중대사고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를 도입하여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13

##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인협력력 강화





## 제 13 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 제1절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1 전략적 통상정책 적극 추진<sup>185)</sup>

##### (1)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2019년 국제 통상환경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제한 조치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갈등심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한층 강화되었던 가운데, 2019년 12월 미국과 중국이 오랜 무역분쟁 및 협상 끝에 1차 합의에 도달하며 추후 국제 통상환경이 보다 안정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2019년 1월부터 발효되었고, 같은 시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도 발효국이 추가(베트남) 되었다.

##### (2) FTA 추진 현황

2019년말 기준, 우리나라는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중이며, 발효 추진중인 FTA는 4건(영국, RCEP,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협상 진행 및 재개 검토 중인 FTA는 12건이다.

브렉시트 대비 통상공백 방지를 위해 한-영국 FTA를 추진하여 국회비준(10.28일)을 완료하였다. 한편, 신시장 개척을 위해 이스라엘(8.21일)·

185) 집필자 :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김종성 사무관, 통상조정과 이세환 사무관

인도네시아(11.25일)와 신규 무역협정을 타결했고 필리핀(6월 협상개시), 말레이시아(6월 협상개시), 러시아(6월 협상개시)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G2의존도 완화 및 안정적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변화한 통상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발효 15주년인 한-칠레 FTA 개선협상을 진행하고 중국의 서비스·투자 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또, 다자 FTA 참여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흥시장 선점을 위해 RCEP(11.4일 타결), 한-중미 FTA(10.1일 부분 발효), 메르코수르 TA, 한중일 FTA, 태평양 동맹 협상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표 13-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9.12월 기준)

단 계	대상국가 및 주요내용
발효 (1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레(2004.4월 발효)</li> <li>• 싱가포르(2006.3월 발효)</li> <li>• EFTA 4개국(2006.9월 발효)</li> <li>• 아세안 10개국(상품 2007.6월 발효, 서비스 2009.5월 발효, 투자 2009.9월 발효)</li> <li>• 인도(2010.1월 발효)</li> <li>• EU(2011.7월 발효)</li> <li>• 페루(2011.8월 발효)</li> <li>• 미국(2012.3월 발효, 2019.1월 개정의정서)</li> <li>• 터키(상품 2013.5월 발효, 서비스투자 2018.9월 발효)</li> <li>• 호주(2014.12월 발효)</li> <li>• 캐나다(2015.1월 발효)</li> <li>• 중국(2015.12월 발효)</li> <li>• 뉴질랜드(2015.12월 발효)</li> <li>• 베트남(2015.12월 발효)</li> <li>• 콜롬비아(2016.7월 발효)</li> <li>• 중미 5개국(2019.10월~11월, 부분발효 3개국)</li> </ul>
서명 및 타결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2017.2월 협상개시, 2019.8.22일 서명)</li> <li>• RCEP(2012.11월 협상개시, 2019.11.4일 타결)</li> <li>• 인도네시아(2012.3월 협상개시, 2019.11.25일 타결)</li> <li>• 이스라엘(2016.5월 협상개시, 2019.8.21일 타결)</li> </ul>
협상진행/ 재개검토 (1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2012.11월 개시, 2019.12.21일 회기간 회의)</li> <li>•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2018.5월 개시, 2019.10.1일 4협상)</li> <li>• 에콰도르(2015.8월 개시, 2016.11월 5차 협상)</li> <li>• 필리핀(2019.6월 개시, 2019.11.25일 FTA 공동선언문 선언)</li> <li>• 러시아(2019.6월 개시, 2019.10.1일 2차 협상)</li> <li>• 말레이시아(2019.6월 개시, 2019.9월 3차 협상)</li> <li>• 한-아세안 추가자유화(2010.10월~2019.2월, 17차례 이행위 개최)</li> <li>•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2016.10월~2019.6월, 8차례 개선협상 개최)</li> <li>•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2018.11월~2019.10월, 3차례 개선협상 개최)</li> <li>•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2018.3월~2019.11월, 6차례 협상 개최)</li> <li>• PA(태평양동맹(4개국), 2019.9월 협상세척 협의 개시)</li> <li>• EAEU(유라시아 경제 위원회(5개국), 2017.9월, FTA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작업반 설치 합의)</li> </ul>

### (3) 평가

그간 우리나라는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상품분야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지향함으로써 FTA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에 브렉시트 등 통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신규 FTA 추진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기체결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존 FTA 개선협상 추진 등의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메가 FTA 가입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칠레 FTA 개선협상,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 既체결 FTA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 2

### 신북방·신남방 등 신시장 진출 확대<sup>186)</sup>

#### (1) 신북방정책을 통한 진출 확대

##### 1) 추진배경

90년대 초 이후 역대 정부는 북방정책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지원체계 미비 및 대북관계 경색 등에 가로막혀 우리 경제의 협력 다변화를 이루어내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북방 국가들과의 상호 호혜적 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신북방정책을 적극

18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박재현 사무관

추진해왔다.

## 2) 주요 추진내용

2.13일 한-러 간 협력 비전과 실행계획을 담은 '9개 다리(9-Bridge) 행동계획(action plan)'을 홍남기 부총리와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 간 서명을 통해 확정했다. '9개 다리 행동계획'은 2017.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9개 다리 협력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당초 제안한 9개 분야(가스, 전력, 철도, 산업단지, 조선, 항만, 북극항로, 농업, 수산)에 3개 분야(보건·의료, 교육, 환경)를 추가했다.

6.29일에는 오사카에서 G20정상회의 계기로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과 더불어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9개 다리 행동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함께,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6.20)을 계기로 향후 상품 분야를 포괄하는 한-EAEU FTA 논의도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 수석대표로 동북아 지역 각국 정상 등과 함께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한-러 기업인 150여명이 자리한 '한-러 기업인 대화' 행사에 참석하고, 직후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만나 한-러 간 실질 협력 강화방안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9.24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간 부총리급 양자 협의체인 제18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개최했다. 양국은 수교 30주년 교역 300억불, FTA 체결을 통한 500억불, 남북러 경협 활성화를 통한 1,0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전력·가스·철도 및 나진-하산 등 남북러 3각 협력, 한-러 공동펀드 조성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3.28일에는 중앙아시아 지역 중점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제2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하고, 개발협력·교역·투자 확대 및 우리 기업 수주지원과 애로사항 등 경제 분야 현안을 조율했다. 양 국은 한-우즈벡 FTA 공동연구를 추진해나가기로 하고, 수르길 프로젝트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4.16~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 3개국 정상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실질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 (2) 신남방정책을 통한 진출 확대<sup>187)</sup>

### 1) 추진배경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완충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인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공동체'를 제안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수준을 미·중·일·러 4대 강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였다.

이후 2018년 8월 신남방정책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1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아래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신남방정책 추진을 본격화했다.

---

18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 강성빈 사무관

## 2) 주요 추진내용

### 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2018년 신남방정책 추진체계 구축 이후 2019년은 고위급 교류를 토대로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신남방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경협 심화를 위해 2019년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수석 대표로 하는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를 개최했다.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 진출기업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고, 베트남 석유가스공사(PVN)와 기본여신약정 (FA) 체결 등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경협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또한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한-인니 CEPA 타결 등 통상 협력 진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캄보디아)·개정(베트남),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합의 등 경제 분야 협력성적을 거두었다.

아울러 2019년에는 미얀마 경협산단 기공식 개최, 베트남 흥이엔성 경협산단 본격 추진 등 우리기업 신남방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협력을 진전시켰으며, 인니 수도이전, 미얀마 달라 신도시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협력도 착수하였다.

### 나. 인도와의 협력 강화

한국과 인도는 각각 신남방정책과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기조 하에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했다.

2019년 1월, 11월에는 금융협력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2017년 체결한 EDCF 기본협정을 기반으로 나그뿌르-뭄바이 고속도로, 반드라 공공지구 재개발 사업 등 EDCF 우선지원 후보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했다.

또한 6월에는 2016년부터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개선협상을 개최하여 상품·서비스 개방 확대,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을 논의했다.

### 3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 지원<sup>188)</sup>

#### (1) 범정부 지원체계 ‘Team Korea’ 구축

2019년 해외 인프라 수주 실적\*은 2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의 등락 배경에 저유가 기조 지속, 글로벌 수주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 악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이 요구되었다.

\* 해외수주액(억불): (2015) 461 → (2016) 282 → (2017) 290 → (2018) 321 → (2019) 223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 체계인 ‘Team Korea’를 정비하였다. 우선 대외경제장관회의(2019.2월, 4월, 7월), 해외 인프라·투자 수주지원협의회(2019.7월, 12월) 등을 통해 해외수주 전략 수립, 부처별 고위급 수주지원활동 계획 공유, 핵심 프로젝트 현황 보고 등 수주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해외수주지원 실무 협의회를 신설·수시 개최하여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애로·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별·지역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경제공동위, 경제부총리회의 등 양자 고위급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에 대한 상대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우즈베크 무역경제협력공동위,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한-UAE 경제공동위 차관급 점검회의 등

18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유채연 사무관

## (2)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유도 및 사업 역량 제고

인프라 사업의 대규모화에 따라 글로벌 인프라 시장은 단순 도급형 중심에서 개발·설계·금융조달·건설·운영 등 쉰 과정을 포괄하는 투자 개발형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오랜 경험을 보유한 선진국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국내 인프라 개발 경험을 활용하고 기업의 사업 발굴·기획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해외수주 실적을 반영하여 인프라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했다. 또한 사업 담당자의 적극적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해외투자 손실 발생에 대해 면책(고의·중과실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KOTRA·KOICA·수출입은행·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현지 사무소에 여타 공공기관의 임시파견을 활성화했다.

한편 기업의 사업 발굴·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Pre F/S) 및 타당성 조사(F/S)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대상국 내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 기획·건설·운영, 제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을 신설했다. 또한 기업의 해외수주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산된 사업 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범정부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개시했다.

\* 미얀마와 우즈베키스탄을 잠정 후보국으로 선정하고 구체적 협의 진행 중

## (3)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한 수주 경쟁력 강화

최근 발주처에서 입찰 참여기업에 금융조달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전 금융조달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금융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과 저가수주 공세를 취하는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기업 수주 지원을 위해 고위험국 금융지원 확대·강화, 인프라 개발 관련 펀드 조성 등을 추진했다.

우선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정책자금 확대(2조원)를 추진했다. 특히 전후 재건 등 대규모 인프라 수요가 예상되나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저신용국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성된 재원(1조원 중 7,800억원)을 기반으로 자금지원을 개시\*했다. 그 외 경험증진자금 지원 대상국가 확대, 해외 대형발주처와 기본여신약정(FA) 체결 확대\*\* 등을 추진했다.

\* 나이지리아 NLNG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수출 사업 3.75억불 지원 등

\*\* 2019.6월 수출입은행 - 베트남 석유가스공사 20억불 체결, 2019.7월 수출입은행 - 인니 석유가스공사 15억불 체결 등

한편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 1차분(1.5조원) 조성을 목표로 정부·공공기관 출자를 통해 모펀드(6천억원)를 조성하고 자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자 모집을 개시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지역 내 우리 기업 인프라 사업 진출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펀드(GIF 5호)와 한-유라시안 협력펀드(GIF 6호)를 각각 1,1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PIS 펀드와 GIF 5·6호 펀드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자금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2018년에 상당부분 개선된 한중 관계의 모멘텀을 양호한 수준으로 이어나갔다. 미중관계 등 복잡한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한중 교역액은 2,434억불로 사상 최대치였던 2018년(2,686억불)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의 대중국 투자금액도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했다.

2019년 4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37개국 정상을 비롯한 150여개 국가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우리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한중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추진 및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간 접점 모색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마련 등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부대 행사로 중국진출 우리기업 대상 오찬간담회 및 진리췌 AIIIB 총재, 후춘화 중국 상업무역담당 부총리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중국 정부에 반도체 반독점 조사 등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양국은 상호호혜적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더불어 2019년 12월에는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5년 6개월 만에 공식 방한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자주의·자유무역을 수호하고 한·중·일 제3자 간 협력을 비롯한 한중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한편, 중동 국가들이 탈석유화 및 산업다각화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189) 집필자 :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유경원 사무관, 국제경제과 정희진 사무관

성장을 모색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활용하여 중동 국가와의 상호 호혜적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건설 등 전통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신도시개발, 신재생에너지, ICT, 보건·의료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도 양국간의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27일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에서 이집트 재무부 장관 및 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경제협력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우리 기업의 이집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6.21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경제공동위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제6차 한-UAE 경제공동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양 측은 에너지·인프라 협력 공고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지향 협력, 국민행복 향상과 민간교류 증진, 정부 협력체계 제도화 등 지난 경제공동위에서 논의한 4대 상호 협력 방안의 진전을 상세히 점검했다.

## 2 || 상생의 ODA 확대190)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함과 동시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 2020년, 제2차)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ODA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도국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는 24.9억달러(증여등가액 기준)의 ODA를 지원함으로써 전년 대비 5.4%의 증가세를 보였다. ODA 지원규모는 29개 DAC 회원국 중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5위를 기록하였고,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기준년도

19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안근욱 사무관

변경(2010년 → 2015년, 한국은행)에 따른 GNI 대비 ODA 규모도 전년 대비 0.01%p 증가하여 0.15%를 기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ODA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표 13-2〉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8년 대비 2019년 증감률
ODA 규모	1,915.4	2,246.2	2,151.9	2,358.3	2,485.6	5.4
양자간	1,468.8	1,548.5	1,565.6	1,734.5	1,857.0	7.1
다자간	446.6	697.7	586.3	623.8	628.6	0.8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개도국과 우리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ODA를 추진하고 있다.

#### (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sup>191)</sup>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도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ODA 중 원리금을 상환 받는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sup>192)</sup>을 주로 지원한다.

EDCF는 2015년 SDGs 채택 이래 단순 ‘원조(Aid)’에서 ‘개발 (Development)’로 전환되는 개발협력 패러다임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19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이명진 사무관

192)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 법적 채무를 동반한 현금 또는 현물 이전으로, 시중의 일반자금 용자에 비해 수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

등 대외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7년 설립 당시 179억원을 승인한 이후 지원 규모가 해마다 꾸준히 확대되어 2019년에는 한해에만 30개 사업, 총 2조 5,900억원(2018년 대비 25% 증가)의 지원을 결정했으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종합병원 건립사업’, ‘케냐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 등 원조 효과가 높은 1억달러 이상의 대형 사업을 다수 승인했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새롭고 혁신적인 차관 지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금의 질적 다변화 노력도 강화했다. 개도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발 계획을 이행하도록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차관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와 같이 특정 분야의 여러 사업을 한 번에 묶어 승인하는 섹터개발차관도 최초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EDCF는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활성화와 사업효과성 증대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2019년에는 ‘제5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이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한-중남미 경제협력을 위한 통합형 협의채널이 공고화되었고, EDCF-CABEI(중미경제통합은행) 협조유자 퍼실리티 체결을 통해 중앙 아메리카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JICA 정례회의 및 아시아 4개국 원조기관 회의 등 유상원조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지속했다.

앞으로도 EDCF는 경험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개도국의 개발 수요와 우리기업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산업화 추진, 기후변화 대응 등 SDGs가 제시하는 주요목표를 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수원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함께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1 G20 등을 통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sup>193)</sup>

(1) 개괄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하여 위기확산을 조기에 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G20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공조 체제 구축, 포용적 성장 등으로 논의를 확대하며 세계경제 이슈에 있어 명실상부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발전해왔다. 2019년 의장국인 일본은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를 주제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세계경제 전망 및 거시정책공조, 인프라, 국제금융체제, 금융규제 및 국제조세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13-3〉 2019년 G20 주요의제

주요 의제	주요 논의내용
세계경제 전망 및 거시정책공조	세계경제 위험요인 대응방안, 글로벌 불균형 및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
인프라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 마련 등
국제금융체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 국제금융안전망 강화 및 저소득국 부채 취약성 해소 등
금융규제	금융시장 분절화 현상 원인 분석, 암호화자산 대두에 따른 기회요인과 도전과제 분석
국제조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193) 집필자: 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 고상현 사무관, 박수민 사무관, 송상목 사무관, 서민아 사무관, 송하균 선임조사역

## (2) 주요 성과 및 평가

2019년 G20 정상회의는 일본 오사카에서 6월에 개최되었으며, 이에 앞서 2차례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의제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4〉 2019년 G20 관련 회의 일정

일시	장소	회의명
1.17~1.18	일본 도쿄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4.11~4.12	미국 워싱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6.8~6.9	일본 후쿠오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6.28~6.29	일본 오사카	G20 재무장관·보건장관 합동회의
		G20 정상회의
10.17~10.18	미국 워싱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세계경제 및 거시정책공조 분야에서 금년 G20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고착화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은 무역갈등을 해결하고, 재정·통화정책 및 구조개혁 등을 지속해서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모든 G20 회원국에게 공통의 도전과제와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친화 산업 육성 등과 같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고품질 인프라 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고품질 인프라에 대한 국제 기준(standards) 마련을 위해 지속가능성장 및 개발, 경제적 효율 제고, 환경적 영향 고려,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사회적 영향 고려, 인프라 거버넌스 등 6대 원칙을 정리하여 ‘고품질 인프라 원칙’을 마련했다. 또한, 고품질 인프라 원칙의 실제 적용을 위한 ‘고품질 인프라 운영가이드’를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고품질

인프라 원칙 이행 노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제금융체제 분야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국제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저소득국 부채 취약성 해소를 위해 채무자·공적채권자·민간채권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개도국들의 개발 효과성 증대를 위한 개발 파트너들 간의 협력 및 조정 메커니즘인 국가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과 실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금융시장 분절화(fragmentation)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8년 이후 진행된 금융규제 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분산형(decentralized) 금융기술 및 암호화자산(Crypto-assets)의 대두에 따른 기회 요인과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 금융포용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G20 회원국은 최근의 기술혁신,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지형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국제조세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면서,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대응,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지(BEPS<sup>194</sup>) 프로젝트, 조세 투명성 제고,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BEPS 포괄적 이행체계(BEPS Inclusive Framework)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194)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인해 세원이 잠식되는 현상

### (1) 국제금융기구 연차총회 참석 및 연례협의 등 실시

국제금융기구 연차총회는 각 국제금융기구별로 연간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식회의로서, 주요국 장관, 중앙은행 총재급 대표들이 참석하여 기구의 연간 및 중장기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 대표들과의 양자면담 등을 통해 국가 간 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은행(World Bank, WB) 춘계회의 및 연차총회(4월·10월, 미국),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연차총회(5월, 피지),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연차총회(5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연차총회(6월, 적도기니),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연차총회(7월, 룩셈부르크),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연차 총회(7월, 에콰도르)에 참석하여 기구별 운영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주요 인사들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상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금융기구들과의 연례협의는 각 기구들과의 양자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기구별 정책방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출연하여 각 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탁기금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협의하는 기능을 한다.

19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이샘나 사무관, 정다운 사무관, 정길채 사무관, 이현지 사무관 및 국제기구과 박상운 사무관, 안기용 사무관, 박중민 사무관, 이홍석 사무관, 박준석 사무관

또한 한국은 WB(2월, 워싱턴 D.C.), ADB(3월, 마닐라), EBRD(8월, 세종), IDB(10월, 서울)와 연례협의를 실시해 각 기구와의 협력, EDCF 협력, 신탁기금 활용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ADB 연례협의에서는 2020년 ADB 연차총회 인천 개최 관련 준비사항을 논의했으며, 2019년 처음 개최된 한-EBRD 연례협의에서는 향후 연례협의의 정례 개최를 합의했다.

한편, 한국은 2018년에 이어 3차례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sup>196)</sup> 19차 재원보충 회의(2차 : 6월, 에티오피아; 3차 : 10월, 미국; 4차 : 12월, 스웨덴)에 참석하여 향후 IDA의 정책방향 및 재원계획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나라 분담률을 1.4%(직전 재원보충 대비 +0.1%p)로 확대하여 저소득국 지원에 동참했다.

## (2) 우리 인력·기업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기획재정부는 우수한 인력과 기업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1월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제1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에는 IMF, WB, ADB, AIIB, AfDB, EBRD, OECD,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등 9개 기구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젊은 인재들에게 국제금융기구 진출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각 기구 인사담당자가 방한하여 총 134건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

196)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최빈 개도국에 대한 무상 자금, 양허성 차관 지원 등을 위한 세계은행그룹(WBG) 기구로, 3년마다 정기 재원보충을 실시

공동으로 11월 25~26일 이틀간 부산에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2019”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했으며, 아세안 지역 유망 발주처 등을 포함한 24개 해외 발주처, 5개 MDB와 50여개 국내 기업이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MDB별 조달사업 정보와 해외발주처-우리 기업 간 1대 1 상담 기회 등을 제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개도국과 인적·기술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을 통한 청년기술인재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년기술인재단은 한국 청년들을 개도국 민간기업, 정부기관 등에 파견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지닌 ICT 분야 등의 기술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IDB, A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모델 협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IDB 1차 청년기술인재단이 처음으로 출범했다. 우루과이, 바베이도스 등 중남미 5개국의 8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1년간 근무할 우리나라 청년 8명을 선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선발 과정은 산업인력공단과, 선발 후 파견 전 사전 교육 과정은 수출입은행과 각각 협업하여 이들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했다. 사전 교육을 거친 1차 파견자들은 11월부터 중남미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했다.

해외진출을 원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현지 정보 부족 및 국내보다 불리한 근무 조건(급여 등)으로 인해 중남미 지역 진출을 시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IDB 청년기술인재단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이 현지에서 IDB 소속 정식 컨설턴트 신분으로 중남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에 국내인력의 활발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초급

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프로그램<sup>197)</sup>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WB(2010년 도입) 및 EBRD(2017년 도입)에 JP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0명의 JPO(WB 5, EBRD 5)를 선발·파견했다. 특히, 파견기간이 종료된 정규직 전환 대상자 13명중 1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누적).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수한 국내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3) 아시아개발은행(ADB) 의장국 수입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빈곤감축을 목표<sup>198)</sup>로 1966년 발족한 지역 내 최대 국제금융기구이다. 한국은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해 높은 지분(8위)을 보유하고, 영구 이사직을 수입하는 등 ADB와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주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제 3차(1970년, 서울) 및 제 37차(2004년, 제주) ADB 연차총회를 유치해왔으며, 2018년 3월 ADB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2020년 제 53차 ADB 연차총회의 한국 유치 관련논의를 시작했다.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2018년 11월 연차총회 한국 유치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며, 2019년 1월 ADB 거버너 투표를 거쳐 유치가 확정(20.5.2~5일, 인천)되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ADB 연차총회 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A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국내 개최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번 연차총회의 국내 개최는 아·태 지역 내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역내 주요국과의 양자 면담 등을 통해 역내 국가와의 협력

---

197)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공여국 정부의 부담으로 자국민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제도로서, 선발된 인원에 정해진 기간동안 정규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198) ADB는 1997년 우리나라 IMF 사태 당시 40억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완료

CABEI는 중미 지역 5개국<sup>199)</sup>이 지역개발과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960년 설립한 국제금융기구이다. CABEI는 현재 중미지역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금융기구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12월 한-CABEI 가입서명식에 이어 2019년 8월 CABEI 가입을 위한 국회 절차를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CABEI의 1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CABEI 가입을 계기로 우리 기업·인력이 중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만큼, 향후 CABEI 및 중미 국가들과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sup>200)</sup>

#### (1) 녹색기후기금(GCF) 재원보충과 발전 기여

GCF는 2월, 7월, 10월 총 세 차례의 이사회를 송도에서 개최했다. 한국은 GCF 제3기(2019년~2021년) 이사진으로 진출하여 2019년 대리이사 자격으로 GCF 운영, 사업 및 이행기구 인증 등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했으며, 한국과 관련한 GCF 사업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GCF 예산위원회 소속으로서 GCF의 예산관련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대응했다.

199) 창립회원국(5개국) :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20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박은결 사무관, 김연태 사무관, 김영수 사무관, 김지영 사무관

2월 송도에서 개최된 22차 이사회에서는 총 9건의 사업(GCF 지원금 4.4억불)과 9개 인증기구를 신규 승인하고, 재원보충 전략, 사무국 인사관리규정 개정 등을 논의했다. 7월에 개최된 23차 이사회에서는 총 10건의 사업(GCF 지원금 2.7억불)을 승인하고, 기존 만장일치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했다. 11월에 개최된 24차 이사회에서는 총 13건의 사업(GCF 지원금 4억불) 및 7개 인증기구를 승인하고, 2020년 사무국 예산안을 승인했다.

2019년은 초기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간(2014~2019년) 이후 맞이하게 될 1차 재원보충기간(2020~2023)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로, 한국은 GCF의 발전 및 사업 확대를 위해 회원국의 적극적인 재원 공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2018년 11월에 개최된 1차 재원보충회의에 이어, 2019년 4월에 개최된 2차 회의, 8월 3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국의 재원보충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공여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GCF 유치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과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수준 등을 감안하여 기존 공여액의 2배인 2억불 공여를 결정했으며,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발표했다. 10월에 개최된 GCF 고위급 공여 회의를 통해 총 27개국이 96억불 공여를 발표했다. 11월 제24차 이사회에서는 추가 발표국가를 포함, 총 29개국, 약 98억불 규모의 성공적인 재원보충 결과를 확인했다.

## (2) 기후변화 협상 재원분야 한국의 위상 제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5차 당사국 총회, 부속기구회의 등에 참석하여 기후재원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 협약 상 기후재원 조성의무가 없는 개도국이지만, 자발적으로 기후재원을 공여하고

있는 중간자적 지위를 활용하여, 기후재원 논의에서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제25차 당사국 총회 위원직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응 기금(Adaptation Fund)<sup>201)</sup> 이사직 진출에 성공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재정상설위원회 아태지역 대표 위원으로서 기후재원 격년보고서, 기후재원 수요 보고서 등 파리 협정 하의 기후재원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재정상설위원회 내에서 GCF 운영지침 초안 마련 논의를 주도하며 GCF 발전을 지원했다.

### (3) 개도국 역량 배양 지원 및 기후 리더십 강화

우리 정부는 GCF와 함께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7월 인천 송도에서 5일간 능력배양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도국의 사업 수행 능력 배양 및 지식 공유를 지원했다. 동 행사에는 개도국 정부관계자와 인증기구 등이 참석하여 상호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GCF의 지원 수단 및 참여 방안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기후 리더십을 강화했다. 8월에 개최된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컨퍼런스'를 통해 개도국 60여명의 장관급 공무원, 인증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논의하며 국제적 공조를 강화했으며, 10월에는 'GCF 민간투자 컨퍼런스'를 통해 개도국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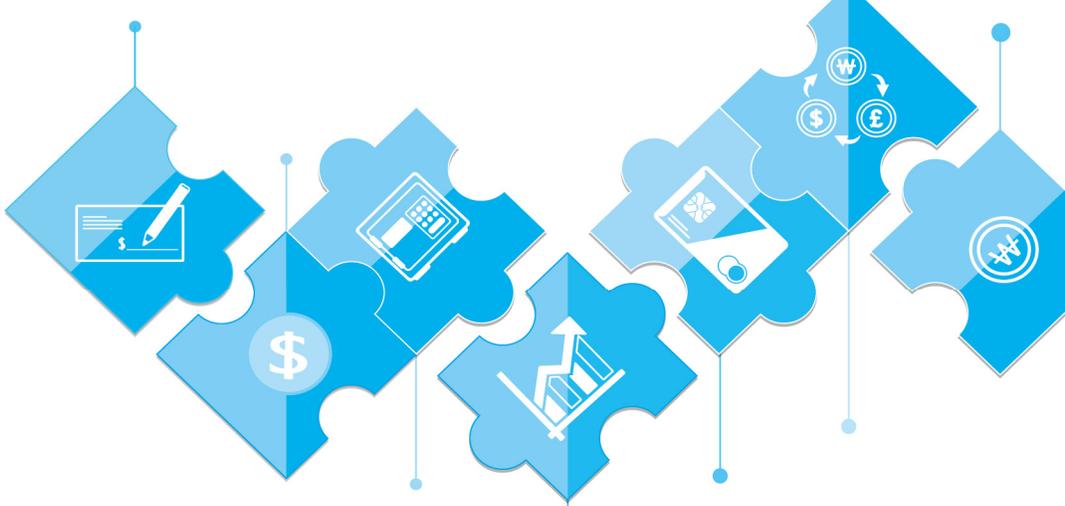
12월에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세미나 및 개도국 공무원 연수'를 개최했다.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도 한국의 기후정책 수행 경험을 개도국 정부관계자·

---

201) 적응 기금(Adaptation Fund)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다자기후기금

인증기구와 공유하고, 국내 기관들에게 GCF 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개도국 공무원 연수에서는 한국의 우수 기후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현장 방문과 기관 면담을 통해 개도국과의 GCF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 부록 1.

#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 1월

- 03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9.1.3.일 시행)
- 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19.1.8.일 시행)
- 09 ▷ 국토교통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 15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2019.7.16.일 시행)
-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2019.1.17.일 시행)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1.15.일 시행)
- 17 ▷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
- 22 ▷ 금융위원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23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선정
- ▷ 금융위원회,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 발표
- 24 ▷ 금융위원회,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마련
- 29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9.1.29.일 시행)
- 30 ▷ 고용노동부, '18.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2월

- 1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9.2.12.일 시행)
-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9.2.12.일 시행)
- 21 ▷ 금융위원회,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공급

- 22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추진
- 26 ▷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마련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2019.2.26일 시행)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2019.2.26일 시행)
- 28 ▷ 금융위원회,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추진
  - ▷ 중소벤처기업부, 「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발표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 3월

- 04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발표
- 06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발표
-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2019.3.19일 시행)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2019.3.12일 시행)
- 13 ▷ 기획재정부,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
- 21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 25 ▷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 금융위원회,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 26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2019.4.1일 시행)
- 29 ▷ 기획재정부, 「국고채권의 발행 및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PD 규정)」 개정 추진

## 4월

- 02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4.2일 시행)
- 04 ▷ 금융감독원,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단축 추진
- 10 ▷ 금융감독원,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에 대한 공개협의안 발표
- 11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12 ▷ 기획재정부,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
- 17 ▷ 금융위원회,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
- 18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7.1.일 시행)
- 24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
- 30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7.1일 시행)

## 5월

- 02 ▷ 금융위원회, 「코스닥 시장 공시건전성 제고 방안」 발표
- 08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 발표
- 10 ▷ 금융감독원,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2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6.25.일 시행)
- 27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마련
- 28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6.3일 시행)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5.28.일 시행)

- 30 ▷ 금융위원회,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 발표
- ▷ 금융감독원,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방안」 마련

## 6월

- 05 ▷ 금융위원회, '19년 주채무계열 선정 및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11 ▷ 기획재정부, 「기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 발표
- ▷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6.12 일 시행)
- ▷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6.12.일 시행)
- 12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
- 13 ▷ 금융위원회,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 ▷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 25 ▷ 금융위원회,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 마련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9.16.일 시행)
-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7.1일 시행)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7.1일 시행)
- 26 ▷ 정부, 「물류산업 혁신 방안」 발표
- ▷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 7월

- 02 ▷ 금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시행
- ▷ 기획재정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발표

- 08 ▷ 정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 12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 16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7.16일 시행)
- 24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 추진
- 30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 31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추진

## 8월

- 02 ▷ 금융위원회,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추진
- 05 ▷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 12 ▷ 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
-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8.20.일 시행)
- 22 ▷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27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8.27일 시행)
- 28 ▷ 정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 29 ▷ 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발표

## 9월

- 04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05 ▷ 금융위원회, 2020년 신용점수제 전환 위한 전담팀 출범
- 10 ▷ 정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9.10 일 시행)
- 11 ▷ 정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16 ▷ 정부, 전자증권제도 시행

- 18 ▷ 정부,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마련
-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현황 및 계획 발표

## 10월

- 01 ▷ 정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
- ▷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2019.10.1일 시행)
- 07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발표
- 08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발표
- 15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일부개정령 (2019. 10.15일 시행)
- 23 ▷ 금융위원회,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개선방안 마련
- 24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편 추진

## 11월

- 02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 발표
- 11 ▷ 산업통상자원부, 개정 「기업활력법」 전면 시행
- 13 ▷ 금융위원회,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인구정책 TF」논의결과 발표
- 14 ▷ 금융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발표
- 26 ▷ 「금융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20. 11.27일 시행)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9.12.27.일 시행)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2019.11.26일 시행)
- ▷ 「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법률 (2020.5.27일 시행)

## 12월

- 12 ▷ 금융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확정
- 16 ▷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17 ▷ 국토교통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 24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 발표
- 26 ▷ 금융위원회,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31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1.1일 시행)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1.1.일 시행)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 1.1일 시행)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1.1일 시행)



## 1월

### ▶ 아시아

- 10 ▷ 중국국가통계국, 12월 CPI(전년동기대비) 1.9%(11월 2.2%)
- 11 ▷ 일본 재무성, 11월 경상수지 7,572억엔 흑자
- 14 ▷ 중국해관총서, 12월중 수출 증감율 전월(5.4%)보다 하락한 -4.4% 기록
- 15 ▷ 중국인민은행, 12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8.1% (11월 8.0%)
  - ▷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 한 도시수가 각각 59개시 및 47개시(11월 63개시 및 51개시)
- 18 ▷ 일본 경제산업성, 11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확정치) -1.0%
  - ▷ 일본 총무성, 12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0.3%
- 21 ▷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7%(11월 5.4%),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9%(11월 5.9%),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2%(11월 8.1%)
- 23 ▷ 일본은행, 기준금리(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 내외)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30 ▷ 일본 경제산업성,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잠정치) 0.9%
- 31 ▷ 중국국가통계국, 1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9.5로 기준치(50.0) 하회 (12월 49.4)
  - ▷ 일본 경제산업성, 12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잠정치) -0.1%

▶ 아메리카

- 04 ▷ 미 노동통계국, 12월 실업률 3.9%
- 11 ▷ 미 노동통계국, 12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9%
- 18 ▷ 미 연준, 12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3%
- 30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2.25% ~ 2.50%로 동결

▶ 유럽·아프리카

- 04 ▷ 유로, 12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6%
- 07 ▷ 유로, 11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6%
- 09 ▷ 유로, 11월 실업률 7.9%
- 14 ▷ 유로, 11월 산업생산(전기대비) -1.7%
- 17 ▷ 유로, 12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6%
- 18 ▷ 유로, 11월 경상수지 203억 유로 흑자
- 24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 (-0.4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31 ▷ 유로,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0.9%



2월

▶ 아시아

- 01 ▷ 일본 총무성, 12월 실업률 2.4%
- 08 ▷ 일본 재무성, 12월 경상수지 4,528억엔 흑자
- 14 ▷ 중국해관총서, 1월중 수출 증감율 전월(-4.4%)보다 증가한 9.1% 기록
  - ▷ 일본 내각부,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잠정치) 0.3%
- 15 ▷ 중국국가통계국, 1월 CPI(전년동기대비) 1.7% 상승(12월 1.9%)
  - ▷ 중국인민은행, 1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8.4%(12월 8.1%)
  - ▷ 중국국가통계국, 1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8개시 및 41개시(12월 59개시 및 47개시)

- ▷ 일본 경제산업성, 12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확정치) -0.1%
- 22 ▷ 일본 총무성, 1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0.2%
- 28 ▷ 중국국가통계국, 2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9.2로 기준치(50.0) 하회 (1월 49.5 )
- ▷ 일본 경제산업성, 1월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잠정치) -2.3%
- ▷ 일본 경제산업성, 1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잠정치) -3.7%

### ▶ 아메리카

- 01 ▷ 미 노동통계국, 1월 실업률 4.0%
- 13 ▷ 미 노동통계국, 1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6%
- 14 ▷ 미 인구통계국, 12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1.8%
- 15 ▷ 미 연준, 1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6%
- 28 ▷ 미 상무부,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2.6%

### ▶ 유럽·아프리카

- 01 ▷ 유로, 1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4%
- 05 ▷ 유로, 12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6%
- 13 ▷ 유로, 12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9%
- 14 ▷ 유로,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0.8%
- 19 ▷ 유로, 12월 경상수지 162억 유로 흑자
- 22 ▷ 유로, 1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4%

## 3월

### ▶ 아시아

- 01 ▷ 일본 총무성, 1월 실업률 2.5%
- 08 ▷ 중국해관총서, 2월중 수출 증감율 전월(9.1%)보다 하락한 -20.7%

## 기록

- ▷ 일본 내각부,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확정치) 0.5%
- ▷ 일본 재무성, 1월 경상수지 6,004억엔 흑자
- 09 ▷ 중국국가통계국, 2월 CPI(전년동기대비) 1.5%(1월 1.7%) 상승
- ▷ 중국인민은행, 2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8.0%(1월 8.4%) 상승
- 14 ▷ 중국국가통계국, 2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3%(12월 5.7%),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1%(12월 5.9%),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2%(12월 8.2%)
- 15 ▷ 중국상무부, 2월중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92.8억달러 기록(1월 2.8%)
- ▷ 일본은행, 기준금리(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 내외)를 현행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18 ▷ 중국국가통계국, 2월중 신규 및 기존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7개시 및 47개시(1월 58개시 및 41개시)
- ▷ 일본 경제산업성, 1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확정치) -3.4%
- 22 ▷ 일본 총무성, 2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0.2%
- 29 ▷ 일본 경제산업성, 2월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잠정치) 0.2%
- ▷ 일본 경제산업성, 2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잠정치) 1.4%
- ▷ 일본 총무성, 2월 실업률 2.3%기준치(50) 상회(2월 50.3)
- 31 ▷ 중국국가통계국, 3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5로 기준치(50) 상회(2월 49.2)

## ▶ 아메리카

- 08 ▷ 미 노동통계국, 2월 실업률 3.8%
- 11 ▷ 미 인구통계국, 1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0.9%

- 12 ▷ 미 노동통계국, 2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5%
- 15 ▷ 미 연준, 2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0.1%
- 20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2.25%~2.50%로 동결
- 27 ▷ 미 상무부, 4/4분기 경상수지 1,344억달러 적자
- 28 ▷ 미 상무부,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2.2%

▶ 유럽·아프리카

- 01 ▷ 유로, 2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5%
  - ▷ 유로, 1월 실업률 7.8%
- 05 ▷ 유로, 1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3%
- 07 ▷ 유로,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연율, 잠정치) 0.9%
  -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0.4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13 ▷ 유로, 1월 산업생산(전기대비) 1.4%
- 15 ▷ 유로, 2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5%
- 22 ▷ 유로, 1월 경상수지 368억 유로 흑자

 4월

▶ 아시아

- 08 ▷ 일본 재무성, 2월 경상수지 26,768억엔 흑자
- 11 ▷ 중국국가통계국, 3월 CPI 전년동기대비 2.3% 상승(2월 1.5%)
- 12 ▷ 중국해관총서, 3월중 수출 증감율 전월(-20.7%)보다 증가한 14.2% 기록
  - ▷ 중국인민은행, 3월중 M2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6%(2월 8.0%) 상승
- 16 ▷ 중국국가통계국, 3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65개시 및 57개시(2월 57개시 및 47개시)
- 17 ▷ 중국국가통계국, 3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5%(1~2

월 5.3%),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3%(2월 6.1%),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7%(1~2월 8.2%)

- ▷ 일본 경제산업성, 2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확정치) 0.7%
- 18 ▷ 중국상무부, 3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한 141.1억 달러 기록(2월 3.3%)
- 19 ▷ 일본 총무성, 3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0.5%
- 25 ▷ 일본은행, 기준금리(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 내외)를 현행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26 ▷ 일본 경제산업성, 3월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잠정치) 0.2%
- ▷ 일본 경제산업성, 3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잠정치) -0.9%
- ▷ 일본 총무성, 3월 실업률 2.5%
- 30 ▷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기준치(50) 상회(3월 50.5)

#### ▶ 아메리카

- 01 ▷ 미 인구통계국, 2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0.4%
- 05 ▷ 미 노동통계국, 3월 실업률 3.8%
- 10 ▷ 미 노동통계국, 3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1.9%
- 16 ▷ 미 연준, 3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1%
- 18 ▷ 미 인구통계국, 3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1.2%
- 26 ▷ 미 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3.2%

#### ▶ 유럽·아프리카

- 01 ▷ 유로, 3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4%
- ▷ 유로, 2월 실업률 7.8%
- 03 ▷ 유로, 2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4%

- 10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 (-0.4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12 ▷ 유로, 2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2%
- 17 ▷ 유로, 2월 경상수지 268억유로 흑자
  - ▷ 유로, 3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4%
- 30 ▷ 유로,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1.5%
  - ▷ 유로, 3월 실업률 7.7%

## 5월

### ▶ 아시아

- 08 ▷ 중국해관총서, 4월중 수출 증감율 전월(14.2%)보다 감소한 -2.7% 기록
- 09 ▷ 중국국가통계국, 4월 CPI 전년동기대비 2.5%(3월 2.3%) 상승
  - ▷ 중국인민은행, 4월중 M2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5%(3월 8.6%)
- 14 ▷ 일본 재무성, 3월 경상수지 28,479억엔 흑자
- 15 ▷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4%(3월 8.5%),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1%(3월 6.3%),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7.2%(3월 8.7%)
- 16 ▷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67개시 및 55개시(3월 65개시 및 57개시)
  - ▷ 중국상무부, 4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93.5억 달러 기록(3월 4.9%)
- 20 ▷ 일본 내각부,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0.5%
- 30 ▷ 일본 경제산업성, 4월 산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0.6%
- 31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9.4로 기준치(50) 하회(4월 50.1)
  - ▷ 일본 총무성, 4월 실업률 2.4%

▶ **아메리카**

- 01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2.25%~ 2.50%로 동결
- 03 ▷ 미 노동통계국, 4월 실업률 3.6%
- 10 ▷ 미 노동통계국, 4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0%
- 15 ▷ 미 인구통계국, 4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0.1%
- ▷ 미 연준, 4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5%
- 30 ▷ 미 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3.1%

▶ **유럽·아프리카**

- 03 ▷ 유로, 4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7%
- 06 ▷ 유로, 3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0%
- 14 ▷ 유로, 3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3%
- 15 ▷ 유로,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1.6%
- 17 ▷ 유로, 4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7%
- 20 ▷ 유로, 3월 경상수지 247억 유로 흑자

 **6월**

▶ **아시아**

- 10 ▷ 중국해관총서, 5월중 수출 증감률 전월(-2.7%)보다 증가한 1.1% 기록
  - ▷ 일본 재무성, 4월 경상수지 17,074억엔 흑자
  - ▷ 일본 내각부,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확정치) 0.6%
- 12 ▷ 중국국가통계국, 5월 CPI(전년동기대비) 2.7% 상승(4월 2.5%)
  - ▷ 중국인민은행, 5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8.5%(4월 8.5%)
- 13 ▷ 중국상무부, 5월중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한 94.7억 달러 기록(4월 2.8%)
  - ▷ 일본 경제산업성, 4월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확정치) -0.1%
- 14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0%(4월

5.4%),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6%(4월 6.1%),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6%(4월 7.2%)

- ▷ 일본 경제산업성, 4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확정치) 0.6%
- 18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67개시 및 55개시(4월 67개시 및 55개시)
- 20 ▷ 일본은행, 기준금리(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 내외)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21 ▷ 일본 총무성, 5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0.7%
- 27 ▷ 일본 경제산업성, 5월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잠정치) 0.3%
- 28 ▷ 일본 경제산업성, 5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잠정치) 2.3%
- ▷ 일본 총무성, 5월 실업률 2.4%
- ▷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9.4로 기준치(50) 하회(5월 49.4)

#### ▶ 아메리카

- 07 ▷ 미 노동통계국, 5월 실업률 3.6%
- 12 ▷ 미 노동통계국, 5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8%
- 14 ▷ 미 인구통계국, 5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0.5%
- ▷ 미 연준, 5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4%
- 19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2.25% ~2.50%로 동결
- 20 ▷ 미 상무부, 1/4분기 경상수지 1,304억 달러 적자
- 27 ▷ 미 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3.1%

#### ▶ 유럽·아프리카

- 04 ▷ 유로, 5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2%
- ▷ 유로, 4월 실업률 7.6%
- 05 ▷ 유로, 4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4%

- 06 ▷ 유로,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1.6%
-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 (-0.4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13 ▷ 유로, 4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5%
- 18 ▷ 유로, 5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2%
- 19 ▷ 유로, 4월 경상수지 209억 유로 흑자
- 28 ▷ 유로, 6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2%

## 7월

### ▶ 아시아

- 09 ▷ 일본, 5월 경상수지 15,948억엔 흑자
- 10 ▷ 중국국가통계국, 6월 CPI(전년동기대비) 2.7% 상승(5월 2.7%)
- 11 ▷ 중국상무부, 6월중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 161.3억 달러 기록(5월 4.6%)
- 12 ▷ 중국해관총서, 6월중 수출 증감률 전월(1.1%)보다 하락한 -1.3% 기록
  - ▷ 중국인민은행, 6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8.5%(5월 8.5%)
  - ▷ 일본, 5월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0.4%
  - ▷ 일본, 5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2.0%
- 15 ▷ 중국국가통계국, 2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6.2%, 6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3%(5월 5.0%),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8%(5월 5.6%),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9.8%(5월 8.6%)
- 18 ▷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 수가 각각 63개시 및 45개시(5월 67개시 및 55개시)
- 19 ▷ 일본, 6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0.7%
- 30 ▷ 일본, 6월 실업률 2.3%
- 31 ▷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9.7로

기준치(50) 하회(6월 49.4)

▶ **아메리카**

- 05 ▷ 미 노동통계국, 6월 실업률 3.7
- 11 ▷ 미 노동통계국, 6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6%
- 16 ▷ 미 연준, 6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0%  
▷ 미 인구통계국, 6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0.4%
- 26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2.1%
- 31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2.00% ~2.25%로 25bp 인하

▶ **유럽·아프리카**

- 01 ▷ 유로, 5월 실업률 7.5%
- 04 ▷ 유로, 5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3%
- 12 ▷ 유로, 5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9%
- 17 ▷ 유로, 6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3%
- 19 ▷ 유로, 5월 경상수지 297억 유로 흑자
- 25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 (-0.4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31 ▷ 유로,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0.8%  
▷ 유로, 7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1%  
▷ 유로, 6월 실업률 7.5%

 **8월**

▶ **아시아**

- 08 ▷ 중국해관총서, 7월중 수출 증감률 전월(-1.3%)보다 상승한 3.3% 기록  
▷ 일본, 6월 경상수지 12,112억엔 흑자
- 09 ▷ 일본, 2분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1.2%

- 12 ▷ 중국인민은행, 7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8.1%(6월 8.5%)
- 13 ▷ 중국상무부, 7월중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80.7억 달러 기록(6월 3.0%)
- 14 ▷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4.8%(6월 6.3%),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7%(6월 5.8%),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7.6%(6월 9.8%)
- 15 ▷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60개시 및 48개시(6월 63개시 및 45개시)
- 19 ▷ 일본, 7월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1.6%
- 30 ▷ 일본, 7월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월대비) 0.7%  
▷ 일본, 7월 실업률 2.2%
- 31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9.5로 기준치(50) 하회(7월 49.7)

▶ **아메리카**

- 02 ▷ 미 노동통계국, 7월 실업률 3.7%
- 13 ▷ 미 노동통계국, 7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8%
- 15 ▷ 미 연준, 7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2%  
▷ 미 인구통계국, 7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1.0%
- 29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2.0%

▶ **유럽·아프리카**

- 02 ▷ 유로, 6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1%
- 14 ▷ 유로, 6월 산업생산(전기대비) -1.6%  
▷ 유로,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0.8%
- 19 ▷ 유로, 7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0%  
▷ 유로, 7월 경상수지 184억 유로 흑자

- 31 ▷ 유로, 8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0%
- ▷ 유로, 7월 실업률 7.5%

## 9월

### ▶ 아시아

- 08 ▷ 중국해관총서, 8월중 수출 증감율 전월(3.3%)보다 하락한 -1.0% 기록
- 09 ▷ 일본, 7월 경상수지 19,999억엔 흑자
- ▷ 일본, 2분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2차 속보치) 1.0%
- 10 ▷ 중국국가통계국, 8월 CPI(전년동기대비) 2.8%(7월 2.8%) 상승
- 11 ▷ 중국인민은행, 8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8.2%(7월 8.1%)
- 12 ▷ 중국상무부, 8월중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한 104.6억달러 기록(7월 4.1%)
- 15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5개시 및 43개시(7월 각각 60개시 및 48개시)
- 16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4.4%(7월 4.8%)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5%(7월 5.7%),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7.5%(7월 7.6%)
- 20 ▷ 일본, 8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0.3%
- 30 ▷ 일본, 8월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월대비) 2.0%
- ▷ 일본, 8월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월대비) -4.7%
-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9.8로 기준치(50) 하회(8월 49.5)

### ▶ 아메리카

- 06 ▷ 미 노동통계국, 8월 실업률 3.7
- 12 ▷ 미 노동통계국, 8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7%

- 13 ▷ 미 인구통계국, 8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0.0%
- 17 ▷ 미 연준, 8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6%
- 18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1.75%~ 2.00%로 25bp 인하
- 19 ▷ 미 상무부, 2/4분기 경상수지 1,282억 달러 적자
- 26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2.0%

▶ 유럽·아프리카

- 04 ▷ 유로, 7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6%
- 06 ▷ 유로,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0.8%
- 12 ▷ 유로, 7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4%
  - ▷ ECB, 예금금리를 10bp 인하(-0.40% → -0.50%)하고 기준금리(0.00%)와 한계대출금리(0.25%)는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18 ▷ 유로, 8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0%
- 19 ▷ 유로, 7월 경상수지 205억 유로 흑자
- 30 ▷ 유로, 8월 실업률 7.4%

 10월

▶ 아시아

- 14 ▷ 중국해관총서, 9월중 수출 증감율 전월(-1.0%)보다 하락한 -3.2% 기록
- 15 ▷ 중국국가통계국, 9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3.0%(8월 2.8%)
  - ▷ 중국인민은행, 9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8.4%(8월 8.2%)
- 17 ▷ 중국상무부, 9월중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한 115.2억달러 기록(8월 0.3%)
- 18 ▷ 일본, 9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0.2%
  - ▷ 중국국가통계국, 3/4분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6.0%
  -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8%(8월 4.4%)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4%(8월 5.5%),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7.8%(8월 7.5%)

- 21 ▷ 일본, 9월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5.2%
-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3개시 및 40개시(8월 각각 55개시 및 43개시)
- 30 ▷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9.3로 기준치(50) 하회(9월 49.8)

#### ▶ 아메리카

- 06 ▷ 미 노동통계국, 8월 실업률 3.7%
- 12 ▷ 미 노동통계국, 8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7%
- 13 ▷ 미 인구통계국, 8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0.0%
- 17 ▷ 미 연준, 8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6%
- 18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1.75%~ 2.00%로 25bp 인하
- 19 ▷ 미 상무부, 2/4분기 경상수지 1,282억 달러 적자
- 26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2.0%

#### ▶ 유럽·아프리카

- 04 ▷ 유로, 7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6%
- 06 ▷ 유로,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0.8%
- 12 ▷ 유로, 7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4%
- ▷ ECB, 예금금리를 10bp 인하(-0.40% → -0.50%)하고 기준금리(0.00%)와 한계대출금리(0.25%)는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18 ▷ 유로, 8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0%
- 19 ▷ 유로, 7월 경상수지 205억 유로 흑자
- 30 ▷ 유로, 8월 실업률 7.4%

## 11월

### ▶ 아시아

- 08 ▷ 중국해관총서, 10월중 수출 증감율 전월(-3.2%)보다 상승한 -0.9% 기록
  - ▷ 일본 재무성, 9월 경상수지 18,216억엔 흑자
- 09 ▷ 중국국가통계국, 10월 CPI(전년동기대비) 3.8%(9월 3.0%)
- 11 ▷ 중국인민은행, 10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8.4%(9월 8.4%)
  - ▷ 일본, 9월 경상수지 16,129억엔 흑자
- 14 ▷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4.7%(9월 5.8%)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2%(9월 5.4%),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7.2%(9월 7.8%)
  - ▷ 일본,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0.1%
- 15 ▷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 한 도시수가 각각 50개시 및 31개시(9월 각각 53개시 및 40개시)
- 18 ▷ 중국상무부, 10월중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100억달러 기록(9월 0.5%)
- 20 ▷ 일본, 10월 수출 증가율(전월대비) -1.7%
- 22 ▷ 일본, 10월 CPI 상승률(전월대비) 0.0%
- 28 ▷ 일본, 10월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14.4%
- 29 ▷ 일본, 10월 산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4.2%
- 30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2로 기준치(50) 상회(10월 49.3)

### ▶ 아메리카

- 01 ▷ 미 노동통계국, 10월 실업률 3.6%
- 13 ▷ 미 노동통계국, 10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8%

- 15 ▷ 미 인구통계국, 10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0.3%
- ▷ 미 연준, 10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8%
- 27 ▷ 미 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2.1%

▶ 유럽·아프리카

- 06 ▷ 유로, 9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1%
- 13 ▷ 유로, 9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1%
- 14 ▷ 유로,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0.9%
- 15 ▷ 유로, 10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0.7%
- 19 ▷ 유로, 9월 경상수지 282억 유로 흑자
- 29 ▷ 유로, 11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0%
- ▷ 유로, 10월 실업률 7.5%

 12월

▶ 아시아

- 09 ▷ 일본,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2차 속보치) 0.4%
- ▷ 일본, 10월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14.2%
- 10 ▷ 중국국가통계국, 11월 CPI(전년동기대비) 4.5%(10월 3.8%) 상승
- ▷ 중국인민은행, 11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8.2%(10월 8.4%)
- 13 ▷ 중국상무부, 11월중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한 136.2억달러 (10월 3.1%)
- 16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2%(10월 4.7%)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2%(10월 5.2%),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0%(10월 7.2%)
-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44개시 및 32개시(10월 50개시 및 31개시)

- 18 ▷ 일본, 11월 수출 증가율(전월대비) -0.3%
- 20 ▷ 일본, 11월 CPI 상승률(전월대비) 0.2%
- 23 ▷ 중국해관총서, 11월중 수출 증감율 전월(-0.8%)보다 하락한  
-1.3% 기록
- 27 ▷ 일본, 11월 산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0.9%
- ▷ 일본,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4.5%
- 31 ▷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2로 기준  
치(50.0) 상회(11월 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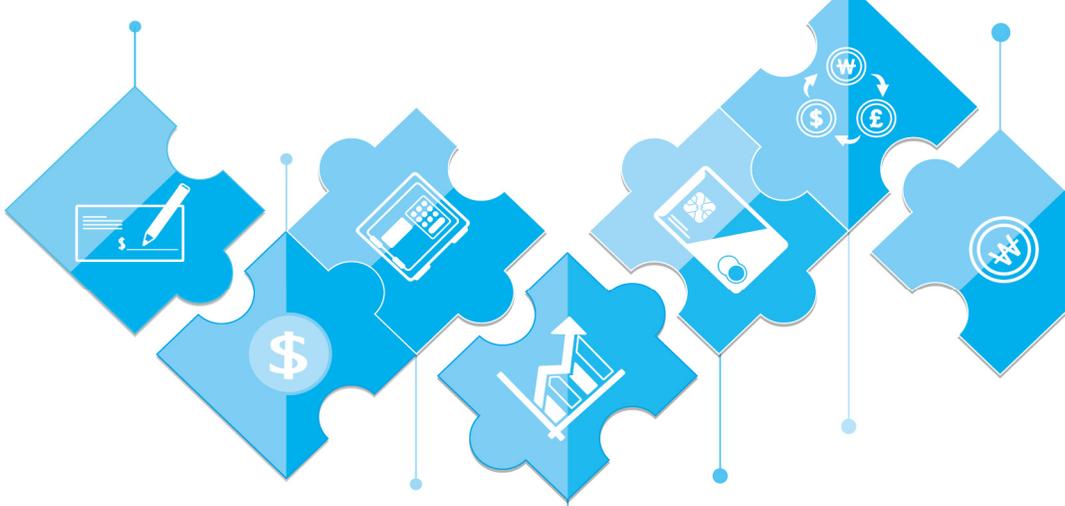
#### ▶ 아메리카

- 06 ▷ 미 노동통계국, 11월 실업률 3.5%
- 11 ▷ 미 노동통계국, 11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2.1%
-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1.50%~ 1.75%로 동결
- 13 ▷ 미 인구통계국, 11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0.1%
- 17 ▷ 미 연준, 11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1.1%
- 19 ▷ 미 상무부, 3/4분기 경상수지 1,241억달러 적자
- 20 ▷ 미 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2.1%

#### ▶ 유럽·아프리카

- 05 ▷ 유로, 10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6%
- ▷ 유로,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0.9%
- 12 ▷ 유로, 10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5%
-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  
(-0.5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18 ▷ 유로, 11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0%
- 20 ▷ 유로, 10월 경상수지 324억 유로 흑자





## 부록 2.

# 주요 경제 통계



# 1. 고용

(천명)

	15세 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비 경 제 활동인구	경제활 동 참 가 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 률)
			취업자	실업자				
2017	43,931	27,748	26,725	1,023	16,183	63.2	66.6 (42.1)	3.7(9.8)
2018	44,182	27,895	26,822	1,073	16,287	63.1	66.6 (42.7)	3.8(9.5)
2019	44,504	28,186	27,123	1,063	16,318	63.3	66.8 (43.5)	3.8(8.9)
2018. I	44,088	27,464	26,283	1,181	16,624	62.3	66.0 (42.1)	4.3(10.0)
II	44,141	28,125	27,019	1,105	16,017	63.7	66.9 (42.5)	3.9(10.1)
III	44,212	28,080	27,015	1,065	16,131	63.5	66.7 (43.1)	3.8(9.4)
IV	44,287	27,912	26,971	942	16,375	63.0	66.8 (42.9)	3.4(8.3)
2019. I	44,370	27,702	26,461	1,241	16,668	62.4	66.0 (42.9)	4.5(9.7)
II	44,466	28,432	27,256	1,176	16,034	63.9	66.9 (43.2)	4.1(10.6)
III	44,550	28,328	27,382	946	16,222	63.6	67.1 (43.9)	3.3(8.1)
IV	44,629	28,283	27,393	891	16,346	63.4	67.3 (44.1)	3.1(7.1)
2018. 1	44,073	27,232	26,213	1,020	16,840	61.8	66.2 (42.2)	3.7(8.7)
2	44,093	27,348	26,083	1,265	16,744	62.0	65.8 (42.2)	4.6(9.8)
3	44,100	27,811	26,555	1,257	16,289	63.1	66.1 (42.0)	4.5(11.6)
4	44,122	28,029	26,868	1,161	16,093	63.5	66.6 (42.0)	4.1(10.7)
5	44,141	28,184	27,064	1,121	15,956	63.9	67.0 (42.7)	4.0(10.5)
6	44,161	28,161	27,126	1,034	16,000	63.8	67.0 (42.9)	3.7(9.0)
7	44,187	28,123	27,083	1,039	16,064	63.6	67.0 (43.6)	3.7(9.3)
8	44,211	28,039	26,907	1,133	16,172	63.4	66.5 (42.9)	4.0(10.0)
9	44,237	28,079	27,055	1,024	16,158	63.5	66.8 (42.9)	3.6(8.8)
10	44,262	28,063	27,090	973	16,199	63.4	66.8 (42.9)	3.5(8.4)
11	44,284	28,092	27,184	909	16,192	63.4	67.1 (43.2)	3.2(7.9)
12	44,316	27,582	26,638	944	16,733	62.2	66.5 (42.7)	3.4(8.6)
2019. 1	44,319	27,455	26,232	1,224	16,864	61.9	65.9 (42.9)	4.5(8.9)
2	44,382	27,649	26,346	1,303	16,734	62.3	65.8 (42.9)	4.7(9.5)
3	44,409	28,002	26,805	1,197	16,408	63.1	66.2 (42.9)	4.3(10.8)
4	44,444	28,284	27,038	1,245	16,160	63.6	66.5 (42.9)	4.4(11.5)
5	44,460	28,468	27,322	1,145	15,992	64.0	67.1 (43.6)	4.0(9.9)
6	44,495	28,545	27,408	1,137	15,951	64.2	67.2 (43.2)	4.0(10.4)
7	44,530	28,480	27,383	1,097	16,050	64.0	67.1 (44.1)	3.9(9.8)
8	44,546	28,216	27,358	858	16,330	63.3	67.0 (44.0)	3.0(7.2)
9	44,573	28,288	27,404	884	16,285	63.5	67.1 (43.7)	3.1(7.3)
10	44,601	28,373	27,509	864	16,228	63.6	67.3 (44.3)	3.0(7.2)
11	44,625	28,380	27,515	866	16,245	63.6	67.4 (44.3)	3.1(7.0)
12	44,661	28,095	27,154	942	16,566	62.9	67.1 (43.8)	3.4(7.3)

\* 고용률 : 15-64세(OECD 기준)

(천명)

	산업별 취업자									
	취업자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주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2017	26,725	4,566	1,988	18,798	1,279	316	△18	119	209	6
2018	26,822	4,510	2,034	18,849	1,340	97	△56	47	51	62
2019	27,123	4,429	2,020	19,197	1,395	301	△81	△15	348	55
2017.Ⅲ	26,998	4,570	1,990	18,926	1,418	279	30	84	144	21
Ⅳ	26,883	4,586	2,038	18,878	1,288	265	41	92	105	28
2018.Ⅰ	26,283	4,575	1,977	18,580	1,056	183	45	69	18	53
Ⅱ	27,019	4,487	2,031	18,951	1,457	101	△91	16	125	52
Ⅲ	27,015	4,479	2,035	18,932	1,481	17	△91	45	6	62
Ⅳ	26,971	4,499	2,094	18,933	1,367	88	△88	56	55	78
2019.Ⅰ	26,461	4,432	1,970	18,819	1,158	177	△143	△7	240	101
Ⅱ	27,256	4,424	2,030	19,246	1,475	237	△64	△1	295	18
Ⅲ	27,382	4,403	2,034	19,323	1,538	366	△76	△1	391	58
Ⅳ	27,393	4,458	2,044	19,399	1,409	422	△41	△50	466	43
2018. 1	26,213	4,609	1,988	18,537	986	334	106	99	42	94
2	26,083	4,562	1,964	18,464	997	104	14	64	△13	41
3	26,555	4,554	1,979	18,738	1,186	112	15	44	25	25
4	26,868	4,473	2,023	18,883	1,394	123	△68	34	100	54
5	27,064	4,507	2,035	18,950	1,481	72	△79	4	90	62
6	27,126	4,482	2,034	19,022	1,497	106	△126	10	186	41
7	27,083	4,484	2,040	18,998	1,468	5	△127	37	36	61
8	26,907	4,439	2,006	18,889	1,484	3	△105	53	△12	69
9	27,055	4,513	2,060	18,909	1,490	45	△42	45	△5	57
10	27,090	4,515	2,090	18,915	1,493	64	△45	60	5	57
11	27,184	4,490	2,118	19,059	1,438	165	△91	73	114	84
12	26,638	4,491	2,074	18,824	1,169	34	△127	35	46	94
2019. 1	26,232	4,439	1,969	18,649	1,093	19	△170	△19	113	107
2	26,346	4,411	1,961	18,775	1,114	263	△151	△3	311	117
3	26,805	4,446	1,980	19,033	1,265	250	△108	0	295	79
4	27,038	4,421	1,993	19,136	1,406	171	△52	△30	253	13
5	27,322	4,434	2,041	19,270	1,497	259	△73	6	320	16
6	27,408	4,416	2,056	19,333	1,520	281	△66	22	311	23
7	27,383	4,390	2,052	19,335	1,523	299	△94	12	338	55
8	27,358	4,415	2,031	19,289	1,539	452	△24	25	399	55
9	27,404	4,403	2,020	19,344	1,553	348	△111	△39	435	63
10	27,509	4,434	2,039	19,401	1,551	419	△81	△51	486	59
11	27,515	4,464	2,047	19,464	1,460	331	△26	△70	405	22
12	27,154	4,476	2,047	19,332	1,217	516	△15	△28	508	47

주) 표준산업분류 개편으로 '13년 이전 산업별 통계 미제공 → 비교군(통계청)

	중상상지외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명목임금 <sup>1)</sup> (전산업)		노동생산성 (제조업) (2015=100)	
	계	임금근로자	상용직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계	활동상태별			중월 (% 전제)	증가율 (% 상용)	생산성 지수 <sup>2)</sup>	증율 (%)
			상용직	임사직	일용직					쉬었음	취업준비	구직 단념자				
2017	316	265	366	△132	31	51	68	△17	16,183	1,736	669	481	3.3	2.6	106.2	3.2
2018	97	150	345	△141	△54	△52	△44	△9	16,287	1,855	693	524	5.3	5.1	109.6	3.3
2019	301	357	444	△56	△31	△56	△32	△24	16,318	2,092	748	533	-	-	-	-
2018. I	183	228	409	△124	△57	△45	△24	△21	16,624	1,951	673	523	7.9	7.7	104.5	1.7
II	101	113	335	△109	△113	△13	△3	△10	16,017	1,756	697	478	4.2	3.8	111.2	4.2
III	17	65	293	△162	△67	△48	△55	7	16,131	1,832	693	545	4.9	4.7	111.6	6.5
IV	88	192	342	△170	19	△104	△93	△12	16,375	1,879	709	550	4.1	3.9	111.2	0.7
2019. I	177	223	334	△123	12	△45	△39	△6	16,668	2,102	780	575	2.9	2.6	106.8	2.2
II	237	295	347	△53	1	△58	△26	△32	16,034	1,980	749	513	3.8	3.6	109.2	△1.8
III	366	427	491	△33	△31	△61	△30	△30	16,222	2,130	734	533	3.4	3.1	110.6	△0.9
IV	422	482	603	△14	△108	△60	△34	△26	16,346	2,156	727	508	-	-	-	-
2018. 1	334	322	485	△94	△69	12	10	2	16,840	2,008	651	553	△2.4	△3.1	-	-
2	104	167	433	△182	△85	△63	△42	△21	16,744	2,028	672	542	22.7	23.3	-	-
3	112	196	308	△96	△16	△84	△41	△43	16,289	1,817	696	475	5.6	5.3	-	-
4	123	140	319	△83	△96	△16	2	△18	16,093	1,749	691	458	3.9	3.5	-	-
5	72	82	320	△113	△126	△10	7	△16	15,956	1,760	680	466	5.0	4.7	-	-
6	106	118	365	△130	△117	△12	△15	4	16,000	1,760	722	511	3.7	3.4	-	-
7	5	40	272	△108	△124	△35	△30	△5	16,064	1,886	678	546	5.8	5.6	-	-
8	3	39	278	△187	△52	△36	△53	16	16,172	1,824	670	533	4.9	4.7	-	-
9	45	117	330	△190	△24	△72	△83	11	16,158	1,786	732	556	4.1	4.1	-	-
10	64	199	350	△138	△13	△135	△105	△30	16,199	1,789	724	526	3.3	3.1	-	-
11	165	248	343	△116	21	△83	△78	△5	16,192	1,820	701	535	3.2	3.0	-	-
12	34	128	333	△256	51	△94	△94	0	16,733	2,029	702	588	5.5	5.4	-	-
2019. 1	19	92	279	△212	25	△73	△61	△12	16,864	2,141	751	605	8.7	8.6	-	-
2	263	296	299	△43	40	△33	△46	13	16,734	2,166	792	583	△3.3	△3.7	-	-
3	250	280	423	△114	△29	△29	△11	△18	16,408	2,000	796	538	3.6	3.4	-	-
4	171	258	324	△45	△21	△88	△42	△46	16,160	1,971	740	487	4.1	4.0	-	-
5	259	317	330	△30	17	△58	△41	△18	15,992	1,963	764	538	4.0	3.8	-	-
6	281	309	388	△85	6	△28	5	△33	15,951	2,007	744	514	3.3	3.1	-	-
7	299	349	438	△87	△3	△49	△26	△24	16,050	2,094	741	526	2.8	2.7	-	-
8	452	514	493	△2	24	△62	△19	△43	16,330	2,173	744	542	4.3	4.1	-	-
9	348	419	541	△10	△113	△70	△47	△23	16,285	2,125	717	532	3.2	2.6	-	-
10	419	474	575	△21	△81	△55	△42	△13	16,228	2,112	722	504	4.9	4.5	-	-
11	331	428	593	△54	△111	△97	△48	△49	16,245	2,134	736	487	3.8	3.3	-	-
12	516	544	641	34	△131	△29	△11	△18	16,566	2,222	723	534	-	-	-	-

주1)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사업체노동력조사)

주2) 노동생산성지수 = 【산출량지수(산업생산지수) ÷ 노동투입량지수】×100

## 2. 물가 및 수출입 단가

(2015 = 100, %, 전년비,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지수	동비	지수	동비	지수	동비	지수	동비	지수	동비	지수	동비	지수	동비
2017	102.9	1.9	103.1	1.5	109.5	5.5	100.9	1.4	103.5	1.6	102.5	1.0	105.3	2.5
2018	104.5	1.5	104.3	1.2	113.6	3.7	102.2	1.3	104.2	0.6	102.7	0.2	108.0	2.5
2019	104.9	0.4	105.2	0.9	111.7	△1.7	102.1	△0.2	104.0	△0.1	102.2	△0.5	110.0	1.9
2017.6	102.6	1.8	103.1	1.3	106.5	7.2	100.9	0.9	103.6	1.8	102.4	1.0	104.9	2.2
7	102.8	2.2	103.4	1.8	106.9	7.0	100.5	0.7	103.6	1.7	102.6	1.0	105.7	2.5
8	103.4	2.5	103.4	1.8	112.9	10.7	100.7	1.0	103.7	1.6	102.6	1.0	106.0	2.4
9	103.5	2.0	103.3	1.6	115.1	4.1	100.9	1.2	103.8	1.5	102.5	1.0	105.7	2.3
10	103.4	1.8	103.5	1.3	110.0	2.9	101.3	1.4	103.8	1.4	102.4	0.9	106.1	2.7
11	102.6	1.2	103.1	1.1	104.8	0.2	101.2	1.4	103.9	1.4	102.2	0.7	105.5	2.3
12	103.0	1.4	103.3	1.4	107.3	0.7	101.5	1.3	103.9	1.2	102.3	0.7	105.7	2.3
2018.1	103.4	0.8	103.5	0.9	109.7	△1.8	101.4	0.8	104.0	1.1	103.0	0.5	106.2	1.7
2	104.2	1.3	103.9	1.1	115.3	2.8	101.8	0.6	104.1	1.0	102.9	0.4	107.1	2.3
3	104.1	1.2	104.1	1.3	111.7	1.2	101.9	0.8	104.1	0.9	102.8	0.4	107.5	2.6
4	104.3	1.5	104.4	1.4	112.2	3.5	101.9	1.3	104.1	0.8	102.7	0.3	108.0	2.6
5	104.3	1.5	104.5	1.3	110.2	1.7	102.3	1.5	104.2	0.6	102.8	0.2	108.2	2.8
6	104.1	1.5	104.4	1.2	107.5	0.9	102.6	1.6	104.2	0.6	102.7	0.3	107.8	2.8
7	103.9	1.1	104.2	0.8	108.1	1.2	102.3	1.8	104.2	0.5	102.7	0.1	108.3	2.4
8	104.9	1.4	104.3	0.9	118.1	4.6	102.5	1.8	104.2	0.5	102.6	0.0	108.7	2.5
9	105.7	2.1	104.7	1.3	124.9	8.6	102.7	1.8	104.2	0.4	102.5	0.0	108.5	2.7
10	105.5	2.0	104.7	1.2	119.4	8.5	103.1	1.8	104.2	0.4	102.5	0.1	108.7	2.5
11	104.7	2.0	104.6	1.4	112.7	7.6	102.7	1.4	104.2	0.3	102.4	0.2	108.4	2.8
12	104.4	1.3	104.6	1.3	112.8	5.2	101.6	0.1	104.2	0.3	102.3	0.1	108.4	2.5
2019.1	104.2	0.8	104.8	1.2	112.5	2.5	100.8	△0.7	104.2	0.2	102.7	△0.3	108.8	2.5
2	104.7	0.5	105.2	1.3	113.6	△1.4	101.0	△0.8	104.2	0.1	102.7	△0.3	109.8	2.5
3	104.5	0.4	105.1	0.9	111.4	△0.3	101.2	△0.7	104.1	0.1	102.5	△0.3	109.6	2.0
4	104.9	0.6	105.3	0.9	112.9	0.7	101.8	△0.1	104.1	0.0	102.5	△0.3	109.8	1.7
5	105.1	0.7	105.4	0.8	111.5	1.2	102.6	0.3	104.1	△0.1	102.5	△0.2	109.9	1.5
6	104.9	0.7	105.3	0.9	109.4	1.8	102.6	0.0	104.0	△0.2	102.5	△0.2	109.8	1.9
7	104.6	0.6	105.1	1.0	107.8	△0.3	102.2	0.0	104.0	△0.2	102.5	△0.1	110.3	1.9
8	104.8	0.0	105.3	0.9	109.5	△7.3	102.2	△0.2	104.0	△0.2	102.6	0.0	110.7	1.8
9	105.2	△0.4	105.3	0.6	114.7	△8.2	102.4	△0.2	104.0	△0.2	101.3	△1.2	110.2	1.5
10	105.5	0.0	105.5	0.8	114.9	△3.8	102.8	△0.3	104.0	△0.2	101.5	△1.0	110.5	1.7
11	104.9	0.2	105.2	0.6	109.7	△2.7	102.5	△0.2	104.0	△0.2	101.4	△0.9	110.2	1.6
12	105.1	0.7	105.4	0.7	111.9	△0.8	102.7	1.1	104.0	△0.2	101.4	△0.9	110.2	1.6

(2015 = 100, %)

	생활물가		생산자물가		수출물가 <sup>1)</sup>		수입물가 <sup>2)</sup>		교역조건 <sup>3)</sup>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2015	100.0	△0.2	100.0	△4.0	100.0	△5.2	100.0	△15.3	100.0	11.1
2016	100.7	0.7	98.2	△1.8	96.7	△3.3	95.8	△4.2	102.2	2.2
2017	103.1	2.5	101.6	3.5	102.6	6.1	102.0	6.5	101.3	△0.8
2018	104.8	1.6	103.5	1.9	103.4	0.8	108.4	6.3	95.6	△5.7
2019	105.0	0.2	103.5	0.0	100.0	△3.3	109.3	0.8	91.8	△3.9
2017.5	102.9	2.5	101.2	3.4	101.3	5.1	100.3	4.1	100.7	△1.2
6	102.8	2.3	100.8	2.8	101.0	4.7	99.1	2.0	100.7	△0.2
7	102.8	3.0	100.9	3.0	102.2	8.1	99.6	5.5	103.0	2.8
8	103.6	3.5	101.4	3.3	102.7	10.8	101.1	9.1	103.5	2.1
9	104.0	2.8	102.0	3.8	103.9	11.2	102.9	10.8	102.7	0.8
10	103.6	2.0	102.1	3.6	104.5	8.1	103.5	6.8	101.9	△1.4
11	102.8	1.3	102.0	3.0	102.8	2.5	103.3	4.0	101.6	0.2
12	103.0	1.6	102.1	2.2	101.3	△2.0	102.5	△0.9	99.5	△3.5
2018.1	103.6	0.7	102.5	1.2	101.0	△3.4	103.4	△2.3	99.3	△1.1
2	104.6	1.3	103.0	1.2	102.3	△0.9	103.8	0.3	97.2	△3.5
3	104.4	1.1	102.9	1.2	100.8	△1.0	104.4	3.1	97.7	△2.0
4	104.4	1.5	103.0	1.5	101.0	△1.4	105.5	3.7	98.2	△3.3
5	104.4	1.5	103.3	2.1	102.8	1.5	108.6	8.3	96.5	△4.1
6	104.3	1.5	103.4	2.5	103.6	2.5	110.0	11.0	94.3	△6.4
7	103.9	1.1	103.9	2.9	106.1	3.9	111.5	12.0	94.6	△8.1
8	105.2	1.5	104.3	2.9	106.1	3.3	111.2	9.9	95.0	△8.2
9	106.6	2.5	104.6	2.5	106.3	2.3	113.0	9.8	95.6	△7.0
10	106.3	2.6	104.3	2.1	106.8	2.3	115.0	11.1	94.0	△7.8
11	105.2	2.3	103.5	1.5	103.5	0.6	109.4	5.9	91.3	△10.1
12	104.3	1.3	103.0	0.9	100.6	△0.7	105.3	2.7	93.5	△6.0
2019.1	104.0	0.4	102.9	0.4	99.2	△1.8	105.1	1.7	94.5	△4.9
2	104.6	0.0	103.0	0.1	99.7	△2.6	107.5	3.5	94.6	△2.7
3	104.5	0.0	103.4	0.5	99.8	△1.0	109.3	4.7	92.8	△5.1
4	104.8	0.4	103.7	0.6	100.5	△0.5	111.2	5.4	92.2	△6.2
5	105.3	0.8	103.8	0.4	103.1	0.3	113.6	4.5	90.7	△6.1
6	105.2	0.8	103.5	0.1	100.8	△2.7	109.4	△0.6	89.9	△4.6
7	104.4	0.4	103.5	△0.3	100.4	△5.4	110.2	△1.1	91.9	△2.9
8	104.7	△0.4	103.7	△0.6	101.8	△4.0	111.0	△0.2	90.6	△4.6
9	105.6	△0.9	103.8	△0.8	101.0	△5.0	110.7	△2.0	91.8	△4.0
10	106.0	△0.3	103.6	△0.7	98.9	△7.4	108.1	△6.0	90.9	△3.3
11	105.4	0.2	103.4	△0.1	96.7	△6.5	107.1	△2.1	91.0	△0.4
12	105.5	1.1	103.7	0.7	97.5	△3.1	108.8	3.4	91.1	△2.6

주 : 1) 2015=100 기준 2), 3) 원화기준, 4) 순상품교역조건

### 3.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경상)		경제성장률(실질, %)			GDP디플레이터 (%)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GDP (전년 동기비)	GDP (전년 동기비)	GNI (전년 동기비)	자수	상승률
2011	13,889,372	12,534	13,975,348	12,612	2,799	25,256	3.7	-	1.6	93.9	1.3
2012	14,401,114	12,780	14,551,703	12,913	2,899	25,724	2.4	-	2.9	95.1	1.3
2013	15,008,191	13,706	15,103,849	13,793	2,995	27,351	3.2	-	3.8	96.0	1.0
2014	15,629,289	14,840	15,704,933	14,911	3,095	29,384	3.2	-	3.5	96.9	0.9
2015	16,580,204	14,653	16,632,066	14,699	3,260	28,814	2.8	-	6.3	100.0	3.2
2016	17,407,796	15,000	17,471,435	15,055	3,411	29,394	2.9	-	4.4	102.0	2.0
2017	18,356,982	16,233	18,431,809	16,299	3,589	31,734	3.2	-	3.3	104.3	2.2
2018p	18,934,970	17,209	18,984,527	17,254	3,679	33,434	2.7	-	1.2	104.7	0.5
2019p	-	-	-	-	-	-	2.0	-	-	-	-
2015. I	3,942,618	-	3,988,772	-	-	-	2.5	0.9	7.5	100.2	3.0
II	4,113,365	-	4,089,730	-	-	-	2.0	0.2	5.1	99.9	3.8
III	4,208,496	-	4,229,395	-	-	-	3.3	1.5	7.2	101.3	3.5
IV	4,315,726	-	4,324,169	-	-	-	3.4	0.7	5.6	98.6	2.5
2016. I	4,133,218	-	4,152,123	-	-	-	2.8	0.4	4.9	102.2	2.0
II	4,345,429	-	4,346,627	-	-	-	3.6	1.0	5.8	101.9	2.0
III	4,394,019	-	4,423,106	-	-	-	2.8	0.5	3.7	102.9	1.6
IV	4,535,129	-	4,549,579	-	-	-	2.7	0.8	3.4	101.0	2.4
2017. I	4,335,372	-	4,357,197	-	-	-	3.1	0.9	2.6	104.0	1.7
II	4,538,913	-	4,507,283	-	-	-	2.8	0.5	2.1	103.6	1.6
III	4,736,609	-	4,784,946	-	-	-	3.9	1.5	5.3	106.7	3.7
IV	4,746,087	-	4,782,383	-	-	-	2.8	△0.1	3.2	102.8	1.8
2018p. I	4,495,111	-	4,513,206	-	-	-	2.8	1.0	2.4	104.9	0.9
II	4,716,299	-	4,675,278	-	-	-	2.9	0.6	1.8	104.6	1.0
III	4,844,915	-	4,880,806	-	-	-	2.1	0.5	△0.2	106.9	0.2
IV	4,878,646	-	4,915,236	-	-	-	2.9	0.9	1.0	102.7	△0.1
2019p. I	4,546,998	-	4,562,345	-	-	-	1.7	△0.4	△0.5	104.3	△0.5
II	4,779,789	-	4,781,399	-	-	-	2.0	1.0	0.3	103.9	△0.7
III	4,863,742	-	4,951,309	-	-	-	2.0	0.4	0.4	105.2	△1.6
IV	-	-	-	-	-	-	2.2	1.2	-	-	-

(2015년=100, %)

	경제활동별 성장률					지출항목별 증가율						국내총 투자율	총 저축률 (명목)
	산 업	광공업		서비스 업	농 립 어 업	최종 소비	민간 소비	총고 정 자 형	본 성 성	설 비 투 자	건 설 투 자		
		제조업											
2011	3.7	5.2	5.2	3.9	△1.0	2.9	2.9	1.3	5.5	△2.8	33.2	34.6	
2012	2.4	1.4	1.4	3.4	△0.5	2.3	1.7	△0.1	1.0	△3.5	31.1	34.5	
2013	3.2	3.1	3.1	3.6	4.2	2.4	1.7	2.8	△3.9	6.3	29.7	34.8	
2014	3.2	3.2	3.2	3.1	5.1	2	2.0	3.1	5.1	1.4	29.7	35.0	
2015	2.8	1.6	1.7	3.1	△0.2	2.6	2.2	5.4	5.1	6.9	29.5	36.4	
2016	2.9	2.3	2.3	2.9	△5.6	3.0	2.6	6.6	2.6	10.0	30.1	36.8	
2017	3.2	3.7	3.7	2.6	2.3	3.1	2.8	9.8	16.5	7.3	32.3	37.1	
2018p	2.7	3.3	3.4	3.2	1.5	3.5	2.8	△2.4	△2.4	△4.3	31.4	35.8	
2019p	2.0	1.4	1.4	2.6	2.6	3.0	1.9	△3.5	△8.1	△3.3	-	-	
2015. I	2.5	0.9	1.0	2.8	9.1	2.2	1.6	4.4	6.1	4.5	29.2	37.1	
II	2.0	0.1	0.2	2.8	△2.1	2.5	1.8	4.7	6.0	5.4	29.1	36.0	
III	3.3	2.5	2.6	3.4	0.6	2.3	2.0	6.6	7.2	8.1	29.9	36.8	
IV	3.4	3.0	3.0	3.3	△4.4	3.3	3.4	5.6	1.6	9.1	29.9	35.7	
2016. I	2.8	1.4	1.4	3.0	△6.3	3.1	2.5	4.4	△1.7	9.9	28.4	37.1	
II	3.6	2.8	2.8	2.5	△2.7	3.5	3.3	5.9	1.0	9.3	30.2	37.3	
III	2.8	1.8	1.7	3.0	△7.8	3.6	3.2	6.5	1.4	10.1	30.8	36.2	
IV	2.7	3.2	3.2	2.2	△5.8	2.0	1.5	9.1	9.5	10.6	31.0	36.9	
2017. I	3.1	4.1	4.1	2.4	△2.9	2.3	2.1	12.4	19.8	10.7	31.7	37.5	
II	2.8	2.1	2.1	2.3	3.2	2.9	2.7	11.6	19.2	9.6	32.7	36.6	
III	3.9	6.5	6.6	2.8	2.7	3.5	3.0	9.8	17.4	6.9	31.9	37.6	
IV	2.8	2.2	2.3	2.9	4.2	3.5	3.2	6.0	10.4	3.1	32.8	36.6	
2018p. I	2.8	1.3	1.4	3.8	8.0	4.2	3.6	4.7	10.2	1.2	32.1	35.9	
II	2.9	3.2	3.3	3.4	2.3	3.3	2.9	△2.2	△4.3	△2.5	32.0	35.9	
III	2.1	2.9	3.0	2.7	△2.3	2.8	2.3	△6.9	△9.4	△8.7	30.0	36.2	
IV	2.9	5.6	5.6	2.7	0.4	3.6	2.4	△4.2	△5.3	△5.7	31.4	35.3	
2019p. I	1.7	1.3	1.3	2.3	1.6	2.8	1.9	△8.6	△7.4	△7.2	30.7	34.5	
II	2.0	0.8	0.8	2.7	0.4	3.3	2.0	△3.4	△7.0	△3.5	31.9	34.6	
III	2.0	1.7	1.8	2.7	4.2	3.0	1.8	△2.1	△2.6	△3.7	30.4	35.0	
IV	2.2	1.6	1.7	2.8	3.7	3.0	1.7	△0.3	△4.2	0.5	-	-	

## 4. 실물경제

### 가. 생산과 출하

(원지수 2015 = 100, 전년동월(분기)비)

시점	생산지수 (광공업)		서비스업		출하지수 (광공업)		재고지수 (제조업)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2017	104.7	2.4	104.5	1.9	102.7	1.2	105.3	8.0
2018	106.1	1.3	106.7	2.1	102.7	0.0	113.7	8.0
2019p	105.4	△0.7	108.3	1.5	101.6	△1.1	111.7	△1.8
2017. II	104.8	2.4	104.6	1.8	103.2	1.2	101.1	△0.7
III	105.1	5.4	105.1	2.6	102.9	4.8	101.3	0.4
IV	105.4	△2.7	107.4	0.8	103.1	△3.7	105.3	8.0
2018. I	102.3	△1.1	103.4	2.5	99.5	△2.1	108.4	8.5
II	106.9	2.0	106.9	2.2	103.5	0.3	109.1	7.9
III	105.2	0.1	105.9	0.8	101.4	△1.5	107.6	6.2
IV	109.9	4.3	110.3	2.7	106.3	3.1	113.7	8.0
2019. I	100.2	△2.1	104.5	1.1	97.8	△1.7	113.4	4.6
II	106.2	△0.7	108.4	1.4	102.1	△1.4	115.9	6.2
III	104.5	△0.7	107.6	1.6	100.7	△0.7	116.4	8.2
IVp	110.6	0.6	112.6	2.1	105.8	△0.5	111.7	1.8
2018.1	105.7	5.1	103.0	3.5	102.1	4.4	107.8	7.2
2	93.1	△5.7	99.6	2.2	90.9	△6.5	107.9	7.6
3	108.1	△2.5	107.7	2.0	105.5	△4.0	108.4	8.5
4	106.2	2.0	105.9	2.7	101.7	△0.9	109.5	7.6
5	107.1	2.2	106.9	2.2	104.6	2.2	108.7	3.7
6	107.5	1.9	108.0	1.9	104.2	△0.4	109.1	7.9
7	108.2	3.2	106.3	2.6	102.3	0.6	110.8	6.5
8	105.2	4.0	105.6	1.5	101.6	2.7	111.1	6.5
9	102.1	△6.7	105.8	△1.8	100.4	△7.0	107.6	6.2
10	112.3	12.6	108.1	5.8	108.9	12.5	110.3	5.2
11	109.4	0.1	107.5	1.2	105.9	△1.9	113.5	7.9
12	108.1	0.7	115.4	1.4	104.0	△0.6	113.7	8.0
2019.1	105.5	△0.2	105.5	2.4	101.2	△0.9	114.4	6.1
2	89.6	△3.8	99.4	△0.2	87.9	△3.3	114.4	6.0
3	105.6	△2.3	108.6	0.8	104.3	△1.1	113.4	4.6
4	106.4	0.2	107.6	1.6	101.9	0.2	116.9	6.8
5	107.6	0.5	109.4	2.3	103.1	△1.4	117.8	8.4
6	104.6	△2.7	108.1	0.1	101.2	△2.9	115.9	6.2
7	108.9	0.6	107.9	1.5	103.0	0.7	119.8	8.1
8	101.7	△3.3	108.1	2.4	99.5	△2.1	117.1	5.4
9	102.8	0.7	106.7	0.9	99.7	△0.7	116.4	8.2
10	110.0	△2.0	109.0	0.8	105.7	△2.9	116.8	5.9
11p	109.2	△0.2	110.2	2.5	103.8	△2.0	116.3	2.5
12p	112.6	4.2	118.6	2.8	107.9	3.8	111.7	△1.8

주 : 연쇄방식 도입에 따라 광공업 관련통계(광공업생산지수 등)의 가중치 기준년도 변경(2016 → 2017년)

## 나. 투 자

(원자수 2010 = 100, 전년동월(분기)비)

	국내건설기성(경상)			국내건설수주(경상)			건축 허가 면적	국내기계수주		설비 투자 지수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제조업		
2017	15.9	△1.9	25.5	△1.7	△1.1	△3.1	△4.0	19.7	31.8	14.5
2018	△1.5	△6.5	0.2	△2.2	△11.7	△1.2	△6.3	1.9	3.4	△3.5
2019p	△4.2	△6.7	△3.8	5.4	7.7	4.0	-	4.4	5.6	△7.6
2018. I	4.8	△6.3	9.3	14.4	△35.9	36.4	3.7	7.6	20.9	10.6
II	0.5	△6.6	3.3	△12.4	△17.0	△11.7	△7.2	1.0	△0.2	△4.8
III	△5.7	△7.4	△5.6	△10.0	△11.2	△14.2	△10.2	△1.0	6.0	△11.8
IV	△4.5	△5.7	△4.4	2.1	6.4	△0.8	△10.4	0.2	△10.3	△6.6
2019. I	△6.5	△12.8	△4.5	△4.2	21.6	△5.9	△12.6	△2.8	△2.0	△19.6
II	△3.4	△6.0	△3.4	△2.3	△21.4	2.3	△18.3	0.5	1.6	△8.7
III	△5.5	△9.5	△4.8	△0.2	4.6	△11.4	△12.2	△0.6	△0.3	△3.7
IVp	△1.7	△0.1	△2.5	22.8	18.6	25.0	-	21.3	25.3	2.7
2018.1	18.6	△2.1	26.9	48.4	△40.9	9.3	3.5	27.9	34.3	21.4
2	1.2	△10.5	5.8	△26.0	△31.7	17.7	2.2	△5.1	12.6	10.8
3	△2.7	△6.2	△1.1	41.5	△36.8	86.3	5.3	3.7	17.9	2.1
4	3.1	△1.6	5.0	△37.7	△31.9	△37.9	5.7	8.2	7.3	3.0
5	1.0	△6.5	3.7	19.5	89.3	8.3	△13.5	7.8	13.9	△4.1
6	△2.0	△10.0	1.4	△12.1	△48.7	1.8	△12.1	△10.8	△16.7	△12.2
7	△1.7	△4.0	△2.1	22.7	△9.7	30.7	24.8	△5.6	10.2	△7.9
8	△1.4	△5.6	△1.0	△28.4	△27.4	△40.4	△16.4	5.0	3.3	△9.4
9	△13.2	△11.8	△12.9	△13.6	10.2	△19.1	△33.2	△1.4	4.3	△17.8
10	0.9	△5.8	1.9	3.0	138.5	△11.4	△11.1	8.2	5.7	6.8
11	△7.1	△9.0	△6.7	△0.6	23.4	△7.8	△5.3	△19.3	△24.4	△10.4
12	△6.3	△3.5	△7.5	△3.1	△12.1	12.1	△14.5	14.9	△7.2	△13.6
2019. 1	△7.9	△11.1	△7.1	△25.5	47.1	△0.1	△18.4	△4.6	2.1	△16.5
2	△9.2	△19.9	△6.6	△22.5	△18.1	△27.7	△11.3	1.9	△5.2	△26.2
3	△3.0	△8.9	△0.3	33.0	62.4	5.4	△8.4	△4.6	△2.8	△16.8
4	△5.8	△7.0	△6.3	39.5	16.0	47.6	△10.2	0.3	14.0	△6.9
5	△3.2	△17.3	△0.3	△32.3	△52.7	△30.6	△16.5	5.1	△6.5	△10.0
6	△1.3	3.6	△3.5	0.5	△4.8	4.3	△28.0	△3.7	△1.9	△9.3
7	△5.4	△11.7	△3.4	△20.9	1.7	△25.7	△24.3	△3.9	△7.8	△4.8
8	△4.9	△2.4	△5.0	△17.1	△2.3	△13.6	△5.9	△2.8	2.4	△4.0
9	△6.3	△13.6	△6.0	35.4	12.8	6.0	△0.5	5.2	5.3	△2.4
10	△2.1	0.1	△2.5	50.5	△21.8	70.7	9.5	1.4	7.7	△3.5
11p	△3.2	△0.8	△4.1	16.3	△1.9	24.0	△11.1	17.9	23.1	△0.1
12p	△0.2	0.3	△1.0	13.2	37.9	△0.8	-	40.9	44.3	11.1

주: 설비투자지수 기준년 개편(2010 → 2015년)

## 다. 소 비

(원지수 2015 = 100, 전년동월(분기)비)

	소매판매액			내 수 용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재출하	내 구 재	비내구재	
2017	1.9	5.3	△1.1	1.8	△0.6	△2.3	0.4
2018	4.3	5.6	5.9	2.9	1.3	4.2	△0.1
2019p	2.4	1.8	0.6	3.3	1.0	1.4	0.6
2018. I	5.3	9.4	4.6	3.8	0.8	5.9	△1.6
II	5.0	6.2	5.7	4.0	0.8	3.0	△0.1
III	3.8	2.3	8.1	2.9	△2.0	0.2	△3.1
IV	3.0	4.8	5.2	1.1	5.5	7.7	4.5
2019. I	1.7	△1.2	3.4	2.2	0.6	0.9	0.5
II	2.0	△0.7	3.4	2.8	2.5	4.5	1.3
III	2.3	1.8	△0.5	3.4	1.4	4.0	0.1
IVp	3.4	7.0	△3.4	4.9	△0.8	△3.3	0.5
2018.1	1.9	17.0	△2.1	△2.4	4.8	8.2	3.1
2	6.8	1.9	3.6	10.3	△0.4	7.8	△4.3
3	7.4	9.8	12.1	4.3	△1.7	2.9	△3.9
4	5.8	10.7	2.1	4.9	0.7	4.8	△1.1
5	4.8	6.0	6.7	3.5	3.6	6.0	2.7
6	4.3	2.2	8.8	3.6	△1.7	△1.2	△1.8
7	5.6	6.4	7.6	4.5	2.1	3.3	1.6
8	5.6	10.0	6.5	3.3	4.3	11.4	0.9
9	0.4	△9.2	9.8	1.2	△11.1	△12.5	△10.5
10	5.1	11.8	8.7	0.5	14.1	20.4	11.1
11	1.0	0.0	1.4	1.3	0.4	0.4	0.6
12	3.1	3.7	5.9	1.5	2.9	4.0	2.3
2019. 1	4.3	△2.0	5.7	6.6	5.6	5.7	5.7
2	△1.9	△1.9	2.3	△3.4	△5.4	△4.6	△5.7
3	2.5	0.2	2.6	3.5	1.2	1.7	0.9
4	1.4	△1.2	0.7	3.0	4.9	7.4	3.4
5	3.4	1.1	5.6	3.4	2.6	6.1	0.6
6	1.2	△1.9	3.7	1.9	△0.1	△0.4	△0.1
7	△0.3	△3.4	△0.3	1.3	1.8	0.6	2.4
8	4.1	0.5	3.2	6.3	2.8	7.6	0.2
9	3.0	9.8	△3.5	2.8	△0.5	3.6	△2.3
10	2.0	4.6	△5.8	4.6	△0.7	△2.7	0.2
11p	3.6	3.9	0.1	5.3	△0.9	△1.3	△0.8
12p	4.6	12.6	△4.4	4.8	△0.6	△6.2	2.3

## 5. 대외거래

### 가. 국제수지(총괄)

(백만달러)

		경 상 수 지					
		수 출	상 품 수 지		서비스 수 지	본 원 소득수지	이 전 소득수지
			수 입				
2017	75,230.9	113,592.9	580,310.2	466,717.3	△36,734.1	5,336.9	△6,964.8
2018	77,466.5	110,086.8	626,266.5	516,179.7	△29,369.4	4,901.9	△8,152.8
2019p	59,971.2	76,856.0	561,962.6	485,106.6	△23,020.8	12,198.8	△6,062.8
2018. I	10,994.0	21,347.8	150,063.5	128,715.7	△9,691.9	2,088.2	△2,750.1
II	18,262.8	29,365.9	157,790.9	128,425.0	△6,131.3	△3,007.0	△1,964.8
III	28,691.1	34,718.1	159,341.5	124,623.4	△7,444.2	3,184.2	△1,767.0
IV	19,518.6	24,655.0	159,070.6	134,415.6	△6,102.0	2,636.5	△1,670.9
2019. I	12,186.3	19,516.0	137,724.7	118,208.7	△7,178.3	1,518.8	△1,670.2
II	10,447.6	17,381.3	140,664.8	123,283.5	△4,359.5	△821.1	△1,753.1
III	19,204.4	19,512.0	139,916.7	120,404.7	△5,366.9	6,029.4	△970.1
IVp	18,132.9	20,446.7	143,656.4	123,209.7	△6,116.1	5,471.7	△1,669.4
2018.1	2,556.9	7,338.0	52,187.5	44,849.5	△4,654.4	1,543.5	△1,670.2
2	3,226.7	4,793.3	44,983.4	40,190.1	△2,723.5	1,553.1	△396.2
3	5,210.4	9,216.5	52,892.6	43,676.1	△2,314.0	△1,008.4	△683.7
4	1,490.4	9,402.2	51,521.7	42,119.5	△1,970.1	△5,269.2	△672.5
5	8,792.3	10,550.2	53,843.1	43,292.9	△1,930.4	900.8	△728.3
6	7,980.1	9,413.5	52,426.1	43,012.6	△2,230.8	1,361.4	△564.0
7	8,874.4	10,685.3	54,312.9	43,627.6	△2,837.4	1,692.5	△666.0
8	8,581.2	10,927.6	53,535.2	42,607.6	△2,127.7	444.3	△663.0
9	11,235.5	13,105.2	51,493.4	38,388.2	△2,479.1	1,047.4	△438.0
10	9,473.6	10,522.2	57,482.0	46,959.8	△2,055.0	1,414.7	△408.3
11	5,130.6	7,504.9	51,813.9	44,309.0	△2,193.6	341.8	△522.5
12	4,914.4	6,627.9	49,774.7	43,146.8	△1,853.4	880.0	△740.1
2019.1	3,296.4	5,752.9	49,534.4	43,781.5	△3,534.5	1,678.8	△600.8
2	3,850.3	5,424.4	40,206.0	34,781.6	△1,543.0	454.6	△485.7
3	5,039.6	8,338.7	47,984.3	39,645.6	△2,100.8	△614.6	△583.7
4	△393.2	5,608.9	48,418.3	42,809.4	△1,269.5	△4,183.3	△549.3
5	5,175.5	5,503.1	48,103.4	42,600.3	△950.6	1,294.7	△671.7
6	5,665.3	6,269.3	44,143.1	37,873.8	△2,139.4	2,067.5	△532.1
7	6,584.6	6,182.4	48,423.8	42,241.4	△1,547.7	2,468.3	△518.4
8	4,860.7	4,630.9	45,328.0	40,697.1	△1,557.5	2,022.4	△235.1
9	7,759.1	8,698.7	46,164.9	37,466.2	△2,261.7	1,538.7	△216.6
10	7,827.2	8,028.2	49,119.9	41,091.7	△1,718.7	1,826.9	△309.2
11p	5,974.8	7,390.9	46,497.3	39,106.4	△1,893.9	967.0	△489.2
12p	4,330.9	5,027.6	48,039.2	43,011.6	△2,503.5	2,677.8	△871.0

(백만달러)

	금 용 계 정						자본 수지	오차 및 누 락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 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2017	84,425.3	16,156.5	57,853.0	△8,253.3	14,312.0	4,357.1	△26.8	9,221.2
2018	76,934.4	26,037.8	47,420.7	△1,502.4	△12,517.4	17,495.7	316.7	△848.8
2019p	60,950.5	24,965.3	40,121.0	5,974.2	△11,576.2	1,466.2	△64.2	1,043.5
2018. I	13,615.6	3,062.4	13,783.0	△3,696.1	△2,325.3	2,791.6	△17.7	2,639.3
II	13,703.1	7,970.3	5,775.1	△867.5	△8,977.3	9,802.5	52.8	△4,612.5
III	28,892.5	9,606.2	8,540.8	2,095.7	6,503.5	2,146.3	62.7	138.7
IV	20,723.2	5,398.9	19,321.8	965.5	△7,718.3	2,755.3	218.9	985.7
2019. I	12,106.1	7,703.4	13,207.4	488.5	△10,328.2	1,035.0	△38.8	△41.4
II	11,522.0	6,768.8	2,754.6	3,821.0	2,060.9	△3,883.3	15.2	1,059.2
III	16,031.5	4,689.2	7,272.9	1,974.2	△380.3	2,475.5	△9.6	△3,163.3
IVp	21,031.5	5,803.9	16,886.1	△309.5	△2,928.6	1,839.0	△31.0	3,189.0
2018.1	4,640.5	885.9	3,516.5	△1,310.9	104.9	1,444.1	△6.1	2,089.7
2	3,634.2	253.1	9,867.3	△888.1	△5,757.8	159.7	△13.3	420.8
3	5,340.9	1,923.4	399.2	△1,497.1	3,327.6	1,187.8	1.7	128.8
4	37.2	2,189.0	4,070.4	△749.3	△8,591.9	3,119.0	47.7	△1,500.9
5	8,438.8	5,146.4	2,068.3	△203.5	△2,280.3	3,707.9	11.8	△365.3
6	5,227.1	634.9	△363.6	85.3	1,894.9	2,975.6	△6.7	△2,746.3
7	10,504.8	2,603.9	△3,553.7	1,023.1	8,946.4	1,485.1	△6.7	1,637.1
8	8,506.4	4,805.0	2,208.1	756.6	1,972.3	△1,235.6	△3.9	△70.9
9	9,881.3	2,197.3	9,886.4	316.0	△4,415.2	1,896.8	73.3	△1,427.5
10	10,656.5	3,298.3	6,891.9	509.1	△2,200.4	2,157.6	82.3	1,100.6
11	3,406.3	131.0	5,218.7	304.2	△2,205.6	△42.0	△9.5	△1,714.8
12	6,660.4	1,969.6	7,211.2	152.2	△3,312.3	639.7	146.1	1,599.9
2019.1	2,739.3	1,566.6	5,012.3	△161.4	△3,842.9	164.7	△29.4	△527.7
2	3,071.4	2,499.3	3,408.7	123.5	△2,373.8	△586.3	△14.8	△764.1
3	6,295.4	3,637.5	4,786.4	526.4	△4,111.5	1,456.6	5.4	1,250.4
4	674.7	3,605.2	3,812.6	557.1	△6,194.9	△1,105.3	△19.5	1,087.4
5	4,911.9	2,618.5	△626.9	886.7	3,368.2	△1,334.6	37.1	△300.7
6	5,935.4	545.1	△431.1	2,377.2	4,887.6	△1,443.4	△2.4	272.5
7	5,792.5	1,404.1	5,171.3	525.8	△2,973.4	1,664.7	△3.6	△788.5
8	4,167.1	1,070.9	△807.2	850.6	4,200.2	△1,147.4	△0.6	△693.0
9	6,071.9	2,214.2	2,908.8	597.8	△1,607.1	1,958.2	△5.4	△1,681.8
10	10,242.3	1,038.9	2,825.0	△329.5	6,218.8	489.1	△14.7	2,429.8
11p	5,341.0	4,003.2	4,825.6	△203.9	△5,191.9	1,908.0	△4.6	△629.2
12p	5,707.6	761.8	9,235.5	223.9	△3,955.5	△558.1	△11.7	1,388.4

## 나. 수출입(통관)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

	수 출(FOB)		수 입(CIF)		수출입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2017	573,694	15.8	478,478	17.8	95,216
2018	604,860	5.4	535,202	11.9	69,657
2019	542,333	△10.3	503,259	△6.0	39,074
2017. I	132,061	14.6	116,428	24.1	15,633
II	147,043	16.7	117,798	18.6	29,245
III	151,051	24.0	120,853	17.9	30,198
IV	143,539	8.4	123,399	11.6	20,140
2018. I	145,055	9.8	132,425	13.7	12,629
II	151,617	3.1	133,153	13.0	18,465
III	153,641	1.7	130,311	7.8	23,330
IV	154,547	7.7	139,314	12.9	15,233
2019. I	132,660	△8.5	123,734	△6.6	8,926
II	138,495	△8.7	128,783	△3.3	9,713
III	134,750	△12.3	124,936	△4.1	9,814
IV	136,427	△11.7	125,807	△9.7	10,620
2018.1	49,221	22.3	45,805	21.7	3,416
2	44,524	3.1	41,722	15.2	2,801
3	51,310	5.5	44,898	5.4	6,412
4	49,850	△2.0	43,694	15.1	6,156
5	50,688	12.8	44,459	13.2	6,229
6	51,079	△0.4	45,000	11.0	6,079
7	51,810	6.1	44,917	16.3	6,893
8	51,180	8.7	44,361	9.4	6,820
9	50,650	△8.1	41,033	△1.6	9,617
10	54,860	22.5	48,481	28.1	6,380
11	51,480	3.6	46,808	11.4	4,671
12	48,207	△1.7	44,025	1.1	4,182
2019. 1	46,173	△6.2	45,132	△1.5	1,041
2	39,483	△11.3	36,617	△12.2	2,866
3	47,004	△8.4	41,985	△6.5	5,019
4	48,783	△2.1	45,040	3.1	3,743
5	45,704	△9.8	43,633	△1.9	2,071
6	44,008	△13.8	40,110	△10.9	3,898
7	46,080	△11.1	43,745	△2.6	2,335
8	44,020	△14.0	42,455	△4.3	1,565
9	44,651	△11.8	38,737	△5.6	5,914
10	46,667	△14.9	41,390	△14.6	5,278
11	44,045	△14.4	40,720	△13.0	3,325
12	45,715	△5.2	43,698	△0.7	2,017

## 다. 지역별 수출입차

(통관기준, 억달러, %)

	대 미					대 일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6	664.6	△4.8	432.2	△1.8	232.5	243.6	△4.8	474.7	3.5	△231.1
2017	686.1	3.2	507.5	17.4	178.6	268.2	10.1	551.3	16.1	△283.1
2018	727.2	6.0	588.7	16.0	138.5	305.3	13.8	546.0	△1.0	△240.7
2017.4	60.4	3.6	43.9	32.8	16.5	21.1	18.7	45.7	19.4	△24.6
5	55.2	△2.6	47.0	21.0	8.2	21.8	6.9	43.8	20.5	△22.0
6	59.8	△1.2	48.1	25.4	11.8	23.5	9.3	47.7	22.7	△24.2
7	56.6	7.0	40.8	18.2	15.8	21.6	4.6	44.6	12.1	△23.0
8	59.5	23.5	45.4	24.8	14.1	21.1	4.8	45.4	8.9	△24.3
9	66.0	28.6	40.8	19.4	25.2	25.2	16.1	49.3	16.3	△24.1
10	47.3	△12.5	34.5	△3.1	12.8	18.5	△12.1	44.2	4.7	△25.7
11	63.8	11.5	42.0	11.8	21.9	25.2	10.8	47.3	10.3	△22.1
12	53.0	△7.8	43.7	4.3	9.3	24.5	10.2	49.5	9.2	△25.0
2018. 1	51.6	4.4	49.3	24.2	2.3	25.8	21.3	44.8	19.3	△19.0
2	46.8	△11.9	45.2	20.5	1.6	24.5	19.6	45.1	1.0	△20.7
3	60.8	△2.0	52.1	18.0	8.7	26.0	8.7	52.3	1.3	△26.2
4	59.4	△1.5	47.6	8.4	11.9	24.8	17.8	49.4	8.2	△24.6
5	61.5	11.4	48.2	2.5	13.3	25.1	15.2	44.2	1.0	△19.1
6	64.2	7.4	47.9	△0.4	1126.3	25.8	9.7	44.5	△6.8	△18.7
7	61.6	8.7	49.1	20.2	12.5	25.4	17.6	45.8	2.8	△20.4
8	60.5	1.6	48.4	6.4	12.1	24.1	14.4	42.3	△6.7	△18.2
9	58.2	△11.8	43.5	6.6	14.7	24.7	△1.9	41.8	△15.1	△17.1
10	69.8	47.7	55.9	62.0	13.9	27.7	49.6	49.7	12.5	△22
11	68.4	7.2	48.8	16.3	19.6	27.1	7.4	43.2	△8.7	△16.1
12	64.4	21.6	52.8	21.0	11.6	24.3	△0.9	42.7	△13.6	△18.4
2019. 1	62.1	20.4	52.9	7.3	9.2	26.2	1.3	40.5	△9.7	△14.3
2	54.4	16.2	43.7	△3.5	10.7	23.0	△6.1	38.1	△15.7	△15.1
3	63.2	4.0	50.2	△3.6	13	22.6	△13.1	43.2	△17.4	△20.6
4	61.8	4.0	55.9	17.4	5.9	22.8	△8.3	46.3	△6.2	△23.5
5	65.0	5.6	55.1	14.4	9.9	25.3	0.8	37.2	△16.0	△11.9
6	62.5	△2.7	46.7	△2.5	15.8	22.6	△12.5	38.8	△12.8	△16.2
7	61.1	△0.6	53.9	9.8	7.2	25.4	0.1	42.0	△8.3	△16.6
8	56.2	△7.1	51.8	7.1	4.4	22.5	△6.8	38.9	△8.2	△16.4
9	56.9	△2.2	47.6	9.4	9.3	23.1	△6.4	38.2	△8.6	△15.1
10	63.6	△8.9	49.6	△11.2	14	23.7	△14.2	38.2	△23.3	△14.5
11	62.7	△8.4	52.7	8.1	10	24.1	△11.1	35.2	△18.5	△11.1
12	64.2	△0.4	58.7	11.1	5.5	22.9	△5.6	39.3	△8.1	△16.4

(통관기준, 억달러, %)

	대 중					대 EU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6	1,244.3	△9.3	869.8	△3.6	374.5	466.1	△3.1	519.0	△9.3	△52.9
2017	1,421.2	14.2	978.6	12.5	442.6	540.4	15.9	572.8	10.4	△32.4
2018	1621.3	14.1	1064.9	8.8	556.4	576.8	6.7	623.0	8.8	△46.2
2017.4	105.9	10.2	79.1	11.4	26.8	64.2	64.8	42.1	△9.3	22.1
5	106.5	7.3	80.9	14.6	25.6	48.2	21.9	46.1	5.0	2.1
6	106.8	4.8	83.5	15.7	23.2	44.0	20.3	53.0	18.6	△9.0
7	107.9	6.5	77.7	10.9	30.2	43.1	10.3	47.9	18.2	△4.8
8	119.1	15.6	81.2	10.0	38.0	46.6	43.2	47.5	1.4	△0.9
9	135.4	23.6	84.4	16.7	51.0	46.2	21.9	52.3	37.5	△6.1
10	125.8	13.5	79.3	2.9	46.5	39.9	2.5	43.9	3.2	△4.0
11	140.0	20.4	92.5	14.2	47.5	40.8	2.7	51.1	14.4	△10.4
12	138.5	14.9	86.0	8.2	52.5	44.7	△9.2	54.3	13.7	△9.6
2018. 1	133.8	24.4	91.5	15.0	42.3	45.0	10.4	57.2	35.7	△12.2
2	115.2	3.6	76.0	15.1	39.2	44.1	12.0	50.0	19.8	△6.0
3	135.8	16.5	84.1	△4.7	51.6	52.0	21.8	57.5	13.6	△5.5
4	130.4	23.1	87.2	10.2	43.2	50.2	△21.8	50.6	20.2	△0.3
5	138.5	30.0	92.8	14.6	45.7	50.1	3.8	57.2	24.0	△7.1
6	138.2	29.4	87.1	4.3	51.1	44.6	1.4	51.0	△3.7	△6.4
7	137.3	27.2	88.7	14.2	48.6	46.1	6.9	49.9	4.3	△3.8
8	144.0	20.9	85.3	5.0	58.7	44.7	△4.0	52.1	9.7	△7.4
9	145.9	7.8	78.9	△6.6	67.0	40.0	△13.3	43.1	△17.7	△3.1
10	147.7	17.4	99.6	25.6	48.1	54.8	37.3	50.0	13.8	4.8
11	135.6	△3.2	98.5	6.5	37.1	50.5	23.8	53.5	4.5	△3.0
12	119.0	△14.0	95.1	10.6	23.9	54.8	22.5	50.8	△6.3	4.0
2019. 1	108.4	△19.0	103.4	12.9	5	50.4	12.0	48.5	△15.2	1.9
2	95.3	△17.3	65.8	△13.4	29.5	39.0	△11.4	37.4	△25.2	1.6
3	114.4	△15.7	88.0	4.6	26.4	46.3	△11.1	49.7	△13.7	△3.4
4	124.3	△4.6	97.9	12.3	26.4	49.6	△1.2	48.0	△5.2	1.6
5	110.2	△20.5	99.4	7.1	10.8	43.6	△12.9	47.5	△16.9	△3.9
6	104.2	△24.5	86.5	△0.7	17.7	43.1	△3.2	42.4	△16.9	0.7
7	114.4	△16.6	93.9	5.9	20.5	46.1	0.0	53.1	6.4	△7
8	112.9	△21.6	83.1	△2.5	29.8	39.5	△11.7	48.7	△6.6	△9.2
9	113.6	△22.1	82.0	3.9	31.6	44.2	10.5	40.3	△6.4	3.9
10	122.4	△17.1	92.2	△7.5	30.2	43.1	△21.2	45.9	△8.3	△2.8
11	118.9	△12.3	89.7	△9.0	29.2	39.4	△21.9	45.9	△14.1	△6.5
12	123.0	3.4	90.2	△5.1	32.8	43.6	△20.3	50.5	△0.6	△6.9

라. 외채·외환보유액·외국인투자·원유도입

(억달러)

	총외채 <sup>1)</sup>	단기외채 <sup>2)</sup>	대외채권	외환 보유액 <sup>3)</sup>	순채권	외국인투자 <sup>4)</sup> (백만달러)	원 유 도 입 <sup>5)</sup>	
							도입량 (백만BBL)	도입단가 (달러/BBL)
2017	4,120	1,160	8,774	3,892.7	4,654	22,948	1,118.2	53.3
2018	4,406	1,266	9,081	4,036.9	4,675	26,901	1,116.3	72.0
2019	-	-	-	4,088.2	-	23,328	-	-
2017.6	4,055	1,169	8,310	3,805.7	4,254	5,740	87.3	49.8
7	-	-	-	3,837.6	-	-	93.6	47.6
8	-	-	-	3,848.4	-	-	101.5	48.7
9	4,084	1,191	8,556	3,846.7	4,472	3,992	93.1	51.3
10	-	-	-	3,844.6	-	-	92.8	54.7
11	-	-	-	3,872.5	-	-	94.7	57.5
12	4,120	1,160	8,774	3,892.7	4,654	9,361	99.9	62.3
2018. 1	-	-	-	3,957.5	-	-	99.8	65.2
2	-	-	-	3,948.0	-	-	94.4	67.3
3	4,275	1,204	8,952	3,967.5	4,676	4,934	82.8	64.4
4	-	-	-	3,984.2	-	-	87.2	65.9
5	-	-	-	3,989.8	-	-	95.2	71.1
6	4,340	1,249	8,958	4,003.0	4,618	10,820	98.0	74.6
7	-	-	-	4,024.5	-	-	96.7	75.2
8	-	-	-	4,011.3	-	-	95.0	75.1
9	4,412	1,263	9,128	4,030.0	4,717	3,449	81.1	75.9
10	-	-	-	4,027.5	-	-	97.8	80.0
11	-	-	-	4,029.9	-	-	95.3	79.0
12	4,412	1,256	9,188	4,036.9	4,776	7,698	93.0	67.9
2019. 1	-	-	-	4,055.1	-	-	93.1	61.5
2	-	-	-	4,046.7	-	-	98.5	61.2
3	4,410	1,284	9,239	4,052.5	4,829	3,172	87.1	64.7
4	-	-	-	4,040.3	-	-	95.7	67.9
5	-	-	-	4,019.7	-	-	84.1	71.7
6	4,628	1,389	9,428	4,030.7	4,799	6,700	85.7	69.2
7	-	-	-	4,031.1	-	-	84.2	67.2
8	-	-	-	4,014.8	-	-	97.1	65.2
9	4,602	1,335	9,423	4,033.2	4,821	3,613	76.5	65.0
10	-	-	-	4,063.2	-	-	82.3	65.0
11	-	-	-	4,074.6	-	-	93.1	63.6
12	-	-	-	4,088.2	-	9,843	89.5	65.9

- 주 : 1)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 기준, 분기별 발표  
 2) 단기 : 계약만기(original maturity) 기준으로 1년(365일) 이하  
 3) 가용외환 보유액 기준  
 4) 신고기준, 분기별 발표  
 5) 한국석유공사 CIF 기준,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통계는 잠정치

## 마. 주요국가의 환율변동 비교

	한국(원/달러)			일본(¥/달러) <sup>4)</sup>		대만(NT달러/달러) <sup>4)</sup>		유로(달러/EUR)	
	기 말 <sup>1)</sup>	절상률 <sup>2)</sup>	기간평균 <sup>3)</sup>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2017	1,071.4	12.80	1,130.84	112.89	3.26	29.82	8.32	1,194.0	13.83
2018	1,118.1	△4.18	1,100.30	110.36	2.29	30.57	△2.45	1,144.1	△4.18
2019	1,157.8	△3.43	1,165.65	108.87	1.36	30.09	1.59	1,120.6	△2.05
2018. I	1,066.5	0.46	1,072.29	106.50	6.00	29.12	2.42	1,230.2	3.03
II	1,121.7	△4.48	1,078.57	110.54	2.13	30.59	△2.50	1,156.3	△3.16
III	1,112.7	△3.71	1,121.59	113.41	△0.46	30.49	△2.18	1,163.5	△2.55
IV	1,118.1	△4.18	1,127.52	110.36	2.29	30.57	△2.44	1,144.1	△4.18
2019. I	1,137.8	△1.73	1,125.08	110.66	△0.28	30.87	△0.98	1,122.8	△1.86
II	1,156.8	△3.35	1,165.91	107.78	2.39	30.97	△1.30	1,136.9	△0.63
III	1,201.3	△6.93	1,193.24	107.90	2.28	31.05	△1.55	1,094.4	△4.34
IV	1,157.8	△3.43	2,275.81	108.87	1.36	30.09	1.59	1,120.6	△2.05
2018.1	1,071.5	△0.01	1,066.70	108.78	3.78	29.24	2.00	1,240.4	3.89
2	1,071.0	0.04	1,079.58	107.40	5.11	29.29	1.82	1,223.6	2.48
3	1,066.5	0.46	1,071.89	106.50	6.00	29.12	2.42	1,230.2	3.03
4	1,076.2	△0.45	1,067.76	109.16	3.42	29.56	0.89	1,212.1	1.52
5	1,081.3	△0.92	1,076.39	108.79	3.77	29.91	△0.29	1,166.5	△2.30
6	1,121.7	△4.48	1,092.80	110.54	2.13	30.59	△2.50	1,156.3	△3.16
7	1,116.7	△4.06	1,122.80	111.01	1.69	30.59	△2.50	1,170.8	△1.94
8	1,108.8	△3.37	1,121.15	111.03	1.68	30.69	△2.82	1,166.3	△2.32
9	1,112.7	△3.91	1,120.60	113.41	△0.46	30.49	△2.18	1,163.5	△2.55
10	1,140.6	△6.07	1,130.81	113.06	△0.15	30.96	△3.67	1,134.5	△4.98
11	1,121.8	△4.49	1,128.58	113.43	△0.48	30.65	△2.69	1,139.0	△4.61
12	1,118.1	△4.18	1,122.90	110.36	2.29	30.57	△2.44	1,144.1	△4.18
2019.1	1,117.2	0.08	1,122.00	109.02	1.23	30.74	△0.54	1,148.5	0.38
2	1,117.8	0.03	1,122.45	110.94	△0.53	30.79	△0.72	1,137.5	△0.58
3	1,137.8	△1.73	1,130.72	110.66	△0.28	30.87	△0.98	1,122.8	△1.86
4	1,158.2	△3.46	1,140.95	111.69	△1.20	30.91	△1.11	1,118.4	△2.25
5	1,190.0	△6.04	1,183.29	109.60	0.69	31.58	△3.20	1,113.3	△2.69
6	1,156.8	△6.04	1,175.62	107.78	2.39	30.97	△1.30	1,136.9	△0.63
7	1,182.0	△5.41	1,175.31	108.60	1.62	31.04	△1.52	1,115.8	△2.47
8	1,215.2	△7.99	1,208.98	106.54	3.58	31.32	△2.40	1,105.9	△3.34
9	1,201.3	△6.93	1,197.55	107.90	2.28	31.05	△1.55	1,094.4	△4.34
10	1,168.4	△4.31	1,184.13	108.79	1.44	30.36	0.69	1,115.4	△2.51
11	1,179.3	△5.19	1,167.45	109.51	0.77	30.44	0.42	1,101.1	△3.76
12	1,157.8	△3.43	1,175.84	108.87	1.36	30.09	1.59	1,120.6	△2.05

주 : 1) 매매기준율  
 2) 절상률은 전년말 대비  
 3) 매매기준율  
 4) 일본시장, 대만시장의 현지일 기준

## 6. 통화·금리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본원 통화 <sup>1)</sup>				M1 <sup>2)</sup>			
	말잔액		평균잔액		말잔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2015	131,438.8	12.5	120,691.4	16.8	708,452.9	20.9	636,639.0	18.6
2016	143,435.3	9.1	137,441.5	13.9	795,531.1	12.3	734,411.8	15.4
2017	155,881.0	8.7	151,858.1	10.5	849,862.4	6.8	802,016.5	9.2
2018	172,353.3	10.6	164,963.2	8.6	865,851.8	1.9	841,014.4	4.9
2016.10	138,161.4	8.3	141,103.5	12.3	758,454.8	11.9	753,367.3	12.5
11	140,003.1	11.5	141,757.2	11.8	767,375.6	12.6	762,639.7	12.5
12	143,435.3	9.1	143,458.7	12.0	795,531.1	12.3	776,589.6	12.4
2017.1	149,132.9	15.2	147,380.8	12.3	780,436.1	11.8	780,995.5	11.6
2	146,930.0	9.9	150,092.9	11.3	785,333.0	10.3	776,362.5	9.7
3	152,539.2	12.7	145,049.0	9.1	793,893.6	9.8	789,187.8	10.6
4	148,202.9	11.7	149,630.1	10.8	793,015.8	10.7	791,859.3	9.9
5	146,241.6	7.9	149,446.2	9.9	791,486.5	9.5	791,074.8	9.5
6	149,971.7	8.7	150,519.7	10.9	816,173.7	9.8	798,890.2	9.3
7	151,177.5	13.0	149,955.1	10.3	796,945.2	8.4	804,853.4	9.5
8	154,591.0	13.1	152,170.5	9.4	800,836.1	7.2	805,103.3	9.1
9	161,818.8	12.1	154,578.4	8.8	837,045.8	11.7	810,904.8	7.9
10	157,141.9	13.8	159,248.2	12.9	818,030.0	7.9	826,892.1	9.8
11	154,807.5	10.6	155,623.3	9.8	821,132.3	7.0	817,624.5	7.2
12	155,881.0	8.7	158,603.1	10.6	849,862.4	6.8	830,003.7	6.9
2018.1	158,176.6	6.1	157,220.1	6.7	828,767.6	6.1	830,732.7	6.3
2	165,676.0	12.8	163,852.7	9.2	840,022.9	7.0	839,555.2	8.1
3	163,765.6	7.4	160,760.7	10.8	851,585.0	7.3	840,991.0	6.6
4	159,088.0	7.3	161,527.1	8.0	836,600.2	5.5	841,002.2	6.2
5	162,659.7	11.2	160,475.5	7.4	836,585.2	5.7	839,880.5	6.2
6	167,048.3	11.4	164,397.3	9.2	861,938.2	5.6	846,240.2	5.9
7	164,566.5	8.9	163,223.4	8.8	837,164.2	5.0	843,752.8	4.8
8	170,586.8	10.3	165,629.2	8.8	833,299.0	4.1	837,607.5	4.0
9	177,902.4	9.9	170,529.6	10.3	853,227.3	1.9	845,523.7	4.3
10	173,738.9	10.6	170,478.9	7.1	840,308.0	2.7	840,678.4	1.7
11	171,141.7	10.6	168,326.2	8.2	837,247.6	2.0	840,084.9	2.7
12	172,353.3	10.6	173,137.8	9.2	865,851.8	1.9	846,123.7	1.9
2019.1	179,920.8	13.7	170,871.6	8.7	853,095.0	2.9	847,765.3	2.1
2	180,690.7	9.1	177,604.3	8.4	859,399.1	2.3	855,633.1	1.9
3	180,425.5	10.2	174,831.7	8.8	879,179.9	3.2	862,572.7	2.6
4	176,149.4	10.7	175,703.9	8.8	866,316.2	3.6	866,144.1	3.0
5	183,868.7	13.0	176,320.7	9.9	867,518.3	3.7	866,643.4	3.2
6	183,143.5	9.6	179,501.6	9.2	891,883.5	3.5	873,802.8	3.3
7	173,689.0	5.5	175,752.8	7.7	870,347.5	4.0	875,495.7	3.8
8	185,473.0	8.7	181,175.3	9.4	884,436.3	6.1	877,062.9	4.7
9	186,544.0	4.9	183,277.0	7.5	893,504.4	4.7	887,411.7	5.0
10	187,003.2	7.6	182,921.2	7.3	886,110.5	5.5	885,065.7	5.3
11	186,457.0	8.9	182,848.9	8.0	915,037.9	9.3	898,607.6	7.0

주 : 1)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2) M1(협외통화) = 현금통화(기념화폐를 제외한 민간화폐보유액) +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투신사 MMF 포함)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M2 <sup>3)</sup>				Lf <sup>4)</sup>			
	말 잔액		평균잔액		말 잔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2015	2,247,375.0	8.2	2,182,911.9	8.6	3,098,929.4	9.0	2,986,698.6	9.7
2016	2,407,459.1	7.1	2,342,621.3	7.3	3,344,919.6	7.9	3,229,857.2	8.1
2017	2,530,353.6	5.1	2,471,225.6	5.5	3,565,196.8	6.6	3,445,645.8	6.7
2018	2,700,362.4	6.7	2,626,902.0	6.3	3,824,267.7	7.2	3,686,392.2	7.0
2018.1	2,554,843.7	6.4	2,551,196.0	5.5	3,581,961.2	7.0	3,573,130.0	6.4
2	2,569,313.3	5.9	2,570,764.6	6.2	3,610,769.0	6.9	3,596,261.3	6.9
3	2,584,208.4	6.0	2,578,361.8	5.8	3,633,741.2	7.0	3,616,028.6	6.7
4	2,584,177.1	5.6	2,590,840.7	5.7	3,630,231.3	6.2	3,628,930.4	6.6
5	2,609,834.8	6.5	2,600,274.3	5.9	3,663,596.0	7.0	3,643,255.3	6.6
6	2,632,341.1	6.8	2,622,268.3	6.1	3,697,098.0	7.2	3,671,929.8	6.7
7	2,634,789.9	6.7	2,637,421.8	6.7	3,698,558.1	6.7	3,698,202.0	7.1
8	2,642,505.0	6.4	2,651,503.4	6.7	3,722,900.0	7.0	3,718,480.0	7.1
9	2,661,729.3	6.0	2,652,829.5	6.4	3,751,107.7	7.0	3,734,526.2	7.2
10	2,682,252.6	7.2	2,674,506.5	6.8	3,776,777.5	7.7	3,759,646.9	7.4
11	2,687,143.0	6.5	2,692,974.8	6.8	3,790,490.4	7.4	3,786,039.7	7.5
12	2,700,362.4	6.7	2,699,882.3	6.8	3,824,267.7	7.2	3,809,349.2	7.6
2019.1	2,712,849.6	6.2	2,716,722.0	6.5	3,838,756.5	7.2	3,838,826.3	7.4
2	2,739,656.1	6.6	2,730,481.9	6.2	3,873,345.9	7.3	3,850,189.3	7.1
3	2,763,165.2	6.9	2,752,723.9	6.8	3,908,081.3	7.5	3,889,792.1	7.6
4	2,760,406.6	6.8	2,763,058.0	6.6	3,918,052.3	7.9	3,909,977.2	7.7
5	2,773,218.1	6.3	2,771,633.0	6.6	3,939,473.0	7.5	3,929,454.2	7.9
6	2,813,932.9	6.9	2,799,248.0	6.7	3,993,040.2	8.0	3,965,906.9	8.0
7	2,807,361.7	6.5	2,811,543.7	6.6	3,996,494.1	8.1	3,993,671.0	8.0
8	2,848,885.3	7.8	2,832,566.1	6.8	4,046,431.5	8.7	4,023,017.6	8.2
9	2,853,964.3	7.2	2,853,272.0	7.6	4,053,810.9	8.1	4,048,352.3	8.4
10	2,871,952.2	7.1	2,874,176.1	7.5	4,077,468.4	8.0	4,073,019.4	8.3
11	2,917,439.1	8.6	2,901,465.4	7.7	4,127,453.3	8.9	4,105,907.7	8.4

주 : 3) M2(광의통화) = M1 + 기간물 예·적금 및 부금 + 시장형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등) + 실적배당형 상품(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 금융채 + 기타(투신증권저축,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 단, 장기(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제외

4) M3(총유동성) = 현금통화 +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예수금 + 금융채 + 상업어음매출 + 양도성예금증서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표지어음(1989년 11월부터 표지어음 포함)

\* M1, M2는 예금취급기관 (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수출입은행, 증권사, 투신사, 은행신탁,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우체국예금)을, M3는 예금취급기관,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대상금융기관으로 함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화폐발행액		회사채 유통 수익률 (3年)	CD 유통 수익률 (91物)	콜금리 (1日)	어음부도율 (금액기준) <sup>5)</sup>		주 식	
	말잔액	증감률 (%)				서 울	전 국	평 균 지 수	거래량 (일평균 만주)
2015	86,757.2	15.8	2.08	1.77	1.65	0.14	0.16	2,011.9	45,526
2016	97,382.3	12.2	1.89	1.49	1.34	0.08	0.11	1,987.0	37,677
2017	107,907.6	10.8	2.33	1.44	1.26	0.13	0.15	2,311.4	34,029
2018	115,389.5	6.9	2.65	1.68	1.52	0.08	0.13	2,325.0	39,797
2017.5	101,331.9	11.0	2.22	1.39	1.23	0.18	0.20	2,301.9	36,991
6	101,368.6	10.7	2.21	1.38	1.24	0.26	0.28	2,372.2	35,638
7	101,949.5	10.9	2.28	1.39	1.24	0.03	0.10	2,412.9	29,644
8	102,490.6	10.4	2.32	1.39	1.23	0.09	0.10	2,372.2	26,018
9	110,694.6	15.2	2.33	1.38	1.25	0.08	0.09	2,371.8	27,822
10	107,231.6	13.0	2.57	1.38	1.24	0.08	0.13	2,482.9	31,573
11	106,856.0	11.4	2.71	1.45	1.26	0.06	0.10	2,533.5	33,975
12	107,907.6	10.8	2.65	1.66	1.51	0.07	0.09	2,467.7	30,253
2018.1	108,534.8	4.9	2.72	1.66	1.49	0.11	0.15	2,520.9	37,516
2	112,751.8	12.5	2.82	1.65	1.49	0.05	0.09	2,439.1	40,451
3	109,523.6	10.1	2.83	1.65	1.49	0.09	0.12	2,451.6	38,471
4	109,613.4	8.4	2.79	1.65	1.47	0.17	0.19	2,458.2	49,714
5	110,517.0	9.1	2.86	1.65	1.50	0.14	0.22	2,461.3	64,103
6	110,069.3	8.6	2.81	1.65	1.49	0.09	0.14	2,394.5	49,741
7	110,474.5	8.4	2.75	1.65	1.49	0.02	0.10	2,284.3	34,134
8	110,584.7	7.9	2.66	1.65	1.50	0.01	0.07	2,283.8	28,203
9	116,454.7	5.2	2.40	1.65	1.54	0.09	0.14	2,307.3	31,960
10	113,859.8	6.2	2.45	1.68	1.52	0.04	0.09	2,153.5	33,439
11	114,080.9	6.8	2.40	1.71	1.51	0.17	0.18	2,083.3	31,723
12	115,389.5	6.9	2.30	1.91	1.77	0.03	0.07	2,070.1	40,168
2019.1	121,247.3	11.7	2.26	1.87	1.76	0.04	0.07	2,102.0	42,978
2	118,574.8	5.2	2.25	1.87	1.76	0.04	0.08	2,210.2	40,486
3	117,380.9	7.2	2.24	1.90	1.76	0.11	0.14	2,161.9	32,290
4	118,057.9	7.7	2.21	1.86	1.75	0.04	0.13	2,212.1	44,044
5	118,679.0	7.4	2.15	1.84	1.75	0.07	0.08	2,086.9	53,538
6	118,397.9	7.6	2.00	1.80	1.76	0.04	0.09	2,105.3	59,246
7	118,785.2	7.5	1.89	1.68	1.63	0.02	0.08	2,079.5	51,778
8	120,382.7	8.9	1.69	1.49	1.51	0.03	0.05	1,944.2	49,867
9	123,376.1	5.9	1.79	1.54	1.52	0.04	0.07	2,045.2	45,373
10	122,698.0	7.8	1.86	1.46	1.36	0.04	0.08	2,065.8	42,307
11	123,558.5	8.3	2.00	1.52	1.28	0.03	0.04	2,128.8	51,132
12	-	-	1.95	1.53	1.28	0.03	0.07	2,147.0	50,944

주 : 5) 전자결제 조정 전

## 7. 경기

(2015 = 100, %)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전월비	순환변동치	
2017. 1	106.9	0.6	101.0	105.7	0.6	101.0
2	107.3	0.4	101.1	105.9	0.2	101.0
3	107.8	0.5	101.1	106.4	0.5	101.2
4	108.3	0.5	101.2	106.7	0.3	101.2
5	108.8	0.5	101.3	107.0	0.3	101.2
6	109.3	0.5	101.4	107.1	0.1	101.1
7	109.7	0.4	101.4	107.3	0.2	101.1
8	110.1	0.4	101.4	107.6	0.3	101.1
9	110.4	0.3	101.3	108.0	0.4	101.3
10	110.8	0.4	101.3	108.1	0.1	101.1
11	111.2	0.4	101.2	108.3	0.2	101.1
12	111.4	0.2	101.1	108.1	△0.2	100.6
2018. 1	111.7	0.3	101.0	108.3	0.2	100.7
2	112.0	0.3	100.9	108.7	0.4	100.8
3	112.2	0.2	100.7	109.1	0.4	100.9
4	112.3	0.1	100.5	109.2	0.1	100.9
5	112.7	0.4	100.5	109.4	0.2	100.8
6	113.0	0.3	100.5	109.5	0.1	100.7
7	113.2	0.2	100.4	109.5	0.0	100.6
8	113.1	△0.1	100.0	109.7	0.2	100.5
9	113.3	0.2	99.9	109.6	△0.1	100.2
10	113.4	0.1	99.7	109.7	0.1	100.1
11	113.4	0.0	99.5	109.8	0.1	100.0
12	113.5	0.1	99.2	109.8	0.0	99.9
2019. 1	113.6	0.1	99.1	110.0	0.2	99.8
2	113.8	0.2	98.9	109.7	△0.3	99.3
3	114.1	0.3	99.0	109.8	0.1	99.2
4	114.5	0.4	99.0	110.0	0.2	99.2
5	114.6	0.1	98.9	110.5	0.5	99.5
6	114.7	0.1	98.7	110.6	0.1	99.4
7	114.7	0.0	98.4	110.7	0.1	99.3
8	114.9	0.2	98.3	111.1	0.4	99.5
9	115.4	0.4	98.5	111.3	0.2	99.5
10p	116.1	0.6	98.8	111.5	0.2	99.4
11p	116.9	0.7	99.2	111.5	0.0	99.3
12p	117.7	0.7	99.6	112.0	0.4	99.5

※ p는 잠정치임

## 8. 재정

(조원)

	통합재정지출 <sup>1)</sup> (GDP대비, %) <sup>2)</sup>					통합재정수입 <sup>1)</sup> (GDP대비, %) <sup>2)</sup>						
	경상 지출	이자 지출	자본 지출	손용자	국세 수입	세외 수입	자본 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2000	129.3	(19.8)	87.2	6.9	22.3	19.8	135.8	(20.8)	92.9	26.7	1.4	14.8
2001	136.8	(19.3)	101.9	7.2	24.9	10.1	144.0	(20.4)	95.8	29.4	1.3	17.5
2002	136.0	(17.3)	106.3	6.8	29.4	0.4	158.7	(20.2)	104.0	33.5	1.5	19.7
2003	164.3	(19.6)	136.2	6.6	30.6	△2.5	171.9	(20.5)	114.7	35.1	1.5	20.7
2004	173.1	(19.1)	144.7	8.3	27.0	1.4	178.8	(19.7)	117.8	36.8	1.3	22.8
2005	186.6	(19.5)	158.9	8.7	24.6	3.0	191.4	(20.0)	127.5	37.8	1.3	24.9
2006	203.6	(20.2)	171.3	9.8	26.5	5.7	209.6	(20.8)	138.0	42.7	1.5	27.3
2007	206.6	(19.0)	173.3	10.2	26.2	7.1	243.6	(22.4)	161.5	50.5	1.9	29.7
2008	234.9	(20.3)	201.0	10.4	28.4	5.5	250.7	(21.7)	167.3	48.6	1.9	32.9
2009	268.4	(22.3)	215.1	11.5	35.2	18.0	250.8	(20.8)	164.5	49.8	2.5	33.9
2010	254.2	(19.2)	216.9	13.4	34.2	3.1	270.9	(20.5)	177.7	55.2	2.4	35.6
2011	273.7	(19.7)	235.5	14.6	34.3	3.9	292.3	(21.0)	192.4	58.5	2.5	38.9
2012	293.0	(20.3)	252.6	14.2	34.3	6.1	311.5	(21.6)	203.0	60.8	3.7	43.9
2013	300.2	(20.0)	268.0	13.4	34.0	△1.8	314.4	(21.0)	201.9	63.1	3.3	46.1
2014	312.4	(20.0)	280.5	14.1	31.0	0.9	320.9	(20.5)	205.5	62.9	2.7	49.8
2015	339.4	(20.5)	296.2	14.1	34.3	8.8	339.2	(20.5)	217.9	64.9	3.3	53.1
2016	354.4	(20.4)	310.0	14.0	32.6	11.7	371.3	(21.3)	242.6	68.4	3.4	56.9
2017	379.8	(20.7)	332.7	14.0	31.0	16.1	403.8	(22.0)	266.4	74.8	3.2	60.5
2018	407.1	(21.5)	360.2	14.3	29.4	17.5	438.3	(23.1)	283.6	77.1	2.7	64.9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sup>2)</sup>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sup>2)</sup>		국가채무 (GDP대비, %) <sup>2)</sup>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2000	6.5	(1.0)	△6.0	(△0.9)	111.2	(17.1)	17.4	20.9
2001	7.3	(1.0)	△8.2	(△1.2)	121.8	(17.2)	17.3	21.2
2002	22.7	(2.9)	5.1	(0.6)	133.8	(17.0)	17.3	21.3
2003	7.6	(0.9)	1.0	(0.1)	165.8	(19.8)	17.7	22.0
2004	5.6	(0.6)	△3.6	(△0.4)	203.7	(22.4)	16.7	21.2
2005	4.9	(0.5)	△6.7	(△0.7)	247.9	(25.9)	17.1	21.7
2006	6.0	(0.6)	△8.4	(△0.8)	282.7	(28.1)	17.8	22.6
2007	37.0	(3.4)	6.8	(0.6)	299.2	(27.5)	18.8	23.7
2008	15.8	(1.4)	△11.7	(△1.0)	309.0	(26.8)	18.4	23.6
2009	△17.6	(△1.5)	△43.2	(△3.6)	359.6	(29.8)	17.4	22.7
2010	16.7	(1.3)	△13.0	(△1.0)	392.2	(29.7)	17.2	22.4
2011	18.6	(1.3)	△13.5	(△1.0)	420.5	(30.3)	17.6	23.2
2012	18.5	(1.3)	△17.4	(△1.2)	443.1	(30.8)	17.8	23.7
2013	14.2	(0.9)	△21.1	(△1.4)	489.8	(32.6)	17.0	23.1
2014	8.5	(0.5)	△29.5	(△1.9)	533.2	(34.1)	17.1	23.4
2015	△0.2	(△0.01)	△38.0	(△2.3)	591.5	(35.7)	17.4	23.7
2016	16.9	(1.0)	△22.7	(△1.3)	626.9	(36.0)	18.3	24.7
2017	24.0	(1.3)	△18.5	(△1.0)	660.2	(36.0)	18.8	25.4
2018	31.2	(1.6)	△10.6	(△0.6)	680.7	(35.9)	-	-

주: 1) 통합재정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 → 2015년 기준년 개편, '19.6.4) 반영

## 9. 해외지표

### 가. 주요국의 경제지표 (미 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 역 <sup>1)</sup>				경상 수지	대외 준비 <sup>2)</sup> (기말)	달러화 호환율	물 가 <sup>4)</sup>		실업률 <sup>5)</sup>	노동 생산량 <sup>6)</sup>
			상품수출 (BOP)		상품수입 (BOP)					생산지	소비자		
			전기 대비 연율 (%)	달러	억달러	전기 대비 (%)							
2017	2.4	60,019	15,536	6.6	23,588	6.9	△440	1,233	108.90	2.3	2.1	4.3	1.3
2018	2.9	62,946	16,743	7.8	25,617	8.6	△491	1,258	106.41	2.9	2.4	3.9	1.3
2019	2.3	65,227	16,530	△1.3	25,190	△1.7	..	1,295	110.11	1.7	1.8	3.7	1.7
2018.1			1,336.1	△3.0	2,084.7	△0.9		1,262	103.14	2.6	2.1	4.1	-
2	2.5	-	1,363.8	2.1	2,122.5	1.8	△114.0	1,257	102.45	2.8	2.2	4.1	0.9
3			1,407.4	3.2	2,107.3	△0.7		1,265	103.10	2.9	2.4	4.0	-
4			1,403.6	△0.3	2,106.6	0.0		1,245	103.18	2.7	2.5	4.0	-
5	3.5	-	1,445.5	3.0	2,112.2	0.3	△107.3	1,228	106.03	3.1	2.8	3.8	1.8
6			1,421.7	△1.6	2,116.1	0.2		1,251	107.30	3.3	2.9	4.0	-
7			1,399.4	△1.6	2,140.8	1.2		1,247	107.67	3.4	2.9	3.8	-
8	2.9	-	1,388.6	△0.8	2,153.5	0.6	△125.7	1,245	108.19	3.0	2.7	3.8	1.2
9			1,407.5	1.4	2,180.2	1.2		1,237	107.61	2.7	2.3	3.7	-
10			1,412.6	0.4	2,185.6	0.3		1,236	108.53	3.1	2.5	3.8	-
11	1.1	-	1,391.2	△1.5	2,132.3	△2.4	△143.9	1,235	109.62	2.6	2.2	3.7	0.1
12			1,365.8	△1.8	2,174.9	2.0		1,258	110.14	2.6	1.9	3.9	-
2019.1			1,376.2	0.8	2,110.6	△3.0		1,264	109.04	1.9	1.6	4.0	-
2	3.1	-	1,392.5	1.2	2,106.0	△0.2	△136.2	1,258	109.28	1.9	1.5	3.8	3.5
3			1,407.6	1.1	2,140.0	1.6		1,252	109.83	2.0	1.9	3.8	-
4			1,363.3	△3.1	2,086.8	△2.5		1,273	110.31	2.4	2.0	3.6	-
5	2.0	-	1,403.5	3.0	2,168.5	3.9	△125.2	1,270	110.75	2.1	1.8	3.6	2.5
6			1,365.4	△2.7	2,122.0	△2.1		1,283	109.71	1.6	1.6	3.7	-
7			1,377.7	0.9	2,118.3	△0.2		1,288	109.83	1.6	1.8	3.7	-
8	2.1	-	1,382.3	0.3	2,128.8	0.5	△124.1	1,285	110.62	1.9	1.7	3.7	△0.2
9			1,363.4	△1.4	2,084.8	△2.1		1,276	111.04	1.4	1.7	3.5	-
10			1,356.7	△0.5	2,039.0	△2.2		1,288	110.57	1.1	1.8	3.6	-
11	2.1	-	1,364.5	0.6	2,011.0	△1.4		1,279	110.55	1.1	2.1	3.5	1.4
12			1,377.5	0.9	2,074.6	3.2		1,295	109.86	1.3	2.3	3.5	-

연월중	통화기 M2 전기 대비 (연율%)	금 리(연%)					산업생산 <sup>1)</sup>			수요관련지표		주기지수 <sup>13)</sup>
		Federal Funds Rate (목표)	재 할인율 <sup>8)</sup> (기말)	프라이머 레이트 (기말)	단 기 <sup>9)</sup> 국 채 수익률 (기간평균)	장기 <sup>10)</sup> 국 채 수익률 (기간평균)	전산업	제조업	제조업 가동률 (%) <sup>12)</sup>	소매 판매액	주택 차입금 호수	
2017	4.8	1.25-1.50	2.00	4.50	0.95	2.33	2.3	2.0	75.1	4.2	2.5	24,719.2
2018	3.8	2.25-2.50	3.00	5.50	1.97	2.91	3.9	2.3	76.6	4.9	3.9	23,327.5
2019	6.8	1.50-1.75	2.25	4.75	2.10	2.14	0.8	△0.2	75.6	3.6	3.2	28,538.4
2018.1	2.0	1.25-1.50	2.00	4.50	1.43	2.58	△0.3	△0.4	75.5	0.2	9.5	26,149.4
2	3.0	1.25-1.50	2.00	4.50	1.59	2.86	0.4	1.1	76.3	0.2	△3.0	25,029.2
3	5.3	1.50-1.75	2.25	4.75	1.73	2.84	0.6	0.0	76.3	△0.1	2.9	24,103.1
4	3.2	1.50-1.75	2.25	4.75	1.79	2.87	0.9	0.4	76.6	0.4	△4.9	24,163.2
5	5.8	1.50-1.75	2.25	4.75	1.90	2.98	△0.8	△0.8	76.0	1.3	5.1	24,415.8
6	5.7	1.75-2.00	2.50	5.00	1.94	2.91	0.8	0.7	76.5	0.1	△11.4	24,271.4
7	2.8	1.75-2.00	2.50	5.00	1.99	2.89	0.4	0.4	76.7	0.5	0.3	25,415.2
8	3.8	1.75-2.00	2.50	5.00	2.07	2.89	0.8	0.4	77.0	△0.2	8.0	25,964.8
9	2.7	2.00-2.25	2.75	5.25	2.17	3.00	0.1	0.0	76.9	△0.1	△3.4	26,458.3
10	0.6	2.00-2.25	2.75	5.25	2.29	3.15	0.2	△0.1	76.8	1.2	△2.0	25,115.8
11	0.8	2.00-2.25	2.75	5.25	2.37	3.12	0.5	0.2	76.9	0.1	△0.7	25,538.5
12	9.3	2.25-2.50	3.00	5.50	2.41	2.83	0.0	0.6	77.3	△2.0	△5.0	23,327.5
2019.1	7.2	2.25-2.50	3.00	5.50	2.42	2.71	△0.4	△0.6	76.7	1.4	13.0	24,999.7
2	2.5	2.25-2.50	3.00	5.50	2.44	2.68	△0.5	△0.5	76.3	△0.5	△11.0	25,916.0
3	4.0	2.25-2.50	3.00	5.50	2.45	2.57	0.1	△0.1	76.2	1.8	4.4	25,928.7
4	3.9	2.25-2.50	3.00	5.50	2.43	2.53	△0.6	△0.9	75.4	0.4	5.9	26,592.9
5	8.1	2.25-2.50	3.00	5.50	2.40	2.40	0.2	0.1	75.4	0.5	△0.5	24,815.0
6	11.0	2.25-2.50	3.00	5.50	2.22	2.07	0.0	0.6	75.7	0.4	△2.5	26,600.0
7	6.7	2.00-2.25	2.75	5.25	2.15	2.06	△0.2	△0.4	75.3	0.7	△2.4	26,864.3
8	6.0	2.00-2.25	2.75	5.25	1.99	1.63	0.8	0.7	75.8	0.6	14.2	26,403.3
9	7.6	1.75-2.00	2.50	5.00	1.93	1.70	△0.5	△0.8	75.1	△0.4	△7.9	26,916.8
10	10.9	1.50-1.75	2.25	4.75	1.68	1.71	△0.5	△0.7	74.5	0.3	5.8	27,046.2
11	8.6	1.50-1.75	2.25	4.75	1.57	1.81	0.8	1.0	75.1	0.3	2.6	28,051.4
12	4.8	1.50-1.75	2.25	4.75	1.57	1.86	△0.3	0.2	75.2	0.3	16.9	28,538.4

주: 월별 및 분기별 전기대비 증감율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국제수지 기준 2) 금+SDR+IMF포지션+외환 3) 캐나다, 유로지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등 7개국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환율지수, 명목기준

4) 생산자물가는 최종수요 기준 5) 계절변동조정 후 6) 전산업(농업부문 제외)취업자의 단위시간당 불변산출액 기준(2009=100)

7) M1 = 민간보유화폐액 + 비은행금융기관발행 여행자수표 +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 + 예금금융기관의 NOW계정 및 AST계정 + 신용조합의 출자금 계정 + 저축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M2 = M1 + 예금금융기관의 익일물 RP + 미국은행 해외지점의 거주자 익일물 유로달러예금 + 예금금융기관의 저축예금 및 소액정기예금 + 일반투자자 보유 MMF - 예금금융기관 및 MMF의 IRA와 Koegh계정 예금, 평잔기준 8) 2003. 1. 9일 이후부터는 primary credit 기준

9) 3개월 만기 10) 10년 만기 11) 지수(2007=100) 증감률 12) 월별 수치는 계절변동조정 후

13) 다우존스 공업평균 추가, 기말기준

## (중 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 역				경 상 수	대외준비 <sup>1)</sup> (기말)	대미달러 율	
			수출(FOB)		수입(CIF)				환	율
	전년동기 대비(%)	미달러	억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미달러	기 말	평 균	
2017	6.9	8,883	22,633	7.9	18,438	16.1	1,951	31,399	6.534	6.752
2018	6.7	9,982	24,867	9.9	21,357	15.8	491	30,727	6.863	6.617
2019	6.1	10,264	24,990	0.5	20,771	△2.7	.	31,079	6.976	6.898
2018.1			1,995	10.6	1,812	37.7		31,615	6.334	6.436
2	6.9	-	1,705	43.5	1,383	6.6	△341	31,345	6.329	6.316
3			1,739	△3.0	1,797	14.8		31,428	6.288	6.322
4			1,989	11.9	1,727	22.3		31,249	6.339	6.298
5	6.9	-	2,116	11.9	1,882	26.2	53	31,106	6.414	6.376
6			2,156	10.7	1,747	13.8		31,121	6.617	6.456
7			2,144	11.6	1,869	26.9		31,180	6.817	6.703
8	6.7	-	2,169	9.5	1,907	20.7	233	31,097	6.825	6.843
9			2,254	13.9	1,951	14.4		30,870	6.879	6.845
10			2,148	14.3	1,818	20.4		30,531	6.965	6.926
11	6.5	-	2,243	3.9	1,824	2.8	546	30,617	6.936	6.935
12			2,209	△4.6	1,641	△7.7		30,727	6.863	6.885
2019.1			2,180	9.3	1,796	△0.9		30,879	6.703	6.790
2	6.4	-	1,353	△20.7	1,323	△4.4	421	30,902	6.690	6.736
3			1,982	14.0	1,668	△7.2		30,988	6.734	6.709
4			1,936	△2.7	1,805	4.5		30,950	6.729	6.715
5	6.2	-	2,139	1.1	1,727	△8.2	462	31,010	6.899	6.852
6			2,124	△1.5	1,628	△6.8		31,192	6.875	6.882
7			2,218	3.4	1,777	△4.9		31,037	6.884	6.875
8	6.0	-	2,149	△1.0	1,802	△5.5	549	31,072	7.088	7.021
9			2,182	△3.2	1,792	△8.2		30,924	7.073	7.078
10			2,130	△0.8	1,705	△6.2		31,052	7.053	7.070
11	6.0	-	2,215	△1.3	1,839	0.8	-	30,956	7.030	7.018
12			2,383	7.9	1,911	16.5		31,079	6.976	7.013

연월중	물 가		통 화 <sup>3)</sup>		금리(기말, 연%)		산 업 생 산		소매 판매 <sup>4)</sup>	주 가 지 수 <sup>5)</sup>
	생산자	소비자	M1	M2	재할인율	금융기관 대출금리(1년)	전산업	국유기업		
	전년동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2017	6.3	1.6	11.8	8.1	2.25	4.35	6.6	6.5	10.2	3,307.17
2018	3.5	2.1	1.5	8.1	2.25	4.35	6.2	6.2	9.0	2,493.90
2019	△0.3	2.9	4.4	8.7	2.25	4.35	5.7	4.8	8.0	3,050.12
2018.1	4.3	1.5	15.0	8.6	2.25	4.35	—	—	—	3,480.83
2	3.7	2.9	8.5	8.8	2.25	4.35	7.2	9.0	9.7	3,259.41
3	3.1	2.1	7.1	8.2	2.25	4.35	6.0	5.7	10.1	3,168.90
4	3.4	1.8	7.2	8.3	2.25	4.35	7.0	7.7	9.4	3,082.23
5	4.1	1.8	6.0	8.3	2.25	4.35	6.8	8.1	8.5	3,095.47
6	4.7	1.9	6.6	8.0	2.25	4.35	6.0	6.1	9.0	2,847.42
7	4.6	2.1	5.1	8.5	2.25	4.35	6.0	6.2	8.8	2,876.40
8	4.1	2.3	3.9	8.2	2.25	4.35	6.1	5.6	9.0	2,725.25
9	3.6	2.5	4.0	8.3	2.25	4.35	5.8	5.6	9.2	2,821.35
10	3.3	2.5	2.7	8.0	2.25	4.35	5.9	4.6	8.6	2,602.78
11	2.7	2.2	1.5	8.0	2.25	4.35	5.4	3.9	8.1	2,588.19
12	0.9	1.9	1.5	8.1	2.25	4.35	5.7	3.6	8.2	2,493.90
2019.1	0.1	1.7	0.4	8.4	2.25	4.35	—	—	—	2,584.57
2	0.1	1.5	2.0	8.0	2.25	4.35	5.3	4.4	8.2	2,940.95
3	0.4	2.3	4.6	8.6	2.25	4.35	8.5	4.7	8.7	3,090.76
4	0.9	2.5	2.9	8.5	2.25	4.35	5.4	6.0	7.2	3,078.34
5	0.6	2.7	3.4	8.5	2.25	4.35	5.0	3.7	8.6	2,898.70
6	0.0	2.7	4.4	8.5	2.25	4.35	6.3	6.2	9.8	2,978.88
7	△0.3	2.8	3.1	8.1	2.25	4.35	4.8	3.7	7.6	2,932.51
8	△0.8	2.8	3.4	8.2	2.25	4.35	4.4	4.1	7.5	2,886.24
9	△1.2	3.0	3.4	8.4	2.25	4.35	5.8	4.9	7.8	2,905.19
10	△1.6	3.8	3.3	8.4	2.25	4.35	4.7	4.8	7.2	2,929.06
11	△1.4	4.5	3.5	8.2	2.25	4.35	6.2	3.7	8.0	2,871.98
12	△0.5	4.5	4.4	8.7	2.25	4.35	6.9	7.0	8.0	3050.120

주: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외환보유액 2) 중국인민은행 고시환율 3) 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M2=M1+준통화(정기예금+저축예금+기타예금), 말잔

4) 2월은 1~2월 누계치 5) 상해 종합주가지수(1990=100), 기말기준

자료: 중국인민은행, 국가통계국,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일 본)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역				경상수지	대외준비 <sup>1)</sup> (기말)	대미달러율 <sup>2)</sup>		물가 <sup>3)</sup>		산업별 수출 <sup>4)</sup>	노동생산성 <sup>5)</sup>
			수출(FOB)		수입(CIF)				환율	평균	생산자	소비자		
			억엔	전년 동기 대비 (%)	억엔	전년 동기 대비 (%)								
2017	2.2	38,424	782,865	11.8	753,792	14.1	22,607	12,643	112.69	112.16	2.3	0.5	2.6	2.0
2018	0.3	39,186	814,788	4.1	827,033	9.7	19,222	12,710	110.04	110.42	2.6	1.0	2.4	0.7
2019	..	..	769,275	△5.6	786,757	△5.0	..	13,238	108.54	109.01	0.2	2.0	2.4	..
2018.1			60,859.6	12.3	70,497.7	8.0	611	12,685	108.82	110.93	2.7	1.4	2.4	0.1
2	△0.5	—	64,628.0	1.8	64,766.5	16.9	2,137	12,617	107.10	107.94	2.5	1.5	2.5	1.6
3			73,821.0	2.1	65,979.0	△0.4	3,186	12,683	106.28	106.07	2.0	1.1	2.5	2.1
4			68,222.8	7.8	62,013.2	6.0	1,886	12,560	109.27	107.54	2.2	0.6	2.5	2.0
5	0.5	—	63,268.7	8.1	69,042.4	14.0	1,895	12,545	108.93	109.70	2.7	0.7	2.3	1.0
6			70,538.3	6.7	63,260.5	2.5	1,212	12,587	110.76	110.05	2.9	0.7	2.5	△2.3
7			67,479.3	3.9	69,753.1	14.6	2,027	12,563	111.55	111.42	3.1	0.9	2.5	2.1
8	△0.6	—	66,878.0	6.5	71,358.9	15.4	1,824	12,593	111.03	111.02	3.1	1.3	2.4	△0.6
9			67,168.3	△1.4	65,927.2	7.1	1,844	12,597	113.70	112.01	3.0	1.2	2.4	△0.7
10			72,434.6	8.2	76,997.3	20.0	1,316	12,529	113.13	112.83	3.0	1.4	2.4	3.9
11	0.3	—	69,271.0	0.1	76,662.0	12.5	821	12,583	113.57	113.32	2.3	0.8	2.5	△0.7
12			70,217.9	△3.9	70,775.3	1.9	464	12,710	110.04	112.14	1.4	0.3	2.4	△0.6
2019.1			55,746.8	△8.4	69,924.0	△0.8	574	12,793	108.60	108.97	0.5	0.2	2.5	2.0
2	0.6	—	63,849.2	△1.2	60,533.6	△6.5	2,593	12,818	110.76	110.39	0.9	0.2	2.3	△2.0
3			72,020.5	△2.4	66,793.5	1.2	2,787	12,918	110.86	111.15	1.3	0.5	2.5	△3.2
4			66,589.4	△2.4	66,054.3	6.5	1,663	12,935	111.33	111.63	1.3	0.9	2.4	△0.5
5	0.5	—	58,353.4	△7.8	68,055.2	△1.4	1,650	13,080	108.29	109.99	0.7	0.7	2.4	0.6
6			65,857.9	△6.6	59,982.8	△5.2	1,255	13,223	107.85	108.09	△0.2	0.7	2.3	△1.4
7			66,433.6	△1.5	68,956.8	△1.1	2,028	13,165	108.56	108.22	△0.6	0.5	2.2	0.6
8	0.4	—	61,412.4	△8.2	62,869.5	△11.9	2,152	13,316	106.28	106.17	△0.9	0.3	2.2	△3.8
9			63,683.2	△5.2	64,966.0	△1.5	1,580	13,226	107.93	107.42	△1.1	0.2	2.4	1.7
10			65,770.6	△9.2	65,642.2	△14.7	1,817	13,245	108.28	108.13	△0.4	0.2	2.4	△5.9
11		—	63,790.1	△7.9	64,665.2	△15.6	1,437	13,173	109.49	108.90	0.1	0.5	2.2	△4.1
12			65,768.1	△6.3	67,313.7	△4.9	524	13,238	108.54	109.12	0.9	0.8	2.2	..

연월중	통화 <sup>6)</sup>				금리(기말, 연%)			광 공 업 <sup>8)</sup>				수요관련지표			추가 지수 <sup>1)</sup>
	M3				생 산	출 하	재 고	제조업 가동률	소 매 판 매	민간 기계 수주액 <sup>9)</sup>	민간 건설 수주액 <sup>10)</sup>	전년 동기 대비 <sup>1)</sup>			
	전년동기 대비 (%)	기 대 이	준 출 을 <sup>7)</sup>	단 기 프라이 메이트									장 기 프라이 메이트	전기대비(%)	
2017	3.4	0.30	1.475	1.00	3.1	2.5	4.1	102.3	1.9	△1.1	1.7	22,765			
2018	2.5	0.30	1.475	1.00	1.1	0.8	1.7	103.1	1.7	3.6	△0.5	20,015			
2019	2.1	0.30	1.475	0.95	△2.9	△2.7	2.1	..	0.1	..	13.5	23,657			
2018.1	2.9	0.30	1.475	1.00	△4.2	△4.5	△0.3	100.2	△1.5	6.0	△11.4	23,098			
2	2.7	0.30	1.475	1.00	2.6	1.8	0.2	102.8	0.3	2.4	18.4	22,068			
3	2.6	0.30	1.475	1.00	1.1	1.0	2.6	103.7	△0.1	△3.4	△1.1	21,454			
4	2.7	0.30	1.475	1.00	△0.6	0.9	△1.1	104.3	0.6	6.8	8.3	22,468			
5	2.7	0.30	1.475	1.00	0.3	△1.1	0.2	104.0	△0.7	△1.2	△8.0	22,202			
6	2.7	0.30	1.475	1.00	△1.0	0.1	△1.1	101.5	0.9	△7.9	3.6	22,305			
7	2.5	0.30	1.475	1.00	0.1	△1.2	0.3	101.3	0.1	9.3	△9.7	22,554			
8	2.5	0.30	1.475	1.00	△0.2	0.9	△0.1	102.8	0.7	6.9	△0.1	22,865			
9	2.5	0.30	1.475	1.00	△0.1	△0.9	0.2	101.7	0.0	△17.0	9.4	24,120			
10	2.3	0.30	1.475	1.00	2.0	2.3	△0.5	104.8	0.8	7.7	△10.1	21,920			
11	2.1	0.30	1.475	1.00	△0.9	△1.5	0.1	105.0	△0.8	△0.1	△9.2	22,351			
12	2.1	0.30	1.475	1.00	0.1	0.3	1.3	104.2	0.7	△0.3	1.4	20,015			
2019.1	2.0	0.30	1.475	1.00	△2.5	△2.4	△0.9	100.0	△1.8	△5.4	15.2	20,773			
2	2.1	0.30	1.475	1.00	0.7	1.6	0.4	101.0	0.4	1.8	6.3	21,385			
3	2.1	0.30	1.475	1.00	△0.6	△1.3	1.4	100.6	0.2	3.8	91.5	21,206			
4	2.1	0.30	1.475	1.00	0.6	1.8	0.0	102.2	△0.1	5.2	△8.5	22,259			
5	2.3	0.30	1.475	1.00	2.0	1.3	0.5	103.9	0.4	△7.8	△20.8	20,601			
6	2.0	0.30	1.475	1.00	△3.3	△4.0	0.4	101.2	0.0	13.9	△4.7	21,276			
7	2.0	0.30	1.475	0.95	1.3	2.7	△0.2	102.3	△2.3	△6.6	28.9	21,522			
8	2.0	0.30	1.475	0.95	△1.2	△1.3	△0.1	99.3	4.6	△2.4	△28.4	20,704			
9	2.0	0.30	1.475	0.95	1.7	1.5	△1.4	100.3	7.2	△2.9	△9.3	21,756			
10	2.0	0.30	1.475	0.95	△4.5	△4.5	1.3	95.8	△14.2	△6.0	17.3	22,927			
11	2.2	0.30	1.475	0.95	△1.0	△1.7	△0.9	95.5	4.5	18.0	△16.1	23,294			
12	2.3	0.30	1.475	0.95	1.3	0.0	1.6	..	0.2	..	14.7	23,657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 1) 재무성발표 외환보유액
- 2) 동경시장 현지증가 기준
- 3) ( )안은 12월의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2010 =100, 생산자물가 2010 = 100 생산자물가는 국내상품 기준
- 4) 계절변동조정 후
- 5) 제조업 2010년=100
- 6) M3 (구M2+CD)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준통화 + 양도성예금기준, 2008.6.9.개편, 평잔기준
- 7) 2006년 8월 11일자로 일본은행이 종전의 공정보험을 2001년 이후부터 소급하여 「기준환인물 및 기준대출이율」로 명칭 변경.
- 8) 광공업 2010년=100.
- 9) 선박 및 전력용 기계 제외.
- 10) 민간건설수주는 대기위 50사 대상.
- 11)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자료: 일본은행, 내각부, 재무성, 경제산업성, 생산성본부, IMF

(유로지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역기 <sup>2)</sup>				경상수지 <sup>2)</sup>	대외준비(기말) <sup>3)</sup>	대미달러율		물가 <sup>4)</sup>		실업률 (%)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환율	평균	생산자	소비자	
			억유로	전기 대비 (%)	억유로	전기 대비 (%)							
2017	2.5	32,850	21,941	7.1	19,527	9.9	3,525	8,030	1.200	1.130	3.0	1.5	9.1
2018	1.9	33,830	22,829	4.0	20,878	6.9	3,595	8,232	1.147	1.181	3.2	1.8	8.2
2019	..	..	..	..	..	..	..	9,136	1.121	1.119	0.7	1.2	7.6
2018.1			1,909	△0.3	1,705	1.0	336	8,259	1.242	1.219	1.5	1.3	8.6
2	0.3	-	1,839	△3.6	1,656	△2.8	307	8,155	1.219	1.234	1.6	1.1	8.5
3			1,875	1.9	1,664	0.4	356	8,296	1.232	1.233	1.9	1.4	8.5
4			1,871	△0.2	1,703	2.4	387	8,178	1.208	1.227	1.8	1.2	8.4
5	0.4	-	1,876	0.2	1,711	0.4	319	8,161	1.169	1.181	3.0	2.0	8.3
6			1,924	2.6	1,754	2.5	323	8,043	1.168	1.167	3.6	2.0	8.2
7			1,891	△1.7	1,767	0.8	235	7,884	1.169	1.168	4.2	2.2	8.1
8	0.2	-	1,930	2.1	1,770	0.2	304	7,863	1.160	1.155	4.3	2.1	8.0
9			1,915	△0.8	1,775	0.3	210	7,800	1.161	1.166	4.6	2.1	8.0
10			1,930	0.8	1,818	2.4	297	7,886	1.131	1.148	4.9	2.3	8.0
11	0.3	-	1,928	△0.1	1,784	△1.9	270	7,955	1.132	1.136	4.0	1.9	7.9
12			1,937	0.4	1,784	0.0	244	8,232	1.147	1.137	3.0	1.5	7.8
2019.1			1,956	1.0	1,789	0.3	336	8,366	1.144	1.142	2.9	1.4	7.8
2	0.4	-	1,945	△0.5	1,751	△2.1	309	8,366	1.137	1.135	3.0	1.5	7.8
3			1,963	0.9	1,792	2.4	277	8,326	1.122	1.130	2.9	1.4	7.7
4			1,931	△1.6	1,775	△0.9	265	8,305	1.122	1.123	2.6	1.7	7.6
5	0.2	-	1,952	1.1	1,769	△0.4	241	8,374	1.117	1.118	1.6	1.2	7.6
6			1,938	△0.7	1,761	△0.4	199	8,769	1.137	1.129	0.7	1.3	7.5
7			1,936	△0.1	1,767	0.3	283	8,896	1.107	1.121	0.1	1.0	7.6
8	0.3	-	1,953	0.9	1,753	△0.8	402	9,231	1.099	1.112	△0.8	1.0	7.5
9			1,958	0.3	1,772	1.1	322	9,005	1.090	1.101	△1.1	0.8	7.6
10			2,002	2.2	1,762	△0.5	358	9,106	1.115	1.106	△1.8	0.7	7.5
11	0.1	-	1,946	△2.8	1,754	△0.5	339	8,874	1.102	1.105	△1.4	1.0	7.5
12			..	..	..	..	..	9,136	1.121	1.111	△0.7	1.3	7.4

연월중	통화 M3 <sup>3)</sup>	금 리(연%, 기말)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추가 지수 <sup>9)</sup>
		전년 동기대비 (%)	초단기 여 금	초단기 수 금	단기공개 시장조작 금 리	EURIBO <sup>6)</sup>	장 기 국 채 수익률 <sup>7)</sup>	전산업 <sup>8)</sup>	제조업	건설업	소 매 판매액	
	전기대비(%)							전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2017	4.9	0.25	△0.40	0.00	△0.33	0.52	3.0	3.1	2.8	2.5	5.7	3,504.0
2018	4.0	0.25	△0.40	0.00	△0.31	0.32	1.0	1.2	1.7	1.6	0.9	3,001.4
2019	4.9	0.25	△0.50	0.00	△0.38	△0.14	..	..	..	..	1.8	3,745.2
2018.1	4.6	0.25	△0.40	0.00	△0.33	0.71	△1.2	△0.5	0.0	△0.7	6.4	3,609.3
2	4.3	0.25	△0.40	0.00	△0.33	0.71	△0.9	△2.0	△1.8	0.0	4.8	3,439.0
3	3.6	0.25	△0.40	0.00	△0.33	0.55	0.3	0.2	0.2	1.0	4.9	3,361.5
4	3.8	0.25	△0.40	0.00	△0.33	0.63	△0.4	0.3	1.2	0.0	3.0	3,536.5
5	4.0	0.25	△0.40	0.00	△0.32	0.40	0.9	1.0	0.7	0.4	2.9	3,406.7
6	4.3	0.25	△0.40	0.00	△0.32	0.38	△0.1	△0.2	0.3	△0.1	3.9	3,395.6
7	4.0	0.25	△0.40	0.00	△0.32	0.46	△0.8	△0.8	△0.1	△0.2	7.8	3,525.5
8	3.5	0.25	△0.40	0.00	△0.32	0.37	1.0	1.0	△0.1	0.3	30.9	3,392.9
9	3.6	0.25	△0.40	0.00	△0.32	0.51	△0.7	△0.6	1.8	△0.4	△21.2	3,399.2
10	3.9	0.25	△0.40	0.00	△0.32	0.43	0.2	0.3	△1.2	0.9	△11.7	3,197.5
11	3.8	0.25	△0.40	0.00	△0.32	0.37	△1.1	△1.2	0.2	0.4	△8.9	3,173.1
12	4.2	0.25	△0.40	0.00	△0.31	0.32	△1.1	△1.1	1.5	△0.7	△6.2	3,001.4
2019.1	3.7	0.25	△0.40	0.00	△0.31	0.19	1.7	1.3	△1.5	0.8	△5.2	3,159.4
2	4.2	0.25	△0.40	0.00	△0.31	0.23	△0.1	0.5	3.1	0.6	△2.1	3,298.3
3	4.6	0.25	△0.40	0.00	△0.31	△0.01	△0.2	△0.2	△0.1	0.2	△2.2	3,351.7
4	4.7	0.25	△0.40	0.00	△0.31	0.08	△0.6	△0.8	△1.3	0.1	△1.3	3,514.6
5	4.8	0.25	△0.40	0.00	△0.32	△0.13	0.8	0.8	△0.5	△0.3	△2.1	3,280.4
6	4.5	0.25	△0.40	0.00	△0.35	△0.26	△1.5	△1.5	0.7	0.9	1.1	3,473.7
7	5.1	0.25	△0.40	0.00	△0.38	△0.39	△0.4	△0.4	△0.9	△0.4	△3.8	3,466.9
8	5.7	0.25	△0.40	0.00	△0.43	△0.65	0.6	0.5	△0.7	0.6	△6.1	3,426.8
9	5.6	0.25	△0.50	0.00	△0.42	△0.52	0.0	0.1	1.2	△0.3	14.8	3,569.5
10	5.6	0.25	△0.50	0.00	△0.39	△0.36	△0.9	△0.8	△0.5	△0.1	9.8	3,604.4
11	5.6	0.25	△0.50	0.00	△0.40	△0.30	0.2	0.2	0.7	0.8	10.0	3,703.6
12	5.0	0.25	△0.50	0.00	△0.38	△0.14	..	..	..	△1.6	10.0	3,745.2

주 :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역내교역제외 2) 계절변동조정 후, 연간은 계절변동조정 전 3) 유럽중앙은행 및 화원국 중앙은행의 대외준비자산  
 (금 + SDR + IMF포지션 + 외환) 4)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 기준 5) 현  
 금통화+요구불예금+만기 2년 이내의 정기예금+통지기간 3개월 이내의 예금+환매채+만기 2년 이내의 채무증서+  
 투자신탁+단기금융상품, 말잔기준 6) 3개월 만기 7) 10년 만기 8) 건설업 제외 9)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Bulletin(European Central Bank), EU통계청, 블룸버그, Reuters 등

(독 일)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sup>1)</sup>	무 역 <sup>2)</sup>				경상수자 <sup>2)</sup>	대 외 준 비 (기말) <sup>3)</sup>	물 가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생산자 <sup>4)</sup>	소비자
	전기대비 (%)	유로	억유로	전기대비 (%)	억유로	전기대비 (%)	억유로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2017	2.5	39,260	12,790	6.2	10,310	8.0	2,619	2,001	2.7	1.5
2018	1.5	40,340	13,176	3.0	10,898	5.7	2,460	1,982	2.6	1.8
2019	0.6	41,350	..	..	..	..	..	2,238	1.1	1.4
2018.1			1,102	△0.3	890	△0.2	250	2,055	2.1	1.4
2	0.1	-	1,079	△2.1	882	△1.0	222	2,032	1.8	1.1
3			1,092	1.1	874	△0.9	234	2,043	1.8	1.5
4			1,097	0.5	899	2.8	207	2,017	1.9	1.3
5	0.4	-	1,110	1.2	904	0.6	215	2,006	2.5	2.1
6			1,109	△0.1	912	0.9	215	1,948	2.9	1.9
7			1,103	△0.6	940	3.0	167	1,917	2.9	1.9
8	△0.1	-	1,107	0.4	921	△2.0	200	1,892	3.1	1.9
9			1,099	△0.7	922	0.1	177	1,865	3.2	1.9
10			1,108	0.8	929	0.8	214	1,904	3.3	2.3
11	0.2	-	1,107	0.0	920	△0.9	208	1,911	3.3	2.1
12			1,119	1.1	924	0.4	198	1,982	2.7	1.6
2019.1			1,120	0.1	936	1.2	226	2,030	2.6	1.4
2	0.5	-	1,109	△0.9	926	△1.1	203	2,032	2.6	1.5
3			1,124	1.3	928	0.3	235	2,001	2.4	1.3
4			1,094	△2.6	921	△0.7	211	1,990	2.5	2.0
5	△0.2	-	1,104	0.9	918	△0.3	222	2,008	1.9	1.4
6			1,106	0.2	924	0.6	216	2,133	1.2	1.6
7			1,108	0.1	912	△1.3	229	2,155	1.1	1.7
8	0.1	-	1,100	△0.7	913	0.1	233	2,266	0.3	1.4
9			1,116	1.4	924	1.2	227	2,203	△0.1	1.2
10			1,132	1.5	928	0.4	239	2,229	△0.6	1.1
11		-	1,108	△2.2	923	△0.6	237	2,165	△0.7	1.1
12			1,109	0.1	917	△0.7	..	2,238	△0.2	1.5

연월중	실업률 (%) <sup>5)</sup>	금 리(연%, 기말)		산업생산(전기대비, %)			수요관련지표(전기대비, %)			주가지수 <sup>8)</sup>
		단기국채 수익률 <sup>6)</sup>	장기국채 수익률 <sup>7)</sup>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소매 판매액	자본재 수주	건설수주	
2017	3.8	△0.69	0.43	3.3	3.5	3.3	3.5	5.7	3.3	12,917.6
2018	3.4	△0.77	0.24	1.0	1.1	0.2	1.6	0.8	4.7	10,559.0
2019	3.2	△0.70	△0.19	..	..	..	2.8	..	..	13,249.0
2018.1	3.5	△0.65	0.70	△0.6	△0.4	0.5	△0.7	△3.9	△13.1	13,189.5
2	3.5	△0.66	0.66	△1.5	△1.9	△4.7	△0.8	1.6	8.2	12,435.9
3	3.5	△0.75	0.50	1.3	1.3	1.9	1.0	△2.2	△12.0	12,096.7
4	3.4	△0.65	0.56	△0.8	△0.7	0.9	2.8	△2.5	2.2	12,612.1
5	3.4	△0.59	0.34	1.6	1.7	3.5	△1.6	3.8	4.8	12,604.9
6	3.4	△0.59	0.30	△0.5	△0.6	△2.2	0.1	△5.7	△3.7	12,306.0
7	3.4	△0.58	0.44	△1.5	△1.7	△0.2	0.0	△0.5	2.1	12,805.5
8	3.4	△0.58	0.33	0.4	0.3	△0.3	△0.2	3.4	△0.7	12,364.1
9	3.4	△0.56	0.47	△0.4	0.0	2.1	△0.2	△0.6	3.5	12,246.7
10	3.3	△0.82	0.39	△0.9	△0.8	△1.1	1.0	1.8	0.3	11,447.5
11	3.3	△0.72	0.31	△1.2	△1.2	△0.1	0.4	1.4	4.7	11,257.2
12	3.3	△0.77	0.24	0.9	0.9	0.5	△2.3	0.9	11.7	10,559.0
2019.1	3.2	△0.53	0.15	△1.1	△1.2	△0.6	3.1	△3.2	△8.3	11,173.1
2	3.2	△0.52	0.18	0.0	0.3	4.1	0.5	△6.1	△2.2	11,515.6
3	3.2	△0.53	△0.07	0.6	0.6	△0.4	0.4	1.9	△2.3	11,526.0
4	3.2	△0.55	0.01	△2.4	△2.4	0.5	△0.4	0.3	△2.3	12,344.1
5	3.1	△0.54	△0.20	0.7	0.8	△2.2	△0.6	△1.5	△2.9	11,726.8
6	3.1	△0.57	△0.33	△1.5	△1.4	1.1	2.0	2.2	2.4	12,398.8
7	3.1	△0.57	△0.44	△0.4	△0.4	△0.3	△0.6	△1.3	0.5	12,189.0
8	3.1	△0.71	△0.70	0.7	0.9	△0.1	0.3	△1.6	△2.7	11,939.3
9	3.1	△0.57	△0.57	△1.2	△1.4	1.4	0.1	2.4	4.1	12,428.1
10	3.2	△0.61	△0.41	△1.1	△1.4	△1.5	△0.9	△0.3	△2.0	12,866.8
11	3.2	△0.63	△0.36	1.0	1.0	2.4	1.5	△1.5	14.2	13,236.4
12	3.2	△0.70	△0.19	△2.5	△2.9	△8.7	△3.3	△3.9	..	13,249.0

주 :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EU통계청 자료 2) 계절변동 조정 후, 경상수지는 조정 전 3) 연방은행의 대외준비자산(금 + 외환 + SDR + IMF포지션 + 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4) 공산품 기준 5) EU 통계청 기준, 계절변동조정 후 6) 3개월 만기  
7) 10년 만기 8) DAX Index (1987.12.30 = 1,000),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Bulletin(Deutsche BundesBank),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영 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sup>1)</sup>	무 역				경상 수지	대외 준비 <sup>2)</sup> (기말)	대미달러율		실업률 <sup>4)</sup>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환		
			전기대비 (%)	유로	억파운드	전기대비 (%)			억파운드	전기대비 (%)	
2017	1.9	35,780	3,375	13.3	4,734	9.5	△723	1,508	1.3512	1.2887	4.4
2018	1.3	36,480	3,496	3.6	4,890	3.3	△829	1,727	1.2757	1.3349	4.1
2019	1.4	..	3,720	6.4	5,017	2.6	..	1,736	1.3259	1.2766	..
2018.1			290	2.1	402	2.2		1,565	1.4190	1.3812	4.3
2	0.1	-	276	△5.0	371	△7.7	△180	1,542	1.3760	1.3962	4.2
3			282	2.4	403	8.6		1,576	1.4015	1.3974	4.2
4			280	△1.0	400	△0.8		1,548	1.3769	1.4068	4.2
5	0.5	-	289	3.4	407	1.8	△186	1,585	1.3298	1.3459	4.2
6			304	5.2	405	△0.4		1,555	1.3207	1.3284	4.0
7			300	△1.5	410	1.1		1,531	1.3124	1.3168	4.0
8	0.6	-	296	△1.3	424	3.3	△196	1,584	1.2961	1.2877	4.0
9			298	0.7	405	△4.5		1,538	1.3028	1.3056	4.1
10			302	1.5	420	3.8		1,574	1.2765	1.3007	4.1
11	0.2	-	295	△2.4	422	0.5	△266	1,672	1.2751	1.2897	4.0
12			283	△4.1	421	△0.4		1,727	1.2757	1.2662	4.0
2019.1			291	2.9	456	8.5		1,751	1.3100	1.2899	3.9
2	0.6	-	290	△0.3	459	0.7	△374	1,697	1.3261	1.3011	3.9
3			310	6.8	478	4.1		1,633	1.3031	1.3173	3.8
4			271	△12.6	412	△13.8		1,667	1.3031	1.3028	3.8
5	△0.1	-	285	5.1	403	△2.3	△242	1,563	1.2631	1.2840	3.8
6			297	4.2	387	△3.8		1,608	1.2693	1.2674	3.9
7			321	8.0	402	3.8		1,684	1.2157	1.2461	3.8
8	0.5	-	307	△4.1	408	1.5	△159	1,678	1.2156	1.2151	3.9
9			312	1.4	425	4.0		1,590	1.2287	1.2353	3.8
10			319	2.3	429	1.0		1,752	1.2940	1.2658	3.8
11	0.0	-	329	3.3	379	△11.6		1,697	1.2933	1.2882	3.8
12			387	17.4	378	△0.1		1,736	1.3259	1.3096	..

연월중	물가		통화	금리(기말, 연%)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주가지수 <sup>10)</sup>
	생산자 <sup>5)</sup>	소비자	M4 <sup>7)</sup>	정책금리 <sup>8)</sup>	장기규제 수익률 <sup>9)</sup>	전산업	제조업	소매 판매	기업투자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2017	3.4	2.7	3.8	0.50	1.74	1.7	2.2	2.2	2.9	7,687.8
2018	2.9	2.5	2.0	0.75	1.75	0.8	0.9	2.8	△1.5	6,728.1
2019	1.6	1.8	3.8	0.75	1.23	△1.3	△1.5	3.1	..	7,542.4
2018.1	2.8	3.0	4.3	0.50	1.94	△0.1	△0.1	0.1		7,533.6
2	2.6	2.7	4.2	0.50	1.90	0.2	△0.5	0.3	△0.9	7,231.9
3	2.5	2.5	2.3	0.50	1.69	△0.1	△0.5	△0.9		7,056.6
4	2.5	2.4	1.1	0.50	1.81	△0.5	△0.4	1.2		7,509.3
5	3.0	2.4	1.9	0.50	1.69	△0.4	0.3	2.1	△0.8	7,678.2
6	3.3	2.4	1.8	0.50	1.72	1.0	0.8	△0.7		7,636.9
7	3.1	2.5	2.1	0.50	1.75	0.3	△0.3	0.8		7,748.8
8	3.0	2.7	1.2	0.75	1.75	△0.2	△0.2	0.5	△0.9	7,432.4
9	3.1	2.4	0.8	0.75	1.89	△0.6	△0.3	△0.5		7,510.2
10	3.3	2.4	1.0	0.75	1.81	△0.1	△0.5	△0.2		7,128.1
11	3.0	2.3	0.9	0.75	1.95	△0.2	0.1	1.4	△0.6	6,980.2
12	2.4	2.1	2.0	0.75	1.75	△0.5	△0.5	△1.0		6,728.1
2019.1	2.1	1.8	0.5	0.75	1.65	0.9	1.3	1.2		6,968.9
2	2.4	1.9	1.2	0.75	1.75	0.2	0.7	0.0	1.1	7,074.7
3	2.2	1.9	2.1	0.75	1.48	0.9	1.2	1.3		7,279.2
4	2.1	2.1	2.9	0.75	1.63	△3.3	△4.5	△0.2		7,418.2
5	1.9	2.0	2.1	0.75	1.36	1.0	0.9	△0.4	0.5	7,161.7
6	1.6	2.0	2.3	0.75	1.35	0.0	0.0	0.7		7,425.6
7	1.9	2.1	2.7	0.75	1.16	0.0	0.2	0.4		7,586.8
8	1.7	1.7	3.3	0.75	0.91	△0.7	△0.9	△0.4	0.2	7,207.2
9	1.2	1.7	4.0	0.75	0.88	0.2	△0.3	0.0		7,408.2
10	0.8	1.5	3.6	0.75	1.03	0.1	0.3	△0.1		7,248.4
11	0.5	1.5	4.5	0.75	1.11	△1.1	△1.6	△0.8	△1.0	7,346.5
12	0.9	1.3	3.8	0.75	1.23	0.1	0.3	△0.8		7,542.4

주 : 월별 및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EU 통계청 2) 금+외환+SDR+IMF포지션+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3) Reuters 기준 환율 4) 실업수당신청자 기준, 계절변동조정후 5) 제조업 산출물가 기준 6) 화폐발행액+은행의 자금결제용 영란은행 예치금, 평잔기준, 연간은 당해년도 12월의 전년동월대비 7) 민간화폐보유액+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요구불예금+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정기예금(CD 포함)+(민간보유 주택대출조합의 주식 예금 및 CD-주택대출조합보유 은행예금, CD 및 현금), 말잔기준 8) 영란은행 RP 금리 9) 20년만기 10) FTSE 100 Index(1984.1.3=1,000),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Digest of Statistic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 (대 만)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미달러	무 역				경 상 지 수	대외준비 <sup>1)</sup> (기말)	대미달러 환 율 <sup>2)</sup> (NT\$/U\$)		실업률 (%)	
			수출(FOB)		수입(CIF)				백만 미달러	기 말		평 균
			백 만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백 만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2017	3.3	24,408	317,490	13.2	259,580	12.4	83,093	451,500	29.66	30.41	3.8	
2018	2.8	25,026	336,110	5.9	287,180	10.6	70,843	461,780	30.56	30.13	3.7	
2019	2.7	..	330,680	△1.6	287,260	0.0	..	478,130	29.91	30.88	3.7	
2018.1			27,380	15.3	24,960	22.0		455,720	29.16	29.41	3.6	
2	3.2	-	22,370	△1.3	19,460	△0.1	21,860	456,720	29.33	29.23	3.7	
3			29,990	16.7	23,990	10.4		457,190	29.08	29.19	3.7	
4			26,730	10.0	22,580	4.9		457,130	29.62	29.37	3.6	
5	3.4	-	29,120	14.1	24,710	11.9	17,570	457,280	29.97	29.85	3.6	
6			28,250	9.4	23,040	15.2		457,120	30.46	30.08	3.7	
7			28,360	4.7	26,120	20.1		458,500	30.57	30.54	3.8	
8	2.5	-	28,300	1.9	23,770	7.4	10,901	459,880	30.72	30.66	3.9	
9			29,620	2.6	25,290	13.7		460,440	30.45	30.71	3.8	
10			29,570	7.3	26,210	17.4		460,180	30.57	30.84	3.8	
11	2.0	-	27,810	△3.5	23,160	0.9	20,512	461,380	30.85	30.80	3.7	
12			28,610	△3.2	23,890	2.2		461,780	30.56	30.78	3.7	
2019.1			27,300	△0.5	26,390	6.9		463,040	30.69	30.80	3.6	
2	1.8		20,390	△8.3	15,470	△20.3	17,015	463,940	30.82	30.79	3.7	
3			28,680	△4.4	25,560	6.7		464,080	30.84	30.85	3.7	
4			25,830	△3.7	23,150	2.1		464,830	30.89	30.84	3.7	
5	2.6		27,720	△4.8	23,220	△5.8	17,466	464,430	31.52	31.22	3.7	
6			28,390	0.4	24,510	6.4		466,970	30.96	31.23	3.7	
7			28,200	△0.3	24,640	△5.7		467,230	31.15	31.07	3.8	
8	3.0		29,000	2.7	23,020	△3.2	12,480	468,170	31.32	31.37	3.9	
9			28,100	△4.6	24,970	△0.6		469,490	31.04	31.08	3.8	
10			28,990	△1.5	25,040	△4.1		472,480	30.48	30.67	3.8	
11	3.4		28,580	3.3	24,300	5.8		474,050	30.51	30.46	3.7	
12			29,500	4.0	26,990	13.9		478,130	29.91	30.24	3.7	

연월중	물 가 <sup>3)</sup>		노동 생산성 <sup>4)</sup>	통 화 <sup>5)</sup>		금리(기말, 연%)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주기지수 <sup>7)</sup>
	생산자	소비자		M1B	M2	재할인율	프라임 레이트 <sup>6)</sup>	전산업	제조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017	0.9	0.6	3.5	4.0	3.6	1.375	2.630	5.2	5.5	0.8	10,642.86
2018	3.7	1.4	2.5	5.7	3.1	1.375	2.630	3.7	3.9	2.5	9,727.41
2019	△2.2	0.6		7.4	4.1	1.375	2.630	△0.3	△0.3	3.1	11,997.14
2018.1	△0.7	0.9	△9.0	3.1	3.4	1.375	2.631	9.4	9.5	△5.7	11,103.79
2	△0.2	2.2	8.5	5.2	3.8	1.375	2.631	△4.7	△5.2	16.8	10,815.47
3	0.6	1.6	5.9	5.5	3.6	1.375	2.631	5.9	6.1	4.7	10,919.49
4	2.5	2.0	7.5	5.6	3.6	1.375	2.631	8.3	8.9	2.8	10,657.88
5	5.6	1.8	△0.7	6.4	3.7	1.375	2.631	7.4	7.6	4.1	10,874.96
6	6.7	1.4	8.5	5.9	4.1	1.375	2.631	0.0	0.3	3.3	10,836.91
7	7.0	1.8	0.5	5.8	3.7	1.375	2.635	4.7	5.3	1.8	11,057.51
8	6.8	1.5	1.4	5.2	3.4	1.375	2.635	1.1	1.6	△0.8	11,063.94
9	6.3	1.7	10.7	5.2	3.3	1.375	2.635	1.7	2.0	2.7	11,006.34
10	5.7	1.2	△1.9	5.3	3.4	1.375	2.631	8.8	9.8	0.6	9,802.13
11	3.0	0.3	2.4	5.1	3.1	1.375	2.631	2.6	2.7	△0.4	9,888.03
12	0.8	△0.1	△2.4	5.7	3.1	1.375	2.631	△1.1	△1.2	0.5	9,727.41
2019.1	0.3	0.2	△2.7	6.6	3.1	1.375	2.632	△1.1	△1.1	6.2	9,932.26
2	0.6	0.2	△2.4	6.0	2.9	1.375	2.632	△2.0	△1.9	△9.4	10,389.17
3	1.2	0.6	△0.8	6.9	3.1	1.375	2.632	△9.4	△10.0	1.3	10,641.04
4	0.7	0.7	△6.1	7.7	3.7	1.375	2.631	1.4	1.3	4.5	10,967.73
5	△0.4	0.9	△1.8	7.2	3.4	1.375	2.631	△2.6	△2.5	2.9	10,498.49
6	△2.0	0.9	3.6	7.4	3.1	1.375	2.631	△0.5	△0.8	4.5	10,730.83
7	△3.6	0.4	0.0	7.3	3.4	1.375	2.636	3.8	3.8	6.7	10,823.81
8	△3.7	0.4	6.1	7.5	3.4	1.375	2.636	2.4	2.2	4.5	10,618.05
9	△4.8	0.4	△3.1	7.4	3.4	1.375	2.636	△0.7	△0.5	2.9	10,829.68
10	△6.3	0.4	△2.0	7.0	3.8	1.375	2.631	△2.6	△3.1	4.2	11,358.71
11	△5.0	0.6	5.7	7.5	4.1	1.375	2.631	1.8	1.9	5.6	11,489.57
12	△3.4	1.1	..	7.4	4.1	1.375	2.631	6.0	6.4	2.8	11,997.14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외환보유액 2) Reuters 고시환율 3) ( )안은 12월의 전년동월대비 4) 제조업 5) M1B= 현금통화+ 당좌예금+ 보통예금+ 보통저축예금, M2=M1B+ 정기예금+ 외화예금+ 우편예금+ 환매거래잔액+ 외국인보유 현금, 평잔기준 6) 대만은행 7) 가권자수(1966=100), 기말기준

자료 : 금융통계월보(대만 중앙은행),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Bureau of Statistics)

대한행정원 주계처, 중화민국대만지구 국민경제동향통계계보 각호, Reuters Business Briefing

## 나. 주요국가의 GDP규모

(십억달러)

기간중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2003	540	558	896	1,671	1,844	2,501	618	255	1,573	4,446	703
2004	657	668	1,026	1,966	2,119	2,813	722	280	1,801	4,815	793
2005	734	891	1,173	2,309	2,198	2,848	834	311	1,854	4,755	935
2006	781	1,106	1,319	2,774	2,321	2,995	949	396	1,944	4,530	1,053
2007	948	1,396	1,469	3,571	2,661	3,426	1,239	470	2,206	4,515	1,173
2008	1,056	1,695	1,553	4,604	2,930	3,745	1,224	559	2,400	5,038	1,047
2009	999	1,668	1,377	5,122	2,698	3,408	1,365	578	2,191	5,231	944
2010	1,252	2,208	1,617	6,066	2,647	3,402	1,708	755	2,129	5,700	1,144
2011	1,514	2,614	1,793	7,522	2,865	3,749	1,823	893	2,279	6,157	1,253
2012	1,569	2,464	1,828	8,570	2,685	3,529	1,828	919	2,074	6,203	1,278
2013	1,518	2,472	1,847	9,635	2,812	3,734	1,857	917	2,131	5,156	1,371
2014	1,457	2,456	1,806	10,535	2,857	3,890	2,039	891	2,155	4,850	1,484
2015	1,235	1,800	1,557	11,226	2,439	3,362	2,104	861	1,833	4,389	1,466
2016	1,268	1,795	1,530	11,222	2,472	3,468	2,290	932	1,870	4,927	1,500
2017	1,387	2,053	1,650	12,062	2,592	3,665	2,652	1,015	1,951	4,860	1,624
2018	1,420	1,868	1,712	13,368	2,780	3,951	2,719	1,022	2,076	4,972	1,720
2019	1,376	1,847	1,731	14,140	2,707	3,863	2,936	1,112	1,989	5,154	1,630

기간중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키	영국	미국
2003	729	580	218	462	216	909	332	353	312	2,046	11,458
2004	782	658	255	634	259	1,071	383	394	405	2,405	12,214
2005	877	686	306	819	328	1,158	390	409	501	2,528	13,037
2006	975	734	345	1,062	376	1,266	420	431	551	2,701	13,815
2007	1,053	849	429	1,394	416	1,481	488	480	675	3,085	14,452
2008	1,110	952	534	1,782	520	1,642	515	554	765	2,935	14,713
2009	900	871	440	1,308	429	1,503	435	542	644	2,403	14,449
2010	1,058	848	479	1,636	528	1,434	495	583	772	2,455	14,992
2011	1,180	905	529	2,048	671	1,490	573	700	832	2,636	15,543
2012	1,201	839	501	2,189	736	1,337	551	668	874	2,677	16,197
2013	1,274	877	524	2,292	747	1,362	585	689	950	2,755	16,785
2014	1,315	892	545	2,058	756	1,379	580	709	934	3,036	17,527
2015	1,171	766	478	1,357	654	1,200	504	680	859	2,897	18,225
2016	1,078	784	472	1,281	645	1,238	516	671	863	2,669	18,715
2017	1,157	834	527	1,579	689	1,317	541	680	853	2,640	19,519
2018	1,222	915	586	1,657	787	1,428	556	706	771	2,829	20,580
2019	1,274	902	566	1,638	779	1,398	529	715	744	2,744	21,439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9.10)

## 다. 주요국가의 1인당 GDP

(달러)

기간중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2003	27,222	3,086	28,339	1,293	30,683	30,669	18,530	572	1,187	27,495
2004	32,751	3,655	32,176	1,513	35,016	34,535	22,008	657	1,281	31,250
2005	36,151	4,815	36,439	1,766	36,057	35,020	22,624	747	1,404	31,936
2006	37,869	5,914	40,558	2,111	37,796	36,894	24,857	837	1,765	33,342
2007	45,105	7,385	44,717	2,703	43,060	42,300	28,900	1,077	2,064	37,685
2008	49,152	8,873	46,774	3,467	47,155	46,368	32,198	1,049	2,418	40,658
2009	45,685	8,642	40,991	3,838	43,191	42,339	29,819	1,153	2,465	36,862
2010	56,454	11,327	47,627	4,524	42,179	42,380	26,973	1,423	3,178	35,655
2011	67,222	13,296	52,286	5,583	45,420	46,697	25,897	1,498	3,689	38,012
2012	68,436	12,427	52,744	6,329	42,372	43,883	22,172	1,482	3,745	34,470
2013	65,171	12,357	52,709	7,081	44,145	46,299	21,805	1,486	3,684	35,219
2014	61,653	12,176	51,021	7,702	44,616	48,036	21,727	1,610	3,534	35,457
2015	51,497	8,846	43,626	8,167	37,938	41,160	18,115	1,640	3,368	30,153
2016	51,979	8,751	42,440	8,116	38,349	42,116	18,111	1,762	3,606	30,824
2017	55,974	9,926	45,217	8,677	40,109	44,334	18,898	2,014	3,885	32,195
2018	56,420	8,959	46,290	9,580	42,953	47,662	20,317	2,038	3,871	34,321
2019	53,825	8,797	46,213	10,099	41,761	46,564	19,974	2,172	4,164	32,947

기간중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대만	터키	영국	미국
2003	34,831	14,673	6,965	3,199	3,744	21,533	14,094	4,643	34,302	39,412
2004	37,697	16,496	7,383	4,408	4,839	24,990	15,361	5,953	40,112	41,630
2005	37,224	19,403	8,189	5,720	5,384	26,530	16,503	7,278	41,843	44,026
2006	35,464	21,743	8,997	7,435	5,611	28,532	16,985	7,899	44,404	46,214
2007	35,342	24,086	9,589	9,760	6,092	32,748	17,781	9,563	50,316	47,869
2008	39,453	21,350	9,973	12,484	5,766	35,698	18,103	10,692	47,469	48,283
2009	41,014	19,138	7,975	9,157	5,880	32,424	16,960	8,882	38,601	47,008
2010	44,674	23,087	9,258	11,447	7,312	30,801	19,262	10,476	39,122	48,403
2011	48,169	25,096	10,205	14,320	7,997	31,876	20,912	11,141	41,650	49,826
2012	48,633	25,467	10,261	15,276	7,488	28,584	21,270	11,553	42,023	51,556
2013	40,490	27,183	10,764	15,953	6,824	29,237	21,888	12,395	42,981	53,061
2014	38,156	29,250	10,981	14,069	6,430	29,687	22,639	12,022	47,004	55,010
2015	34,569	28,732	9,674	9,262	5,732	25,850	22,374	10,915	44,495	56,787
2016	38,805	29,296	8,816	8,723	5,267	26,682	22,573	10,817	40,658	57,901
2017	38,343	31,577	9,367	10,751	6,120	28,381	24,390	10,551	39,977	60,000
2018	39,304	33,320	9,797	11,289	6,354	30,733	25,008	9,405	42,580	62,869
2019	40,847	31,431	10,118	11,163	6,100	29,961	24,828	8,958	41,030	65,112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9.10)

라. 국제금리, 국제원유 및 1차 상품가격(기말)

	금 리 (%)			현물유가 (달러/BBL)		Reuter 지 수 (*31.9.18=100)
	LIBOR\$ (3개월)	미우대금리	T/Bill (3개월)	Dubai	Brent	
2016	1.00	3.75	0.51	53.99	55.41	2,578.71
2017	1.69	4.50		63.77	66.82	2,371.84
2018	2.81	5.50		52.35	53.17	2,371.63
2019	1.91	4.75		65.38	66.42	5,486.07
2017.5	1.21	4.00	0.97	49.48	50.08	2,381.82
6	1.30	4.25	1.03	46.60	48.23	2,388.79
7	1.31	4.25	1.09	51.09	52.17	2,419.99
8	1.32	4.25	0.99	49.67	52.41	2,388.50
9	1.33	4.25	1.06	55.82	56.53	2,407.96
10	1.38	4.25	-	58.79	60.94	2,441.94
11	1.49	4.25	-	60.86	62.78	2,405.62
12	1.69	4.50	-	63.77	66.82	2,371.84
2018.1	1.78	4.50	-	65.75	68.83	2,348.73
2	2.02	4.50	-	63.29	64.46	2,353.21
3	2.31	4.75	-	66.09	69.13	2,293.67
4	2.36	4.75	-	70.73	74.87	2,294.16
5	2.32	4.75	-	74.28	77.13	2,329.29
6	2.34	5.00	-	75.56	78.60	2,335.29
7	2.34	5.00	-	72.85	73.07	2,327.04
8	2.32	5.00	-	75.16	77.15	2,308.80
9	2.40	5.25	-	79.99	82.95	2,318.12
10	2.56	5.25	-	74.90	73.86	2,367.41
11	2.74	5.25	-	58.57	58.44	2,378.12
12	2.81	5.50	-	52.35	53.17	2,371.63
2019.1	2.74	5.50	-	61.37	60.91	2,390.82
2	2.62	5.50	-	65.64	65.79	2,378.26
3	2.60	5.50	-	67.61	67.51	2,359.79
4	2.58	5.50	-	72.13	71.85	2,351.39
5	2.50	5.50	-	63.22	62.93	2,341.69
6	2.32	5.50	-	64.79	64.43	2,406.88
7	2.27	5.25	-	63.58	64.13	2,338.72
8	2.14	5.25	-	59.62	59.20	2,236.08
9	2.09	5.00	-	59.88	59.85	2,312.81
10	1.90	4.75	-	59.30	59.55	2,372.05
11	1.91	4.75	-	62.73	61.34	2,419.57
12	1.91	4.75	-	65.38	66.42	2,486.07

주 : 2015.1.2.일자로 석유공사에서 WTI(현물) 통계중지, 2017.10.19.일자로 국제금융센터에서 T/Bill 통계중지



● 本書의 發刊을 위하여 協助하여 주신 人士 ●

신태섭(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전유석(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김태순(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주민(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
오다은(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희준(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이병준(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임순묵(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류성열(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동욱(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조찬우(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이한결(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송지현(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원종혁(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최지훈(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한은파견))	박기오(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권용준(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이보영(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신채용(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안건희(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성민혁(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황인환(기획재정부 사회경제정책과)
유근정(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남기범(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정영주(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김진수(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김애리(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이종혁(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하다애(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이신영(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도종화(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고대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이정아(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김현수(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이상민(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김만기(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유이(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박준영(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용준(기획재정부 금융협력과)	이석원(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한유빈(기획재정부 혁신성장기획팀)	남원우(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성진규(기획재정부 혁신성장지원팀)	김종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양현정(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백경원(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최진광(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원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이재홍(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최시영(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박재은(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경숙(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김태웅(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서은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남궁향(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 本書의 發刊을 위하여 協助하여 주신 人士 ●

최관수(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이상협(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김영현(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박준하(기획재정부 경영관리과)
김준하(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안형자(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
조진희(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김종성(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권영민(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이세환(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김서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유경원(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윤민정(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박재현(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남한샘(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유채연(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이주호(기획재정부 지출혁신과)	정희진(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김영웅(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강성빈(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
김지현(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혁신팀)	이명진(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이현주(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고상현(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
김도희(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박수민(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
정민형(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	송상목(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
이범한(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서민아(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
박준영(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이쌤나(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최현화(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정다운(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한송이(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정길채(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손주연(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이현지(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장준영(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박상운(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조선형(기획재정부 혁신조달팀)	안기용(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박양규(기획재정부 혁신조달팀)	박중민(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김지수(기획재정부 국채과)	이홍석(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채원혁(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박준석(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권오영(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박은결(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소병화(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김연태(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가순봉(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	김영수(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이승민(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	김지영(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 경제백서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 전화 : (044) 215-2736
- 경제백서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02-394-0337)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2019 경제백서

---

2021년 4월 일 인쇄

2021년 4월 일 발행

편집겸  
발행인 기획재정부

---

인쇄 : (사)한국기능장애인협회 (041)553-8811  
하나로장애인작업장

